

統一文化研究(上)

1994. 12.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우리 민족은 일제식민통치로 부터 벗어나는 민족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3·1독립운동, 상해임시정부로 맥맥히 이어져 오면서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적 여망과는 달리 국제정치의 제물이 되어 민족분단을 강요당하였으며, 이어 동서냉전체제가 자초한 동족상잔과 남북체제 갈등 속에서 어언 분단 반세기를 맞고 있다. 지난 반세기는 대한민국이 선진조국으로 향하는 영광의 장도였지만, 민족사적 견지에서 보면 같은 민족이 분열·대결하는 고통과 수난의 연속이었다.

분단조국의 통일은 천만이산가족들의 한 많은 비극을 청산하고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인도적 견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민족 생존권 차원뿐만 아니라,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 속에서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민족적 용비를 기약하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될 시대의 민족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민족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국제정세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공산체제가 붕괴됨으로써 민족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빨리 선회하고 있다. 공산종주국 소련과 동구공산권이 이미 붕괴되고,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20세기를 지배했던 동서체제경쟁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일단락됨으

로써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이 명료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국제정세는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우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선차적 조치를 마련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이같이 국제정치적 요인을 외면할 수 없으면서도 민족적 슬기를 모아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민족 내부문제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21세기 민족의 발전과 응비를 기약할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목표지향성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미 체제적 한계성이 노출된 이상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먼저 실현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완결시켜 가는 장엄한 도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완결시켜 가기 위해서는 실리추구 차원에서 비교적 빨리 시도될 수 있는 민족경제공동체로부터, 「남북연합」을 거쳐 하나의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마지막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순리이며, 이 과정에서 분단 반세기 동안 동서냉전체제하에서 어쩔 수 없이 축적된 고질적 상호적대의식을 청산시키고 민족공동체의식을 활성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제시할 「통일문화」의 창조가 민족공동체를 응집시키는 촉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문화」는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 가야 할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조국의 근대화·선진

화를 위하여 체제를 초월하여 공유될 수 있는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과 행태,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창조되어야 할 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 문화임과 동시에, 남북한의 현실적 냉전구조를 하나하나 탈피·개선시켜 가기 위한 당면 실천문화이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북한이 대남전략적 요인을 여전히 잉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공산체제의 붕괴에 따른 체제생존차원에서나마 민족주의·전통문화 쪽으로 통치이념을 변용시켜가는 경향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외개방경제정책과 대서방개방외교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북체제간 교류 실현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민족정서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측면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분단 반세기를 맞는 현시점이야말로 「통일문화」 창조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민족적 노력을 경주할 적기로 판단하여 「통일문화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연차 계획으로 추진될 통일문화 연구의 제1차년도인 금년은 통일 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에 관한 이론적 기본틀 모색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과정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민족문화공동체 형성이 지닌 의미와 위상을 정립하고, 통일문화창조를 위한 선결연구로서 우선 남북문화간의 이질화실태를 파악하고 그 동안 간헐적으로 추진된 남북문화교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다.

통일문화 중에서도 「생활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남북한 인구구성비에서 큰 비중을 점하여 통일조국의 주요사회 구성원을 형성할 노동자와 여성의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잡았다. 이른바 「주체사상」에 따라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그리고 여성해방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선전되어 온 북한사회에서의 노동자와 여성 문화의 실태를 규명하는 연구는 통일문화 연구를 위한 하나의 핵심 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활문화 연구의 또한 측면으로서 분단 반세기 동안 공산주의적 인간개조과정에서 이질화된 북한의 주민생활에서 과연 전통문화적 요인이 얼마만큼 잔존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순수문화연구는 사회과학 영역의 연구와 다른 전문연구영역으로 간주, 이번 연구에서는 통일문화개념 정립을 위한 북한문화의 이질화 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우선 최근 북한 문예정책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한정시켰다.

분단 상황하에서 다방면적인 문화교류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이질문화의 접촉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충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통일 사례야말로 우리의 통일문화 연구에 결정적 교훈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론적 연구와 남북문화교류 경험의 분석을 토대로 통일문화 창조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을 종합정리하였다.

이상 통일문화 연구를 통한 통일문제에의 접근 시도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제도통일·정치통일 위주로 진행되어 온 감이 있는 기존연구경향으로부터 새로운 연구방향의 지평을 여는 긍정적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1994. 12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총 목 차〉

〈상 권〉

- 統一文化의 概念 정립과 形成方向 연구 윤 덕 희
- 민족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민족통일 윤 경 태
- 통일문화연구의 방향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김 학 성
- 남북한 문화예술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이현경·최대석

〈하 권〉

- 북한 노동자문화 연구 손기웅·길태근
- 남북한 여성 비교연구
-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 이 금 순
-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연구 주 강 현
- 최근 북한 문예정책의 비판적 연구
- 「주체문학론」을 중심으로 - 김 재 용
- 통일문화 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 김 영 준

차 례 (상권)

■ 統一文化의 概念 정립과 形成方向 연구 윤 덕 희

| | |
|----------------------------|-----|
| I. 서 론 | 3 |
| II. 통일문화의 개념 | 14 |
| III. 남북한 문화에 대한 비교인식 | 31 |
| IV.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 70 |
| V. 결 론 | 103 |

■ 민족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민족통일 윤 경 태

| | |
|----------------------------|-----|
| I. 서 론 | 117 |
| II. 민족통일을 거쳐 정치적 통일로 | 119 |
| III.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 | 130 |
| IV. 민족공동체와 문화적 통합 | 141 |
| V. 결 론 | 154 |

■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김 학 성

| | |
|---------------------------------|-----|
| I. 서 론 | 159 |
| II. 통일문화의 개념설정문제 | 170 |
| III. 통일문화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재조명 | 179 |

| | |
|--------------------------------|-----|
| IV. 독일사례를 통해 본 통일문화연구의 방향..... | 247 |
| V. 결 론 | 273 |

■ 남북한 문화예술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이현경·최대석

| | |
|--------------------------------|-----|
| I. 서 론 | 291 |
| II. 통일문화연구의 현황 및 남북한 문화정책..... | 298 |
| III. 북한문화예술의 실상 | 332 |
| IV. 남북한 문화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 | 508 |
| V. 결 론 | 570 |

統一文化의 概念 정립과 形成方向 연구

윤 덕 희*

- I. 서 론
- II. 통일문화의 개념
- III. 남북한 문화에 대한 비교인식
- IV.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 V. 결 론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사업부 정치학 박사

빈 면

I. 序 論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통일문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심적인 통일접근시각을 군사, 정치적 해결을 통한 영토분단의 극복이라는 통일의 외형에 맞추어 왔다. 둘째,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통일연구가 제도통합 중심의 통일방안의 제시와 이의 실현을 위한 남북협상 및 기능주의적 남북접근전략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외형적인 통일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민족통합을 가능케 하는 사회내적 통합의 문제는 당연히 통일논의의 뒷전에 밀리게 되었다. 더욱이 통일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구상해보는 통일의 내용과 본질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동안 통일정책은 물론이거니와 통일논의 및 연구도 국내외적 환경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즉, 각 체제내의 정

1) 현재 남한의 통일정책은 기능주의 또는 신기능주의적 통일방법론에 의존하고 있다. 기능주의론은 비정치적 국가통합 방법으로서, 여러 나라 사이에 격증하는 생산의 분업화와 상품 및 사람들의 광범위한 교류가 상호의 협력과 공동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창출하게 되며,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자연발생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신기능주의론은 국가통합에 있어서 현존 정치기구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책적으로 이해집단간의 교류를 촉진하면 이들 이해집단들은 그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하게 되고, 결국 정치적 동맹관계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구영록·임용순 편,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3, pp. 179-180.

권수호용 이데올로기 - 남한의 반공이데올로기, 북한의 주체사상 - 는 통일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자신의 체제개혁이나 체제비판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 현상유지차원의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의거한 남북한 통합방안에만 주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통일문제 연구는 남북한체제를 이루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틀 내에서 목적과 내용이 없는 방법론, 즉 미래상 없는 현상통합방법론이 그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 방안이 어떤 목표를 향할 것인가에 대한, 즉 미래의 통일 정치·사회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미래상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법론에 관한 고려가 결여된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추상적인 미래상 제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들어 문화적 측면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환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탈냉전의 국제정세 변화와 더불어 독일통일 후 사회적 혼란의 교훈은 실질적인 민족통합이 주민들간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내적통합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둘째,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사회내의 변화로 통일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계 각층의 통일논의가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계는 물론 그동안 통일문제를 비교적 등한시해왔던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철학 등의 인문학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자연과학 분야도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

하면서 통일논의에 있어서 문화계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힘입어 통일문제 연구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첫째, 통일방식에 관계없이 통일과정에 있어서 문화가 통일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남북한이 정치·군사적 분야에서의 대결상황에서 문화분야의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의 단절을 피할 수 있다는 기능적인 측면이 외에도, 문화적 접촉 및 이해를 통해 체제에서 오는 적대감을 완화하여 민족화합의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둘째, 문화는 통일의 목표인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이다. 남북한은 한 세대 이상에 걸쳐서 서로 다른 체제적 이념에 따라 각기 발전을 추구해옴으로써 문화면에서 심한 이질화 현상을 빚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도적으로 통합이 되었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체제에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문화는 민족을 구성하는 기반이기도 하지만 또 민족을 구체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공통의 문화적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민족으로서의 공통기반을 약화시킬 뿐만아니라 민족을 구체화하는 수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통일이후의 한국사회를 전환기의 사회로 볼 때, 문화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진다. 안정된 사회에서와는 달리 광범하고도 근본적인 사회변동이 진행되는 전환기 사회에서 문화는 그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²⁾ 왜냐하면 사회변동의 진행과 추진과정에서 문화가 변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인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환기 사회의 사회성원들은 기존의 행위양식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행위양식을 선택, 창조, 수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며, 그와 같은 조건에서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위노선을 인도할 가치, 신념, 의미의 체계를 필요로 한다. 사회내에 사회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신념, 의미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못할 때, 문화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넷째, 1980년대 후반기 이후 분출하기 시작한 남한내의 다양한 통일논의 및 연구들의 내용들은 상호간의 연계성 결여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적 기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문화의 총체성을 바탕으로 각계 통일논의의 상호연계성을 가능케 하는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연구 및 논의에 있어 문화분야의 연구가 시도되어 왔지만,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통일연구나 통일정책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중요

2) 임희섭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1988, p. 18.

시하는 분위기는 쉽게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전략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나머지 문화를 정치, 군사에 대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이었다.³⁾ 그 결과 남북대화나 국제정세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논의가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문화’ 개념의 복잡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연구별로 개념정의 및 연구의 초점이 다양하다. 우선 통일문제에 있어서 문화분야의 연구는 문화예술계 내지 인문학계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이들은 문화의 개념과 연구의 초점을 구체적인 표현양식의 부문별 연구(예컨대, 문학, 언어, 예술, 또는 가치관, 종교 등)에 두고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사회과학계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부문별 행동양식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가치관, 삶의 양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망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따라서 통일연구에 있어서도 문화개념이 통일되지 못하고 개념상의 차이는 같은 문화연구라 하더라도 접근상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으며, 이상의 두가지 접근태도를 연결시켜보려는 노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3) 여기에서 문화의 ‘상대적 독자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의 남북한 체제와 같이 정치화·군사화의 정도가 높고, 국가권력의 통치행위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문화영역의 상대적 독자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상 문화의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남북한간 대치상황과 냉전이테올로기가 지속되는 한 통일문제에 있어서 문화의 상대적 독자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문화분야의 연구는 주로 민족사적 정통성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문화의 이질화 규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⁴⁾ 즉, 문화적 전통성에 기반한 남한의 민족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북한문화의 이질화 및 왜곡현상을 규명하는데 주력해왔다. 민족적 정통성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관심은 통일국가의 사회·문화상을 모색하는 연구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사회·문화상을 모색하는 연구관심이 어디까지나 현존체제를 명분화하는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넷째, 문화분야의 연구는 문화예술의 기능적 교류증진을 통한 문화통합에 중점을 두어왔다. 문화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나 목적 지향성 없이 남북 문화교류 방안 등에 대한 단기적, 기술적 차원의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북대치관계 속에서 문화분야의 연구나 논의가 북한을 이해하고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

4) '민족사적 정통성' 문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논의·연구되었으며, 이는 당시 남북한 두 체제 사이의 치열한 체제경쟁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통일정책」에 게재된 다음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최창규, "민족사적 정통성 연구방법론," 1권2호, 1975.6; 이성근, "한국의 평화통일과 정통성 개념," 1권2호, 1975.6; 이병엽, "민족사적으로 본 우리의 정통성," 1권3호, 1975.10; 이병용, "민족사적 정통성 이론 체계화," 2권1호, 1976.4 등이 있다. 이들 논의에서 다루어진 민족사적 정통성 개념은 문화적 전통성, 국가의 법통성, 정치적 내지 사회체제의 정당성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남북한 두 체제의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남한체제의 대북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원용되었다.

화를 해소해나가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학문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통일문화 형성을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일성취의 외향적 측면보다는 그것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내면적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의 중심적인 통일접근 시각은 영토적 통합이나 국가기구의 통합과 같은 통일의 외형보다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민족통합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통합을 형성·심화시키기 위한 근원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통일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 및 의미를 재정립함으로써 통일문화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이념과 사회경제구조에 상응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문화의 성숙을 지향할 문화체계를 제시한다. 셋째, 이에 맞추어 남북한 문화통합 및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2. 研究方法 및 研究의 構成

본 연구는 통일문화 연구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첫째, ‘문화적 시각’을 견지하고, 둘째 ‘분단과 문화구조의 상관성’을 밝히는 것이 통일문화 연구의 범주화에 있어서 핵심부분이라는 인식에 기초하며, 셋째 통일연구에 있어서 대북정책적 차원

보다는 남한 자체의 연구를 강조하는 남한중심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첫째, 통일문화를 ‘문화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함은 1/ 무엇보다도 문화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며, 2/ 특히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먼저 우리문화를 안으로 돌아보는 내향적 성찰(introspective reflection)이 전제되어야 하며, 3/ 나아가 남과 나의 관계를 배우려는 관점으로서의 연구를 의미한다.⁵⁾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문화의 개념은 문화인류학에서 제시되어 사회과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총체론적인 관점과 관념론적인 관점의 두 가지 범주를 포괄하는 개념정의이다. 문화란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 장기간 적응하는 가운데 좀더 효율적인 적응을 가능케 하는 체계를 만든 것, 즉 적응체계이다. 따라서 문화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의 체계로서의 가치관, 철학, 세계관 - 즉,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체계, 상징체계 - 뿐만 아니라 규칙체계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동 자체를 모두 포함한 생활양식의 총체를 의미한다.⁶⁾

5) 문화비교의 개념과 연구에 대해서는,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지사, 1994, pp. 115-142 참고.

6) 좀더 간단히 표현하면 문화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삶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와 행위를 이루어 내는 전 과정의 사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삶의 현상을 말한다. 위의 책, p. 7.

또한 ‘문화적 시각’에서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한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상적 기초의 대전제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⁷⁾ 1/ 제일성(齊一性)의 전제로서 문화의 제일성이란 어떤 종류의 문화이건간에 보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다 똑 같다라는 전제이다. 이러한 문화의 제일성은 인류문화의 보편성과 특정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논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2/ 상대성의 전제로서, 문화는 특수한 차원에서는 각기 다르다는 전제이다. 어떤 문화의 요소이건 인간의 행동이건간에 다 그러한 요소와 행동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며,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요인의 선악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총체성의 전제로서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통합성 자체가 총체적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론적인 기초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흔히 개입되어 온 편견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제도적 분리주의 등을 배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화분야에 있어서의 통일문제를 단순히 현상유지 차원의 남북한 문화통합에만 초점을 맞추어온 기존의 기능주의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분단이 초래한 남북한 사회구조의 파행화와 이에 따른 문화적 왜곡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7) 위의 책, pp. 26-35.

을 문화적 접근법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이러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분단’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고 있다. 통일은 분단의 극복형태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분단이 남북한 사회현실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분단현실의 개념적 증립화 과정을 거쳐야만이 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분단은 존재형태상으로는 한 민족이나 한 국가가 둘로 나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분단은 자기완결적인 개체의 인위적이고 타율적인 분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정의 할 수 있다.⁸⁾ 이러한 분단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분단의 원인이 내생적이고 평화적이기 보다는 외생적이고 강제적인 것이어야 하고, 2/ 분단상태가 그 자체로서 자족적이기보다는 민족의 자기완결적 재생산을 저해하는 본질적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3/ 분단이 정치사회구조의 파행화를 가져와 고착·심화되고 이에 따라 분단의 재생산기제가 내면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개인에게까지 분단의식이 고착화되는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⁹⁾

따라서 분단은 이제 단순히 강요된 외재적인 현실이 아니라 일정하게 내면화된 현실이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이 남북한 사회구조를 어떻게 구조

8) 정대화, “통일체제를 지향하는 ‘분단체제’의 탐구”, 「창작과 비평」 1993 가을, p. 289.

9) 위의 글, p. 290.

시켰는가 하는 것을 규명해야 한다. 즉, 지난 40년간의 남북 사회변동에 분단현실이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 사회가 갖는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그로 인해 야기되는 남북한간의 이질화 및 체제대립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과 규명이 있어야 한다.¹⁰⁾ 이러한 접근법은 남북한 각 체제 내부 변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문화 연구는 바로 분단으로 왜곡된 남북한 내부의 문화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 지식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체제내부 변혁의 중요성에 있어서 남북한 모두의 변화가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의 국제적 및 한반도 내적 상황과 남북관계의 역학을 고려해 볼 때, 남한의 자기 개혁적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통일방식은 크게 나누어 평화적 통일과 비평화적 통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의 주 객관적인 상황으로 예상해 볼 때, 평화적 통일이 바람직 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높다. 평화적 통일은 점진적 통일과 급속한 통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 경우 다 통일과정에서 남한이

10) 이러한 의미에서 '분단과 사회적 문제구조의 상관성'을 밝히는 것이 분단 현실의 정치사회학적 범주화라고 하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변형윤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까지, 1986, p. 397 참고. 또한 이효재 교수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 시대 사회구조의 성격을 어떻게 특징지었으며 이로써 형성될 우리의 인식상태, 가치관 및 인간관계와 사회행동, 즉 모든 사회적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창작과 비평」 제 14권 1호, 1976 봄, pp. 250-268.

수행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독일통일이 서독의 발달된 민주화와 사회경제구조가 토대가 되어 가능했듯이 한반도통일에 있어서도 남한의 역할과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남한 역할의 중요성은 통일기반 조성으로서의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남한사회의 개조문제를 중심으로 통일문화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민족공동체의 의미를 통해 통일문화의 개념과 통일문화 형성의 기본목표를 설정해보고, 이어서 남북한 문화구조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 및 공유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일문화 형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정책수립의 골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統一文化의 概念

1. 民族共同體와 統一文化

통일문화는 궁극적으로 민족통합의 달성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의 개념과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

요하다.

민족공동체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 ‘민족성’이라는 추상적인 결속력과, 이를 바탕으로 현실상황에서 기능적으로 형성된 ‘국가목표’라는 구체적인 결속력으로 이루어진 민족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개념은 공동체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적 공동체론과 도이치와 하스로 대표되는 통합이론가들의 기능적 공동체론을 결합시킴으로써 도출될 수 있는 개념이다.

문화적 공동체론은 공동체 내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질적 가치관을 무엇보다 중요한 공동체의 형성요인으로 간주하고 종교, 국가의지, 민족의식 등의 신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²⁾ 공동체를 결속하는 실체, 즉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을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에서 찾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공동체’란 일정한 영역에서 동류의 언어, 생활방식, 가치체계를 지닌 사람들이 공통의 숙명적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형성하게 된 동질집단이다.

반면에 ‘기능적 공동체’란 지리적으로 제한된 영역 내의 주민들이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등의 분야에서 통합되거나 연관된 사회체계를 유지할 때 성립된다.¹³⁾ 여기서 공동체의 한

11) 한홍수,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의식의 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 217.

12) Sebastian de Grazia, *The Political Community: A Study of Anomi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p. 17, p. 189

13) Jessi Bernard, “Community Disorganization,”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3*, New York: Macmillan, 1968, p. 163.

기능의 수행과정은 또 다른 기능에의 필요성을 유발시키게 됨으로써 기능의 전이과정을 수반한다. 기능적 공동체론은 기능의 전이적 통합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때 사회기능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공동체와 기능적 공동체가 일치할 때 민족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즉, 공동체의 문화는 축적된 역사성과 함께 동의를 통한 공동체의 구체적 현실성도 함께 반영한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전통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의 현실적 지향목표가 생성되며 이러한 현실성이 공동체를 결속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형성은 구성원들이 민족의식과 국가목표의 추구에 있어 공감대적 가치관을 형성할 때 가능해진다. 민족의식은 민족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성립된다. 민족공동체를 성립시키기 까지 각 민족의 역사적 경험이 천차만별이듯이 그들이 지니는 민족의식 또한 다양한 내용을 지닌다. 그러나 각 민족이 지니는 역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구조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애착의 대상을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인종의 동질성, 언어의 동질성, 공동의 역사, 공동의 영토, 종교, 전통과 관습의 동질성 등이 그것인데, 이들 기준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아집단(we group)임을 느끼게 하여 주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로서 한 민족의 민족의식을 형성시켜 주는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의식이 공동체의 역사성 속에서 생성된 결속의 근거라

면 국가의지는 공동체의 현실적 조건 아래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 목표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지란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강제적으로 성립된 현실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지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공동체의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나 통상 영토적 통일, 국가적 번영의 달성,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더불어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구조의 확립,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신의 보장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¹⁴⁾ 그러므로 민족의식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역사적 생성물인 반면에 국가의지는 공동체가 추구하여야 할 현실적 지향을 제시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을 동일한 언어, 영토, 혈통, 역사성, 종교 등의 객관적 보편성과 상호애,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독립성, 귀속의지 등의 주관적 특수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단¹⁵⁾으로 인식할 때, 민족공동체란 하나의 민족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강한 동질감에 의거하여 사회기능을 수행하는 문화, 기능적 동류집단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¹⁶⁾

민족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사회

14) 한홍수,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 형성,” p. 224.

15) Karl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Boston: MIT Press, 1966, p. 17.

16) 민족국가라는 일반적인 용어보다 민족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일지향성을 보다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며, 민족공동체 개념이 한국적 상황에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 각 기능을 국가차원의 통합된 수준으로 유지시키며, 민족 번영의 공동체적 목표 아래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강력한 통합의 수준을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동질성의 유지와 사회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현실적 목적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뜻한다. 남북한의 경우 민족공동체 형성은 민족적 동질성을 재창조하는 일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향에 대한 공통된 가치관을 추구해야 하는 미래적 과제를 포함한다.

2. 統一文化의 概念化

‘통일문화’에 관한 논의는 1985년 남북한간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비롯한 비정치적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¹⁷⁾ 이후 학계, 문화계내에서 통일문화에 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있어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

17) 당시 분단문화 극복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학, 문화예술, 언론, 교육 등의 분야에 걸쳐 통일문화 지향이라는 주제로 국토통일원의 지원하에 남한 학계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 적이 있다. 국토통일원 주최의 통일문화 심포지움으로 「통일문화 지향과 문화예술」(1985.11.25), 「통일문화 지향과 언론계의 역할」(1986.6), 「통일문화 지향과 교육계의 역할」(1986.10) 등이 개최되었다.

적 연구나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통일관련 문화분야 연구의 문제점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통일문화’의 개념에 대한 혼란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라는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다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통일문화’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문화에 관한 논의에서 개념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논하는 경우가 많았고 구체적으로 논할 경우에도 입장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어온 ‘통일문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문화개념의 범주와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분류된다. 사회과학계열 전공자들은 대부분 총체론적 전망¹⁸⁾에 의거해서, ‘통일에 대한 가치관, 행동양식’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문화성향을 남북한 사회구조와의 상관관계속에서 구체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문화예술계의 연구자들은 주로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 예술, 언어, 도덕’ 등 개별문화분

18) 사회과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인류학자 E. Tylor가 정의한 넓은 의미의 문화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획득된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로서 인간들이 사회생활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모든 생활양식으로 이해된다. John B. Thompson, *Ideology and Modern Cultur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 128. 문화의 개념에 관해서도 같은 책, pp. 122-162 참고.

야에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통일문화’의 개념정의를 시도한 것은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중 통일문화에 관한 개념정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통일문화의 개념은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통일체를 열망하는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문화’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통일문화는 ‘남북한 문화의 일질성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남북한 문화의 도덕성과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것과 아울러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¹⁹⁾

- ‘통일문화란 남북동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통일에 관한 이념(가치관, 신념) 지식 법률 정치와 경제제도 예술 도덕 등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이며, 기존문화와 달리 새로이 형성되거나 창조되는 성격을 가지며, 남북한 동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놓아야 할 생활양식을 말한다.’²⁰⁾

- ‘통일문화란 40년동안 남북한 분단생활을 통하여 각자성을 갖게 된 이질화한 생활양식 및 그 속에 들어 있는 법률, 도덕, 신앙, 지식, 예술, 관습 등의 각자성을 민족사적 정통성 전개에 맞게 민족적 단위(단일적 근원)으로 통합에 나가는

19) 조민,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2권 2호.

20) 양홍모, “통일문화형성론 서설,” 국토통일원, 「통일논총」 제5권 제1호, 1985. p. 6.

능력과 의지 및 관습의 복합적 총칭이다.’²¹⁾

- 통일문화라는 말 속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라는 뜻과 아울러 통일후에 마땅이 이땅에 자리잡아야 할 문화의 뜻까지도 포함된다.²²⁾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논의에 나타난 ‘통일문화’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초점이 목표/과정, 기능/당위, 현재적 차원/미래적 차원, 과거(전통)중심/미래지향적, 실천적/규범적, 현상타파/계승,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분석 차원이 상호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통일문화의 구성요소의 다양함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통일문화의 개념화는 통일문화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시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통일문화의 내용은 우선 ‘통일’의 의미를 재정립함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통일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및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절적이고 대립적인 분단체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통일이기도 하다.

2/ 통일은 ‘현재적’ 관점에서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왜곡된 현실의 타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미래적’ 관점에서

21) 김창순, “통일문화의 창조운동을 논한다,” 「북한」 1984. 3월호.

22) 정세현, “통일문화 창조의 전망,” 한국공연예술평론가협회 주최, 「통일문화 심포지엄: 주제 통일문화 지향과 오늘의 공연예술」 1985. 2.

는 새로운 통일국가의 미래상의 창조를 내포한다.

3/ 통일은 '실천적'인 운동인 동시에 그 자체가 실천적 운동을 규율하는 '이념 및 규범'을 내포하고 있다.

4/ 통일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작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을 통하여 세계사적 조류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통일'의 복합적 의미는 '통일문화' 개념의 내용상 복합성을 설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통일문화는 '목표'와 '과정'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지향해야 할 문화체계인 동시에 남북한 이질적 문화의 극복과정에서 제기되는 문화적 현상을 지칭한다.

2/ '규범'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연결시키는 개념으로서, 통일문화는 통일국가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문화체계인 동시에, 이를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확산하고 남북한 문화의 공통기반을 확인·확산시키며, 나아가 문화개혁을 추진하는 실천적인 사회, 문화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3/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분단에 의해 왜곡된 문화구조의 극복을 현재적 과제로 삼되, 이를 분단현실의 틀 안에서만 한정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통합과 민족문화의 창조라는 미래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동원'적 기능과 정책지도 '이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으로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국민들의 의지와 동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사회적 동원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정책을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수립하는 정책 지도이념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²³⁾

5/ '전통'적인 것과 '발전'적인 것, 민족 '특수성'과 인류 '보편성'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통일문화의 개념은 인류의 보편적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문화적 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복원·계승·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통일문화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통일한국의 사회구성원이 다 같이 지향해야 할 신념, 가치체계, 행동양식 체계로서 통일한국의 이념에 부합되는 민족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과정을 통해 분단된 사회 문화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를 의미한다. 통일문화의 개념은 결국 통일국가의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화 극복이라는 두 측면을 연결시키는 문화규범 및 그 실천정책의 창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3) 문홍주, “통일문화 지향과 교육계의 역할,” 국토통일원 통일문화심포지움 「통일문화지향과 교육계의 역할」 1986.10. pp. 16-17.

3. 統一方式과 統一文化

통일문화 개념은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문화상이라는 측면에서 규범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문화를 현실적으로 형성하는 데는 통일방식과 이에 따른 통일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한국의 모습도 통일방식과 과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문화 개념이 상정하고 있는 통일방식의 최저선은 평화적 통일이다. 평화적 통일방식 한계내에서 예상가능한 통일 유형은 통일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점진적·단계적 통일과 급속한 통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점진적·단계적 통일: 장기간에 걸친 분단과 이로 인한 대립 및 이질화의 심화를 고려할 때 남북한간의 교류접촉, 상호접근 및 궁극적인 기능적 통합을 상정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이 경우 남북한 한 쪽의 체제이념이나 가치가 지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추구할 체제이념과 가치가 수립될 수 있다면 통일문화 형성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러한 이상적인 합의통일의 경우보다는 한 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다른체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자신의 체제로 접근시키면서 중국에는 흡수통일하는 상황을 정책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합의통일도 체제경쟁력의 차이와 문화 격차로 인해 내용적으로는 흡수통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기능주의 접근에 의거한 남한의 통일정책은 체제우월성을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북한유도정책을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이라 부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두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전에 남북한 주민들사이의 가치체계의 이질화가 어느정도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통일문화상의 수립이 요청된다. 이에 맞추어 남북한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상호접근과 상용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각자의 사회현실과 문화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2/급속한 통일: 독일통일 이후 한반도에서의 조기통일을 예견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나 조기통일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남북정부간의 협상과 타협, 그리고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²⁴⁾ 조기통일을 예견하

24) 양 정부간의 급속한 합의통일은 예멘의 통일방법으로서 문화적 이질화 극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없이 합의로 인해 선택된 체제유형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체제는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높은 통합력을 발휘하는 민족공동체와는 거리가 멀고, 문화적 기반을 얻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할 것이다. 예멘의 경우 결국 급속한 합의통일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예멘의 통일사례에 대해서는, 김국신·김도태·여인곤·황병덕,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통일 1.2」 한울아카데미, 1994를 참고할 것.

는 근거는 주로 북한경제의 파탄과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체제관리능력의 부족, 엘리트간의 권력투쟁 등으로 북한체제가 붕괴하는 경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통일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독일통일에서 보듯이 북한체제의 붕괴는 남한체제에 의한 북한체제의 급속한 흡수로 귀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급작스런 문화이식 현상에 의한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된다. 즉, 남한의 상업주의적 소비문화와 향락문화, 전통윤리의 부재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화가 신속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한 주민들간의 문화적·심리적 갈등이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단시일내에 남한의 사회구조와 문화를 북한에 그대로 이식하기 보다는 남북한 사회의 기능적 통합 이전에 위기관리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간에 북한지역에서는 기존의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에 주력해야 하며, 남한측에서도 북한의 문화를 수용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물론 통일국가가 지향해야 될 문화상의 수립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단계적 통일이건 급속한 통일이건 통일문화의 수립은 민족통합의 선결조건이 된다. 즉, 통일방식에 관계없이 민족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문화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일관되게 적용될수 있는 실천적, 규범적 문화체계의 구상이 필요하다.

4. 統一文化 形成의 基本方向

민족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통일문화는 남북통일의 궁극적 목표인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본원칙과 부합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민족공동체는 남북한간의 대립·경쟁을 극복하고 조화점을 찾음으로써 통일이전 남북한 체제가 지향하였던 이념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남한과 북한의 기존 체제하에서 나타났던 상극성을 해소하고 서로의 장점들을 부각함으로써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를 통일한국의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민족공동체의 내용은 국제사회의 발전추세 및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체계와 부합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각기 체제 대립에서 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폐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 개방, 민주화 등으로 요약되는 세계적 조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통일한국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민족공동체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사회내 특정 집단이나 계급, 혹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주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사회내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체계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사회의 변화방향을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민족공동체의 지향성과 부합되는 방향에서 통일문화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문화가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문화상이라는 점에서 당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통일문화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지닐 때만이 통일과정과 민족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문화의 형성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파행적 사회문화구조의 극복을 전제로 하는 만큼 내부개혁을 통한 기존 남북한 문화의 일정한 변화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남북분단과 적대상황에 의해 왜곡된 각 문화가 각 체제의 틀 내에서 각자의 문화적 전통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사회문화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²⁵⁾ 특히 남한의 통일문화정책은 대북정책을 넘어서서 남한내부의 통일대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 주민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통일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전통을 확산 시킴으로써 통일문화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은 한 문화가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25) 이러한 점에서 남한내부의 문화구조의 개혁과 통일문화를 지향하는 문화풍토의 조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환경과 역사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문화의 특수성과 정체성의 문제는 ‘환경과 역사속에서 축적된 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적 전통을 뜻하는 것이며, 문화적 전통이 곧 그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²⁶⁾

넷째, 남북한의 사회구조의 특성과 변화방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미래 사회에 대한 높은 적합성(relevancy)을 갖는 문화유형을 통일문화로 형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한 사회는 체제이념적 성격상 상극성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라는 사회변동을 겪어왔으며, 산업화의 정도는 달라도 근대화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구조적 변동에 맞추어 현대적 사회구조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구조에 적합성을 갖는 가치, 규범, 도구 등의 문화유형이 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계층, 직업, 성별, 세대, 지역간의 격차를 초월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할

26) 문화정체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전통문화-traditional culture’와 ‘문화전통-cultural tradition’을 구별해야 한다. ‘전통문화’는 과거 전통사회의 문화라는 뜻이며, ‘문화전통’은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축적되어진 문화양식으로서, 현재의 사회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양식이 되고 있는 문화를 뜻하는 것이다. 물론 전통문화를 배놓고서 문화전통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모든 전통문화가 계승해야 될 문화적 전통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전통을 계승한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환경에서 적합성을 지니는 전통문화의 유형을 창조적으로 재조정하고 그것을 더욱 개발해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현암사, 1985, p. 19.

수 있는 문화유형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적 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문화적 통합성은 문화적 다양성의 포용을 전제로 한다. 통일은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이념을 지닌채 살아오던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면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이질성들이 서로 뒤섞이는 과정이다. 통일문화 형성과정을 통하여 사회구성원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이질화된 문화구조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이 가져오는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소시켜나가야 한다. 나아가 통일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장해줌으로써 전체사회의 다양한 하부문화(sub-culture)의 내적 통합을 이루어내는데 기여해야 한다.

일곱째, 통일문화가 추구하는 민족문화의 발전은 국제사회의 문화적 변화추세 및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와 부합되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Ⅲ. 南北韓文化에 對한 比較認識

통일문화 연구에 있어서 남북한 문화에 대한 비교분석이 갖는 의의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및 공유점을 규명함으로써 이질화 극복과 공유점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한다. 둘째, 남북한 문화구조의 특수성 및 변화방향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통일국가의 문화상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 문화가 분단으로 인해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가를 규명함으로써²⁷⁾ 분단문화의 극복을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전제로 삼을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 문화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 의거한다.

첫째, 남북한 문화의 형성요인으로서 각 사회의 변동과정

27) 1970년대 이후 사회과학계에서는 분단과 남북한 사회구조와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백낙청 교수는 분단이 남북한 사회구조에 규정성을 갖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명제하에 '분단체제론'을 다시 제기하고 나왔다. 즉, 남북한은 분단체제로 인하여 사회발전이나 민주화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분단체제는 독자적인 재생산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남북한 주민들의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학술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 할 것.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 1992 가을; 이종오, "분단과 통일을 다시 생각해보며: 백낙청교수의 분단체제론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1993 여름; 손호철,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백낙청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1994 여름.

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 사회의 문화가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 효율적인 적응을 가능케 하는 '적응체계'라는 개념적 틀 안에서 설명할 될 수 있다는 것과 문화란 시간적 흐름속에서 누적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편, 한 사회의 사회변동은 물질 토대를 이루는 생산양식과 생산관계, 국가와 권력관계 등과 같은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문화의 성격도 각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관관계속에서의 사회변동에 비추어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은 분단이래 정치·경제체제의 성격을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형성시켜 감에 따라 그 문화의 성격도 달리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한문화의 변화과정은 남한 자본주의의 발전·정착과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면에 북한 문화체제의 변화과정은 북한 사회주의 발달과정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이다.

셋째, 그러나 남북한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자본주의문화와 사회주의문화의 일반적 특성을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 각 문화의 성격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커다란 범주내에서 각기 특수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의해 다른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수성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문화정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회 변동의 각 단계에서 그 사회의 특수한 상황이 각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행동양식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성을 가져왔는가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²⁸⁾

문화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남북한 사회의 특수성은, 체제의 근본성격, 근대화, 분단 등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²⁹⁾ 이러한 정치, 경제, 역사적 요인이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한 문화의 성격이 어떻게 이질화되었고 또한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

28) 남북한사회의 변동과정을 밝히려는 노력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 문화체계의 형성·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더욱이 두 문화체계를 대비시켜 비교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남북한의 문화를 개별적인 차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으나 그것도 정책이나 그 이념적 토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성과의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의 문화정책을 분석한 것으로 박상천·김경웅·류보선의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이춘길,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북한문화연구」 1집, 1993이 있으며, 남한의 문화정책을 다룬 연구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1992;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발전연구소 연구논문집」 1집, 1993; 김여수,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예술논총」 1집, 1988; 정홍익, “문화정책의 역사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1991 등이 있다.

29) 이는 ‘통일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남북한 문화성격을 비교한다고 할 때, 남북한 문화가 각기 또는 공히 지양해야 할 문화적 요소와 지양해야 될 문화적 요소를 가려내기 위하여 현 분단상황에서의 남북한 문화의 주요 부문을 범주화해 본 것이다.

추기로 한다. 첫째 체제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차이, 둘째 근대화로 인한 문화변동의 방향, 셋째 전통문화의 변화·유지 현황, 넷째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왜곡현상 등이 그것이다.

1. 南韓文化의 性格

해방후 남한사회의 성격은 근대화를 통한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 및 발달과정에 의해 규정지워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한사회는 일제 식민지배의 유산, 분단, 군사독재에 의해 3중으로 가치체계가 굴절되는 문화적 왜곡현상을 경험해왔으며, 이것이 다른 자본주의국가에서의 문화현상과의 편차를 설명해주는 특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문화의 변화단계를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구분지어 보면,

- 1945년~1959년: 자본주의문화의 도입기로서, 문화적 특징은 미국식 자본주의문화의 도입이 전통문화와 갈등을 빚음으로써 초래된 가치관의 혼란이다.
- 1960년~1980년대 중반: 자본주의문화의 확산기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보편화되는 시기이다. 문화적으로는 상업적 대중문화와 향락문화, 그리고 권위주의적 군사문화의 확산이 특징이다.
- 1980년대 중반이후: 자본주의문화의 고착화 시기로서,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다원주의적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가치관 및 윤리의식의 부재가 문화적 특징이다.

가. 1945년~1950년대 말: 자본주의문화의 도입기

해방 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한국은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재편과정에 들어갔다. 경제구조의 재편성은 일본인 귀속재산의 처분과 농지개혁이라는 두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지배계급이 새로이 성장하는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과거의 지주계급을 대신하여 등장한 것은 식민지자본주의로부터 불하받은 귀속재산을 물적 기초로 하여 미국의 후원하에 급속하게 성장한 매판적, 관료적 부르조아지였다.³⁰⁾

해방에서부터 4.19와 5.16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시기의 문화적 특징은,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의 증대, 남북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합일의 실패, 미국문화 및 미국식 민주주의의 급격한 소개 등의 상황에 의해 유발된 문화적 갈등, 반공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전통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해방후의 남한사회는 전통적 가치규범 및 생활풍습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³¹⁾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는 미소 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분할점령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점령지로 변모되었

30)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새로운 사회학 강의」 미래사, 1990, pp. 132-34.

31) 주장현, “민족문화와 문화제국주의,” 「역사민속학」 2집, 1992, p. 76.

으며, 사회전반에 팽배해있던 민족주의적 가치 - 즉, 손상된 민족 고유문화를 회복하고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식 - 에도 불구하고 민족분단은 더욱 명확한 사실로 자리잡아 갔다. 또한 미군정 기간에 침투한 미국문화와 가치관은 서구 문명이 곧 선진문명이라는 등식을 심어주기 시작하였으며, 우리의 생활풍습에 대한 열등감을 조장하였다.³²⁾

자본주의문화의 도입 측면에서 보면, 해방과 동시에 시작된 미군정의 상황과 한국전쟁은 남한의 문화적 토양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 하에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자생적인 역사를 가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정책을 저지하려는 미국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 기간동안 미국의 영향은 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등과 같은 문화적 내용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으며, 미국의 문화와 가치체계가 한국에 이식되는 데 기여하였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전혀 없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적 의식과 문화의 도입은 문화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한국전쟁은 미국 문화의 대중적 확산과 그에 대한 맹목적 동경심리의 내면화가 이루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2) 이 시기에 양악, 양춤, 양식, 양복, 양육 등 '양자문화'의 우월성이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주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사회는 당시 까지도 반봉건 구조를 벗어날 수 없었고, 마을 공동체적 기반이 그런대로 온존되어 있었다. 당시의 미국문화의 침투에 대해서는 주장현의 위의 글을 참고할 것.

미국의 소비적 자본주의 문화는 규범문화와 가치체계 전반에 까지 확산되어 그 결과 휴전 후 50년대 말까지 남한 사회는 극도의 가치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가치와 미국에 의해 도입된 서양의 가치간의 갈등은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었으며,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지 못했던 남한 국민들은 심한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분단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전쟁은 분단체제의 완전한 성립과 함께 친미·반공 이데올로기가 전 민중적 수준에서 내면화된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과 더불어 이승만 정권의 노력에 의해 남한사회 내에 분단의식이 고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1960년~1980년대 중반: 자본주의문화의 확산기

5.16 이후 1960년대부터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화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보편화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동과 군사정권의 권위주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시기의 남한사회의 문화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의 문화구조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산업화에 의한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 1960년~1970년대의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남한 사회구조의 불균형 양상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 까지 나타났다. 즉, 산업화의 발전가치와 민주화 발전가치 사이

의 불균형과 긴장,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부의 편중화로 인한 분배구조의 악화와 계급적 양극화, 사회구조와 가치관 사이의 괴리 등이 그것이다.

산업화에 의한 이 시기의 문화적 특징으로는 첫째, 70~80년대에 걸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었으며, 일부 계층의 경제적 풍요는 소비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게 되고, 나아가서 쾌락주의적인 풍토가 만연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향락문화가 산업화되고 그와 함께 범죄나 비리 등도 증가하였다. 즉,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와중에서 국민들이 적절 경험한 불안, 극단주의, 쾌락주의가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산업화 요인에 의하여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합리성의 증대, 전통적 도덕성의 붕괴 및 새로운 가치기준인 실용성의 증대, 개인주의의 발달 등의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이 시기에 상업주의적 대중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현상도 주요한 문화적 변화로 지적될 수 있다. 남한의 대중문화는 남한사회 자체의 산업화에 수반한 결과적 산물인 동시에 미국 및 일본문화의 침투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두 요인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대중문화의 확산에 촉매제가 된 것은 라디오,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의 급속한 보급이었다.

전통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이후에 남한에서는

민족전통문화의 해체가 가속화하였다. 그 요인으로는 산업화,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확산, 정권에 의한 민족 및 전통문화의 정치적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유신정권의 등장이후 퇴폐적 외래풍조의 추방과 함께 전통문화의 개발이 강조되어 왔는데, 이러한 유신정권의 문화정책이 이후 남한에서 군사정권에 의한 민족문화의 왜곡과 이에 따른 민족전통을 둘러싼 사회내 이념적 충돌의 전례를 남겼다.

유신정권의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는 첫째, 근대화 정책의 수단으로서 자립경제에 대한 강조와 조화를 이루었다. 이 시대를 지배했던 이념은 위에서 언급한 철저한 반공주의 이외에도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조국근대화’, 경제발전에 의한 부국강병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지향’을 들 수 있다. 둘째, 상반된 논리로서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해체 현상을 전통과 민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치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시도하자는 것이며, 셋째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모델로 하여 가해지는 독재정치에 대한 비판을 전통적 가치관에서의 회귀를 통해 극복해보려 했다.³³⁾ 결국 당시의 민족문화의 이념적 지향은 충효정신과 같은 전통적 가치덕목의 부각 즉 유교적 전통의 복구로서 그 목적이 권위주의적 정권의 유지에 있었다.

이러한 유신정권에 의한 민족문화의 강조는 남한사회에서

33)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발전연구소 「연구논문집」 제1집, 1993, pp. 77-78.

‘민족’을 둘러싼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양분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래 국가와 그에 대항하는 비판세력 모두가 ‘민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를 민족문화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던 반면에 비판세력이 주장하는 민족문화는 ‘반외세,’ ‘반봉건’이라는 이념적 토대에 의거해 변화를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이념적 지향의 차별성은 주로 정치적 투쟁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1980년대까지도 남한사회에서 갈등 표출의 근본 요인이었다.³⁴⁾ 또한 산업화가 수반한 도시화, 새마을운동 등의 근대화 조치, 매스미디어의 보급 등은 농촌 고유의 집단적, 공동체적 풍습들을 사라지게 하였다.³⁵⁾

분단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반공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가

34) ‘민족’ 혹은 ‘민족문화’를 강조하면서도 양자의 관점이 서로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판세력의 민족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념적 틀은 정당성을 결여한 5공화국하에서 정치투쟁을 위한 논리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통일적 세계관을 창출할 것 같았던 민족문화의 이념적 지향은 결국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투쟁을 첨예화하는데 일조했을 뿐 문화의 기능인 국민적 가치 합의 창출을 통한 사회통합의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였다.

35) 새마을운동은 농촌 부흥이라는 차원에서 마을단위의 공동체 신앙 등을 모두 미신타파로 파괴해버렸다. 가정의례준칙 등의 강제적 규정은 사치 풍조를 막는다는 본뜻과는 달리 관혼상제풍습의 강제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더우기 이 시기 텔레비전 등의 전면적 보급으로 인하여 농촌문화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풍습이 견잡을 수 없이 도시화 되었다. 1980년대로 들어와서 농촌의 사정은 더욱 몰락하여 농촌의 공동화는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 주장현, “광복이후 남북한 생활풍습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15권 제2호, 1992, pp. 90-91.

핵심을 이루는 군사문화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군사문화는 유신체제를 통하여 반공산주의적 냉전의식 및 분단의식을 사회내 하나의 문화체계로 형성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제3공화국은 자신의 정당성을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찾았으며 따라서 민간부문보다 군부가 반공의 측면에서 더욱 상위의 질서로 군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군부적 성향, 이념, 구상에 의해 민간사회부문을 재편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곧 유신체제의 성립이다. 유신체제는 민간부문과 국민의식 속에 냉전의식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였으며, 매스컴, 교육 등 사회화의 주요 기구를 군부적 구상대로 작동시키게 되었다. 이로써 유신체제는 사회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분단의식을 가일층 체계적으로 강화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국민의식 속에 ‘레드 콤플렉스’가 명백하게 정착되었으며, 분단의식이 하나의 가치합의된 현실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³⁶⁾

또한 사회내에 정착해 있던 군사문화는 5공화국의 성립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과격하고 극단적인 의식이 팽배해지는데 기여하여, 획일주의와 흑백논리를 조성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성과제일주의 및 힘의 논리가 사회내 가치관의 왜곡현상을 심화시켰다.

36) 당시 통일에의 요구가 감정적 차원의 문제로 까지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변형운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pp. 419-420.

다. 1980년대 중반 이후 : 자본주의적 대중문화의 고착기

1980년대 초의 경제자유화 정책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는 자본주의의 고착화가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1987년 6월 항쟁, 6공화국의 가시적 민주화 등으로 남한사회는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남한사회는 비록 서구사회에서와 같이 다원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권위주의적 상태에서 벗어나 민주화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다원주의적 특성을 점차 표출하게 되었다.

첫째로 산업화에 따른 문화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문화적 특성은 시민사회의 자율성 회복을 통한 다원화, 자본주의적 대중문화의 정착, 소비 위주의 물질만능주의와 몰가치적 의식구조의 확산, 현대 산업국가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합리성의 증대, 개인주의의 발달 등이라 할 수 있다.

우선 6월 항쟁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중간집단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6공화국의 가시적 민주화에 힘입어 시민사회가 권력으로 부터 자율성을 회복해 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간집단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한에도 근대화 과정에서 중간집단이 생성되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은 채 권력의 조정을 받는 어용집단화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따라서 시민사회

가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중간집단들이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이 사회내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본래의 역할을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내 다원주의의 진작에 기여하고 있다.³⁷⁾

또한 합리주의의 증대 현상을 볼 수 있다. 과거 전통문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형식주의였다면 이제는 형식이나 과정보다 효율성이나 결과를 중시하고 있는 경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 허례를 중시하는 것에 비하여 실질을 앞세우는 의미에서는 진보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반면 효율성을 증대를 위해서는 수단이나 목적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폭력성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고속경제성장과 군사문화에 의한 사회·문화적 왜곡현상은 1980년대 중반이후 90년대까지의 극심한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가치관 및 윤리의식의 부재현상으로 귀결됨으로써 최근에 극심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둘째, 전통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남한문화는 왜래문화의

37) 그러나 크고 작은 이익집단의 수가 늘어나면서 무질서와 내분 쟁기기도 동시에 커졌으며, 이는 중간집단들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이기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가 쉽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본질적으로 여러 집단의 이익이 상충되는 구조의 다원화 사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집단의 집단이기주의적 현상은 산업사회로 이행될수록 계속될 것이며, 이의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정착이 시급하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미국문화의 영향은 예술, 대중매체, 영화, 잡지, 번역서적, 의상 및 미용, 주거문화, 음식문화, 언어 등 문화 및 일상생활 전반에서 찾을 수 있다. 동시에 최근에 들어서는 전통문화도 문화의 다원화라는 시각과 ‘민족의 재발견’이라는 인식속에서 복원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래 정부와 민간부문이 경쟁적으로 추진시켜온 민족문화 정책 또는 운동이 결과적으로는 남한사회에 민족문화를 유지 부활시키는데 공헌하였음을 의미한다.³⁸⁾

즉, 한편으로 민간부문의 주도하에 민족문화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되살리려는 운동이 1970년대 이래로 본격화하였다. 전통부흥운동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저항문화로 시작된 민족문화 되찾기 운동은 생활풍습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다.³⁹⁾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민족문화정책도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름의 결과물을 수확하기 시작함으로써 전래 생활풍습을 이해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남한에서는 유교이념과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인 문화가 잔존하고 있어서, 가족중심주의, 연고주의, 학벌주의 등이 아직도 국민들 의식구조에서 상

38) 민중주의의 관점이건 정부의 관점이건 전통에 대한 강조는 왜래문화에 대한 경계와 거부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그 공통된 인식의 토대는 있었다.

39) 탈춤을 비롯하여 풍물, 국악 등이 새롭게 조명되었고 특히 지식인 사회에서도 즐겨 놀아졌다. 풍물·민요 등이 대중 문화에 노출된 노동자문화 속에도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민족혼례, 민족무예, 민족의학 등의 다양한 전통들도 새롭게 검증되고 있는 중이다. 주장현, “광복이후 남북한 생활풍습의 변화,” 참고.

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한사회에는 농촌문화가 갖고 있는 공동체적이고 온정주의적이며 가족주의적 문화도 부차적이지만 공존하여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탈냉전의 국제적 추세와 남한 사회의 민주화·진전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내에 반공주의와 군사문화가 잔존하고 있어서 분단의식이 여전히 재 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北韓文化의 性格

북한문화의 성격도 국가와 권력관계, 생산양식과 생산관계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맥락이 배제될 수 없다. 특히 북한과 같은 현존 사회주의체제에서 사회변동이 ‘위로부터’ 그리고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문화의 성격은 그 정치경제적 특성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북한문화의 형성과정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발전 단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⁴⁰⁾

40) 우선 북한의 자신들의 문화를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로 규정짓고 그 전개 과정을 대개 7시기로 나누고 있다. 제1기는 1926년부터 1945년 8월까지이고 제2기는 1945년 8월에서 1950년 6월까지, 제3기는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제4기는 1953년 7월부터 1961년 9월까지, 제5기는 1961년 9월부터 1966년 10월까지, 제6기는 1966년 10월부터 1970년 11월까지이고 제7기는 19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

- 1945년~1950년대 말: 사회주의국가 건설기, 사회주의 문화 형성기
- 1960년대 초~1970년대 말: 주체사상에 의거한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기, 사회주의문화 발전기(주체문화의 도입이 사회주의문화 발전에 기여)
-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 침체기 또는 김일성 후계체제의 수립 및 공고화 시기, 주체문화의 정착기

가. 1945년~1950년대 말: 사회주의문화 형성기

해방 직후 북한에서 태동한 사회주의 정권의 최대 과제는 과거 조선조 지배 및 일본 통치와의 차별화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정권의 대내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과 식민지 경제를 청산하고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모색하는 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⁴¹⁾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는 소련의 강력한 후원하에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형성되기 시작된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다른 동구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었으며, 자생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경험이 부족했던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그 모방의 강도는 더욱 심하였

시기구분은 크게 보아 1953년 7월까지를 사회주의문화맹아기, 1953년 7월부터 1967년까지를 사회주의 문화 형성기, 1967년부터 지금까지를 사회주의문화 확립기로서 나누고 있다. 권영민 외,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현황」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0, p. 52.

41)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15.

다. 소련식 사회주의 모방을 문화적 특징으로 하는 북한의 사회주의이행기는 한국전쟁 후 복구시기를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출범을 경유하여 1950~53년 한국전쟁에 이르기 까지 전개된 이 시기의 북한 문화정책은 그 이후 어느 때보다 사회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었고 그 방법 또한 혁명적이었다. 혁명적 방법이란 자산소유의 불평등에 기초한 경제적 하부구조를 와해시키고, 봉건성에 바탕을 둔 상부구조로서의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원칙에 충실한 혁명적인 사회·문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전통문화에 상당히 집착하였으며, 북한정권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전통문화에 대한 관용을 보였다.⁴²⁾

북한문화의 초기적 설정단계가 급속히 성장하여 사회주의적 문화로서 체계화된 것은 6.25전쟁 이후 전후 복구시대를 거치면서였다. 한국전쟁은 무엇보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확립에 공헌하였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봉건적 및 식민지적 하부구조와 그에 연루된 상부구조의 청산작업을 가속화하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즉, 한국전쟁으로부터 극심한

42) 도홍렬, "남북한 문화체제의 비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이념 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p. 143-144. 당시 북한정권은 종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민족주의 세력, 기독교 세력 등 비공산주의 세력과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주의적 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였다.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북한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한편으로는 용이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농촌의 하향적 계층분화가 가속화되어 농업협동화에 대해 정서적으로 호의적인 분위기가 나타났고, 농업생산수단의 피폐화는 공동경작이나 협동영농 등을 객관적인 생활상의 요구로 바꾸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전시경제 체제하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각종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의 경험도 전후 농업 및 상공업의 전면적 사회화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⁴³⁾

북한은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 전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으며,⁴⁴⁾ 이 과정에서 문화구조를 과격하게 변형시킬수 있었다. 북한은 획일적인 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해 전시에의 사회적 주민통제와 동원화를 충분히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후일 병영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기초작업을 이룩하였다. 또한 전통적 제도나 생활양식을 타파하는 제도개혁 및 의도적인 사상교육을 시행하여 집단주의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58년에 완성된 농업의 집단화로 귀결된 전통적 토지소유제도의 변화는 북한사회의 문화구조와 주민들의 심리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43)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p. 28.

44) 한국전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김귀옥,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당과 인민대중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1992, pp. 329-359.

이 시기의 북한문화의 특성을 우선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전통적 문화구조와 가치체계가 제도적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방후 북한에서는 반제·반봉건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명분을 걸고 공산주의문화가 이식되면서 계급노선에 입각한 일련의 사회주의적 문화정책이 강행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기초한 경제적 하부구조가 와해되고 상부구조로서의 전통적 사회관계가 청산됨으로써 전통적 문화구조 및 제도가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문화생성기에는 사회주의 문화가 그 나름의 절대적인 가치체계로 주민에게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전의 전통과 관습에 집착하였으나 공산주의적 문화구조에 대해 강력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에 이미 무력화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제시대와 해방을 거치면서 전통문화와 민족적 정통성의 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이었다.⁴⁵⁾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은 주민들 가치체계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사회주의문화의 도입 측면에서 볼 때, 사회·문화생활 모든 면에서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자리잡았다. 북한정권은 전시에

45) 민족과 전통에 대한 일체감은 대개 왕권의 수호에서 비롯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기간 구 왕권은 민족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도 의세에 의해 성취됨으로써 민족적 저항의 핵심이 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의 사회적 주민통제와 동원화를 획일적 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였다. 예컨대 1958년 말에 채택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확립이라는 명제는 북한농촌을 집단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그후 1958년~1960년 까지의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을 감행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북한 전주민의 1/3 이상에 속하는 약 350만여명이 반혁명분자로서 규정되어 숙청되던가 또는 이주되었다.⁴⁶⁾

그리고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 북한정권은 전후복구사업과 김일성지도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주민생활에 대한 광범한 통제를 시도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미 종교의 자유는 완전히 소멸되었고 종교인은 반사회적 인물로 지탄받았으며, 지주나 이전의 핵심적 계층은 점차 주변적인 지대로 전이하였다. 이러한 전시적인 정책의 추진은 문화구조의 개조를 가속화시켰으며 점차 일인 전체주의 체제에의 일반성을 굳혀갔다.

한국전쟁은 북한에서도 분단문화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에게 한국전쟁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의 대결, 외세지배에 대한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의미를 지녔던 만큼, 한국전쟁 이후 반제·반미 정서가 더욱 고양되었으며 이는 남한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으로 연결되었다. 특

46) 도홍렬, "남북한 문화체제의 비교," p. 145.

히 전후복구사업의 강력한 추진은 이 사회에서 반대적 인사의 존립여지를 완전히 박탈하였으며, 공산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은 민족간의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심화시켰다.

나. 1960년~1970년대 말: 사회주의문화 발전기

북한역사에 있어서 1960년 부터 1970년대 까지는 사회주의 발전기라고 볼 수 있다. 전후 1950년대에 이루어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공업화의 토대위에 북한은 1960-70년 대에는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주체사상에 의거한 김일성 유일체제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급속한 사회주의 공업화를 통하여 전통적 문화가 급속히 와해되고 사회주의적 문화가 체계화되었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주체사상의 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문화의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현실화하는 데서 야기되고 있던 전통문화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식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갔다.

이 시기의 북한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근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문화의 성격은 남한의 근대화론으로 인한 문화변동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사회주의적 동원체제에 의한 근대화 전략으로 폐쇄적 사회가 유지되었으며,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지향의 획일적 문화가 자리잡았다. 북한의 획일적인 문화구조는 당과 국가의 강력한

사회통제와 획일화된 사회화 과정⁴⁷⁾을 통해 가능해졌다.

북한 문화구조는 정권의 의도적인 정책을 통해 확립되었으며, 이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자기발생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최대한도로 억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으로 북한은 1960년 초부터 전지역에 철저한 주민등록사업을 계속적으로 강행시켰다. 또한 김일성은 공산주의 사상의 확립을 위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애국심, 낡은 것은 소멸하며 새 것이 승리한다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의 철저한 확신, 부르조아지적인 개인주의 사상의 제거와 집단주의적 사상의 고취,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 노동의 신성함과 가치, 부단한 전진을 통한 지속적인 혁명의 완수 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사상적 기초에 의거하여 대내적인 통합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통제, 사상적 당위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 집단주의 귀속감의 강조 등 여러가지 자극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서 김일성을 단순한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일종의 신격적 인물로 미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상체계에서부터 가치관념, 판단기준, 활동내용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어느 정도로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7) 북한에서의 사회화에 관해서는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8-32; 온만금,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와 결과분석,” 통일원,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 1992 참고.

북한문화는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두가지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민족문화가 사회주의적 내용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창조적으로 계승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전통문화와의 타협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 내용’을 결합한 문화형태가 정착되어 갔다. 즉, 1960년대 후반 당내 유일사상지도체계가 확립되면서 주체사상에 기반한 문화이론이 형성되어 나갔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민족문화를 건설한다고 하여 원형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원칙과 현대성(민중성, 주체성 등)에 맞게 변형시키려고 노력하였다.⁴⁸⁾ 이에 따라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민족생활에 대한 묘사는 복고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생활을 혁명적으로 풍만하게 보여 주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민족생활을 그리는 데서는 현대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시대와 사회제도의 본질을 띠고 있는 생활을 찾아 내어 현대의 요구에 맞게 잘 그려야 한다”고 주

48) 이러한 과정을 북한은 ‘민족문화의 문명화’로서 설명하였다.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주체사상총서8」,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8. 또한 이러한 그들의 문화정책에는 인민성, 계급성, 혁명성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는데, 다시 말해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종자론·주체문예이론·속도전이론·군중예술론·영생주의예술론·전형화이론·통속화이론 등 7가지 이론에 입각하여 전개된다고 한다. 권영민 외,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현황」 p. 417.

장한다.⁴⁹⁾ 이에 따라 북한의 문화정책과 일상생활에서는 현대성을 선진 왜래문화의 수용에 의존하지 않고 문화유산의 개조를 통해 새로이 창조하는 것으로 여겨왔으며, 이를 통해 현대성과 문화의 자주성을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둘째,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전통적·봉건적 문화유산을 국가적인 수준에서 대거 부활시켰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강조와 국가권력의 의인화는 사회내에 유교이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및 온정주의를 강화시켰다.⁵⁰⁾ 더욱이 부자세습이라는 특이한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가부장적 전통문화가 강조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가부장적 권위주의, 남녀간의 불평등, 혈연주의 그리고 신분제적 차별과 같은 전통문화의 요소가 다시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에서 혁명전통의 강조, 반제 반미 정서의 고취, 남한문화와의 차별성 강조 등은 주민들이 민족적 자긍심 및 문화적 자주성을 고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단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극단화된 이러한 경향은 주민들에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을 심어주었다. 또한 이는 이 당시 추진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폐쇄성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에 의거한 분단의식을 더 한층 고취시키

4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에서의 생활묘사」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pp. 29-32.

50) '수령론'과 '후계자론'으로 표출되는 북한의 유기체적 국가관에 대해서는,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pp. 47-53.

는데 기여하였다.

다.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문화 쇠퇴기(주체문화의 정착기)

이 시기는 북한경제가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에서 저성장 및 침체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기이다.⁵¹⁾ 그 가운데서도 북한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의 최우선을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에 두었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서 60-70년대 산업화로 인한 사회발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부자세습체제 확립의 반발을 무마한다는 의미에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위주로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사회발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즉,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화, 교육수준의 상승, 사회분화의 발달로 인한 사회통제의 이완, 혁명 후기세대의 등장 등의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주의적 가치 규범과 괴리된 주민들의 행위를 유발시킴으로써 사회적 이탈 현상이 고조되고

51)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구 동독외교관으로서 평양에 장기간 체류한 바 있는 샤이베는 북한의 제2차 7개년경제계획 기간(1978-1984)동안 경제성장률은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Siegfried Scheibe, “기रो에 선 북한경제 사회,”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발표논문, 1991.6.28, p. 3. 또한 그 이후 1980년대 후반의 평균적 경제성장률은 더욱 떨어져 약 1.3%로 추정되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219.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경제는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있다.

이 시기의 북한 사회주의문화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근대화
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 자본주의문화의 부분적 수용을 가능케 하
는 사회환경의 변화(확일화된 생활규제의 완화, 자본주의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 능력별 임금제도 실시, 상설자유시장
의 부분적 허용, 개인부업 허용, 외화상품의 등장, 종교활동
의 외면적 활성화 - 등)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치체계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즉, 물질과 문화에 대한 개인적
욕구가 상승되고, 나아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사고의 틀이 비교의식과 실용
주의적 사고를 지닌 가치관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북한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개방적 변화는 전
통문화 및 전래풍습을 대하는 ‘사회주의적’ 입장에도 많은 변
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1980년대의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하여 전통적 문화유산을 대거 회복하고 있다. 첫째,
후계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봉건 유교적
전통이 강조되었다. 그 가장 뚜렷한 예로서 1980년대에 들어
와 주체사상의 내용과 기능이 바뀌면서⁵²⁾ ‘사회정치생명론’이

52) 1980년 10월 10-14일에 개최된 로동당 제6차 당대회는 당 규약을 개정
하고,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
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
는 구절을 삭제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조선
로동당출판사, 1991, p. 531.

대두되었다.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은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⁵³⁾ 그는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사회정치생명은 “정치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생명”으로서 영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생명의 모태는 수령이며, 사회정치생명체 안에서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대중의 상화관계는 혼연일체로서 “유기적이며 전일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이어서 1986년 7월 15일 ‘사회정치생명체론’을 북한의 새로운 통치모형으로 구체화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정치생명체론’은 봉건 유교적 전통과 크게 공조하고 있다. ‘사회정치생명체론’은 사실상 혈연공동체에서 효를 중심에 마련해 두고 개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유교와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이미지가 강조되고 상속제가 부활 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부활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서는 복고적인 여성관이 부각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 “북한여성들의 모범”으로 미화되면서 어머니, 아내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여성상이 크게 부각되었다.

53)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8-81.

1990년 10월 24일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상속제를 부활 하는등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산을 대거 회복하고 있다.⁵⁴⁾ 북한당국은 추석이나 단오, 설날 같은 전통 명절 및 전래 생활풍습을 부활시키고 있으며, 단군릉 발굴 등을 통해 민족문화 유산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혹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강조를 통해 더욱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있다.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⁵⁵⁾ 또한 김정일은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던 1989년 말에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재차 확인했다.⁵⁶⁾ 그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세계에서 북한이 “사회주의를 으뜸가게 세워놓았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크나

54) 북한의 새 가족법에 관해서는,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pp. 62-65 참고.

55)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 1986.7.15, 「김정일저작선」 pp. 309-328.

56)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12.2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248-273.

큰 자량이 아닐 수 없다”고 자부하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식으로 건설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집니다”라고 자부했다.⁵⁷⁾ 이는 민족감정의 고취를 통해 북한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대남 선전공세적 차원에서 북한의 민족적 정통성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3. 南北韓 文化의 比較

이상과 같은 남북한 문화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문화를 비교분석하는데 있어서 첫째, 체제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차이, 둘째 근대화로 인한 문화변동의 방향, 셋째 전통문화의 변화·유지 현황, 넷째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왜곡현상 등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가. 체제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이질화

남북한은 각기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인민주의를 지향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극성을 지닌 체제로 사회변동을 경험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는 상당한 이질화를 겪어왔다.

첫째, 북한문화에서는 집단주의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남한

57) 김재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우월성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정당한 로선,” 「경제연구」 1992년 3월, pp. 5-7.

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를 지향하면서 모든 문화활동에 있어서 자아의식이나 개인적인 행위를 지양하고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남한에서 자본주의 문화가 개인의 자발성, 개인적 욕구에 의거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북한에서 폐쇄적, 통제적 조건하에서 지나치게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개인적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외부적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 일시에 심리적 동요가 유발되고 불만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 경제체제의 변화와 함께 지나친 물질주의, 개인주의 등 반대방향의 성향으로 급변할 수 있다.⁵⁸⁾

둘째, 남한 문화의 다양성과 북한 문화의 획일성을 들 수 있다. 남한은 자유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생활방식과 가치관에서 부터 여가 활동에 이르기 까지 개인의 욕구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된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문화의 내용이 획일적으로 혁명사상 고취와 김일성 유일사상의 확산으로 채워져 있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남한 문화의 개방성과 북한 문화의 폐쇄성을 들 수

58)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몰락과 자본주의의 유입 이후 이들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국가와 타인에게 해가 되는 부당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극심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무질서가 계속되고 있다.

있다. 남한은 해방 이후 계속 이질적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문화변용⁵⁹⁾에 따른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외부 사조의 유입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북한은 조선의 봉건사회, 일제하의 군국주의를 거쳐 곧바로 폐쇄적 공산정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타문화와의 접촉을 통한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외부사조의 변화에 둔감할 수 밖에 없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왕조사회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문화예술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북한사회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⁶⁰⁾

넷째, 남한은 이질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적응력이 크며 이질적인 문화와의 공존을 당연시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 사회의 폐쇄성과 유일사상 및 문화적 순수성의 강조로 인해 이질적인 것에 대한 허용범위가 적으며, 타문화에 대한 적응력도 약하다.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계가 외래적인 문화요소에 대한 면역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이후 남북한 문화

59)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쌍방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문화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문화변용에 대해서는, Bruce P. Dohrenwend and Robert J. Smith, "Toward a Theory of Acculturation,"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vol. 18, 1968, pp. 30-39 참고.

60) 북한 사회내의 전통문화적 요소에 대해서는, 김영수, 「북한의 정치문화: '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참고.

통합의 관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사회의 개방이 어떠한 형태로든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섯째, 남한에서는 문화가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통제역량을 과시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문화가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북한의 문화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민간 문화조직체 및 생활 문화운동이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영역도 확보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나아가 개인이 다양한 방법과 채널에 기초한 일상적인 문화활동이나 생활 패턴을 통해 한 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문화의 상이성에 따라 남북한의 가치지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가치지향은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유일사상에 귀착하는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특징지워 진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성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지닌다.⁶¹⁾ 반면에 남한의 가치지향은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창의와 자율성을 신봉하며, 개방적이고 물질추구적인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다.

61) 북한주민의 인성에 대해서는, 서재진·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고.

나. 근대화로 인한 문화변동 비교

남한과 북한은 체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근대적 사회구조에로의 사회변동을 겪어 왔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근대화 전략으로 사회발전 과정에서도 차이를 겪어 왔으며, 이에 따라 사회 문화적 성격도 서로 달라졌다.

남한에서는 1960년대이래 본격화된 산업화의 결과로 전통적인 생활형태와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문화변동의 일반적인 정향을 보여주었다. 즉, 남한의 문화는 사회의 다원화, 개인의 자율성 증진과 함께 합리성의 증대, 전통적 도덕성의 붕괴, 실용주의와 개인주의의 확산 등과 관련된 현대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 공산주의적 동원체제에 의해 근대화가 추진됨으로써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일반적인 정향에서 크게 벗어났다. 근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집단주의적 사회가 유지되었으며, 주체사상으로 김일성주의 지향의 획일적 문화가 자리잡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북한에서도 사회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화체계의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화, 교육수준의 상승, 사회분화의 발달과 사회통제의 이완, 혁명 후기세대의 등

장 등의 사회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가치 규범과 괴리된 주민들의 가치관과 행위를 유발시킴으로써 문화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1980년대 들어서 북한 정권은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부자세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공업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예컨대, 획일화된 생활규제의 완화, 능력별 임금제도 실시, 상설자유시장의 부분적 허용, 개인부업의 허용, 외화상품의 등장, 종교활동의 외면적 활성화 등의 정책 변화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치체계에도 변화 조짐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 북한주민들 사이에 물질과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가 상승되고, 나아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사고의 틀에서 실용주의적이고 비교의식을 지닌 가치관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조짐이 엿보인다. 이는 북한의 문화도 결국은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화 전략과 과정의 상이성으로 인한 사회변동 및 문화구조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 산업화에 의한 문화변화의 정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전통문화의 비교

분단이래 남북한 양쪽에서 전통문화가 많이 파괴되었다.

남한에서는 산업화와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 초래한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폐해로 인하여 전통문화가 급속히 해체됨으로써 생활문화나 의식구조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문화의 도입으로 전통문화가 정치적·계획적으로 파괴되었다.⁶²⁾

그러나 남한과 북한사회에서 전통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규범관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며, 전통문화의 뿌리는 잔존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1970-80년대 정부가 추진해온 민족문화정책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의 맥을 유지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⁶³⁾ 이와 병행해서 1970년대 이래 민간부문에서 민족문화를 되살리려는 문화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전통예술, 전래생활 풍습 등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민족문화운동의 추진이 결과적으로 민족문화에 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데 공헌하였다.

북한에서도 정권에 의한 전통문화의 정치적 이용이 주민들 사이에 뿌리 깊은 전통적 가치체계를 유지·부활시키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주체사상의 확립을 추진하는 과

62) 북한은 전통문화를 봉건적 잔재로 규정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친족의 개념을 말살시켰으며, 세시풍속과 종교생활에서도 전통문화를 단절시켜버렸다. 부남철,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 정책: 가족법윤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행정사연구회, 「행정사 연구」 제1호, 1993, pp. 173-187.

63)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pp.77-78.

정에서 문화의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현실화하는 데서 야기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를 수용 또는 복구하는 정책을 동시에 실행하였다. 특히 1980년대의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적 문화유산을 대거 회복하고 있다.⁶⁴⁾

정치적 측면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의 강조와 국가권력의 의인화는 사회 내에 유교이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및 온정주의를 강화시켰다.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사회정치 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의 강조를 통해 전통과 민족이 통치수단을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⁶⁵⁾ 제도적 측면에서도 추석이나 단오, 설날 같은 전통명절 및 전래 생활풍습을 부활시키고 있으며, 단군릉 발굴 등을 통해 민족문화 유산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가부장적 권위주의, 남녀간의 불평등, 혈연주의, 상속제의 부활 등과 같은 전통문화 요소가 다시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⁶⁶⁾

최근에 들어 통일에 관련해서도 남북한이 민족주의를 이념적 근거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3년 4월

64) 외부적으로는 소련·동구권의 몰락과 이에 따른 국제적 고립,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김정일 세습체제 확립을 위한 사회통제 강화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65)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및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를 참고할 것.

66) 이은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1993, pp. 170-202 참고.

에 발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해 민족주의적 공세를 강화했으며, 남한에서는 1993년 2월 25일 김영삼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민족우선주의'를 내세움으로써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간의 이념적 공통분모가 재확인되었다.

라. 분단문화

남북한 사회를 공히 지배하고 있는 분단의 논리가 존재하며, 이것이 남북한간 이질화를 심화시키고 통일을 지체시키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분단문화의 핵심적 내용은 민족간의 대결의식과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냉전적 문화이다. 남한에서는 동족상잔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증이 일반국민들의 의식세계에 뿌리내려 있다. 이러한 적색혐오증은 반공 이외에 별다른 통치이념을 찾지 못했던 남한의 역대 정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장되어 온 측면이 있다. 북한에서도 남한정권과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증은 대단히 극렬하다. 북한정권은 상징조작을 통하여 주민들의 적개심을 극대화시켰으며 이를 정권유지 및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냉전적 문화는 다음과 같은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첫째, 권위주의체제와 권위주의적 문화를 유지·확산시켰다.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에 외세 의존적인 권위주의적 정권이

등장하였으나 그것을 유지·강화시킨 것은 민족분단에서 오는 대립의식이었다.⁶⁷⁾ 즉, 민족분단이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 강한 구심력과 생존을 보장해주는 카리스마의 존속을 가능케 한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적대적으로 대치하게 된 남북한 정권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웠으나 실제로는 ‘반동제거’와 ‘반공노선’에서 정통성의 근거를 찾으려 하였다. 남한에서는 반공이념이 건국 이래 국가목표의 최우선 순위로 강조되어 왔으며 국민의 정치생활을 지배하고 감정적 차원의 무조건적인 반공 정치문화를 형성시켜 왔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의 혁명사상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조성하였으며 온 국민을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배타적 민족의식을 조성하였다.

둘째, 군사문화의 확산이다. 분단은 남북한에서 이념의 강경화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에 있어서도 막강한 무력의 조직을 탄생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정치에 대한 군부의 개입과 역할의 증대를 가져왔다. 군부가 사회통합의 결정적 일원으로 등장하는 현상은 그 자체로 민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개입은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지속과 획일적 문화의 강화현상을 의미한다.

67) 고영복, “민족통일을 위한 선결과제,”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 이론」 한길사, 1987, p. 369.

셋째로 다원주의의 약화를 들 수 있다. 분단은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내의 다양한 이념과 다원적 정치활동의 영역을 축소시켜 왔다. 또한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사회내 갈등의 첨예화는 의식의 양극화 현상 및 흑백논리의 횡행을 초래하여 남한에서 건전하고 다양한 중간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였다. 북한에서는 분단상황이 김일성 우상화와 유일사상을 모든 주민에게 주입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공산주의 역사상 가장 획일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장하였다.

넷째, 남북한의 대립과 냉전문화는 남한과 북한에 민족주의의 왜곡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본질적인 성격의 민족주의는 민족구성원 사이의 통합과 전통에 바탕을 둔 발전의 모색과 민족성원간의 대등성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분단된 남북양체제는 대립적인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서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민족국가를 이룩하여야 할 당면과제로서의 민족주의는 밀려났으며 정권의 정당성을 논리화시켜 주는 이념적 도구로 활용되었다.⁶⁸⁾

남북한 문화를 비교하여 보면 각기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한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력이나 흡수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상품화, 외래사조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68) 진덕규, “분단사회의 민족주의 형성에 관한 고찰,” 변형윤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pp. 21-24.

인한 민족문화의 퇴조, 문화의 파편화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⁶⁹⁾ 북한은 비교적 균등한 문화의 수용, 외래사조에 대해 민족문화의 보존, 통합요소로서 문화의 역할은 극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정치적 도구화, 획일화, 개인의 창의성 말살 등은 북한사회의 심각한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IV. 統一文化 形成을 위한 政策方向

남북한 문화의 성격과 특수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 첫째, 남북한 문화의 공유점으로는 근대화 지향으로 인한 문화변화의 방향, 민족성 유지 및 전통문화의 강조 두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문화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남북한 문화는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심각한 이질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갈등을 예측하여 해소하는 것이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우선과제로 제기된다. 셋째, 남북한은 공히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왜곡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통일문화 형성은 이러한 분단문화를 극복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69) 이우영, “통일한국의 문화통합,” 「포럼21」 8집, 1993, p. 40.

따라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은 통일이전에라도 현대사회의 성숙한 시민문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각자의 문화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또는 전통문화를 확인 확산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높인다.

셋째, 통일 이후 공동생활을 통해 겪게 될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적 심리적 갈등을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해소한다.

1. 政策課題

가. 남북한 문화구조의 개조

남북한 문화구조는 남북한 각 문화의 변화방향과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정향에 부합하도록 다원주의, 시민사회의 활성화, 합리주의, 인간중심의 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남한사회는 북한사회에 비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나 통일국가의 문화적 성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혁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원주의>

남북한은 기존의 권위주의 문화와 획일성에 바탕을 둔 냉

전문화에서 벗어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내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남한사회는 북한사회와 비교해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 여러방면이 다원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이한 신념, 의견 등을 포용할 사회적 관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문화개조로 인해 전체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가 그 문화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생활모습에서의 변화는 북한사회도 점차 종전의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다원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다원주의 문화는 광범한 신념, 사상 또는 태도들이 자유롭게 공존하고 그러한 신념, 사상, 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문화이다.⁷⁰⁾ 다원주의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오류에 빠지기 쉬운 존재로 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신념이나 조직세력이 오랫동안 사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다층적이고 균형잡힌 여러 정치적 형태와 과정, 여러 가지 소유형태, 다양한 결사체들이나 공개적인 토론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인간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는 데 관심을 둔다.

70) 다원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Gale Stokes, "Lessons of the East European Revolutions of 1989," *Problems of Communism*, vol.XL Sept.-Oct. 1991 pp. 17-22.

다원주의가 추구하는 문화체계는 신념이나 종교, 이익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문명적인 관계가 지배하는 다원주의적 문화만 아니라, 자유주의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계급적 불평등과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평등지향적 사회운동에 의한 평등주의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다원주의는 또한 사회내의 권력이 분산되고 그 권력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개인들, 공동체들, 그리고 결사체들 사이에 각기 다르게 부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원주의는 시민사회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시민사회의 활성화〉

남한과 북한의 문화는 정도에서의 차이는 많으나 국가 권력 및 정치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익에 종속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북한에서는 엄격한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정치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세계를 지배함으로써 문화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이다. 남한에서는 사회내 다양한 집단과 문화적 다원주의를 통해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의 형태는 갖추고 있었지만 정치적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시민사회의 발달은 보편적 의미에서 한 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가늠한다. ‘시민사회’의 개념을 단순화해 보면 “사람들이 사적 시민으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기들 자신의 여러가지 조직을 창조하는 사회생활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¹⁾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⁷²⁾ 시민사회란 개인적 권리, 자유, 자원단체들이 제각기 사적 관심, 이해 그리고 의도에 따라 정치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민사회의 국가로부터의 보호와 아울러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남한에서는 기존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보다 많은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북한에서는 전체주의적 체제에 의하여 소멸된 시민사회를 회생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다원주의의 확대와 민주화 진척에 힘입어 점차 다양한 계급, 신념, 이데올로기, 그리고 종교패턴으로 분절(fragmentation) 되면서 다양한 집단의 배합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기업집단과 노동단체, 이념, 사상적인 자율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지

71)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시민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p. 66.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로크, 몬테스큐, 루소 등의 고전적 자유주의사상가로부터 헤겔, 뒤르켐, 그리고 맑스와 그람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아직도 그 의미는 부정확하다.

72) ‘시민사회’ 개념에 대해 만족할 만한 외연적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으며, ‘이상적’인 시민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보다 성숙하거나 덜 성숙한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자본주의의 등장 및 공고화, 부르주아 문명,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불가분하게 연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개념의 본질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문명’이 최고봉에 도달했던 특정의 역사적 시기를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식인 집단으로서의 교육자, 작가, 예술인, 종교세력 등이 각기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자율적인 영향권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완전한 통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상 시민사회가 존재할 수 없었다. 더욱이 김일성 일인통치의 권위주의적 지배는 시민사회가 생성될 수 있는 여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강력한 국가와 기술관료의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억압해 온 권위주의적 지배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의 재생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시민사회의 불완전한 생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다. 남한의 경우 권위주의지배가 해체됨으로써 자원적 집단들이 번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것들이 다원주의적 문화를 갖추지 못한 속에서 서로 비타협적이고 때로는 폭력에까지 의존하는 비문명적 경쟁을 벌이거나 서로 심각한 갈등을 조성하게 될 때, 진정한 시민사회가 등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원주의와 시민사회가 종국적으로 추구하는 민주화란 국가가 사회의 자율성을 진정으로 존중할 때, 그리고 사회는 사회내의 자원적 결사체들이 자유로운 형태를 형성할 뿐 아니라 저들 사이에 서로 자율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적 문화가 내면화될 때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의식과 문화의 통합을 주도함으로써 통일문화의 주요 요소로 기능해야 한

다. 다시 말해서 통일문화의 주체는 국가권력으로 부터 자율성을 회복한 시민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가와 같은 공적기구가 통일문화의 형성을 주도할 경우 이념적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획일화되고 전체주의화된 의식을 재창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⁷³⁾

〈합리주의〉

민주적 사회질서를 성숙시켜 나아갈 통일국가는 남한과 북한에 잔존해 있는 ‘힘의 문화’⁷⁴⁾를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적 대안으로서 합리주의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1960년대 이래 남한과 북한은 각기 근대화와 산업화를 지향해오면서도 이러한 산업사회의 구조에 적합성을 가지는 합리주의적 문화를 키워오지 못했다. 남한에서 60년대 이후의 공업화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각 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였다. 그 대신 남한에서는 재력, 권력, 학력과 사회망이 인간관계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관료주의의 병폐⁷⁵⁾와 새로운 불평등 사회구조⁷⁶⁾가 발

73)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의 차이는 각각이 처해 있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획일적인 통합노력은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74) 임희섭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1988, p. 25.

75) 북한 관료사회의 부패와 부조리에 대해서는,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고.

76) 이에 대해서는,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377-390 참고.

생하게 되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는 지배-피지배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남한과 북한에 잔존해 있는 힘의 지배와 힘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대안은 무엇보다도 합리주의가 적합하다. 즉,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더 이상 전통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대사회구조에서는 합리주의가 중요한 통합 원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성 가운데 도구적 합리성보다는 비판적 이성과 창조적 이성에 기초하는 합리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⁷⁾ 비판적 이성은 어떠한 가치나 유형도 그것이 절대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 창조와 개혁의 영역을 넓혀준다. 이와 같이 비판적 이성과 창조적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 문화는 절대화된 가치, 권위주의적인 가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원적인 가치가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는 질서를 지향한다.

〈인간주의적 문화의식〉

산업사회를 특징짓는 문화의식의 중요한 요소는 성취동기, 경쟁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등이라 할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대중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동은 인간을 규격화

77) 임희섭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pp. 27-28.

· 획일화하는 대중문화,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적 생활양식의 범람, 타자기향형과 시장지향형의 퍼스널리티 증가, 가족해체의 가속화, 가치관의 혼란 등의 현상을 수반하여 결과적으로 대중의 소외와 비인간화 현상을 증대시키고 있다.⁷⁸⁾

이러한 산업화 사회의 문화현상은 경제성장에 의해 정당화되어 온 측면도 있으나, 근래에 들어 현대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적 삶의 질을 강조하는 인간주의적 문화의식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인간주의 문화의식은 산업화 사회에서 강조되던 합리주의, 근면, 개인의 희생 등의 가치를 초월하여 평등, 자유, 소외의 극복, 환경보존, 대규모 사회조직과 획일화·표준화 경향의 거부 등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⁷⁹⁾

인간주의적 문화의식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은 특히 서구의 '신사회운동'의 틀내에서 전개되어 왔다.⁸⁰⁾ 신사회운동은 사회내의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의 창출, 문화혁신 등을 목표로 하는 대중운동이다.⁸¹⁾ 인간주의적 문화의식은 예술, 종교, 인문·사회과학의 이론과 사회운동을 통해서 강화되어갈 수 있으며,

78) 또한 산업화사회에서는 대중들이 기대상승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상승기대는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주의와 성공지향의 가치관은 기대와 현실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의식과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격차로 인한 아노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의 책, pp. 240-243.

79) 위의 책, pp. 242-243.

80) 신사회운동의 이론에 대해서는, 김호기, "포스트 맑스주의와 신사회운동," 「경제와 사회」 1992년 여름호, pp. 116-143을 참고할 것.

81) 사회문화연구소 편, 「사회운동론」 사회문화연구소, 1993, p. 162.

이를 통해 문화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상업주의문화와 외래문화 수용에 따른 폐해 제거〉

남북한 문화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고유
의 전통을 거의 말살당했으며, 해방이후 이질적인 왜래문화
의 도입으로 자생적인 발전능력을 더욱 상실해온 것이 사실
이다. 북한의 경우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는 낯설은 사회주의
적 문화가 주입됨으로써 전통문화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으
며, 남한에서는 해방후 왜래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그 자
생력은 더욱 허약해지면서 자발적으로 왜래문화를 수용하는
편향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편향적인 외래문화의 수용은
기존문화의 통합력을 약화시키고, 세대, 계층, 지역간의 사회
적 갈등을 심화시키는데까지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
화의 통합력 약화는 그 주체적인 발전능력을 저해함으로써
문화의 연속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문화의 자생적 발전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
청되고 있다. 남북한은 한세대 이상에 걸쳐서 서로 다른 체
제이념에 따라 각기 발전을 추구해옴으로써 문화면에서 이미
심한 이질화를 빚고 있다. 앞으로도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외래문화의 편향적인 수용에만 급급하여 전통문화와의
연속성을 아주 상실하게 된다면 통일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
이다. 남북한이 공통의 문화적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으

로 민족으로서의 공통의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아니라 민족을 구체화하는 수단을 또한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더욱이 남한에서 1970년대 이후 매스미디어가 초래한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침투와 상업주의적 문화는 대중문화의 저질화·규격화·획일화 현상을 가져왔고 나아가서는 민족 전통문화의 해체현상을 가속화하였다.⁸²⁾ 남한의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질만능의 풍조를 제거하고, 대중문화가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시민문화, 민족문화로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향락주의와 상업주의 문화는 북한에 급속히 파급될 것이며, 이는 결코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북한주민의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상품의 구매력이 약한 북한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시킬 위험도 적지 않다.⁸³⁾

나. 전통문화를 통한 남북한 문화의 공유점 확대

전통문화는 통일문화 형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82) 매스미디어에 의한 문화의 중앙집중현상은 지방문화와 농민문화, 계층문화 등을 주체적·조화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저지하였다. 따라서 대중문화는 자연히 저급한 상업주의적 오락문화로 전락하게 되었다.

83) 사회주의가 몰락한 러시아 및 동유럽국가들에서는 물론, 개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자본주의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퇴폐문화와 향락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유에서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이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민족과 전통의 원형을 바탕으로 문화적 동질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근간을 삼을 수 있다. 둘째, 인류 보편적인 문화체계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전통문화의 특수성으로 보완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우리의 것으로 토착화해 갈 수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1 전통이란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가장 본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과거로부터 전래된 사상(事象) 일체’⁸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유물이나 유적과 같이 가시적인 형태를 지닌 것, 그리고 관습, 제도와 같이 무형적인 것 모두가 포함된다. 전통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적 속성은 ‘통시성’으로서 대인접촉 또는 간접적 의사교환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승된다고 하는 점’이다. 두번째 속성은 ‘영속성’으로서 인간사회에 장기간 존속해왔다는 사실로서 가치를 획득하며 사람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전통이란 그 형식성이 규정하듯 초시간적인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나 그 구체적 내용은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경, 조정 또는 재창조될 수 있는 ‘형

8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현대사회와 전통윤리: 미래사회의 질서를 위한 모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p. 245.

성성'(constitutive character)을 지닌다는 점이다. 형성성에 관한 인식은 우선 '전통이란 불변한다'라는 정태적 전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준다.⁸⁵⁾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문화는 세대적으로 계승·존속되어 오면서 한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성을 획득한, 영속적이면서 변화가능한 일련의 문화체계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전통문화의 개념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 남한은 지배문화였던 유교문화와 피지배문화인 민중문화 등 선조들의 모든 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계급혁명에 관련한 문화유산만을 전통문화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북한에서도 전통문화 해석에 있어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남한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통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긍지는 역사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역사에 대한 그릇된 시각과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음으로써 전통문화를 정당하게 평가하면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국민의 내면적 긍지를 복돋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현상은 국민들의 민족적 긍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주어온 것

85) 위의 책, pp. 245-246.

이 사실이다.

둘째로, 전통문화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것은 전통문화를 재현 복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문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전통에의 복귀가 아니라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전향적인 발전이다. 문화란 본래 역사적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역사적 산물이며, 문화의 발전은 그와 같이 기존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끊임없는 재창조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재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구조에서 필요한 기존문화의 적합성을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전통문화를 회복한다는 것이 결코 외래문화의 수용을 배격하는 문화적 폐쇄주의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생적인 요인과 외생적인 요인을 다 같이 필요로 한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외래문화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한은 미국문화와 일본문화를 주축으로 하는 외래문화에 대한 지나친 편향성으로 인한 문화적 정체성 상실 현상과 시대 역행적인 외래문화에 대한 소비니즘적 배타성을 동시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넷째, 전통문화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해야 한다. 남북한은 체제경쟁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각기 전통문화를 강조한 경향이 있다. 또한 권력의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이용하기도 했다. 권력에 의한 전통적 가치의 활용은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민족적 긍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저해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한은 전통문화 속에서 탈이념적인 문화요소를 찾아내어 공통의 문화로서 발전시킴으로써 민족동질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에서 한민족 고유의 전통문화가 정치·사회적 이유로 각기 변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민족의 전통문화에는 민족의 문화심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문화소(文化素)가 있다”⁸⁶⁾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기층의 생활상이나 기층민들의 의식구조에서 이러한 탈 이념적인 전통문화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문화의 재조명〉

공동체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또한 공동체주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속에 오랫동안 담겨져 온 상부상조의 생활원리라 할 수 있다.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결속력을 지닌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의식은 원래 그것의 업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공속성 내지 귀속

86) 김한초, “남북한의 사회적 이질성 극복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와 삶의 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152.

성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⁸⁷⁾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통합의 근간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사회관계의 비인격화와 개인의 소외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위기를 공동체적 관계의 재추구를 통하여 극복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친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던 전통적인 공동체문화⁸⁸⁾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사회구조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주의가 갖는 부정적 요소(예컨대 강한 배타성과 폐쇄성)를 현대 시민사회에 맞는 생활원리로 어떻게 변용시키느냐 하는 것과, 지금 붕괴 일로에 있는 각종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강화시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 가운데 현재까지도 남한과 북한에서 공히 구조적 원리의 하나로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연고주의적 집합주의일 것이다. 연고주의는 그것이 지닌 배타성, 비합리성, 파쟁성 등으로 인

87) Harold D. La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5, p. 30 참조.

88) 한국인의 공동체의 근간은 가족과 촌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진교훈, "사회공동체와 시민윤리 -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 「도덕적 삶과 공동체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년 제2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4. 10. 24. p. 86.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대표적인 공동체 조직체로서 두레를 찾아볼 수 있다. 두레에 대해서는, 김택주,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pp. 380-382 참고.

하여 슬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고주의가 하나의 사회·문화적 규범으로서 그 생명력이 유지·강화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급격하고 전면적인 사회 변화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과거의 농촌공동체적 질서 아래서 누렸던 안정감과 정체성을 연고주의적 집단 의식을 통해서나마 되찾아보고자 하기 때문이다.⁸⁹⁾

그러므로 만약 연고주의적 사회조직이 이처럼 이익추구성을 억제하고, 감정 및 의사소통체계로서 작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사회의 비인격화 내지 소외화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집단들이 친목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서 공익을 위한 봉사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연고주의는 사회적 분열과 파쟁의 원천이라는 역기능 대신에 시민적 연대와 통합이라는 순기능을 행사할 것이다.⁹⁰⁾ 따라서 연고주의와 가족주의가 갖는 긍정적 잠재력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공동체문화의 창조가 불가능하지 않은 않을 것이다.

89) 연고주의는 성원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속성상 감정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불신풍조와 이기주의, 끊임 없는 경쟁관계로 특징지워지는 인간성 부재의 시대에서 연고주의적 인간관계는 인정과 격려의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서구나 일본에서는 합리적 조직 내에 운정주의나 가족주의 문화와 같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결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90) 김성국,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격: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pp. 160-161 참고.

〈민족주의의 정립〉

통일문화는 무엇보다도 민족적 정통성과 이에 근거한 민족주의를 주요 요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경제체제를 초월하여 이념적으로 연결시켜주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공통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적극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⁹¹⁾ 남북한 양체제에서 민족주의는 1940년 중반기 이래 체제의 이질화를 통해서 각기 민족주의의 본질적 가치에서 이탈된 '변형 민족주의'의 성격으로 나아갔다.⁹²⁾ 남북한에서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는 사회 문화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화적으로는 전통문화의 근대화를 이룰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전통문화와 근대문화의 대립을 조장시키는 문화적 식민화의 종속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격의 민족주의는 민족성원의 통합이나 전체 민족의 발전과는 직접 연관이 적은 지배세력의 공고화와 민족분단을 고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질화된 민족주의를 정상화시키고 그것에 바탕을 두는 통일국가의 형성을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향을 어

91) 진덕규, "한국 민족주의의 미래구도,"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1993, pp. 106-107.

92) 민족주의는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 민족주의'로,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적 민족주의'로 변형되었다. 남한과 북한에서 민족주의의 변형과정에 대해서는, 위의 글, pp. 113-115 참고.

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역사상 민족전체의 통합이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특정 분파를 전제로 하는 분열의 성격을 강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통합의 이념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정해야 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 첫째, 민족주의는 새로운 가치정향과 공동의 신념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념과 계급을 초월한 사회적 가치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민족주의는 민족문화와 전통성에 의거하여 민족의 공통기반을 재구성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민족주의는 정치사회의 현실적인 정책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 통일 이후의 문화갈등 해소

통일은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이념을 지닌채 살아오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섞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통일이전에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접근의 노력을 통해 대비를 철저히 한 다해도, 기존의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 정도를 감안할 때 통일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통일이후 예상되는 문화갈등의 양상을 예측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적 접촉에 의

한 문화충격을 들 수 있다. 통일과정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은 상대방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접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접촉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 및 편견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서로의 편견이 확인되고 분단상태에서의 막연한 이질감이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통해 구체적인 갈등 및 적대감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한의 자율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획일화되고 이념성이 짙은 문화를 접함으로써 북한문화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폐쇄적 사회에서 외부문화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문화를 새로이 접함으로써 일종의 문화충격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세계적 추세나 남북한 변화방향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통일국가의 사회체제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적 경쟁 문화나 개방적 성문화 등과의 접촉을 통해 가치관의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남북주민간 문화적, 심리적 불평등이 예상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제각기 독자적으로 정치적, 문화적 경험세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남한이 우세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배적 위치에서 통일과정을 주도할 경우, 새로운 사회·문화체제 내에서 북한주민들

이 지향해왔던 지식 능력, 사회적 문화적 자본, 가치는 평가 절하되고 그들 특유의 심성과 생활 형태의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새로운 사회에서 집합적 정체성은 물론 개인적인 자기 정체성까지도 동요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그들에게 생소한 법체계와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세계와 가치관, 행동패턴을 파격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기능적 문맹’ 또는 ‘2등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한주민은 일방적인 우월의식을 가짐으로써 북한주민에게 심리적 상처를 입히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문화통합에 역행하는 저항 문화를 양산할 수 있다.

셋째, 세대간의 갈등도 예상할 수 있다. 남한의 젊은세대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 상당한 융통성이나 적응력을 발휘하여 통일된 체제의 이념이나 제도에 비교적 빨리 적응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통일 후 초기단계에서는 민족의 공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교육만을 받아온 젊은세대들이 더 경직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⁹³⁾ 그러나 이들도 곧 새로운 교육제도하에서 체계적인 사회화를 통하여 새

93)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한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출생자의 비중이 70.6%에 달하고 있는데 인구구성은 북한의 경우도 비슷하여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가 남북인구의 2/3를 육박하고 있다. 이는 남북인구의 대다수가 각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전혀 다른 가치체제하에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최협, “더불어 사는 사회로 이념의 벽을 극복,”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대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아일보사, 1993, pp.105-6.

로운 문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장년 이상의 세대들은 기존체제에 익숙하고 재사회화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기존의 이념체제와 문화성향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세대는 새로운 체제에서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⁹⁴⁾

넷째, 통일후 남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문화갈등은 통일 이후 경제적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남한지역 주민들은 오랜동안 통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져왔다. 통일이 가져올 국제적 위상강화, 남북한의 보완적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부흥,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남한 주민들은 통일이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통일로 인해 정치사회적 안정이 일시적으로 저해되거나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불만도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주민들도 통일이전의 생활수준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영위할수 있다 하더라도 남한지역 주민들과의 격차 때문에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⁹⁵⁾

94) 그러나 분단이전 시대의 경험이 있는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95) 또한 통일과정에서 산업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과정에서 새로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회계급도 재편될 것이며, 통일에서 수혜를 입은 계급과 피해를 입은 계급간의 갈등도 야기될 수 있다. 이우영, "통일의 사회·심리적 후유증 해소를 위한 체계적 방안 연구," 강광식 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386.

다섯째, 통일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지역감정이 증폭될 수 있다. 남한에는 동서간의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양과 그 이외의 지역간의 생활 격차로 인하여 부분적인 지역감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후 남북한 주민이 모두 단일생활경제권에 살게 될 때,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거나 정치·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감정이 증폭될 수도 있다.⁹⁶⁾

여섯째, 통일 후에는 사회적 과도기적 현상인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들의 갈등도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집단적 갈등 및 청소년 범죄 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성운리의 혼란과 빈부의 격차로 인해 성의 상업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곱째,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여타 사회주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 비해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으며 사회활동에서 남녀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⁷⁾ 따라서 통일 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성적 가치관에 대한 차이로 인한 여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간 여성의 근로조건, 탁

96) 통일이후의 지역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강명구, “통일한국의 지역 격차 문제: 공존의 지역정책을 위한 제언,” 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pp. 237-262 참고.

97) 남북한 여성의 사회적 위상 비교에 관한 연구로는, 기사연 통일연구위원회,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민중사, 1994, pp. 323-393 참고.

아정책, 가족정책 등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으로 통일정부의 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녀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2. 政策 推進方向

이상과 같은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남북한이 분리되어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접근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남북한의 동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남북간의 교류·협력 단계가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상호 합의하에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문화체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때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서로간에 체제변화에 대한 조그마한 양보도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사실상 가능하더라도 현재 남북한의 이질

화를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둘째, 현실적으로는 남한만이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남북한이 상대체제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⁹⁸⁾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을 통한 접근을 확대하면서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선택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택할 경우 선결되어야 할 것은 남한이 유지하고 있는 현 문화구조를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이다. 남한문화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제거하면서 북한문화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바람직한 체제를 형성해 나갈 때 북한의 일반주민들도 남한체제를 모델로 삼을 필요성을 인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실천정책으로서는 민주시민교육, 재사회화 정책, 문화교류의 확대, 통일문화운동 지원 등의 다각적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가. 민주시민교육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서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은 건전

98)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호간의 내부문제 불간섭을 명시하고 있다.

한 시민의 양성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⁹⁹⁾ 정부에서는 통일교육을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모든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¹⁰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은 일반적인 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민족번영을 약속하는 통일한국의 정신적 기초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냉전구도하에서 심화된 적대의식을 지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한국의 정신적 기초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통일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자유, 민주, 복지체제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첫째 남북분단의 역사적 상황, 원인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분단에 따른 부작용을 규명하는 작업을 토대로 통일의 당위성을 교육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 대한 실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개하고 설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를

99) 이우영, “평화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 한국도덕정치교육연구원 94년도 학술세미나, 「개혁의 과제와 민주시민교육」 발표논문 1994. 10. 21.

100) 통일원, 「화해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원, 1993, p. 4.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통일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적극적 동의를 얻어내는데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방법은 기존의 공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대중매체 등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정치교육연방본부」와 같은 통일대비 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기구는 다양한 정당과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통일대비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각 교육기관의 유기적 연결, 교육담당자의 양성 및 연수 등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실체험, 문화행사의 이용 등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정치권력과 독립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 대상별로 교육내용과 방법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교육대상의 지적 능력, 세대별 특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재사회화정책

사회화 또는 정치사회화는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이념을 수호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치와 규범을 사회 구성원에게 주입하는 것이다.¹⁰¹⁾ 이는 정치이념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과정이다.¹⁰²⁾ 따라서 재사회화는 특정한 이념과 체제의 수호에 기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와 규범을 새로운 체제에 맞는 의식구조로 시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은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규범을 배양해야 한다. 통일 국가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목적은 새로운 국가의 이념에 부합하는 통일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사회화는 문화의 시정정책, 학교교육, 사회교육, 정치교육 등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 정책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첫째로 기존의 남북한 문화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문화 전반에 대한 시정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 문화에서는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분단의식을 고취하는

101) Gabriel A. Almond and G. B. Powell,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1966, p. 54.

102)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정치사회화에 관해서는, 김덕, “정치사회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련문제연구소 편, 「소련정치과정」 정음문화사, 1985 참고. 또한 북한과 관련해서는 도홍렬, “정치 문화와 정치 사회화,” 최명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참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청산이 있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각기 이념적인 이유로 왜곡시킨 문화예술 현상이나 전통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간의 심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문화예술인, 종교인에 대한 지원 및 재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북한의 정치적 문화예술인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통일 이후 재사회화에 있어서 교육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 분단체제에 익숙해 있는 남북한 양측 주민들에게 통일한국의 이념과 가치를 확산 시킴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교육은 역사, 문화, 언어, 종교, 경제행위, 사회규범, 생활습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및 갈등을 극복하게 하며,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의 심리적·실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통일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의 내용을 볼 때, 우선 남북한간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과 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이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서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에 적응하게 한다. 산업구조의 재편과 경제적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 주민들에게 창

조성과 자기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새로운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지역의 교과과정의 개편이 중요한데, 그 내용은 유일사상 및 주체사상관련 교과 및 교과서 폐지, 사회교과의 비중 증대, 제2외국어 과목 신설 및 증설, 민주시민교육과 경제교육 강화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에서 재사회화를 위해 사회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성격과 내용은 교양 및 여가교육, 직업교육, 문화교육, 시민교육 등으로 대폭 다양화되어야 한다.¹⁰³⁾ 또한 현대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기 위해서 첨단 과학기술 및 컴퓨터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기술과 인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북한지역에서의 사회교육체제 개편은 불가피 할 것이며, 이는 정치·사상교육 일색의 획일적인 사회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며, 일반주민의 교육기회를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교육체제를 남북한 공동의 민간주도의 다원화체제로 대폭 전환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자생적 사회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 주민들의 재사회화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중

103)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52-4.

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정치교육의 목적은 남북한간 상이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기인하는 경험 및 인식체계의 격차를 줄이고 양지역 주민들간의 정신적·심리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있다. 정치교육은 남북한주민들로 하여금 통일후 새로운 사회·문화제도 및 가치·이념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정치교육은 남한의 정치제도나 이념을 일방적으로 홍보·교육하는 차원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민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은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탈정치화하고, 국가의 후견에 익숙하여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보호문화」로부터 탈피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갈등속에서 서로의 이해를 표출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되 궁극적으로 타협해나가는 「민주적인 논쟁문화」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교육의 주체는 국가기관과 자율적인 민간기관 모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산하에 「정부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재사회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¹⁰⁴⁾ 그러나 이러한 재사회화를

104) 북한주민의 재사회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해방이후 여러 귀순자들의 남한생활에의 적응상황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진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정당,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집단과 학술연구기관, 중립적인 교육기관 등 자율적인 민간단체들이나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정당, 학술단체, 대학의 연구기관과 종교사회단체 등이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간행물, 학술회의, 연수주선을 통해 학생, 교사, 기업인, 노조간부, 정당간부, 언론인, 법조인 등을 상대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 언론의 상호개방 상황을 활용하여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다. 문화교류의 확대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실천정책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교류 및 협력이다. 남북한 문화교류는 남북한간 접촉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인식과 생활의 이질화 폭을 좁혀나감과 동시에 공동활동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의존도와 문화접변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 단계별,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역사적으로 공유해왔던 전통 민족문화를 기반으로 남북한간 인식의 이질화폭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상대방 문화와의 활발한 접촉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호간 문화적 차별성과 유사성을 이해하게 하고 문화적 적응성을 높임으로써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줄여나가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남북한 문화단체나 사회단체들을 존속시키면서 이들이 상대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창작된 문예작품이나 출판물을 상대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과정이나 대중매체를 이용해 분단시대의 문화활동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 직후에는 비록 이념과 체제가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념적인 갈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비 이념적 분야에서 공동사업 및 협력을 추진하고 기존의 남북한 민간단체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상호의존성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통일문화가 지향하는 바에 부합되도록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 지향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남북한 주민이 공통의 가치체계 및 생활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주민들의 문화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동생활을 통해 인식의 공유와 상호이해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공동생활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각 체제의 장단점에 대한 균형있는 비판의식과 더불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남북한간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민간단체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사회·문화구조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즉, 남북간 계층적인 통로를 열어 협

력 확대 및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데, 청년단체, 학생단체, 노동조합, 농민단체 등과 같은 민간 사회단체들이 광범위한 협력사업과 결연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완전한 민족공동체 형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문화통합을 완결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 주권을 초월한 사회·문화적 공동기구를 설립·운영하고, 둘째 북한지역의 사회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위해 지원하며, 셋째 사회·문화와 관련하여 재교육 및 시정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사회화를 실시함으로써 의식의 동질화를 추진해야 한다.

V. 結 論

‘통일문화’ 연구는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과 방법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통일문화는 통일성취의 외향적 측면보다는 그것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내면적 측면에서 민족통합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통합의 차원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문화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문화체계를 창조한다는 미래적 관점에서 남북한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 방향과 목적의 설정을 요구한다. 이는 통일의 본질과 내용에 접근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탐구를 통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분단을 타개하는가에 대한 답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장에서는 민족공동체의 의미를 통해 통일문화의 개념화를 시도해보았다. 통일문화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포괄한다. 첫째, 통일한국의 사회구성원이 다 같이 지향해야 할 신념, 가치체계, 행동양식으로서 통일한국의 이념에 부합되는 민족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과정을 통해 분단된 사회·문화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를 의미한다. 통일문화의 개념은 결국 통일국가의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화 극복이라는 두 측면을 연결시키는 문화규범 및 그 실천정책의 창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남북한 문화구조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 및 공유 가능성을 규명해보았다. 남북한 문화는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심각한 이질화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지향으로 인한 문화변화의 방향, 민족성 유지 및 전통문화의 강조 두 측면에서 공유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남북한은 공히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왜곡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통일문화 형성은 이러한 분단문화의 극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통일문화 개념과 남북한 문화에 대한 비교인식을 바탕으로

통일문화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에서 수립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은 통일 이전에라도 현대사회의 성숙한 시민 문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각자의 문화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 즉, 남북한 문화구조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정향에 부합하도록 다원주의, 시민사회의 활성화, 합리주의, 인간중심의 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또는 전통문화를 확인·확산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복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하며, 나아가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정치 경제체제를 초월하여 이념적으로 연결시켜주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공통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적극 모색하여 통일문화의 주요 요소로 삼는다.

셋째, 통일 이후 공동생활을 통해 겪게 될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적·심리적 갈등을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해소한다. 통일이후 예상되는 문화갈등의 양상으로는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적 접촉에 의한 문화충격과 심리적 불평등, 가치관의 혼란, 세대·계층·지역갈등, 여성문제로 인한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정책으로는 민주시민교육정책, 재사회화

정책, 문화교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의 기저에는 대북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남한이 먼저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앞장서는 것을 강조하는 남한 중심적 시각이 깔려있다. 통일문화 형성에 있어서 남한 문화구조 개혁의 중요성이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은 통일문화 형성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나아가 북한에게 통일문화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사회·문화적 변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문화에 대한 남한의 포용력을 키움으로써 통일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북한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민족융합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현실의 정확한 인식에 바탕한 남한 중심적 사고는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통일방법이나 과정에 관계없이 추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문화의 개념과 형성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통일문화에 관한 인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통일문화는 미래지향적 제의나 요청이므로, 비록 그것이 남북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규범적·당위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논의에 있어서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 밖에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한 정책방향의 틀이 구체화되어 실천적인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실천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는 '통일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일상생활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의식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전체의 변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¹⁰⁵⁾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강광식 편, 「북한의 실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에서의 생활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현대사회와 전통윤리: 미래 사회의질서를 위한 모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 구영록·임용순 편,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3
- 국토통일원, 「통일문화지향과 교육계의 역할」 1986
- _____, 「남북한사회문화 현황비교」 1989
- _____, 「남북한 보건의료 비교연구: 북한실태를 중심으로」

105) 이것은 통일문화운동이 과거의 문화예술 영역에 한정되어 있던 문화운동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닐 때 가능할 것이다.

- 1989
- 권영민 외, 「북한문화예술 연구의 현황」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2
- 기사연 통일연구위원회,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민중사,
1994
- 김국신·김도태·여인곤·황병덕,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통
일 1.2」 한올아카데미, 1994
- 김영수, 「북한의 정치문화: 주체문화 와 전통정치문화」 서강
대학교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각년도
- 김정일, 「김정일선집 I」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태완, 「교육부문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합방안」 한
국교육개발원, 1991
-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
아일보사, 1993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과정」, 1991
- _____,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 박상천·김경웅·류보선,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동화연구소, 1991
- 변형운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6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사회문화연구소 편, 「사회운동론」 사회문화연구소, 1993
- 서재진, 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송복,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현대문학, 1990
- 알렉산드리아 유리예비치 만수로브, 「소련학자가 본 북한」 남북문제연구소, 연도미상
-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이온죽, 「북한 사회 연구: 사회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_____,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1993
-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현암사, 1985
- 임희섭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1988
-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지사, 1994
-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_____,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통일대비특별정책연수단, 「독일통합실태연구」 통일원, 1992
- 통일원, 「화해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원, 1993
- _____, 「남북한 사회문화지표」 1991

_____, 「북한개요」 199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1993

_____, 「분단국의 통일과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통합에 관한연구」 1991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1992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새로운 사회학 강의」 미래사,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1993

한국청소년연구원, 「남북한 청소년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1992

Karl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Boston: MIT Press, 1966

Sebastian de Grazia, *The Political Community: A Study of Anomi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John Keane 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London: Verso, 1988

Harold D. La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

- 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5
- John B. Thompson, *Ideology and Modern Cultur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2. 論 文

- 강명구, “통일한국의 지역 격차문제: 공존의 지역정책을 위한 제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1993
-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의 사회구조 변화,”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김 덕, “정치사회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련문제연구소 편, 「소련정치과정」 정음문화사, 1985
- 김성국,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격: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 김한초, “남북한의 사회적 이질성 극복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김호기, “포스트 맑스주의와 신사회 운동,” 「경제와 사회」 1992년 여름
- 도홍렬, “남북한 문화체제의 비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

- 일이념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 1992년 가을
- 손호철, “분단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백낙청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1994년 여름
- 신광영,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경제와 사회」 12, 1991
- 이서행,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이질적 가치관의 극복과제,” 「정신문화연구」 제15권 제2호, 1992
- 이우영, “통일의 사회·심리적 후유증 해소를 위한 체계적 방안 연구,” 강광식 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_____, “평화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회,” 한국도덕정치교육연구회 94년도 학술세미나, 「개혁의 과제와 민주시민교육」 발표논문, 1994.10.21
- 이종오, “분단과 통일을 다시 생각해보며: 백낙청교수의 분단체제론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1993년 여름
- 이호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창작과 비평」 1976년 봄
- 이춘길,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북한 문화연구」 1집, 1993
-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발전연구소, 「연구논문집」 1집, 1993
- 정대화, “통일체제를 지향하는 ‘분단체제’의 탐구,” 「창작과

- 비평」 1993년 가을
- 조 민,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2권 2호, 1993
- 조 형, “북한사회체제와 가부장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주최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30
- 주강현, “민족문화와 문화제국주의,” 「역사민속학」 2집, 1992
- _____, “광복이후 남북한 생활풍습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 15권 제2호, 1992
- 진교훈, “사회공동체와 시민윤리 -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 「도덕적 삶과 공동체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년 제2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4
- 진덕규, “한국 민족주의의 미래구도,”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1993
-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 - 시민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 한홍수,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의식의 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홀데 하이데, “민족적 통일과 사회적 분열: 독일에서 얻을 수 있는교훈,” 「창작과 비평」 1993년 봄
- Jessi Bernard, “Community Disorganization,”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3*, New York:

Macmillan, 1968

Salvador Giner, "The Withering Away of Civil Society?,"

Praxis International, Oct. 1985

Gale Stokes, "Lessons of the East European Revolutions
of 1989," *Problems of Communism*, vol XL Sept.-oct.
1991

민족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민족통일

윤 경 태*

- I. 서 론
- II. 민족통일을 거쳐 정치적 통일로
- III.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
- IV. 민족공동체와 문화적 통합
- V. 결 론

* 통일연수원 교수

빈 면

I. 서 론

전후 미·소의 첨예한 대립과 냉전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비롯된 남북분단은 벌써 반세기에 이르고 있다. 남북분단은 민족사회의 단절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극단적 이념대립을 초래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이질성마저 심화시켰다.

남북분단의 이러한 현실적 상황때문에 남북통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회의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20세기 국제정치의 골격을 이루어 왔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세계질서가 획기적으로 재편됨으로써 남북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도 그만큼 커졌다. 세계사의 흐름을 볼 때, 남북통일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상황으로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이란 '신사고'와 1988년 서울올림픽의 '화합의 정신'은 사회주의권의 정치, 경제적 변혁을 가속화시켰고, 결국에는 동구와 소련의 붕괴라는 엄청난 변화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국제질서를 탈냉전화하였다.

동구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자유화되었다. 소련의 변혁으로 냉전체제는 급속히 와해되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1985년부터 스스로의 체제개혁을 단행했다. 그것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의한 개혁과 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이루어졌다. 동구와 소련의 변혁은 70년동안 고수해 오던 맑스·레닌·스탈린주의를 버리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통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음을 말한다.

이러한 세기적인 변화속에서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이 베르린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역사적 통일을 이룩하였다. 동독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희망을 주었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단배경과 쌍방간의 교류·협력의 현황 등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독일의 통일은 우리도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었다.

국제질서의 변화는 우리의 국제적 위치와 남북한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과거 비우호적이었거나 적대적이었던 동구의 여러 나라와 소련(90. 9, 그후에 91. 12에 러시아와도 수교) 중국(92. 8)과도 수교를 하였다. 그로부터 이들 나라들과 사회·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남북한은 다같이 유엔에 가입하였다.(91. 9) 1992년 2월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시킴으로써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국제질서의 변화는 남북통일을 실

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세기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는 민주화·국제화·세계화로 가고 있으며, 국가간의 관계는 이념적·정치적·군사적 대립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무역·자원·환경 등 보다 새롭고 광범한 분야로 협조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통일은 이제 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현실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세계사의 흐름을 직시하여 우리의 모든 역량을 평화통일의 여건조성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1)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통일접근방식, 2) 남북한의 이질화현황, 3)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문화통합 등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민족통일을 거쳐 정치적 통일로

왜 우리는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분단 50년을 맞고 있지만 남북한 주민은 '우리'라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 민족은 국권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하나의 민족사회를 이루어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을 통합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에게는 1민족 1국가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1민족 다국가가 있는가 하면 다민족 1국가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우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역사가 천년이 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속에는 민족과 국가가 일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

남북통일의 당위는 지금은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데 있다. 오늘날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통일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통일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통일이란 분단을 전제로 할 때, 남북으로 나뉘어진 국토도 하나(국토통일), 남북에 두 개로 존재하는 정치체제도 하나(정치적통일), 남북으로 나뉘어진 민족사회도 하나(민족통일)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수백년 동안 한반도를 하나의 생활터전으로 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이루어 생활해 온 역사적 경험을 가진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은 비록 남북으로 나뉘어 살고 있지만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이루어 하나의 민족국가 사회를 건설해야

1)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3), p. 160.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족적 정서이다.

그러나 남북한관계의 역사나 현실을 볼 때, 즉각적인 통일은 기대할 수 없다. 지난 날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에도 남북한관계는 상호간의 증오와 불신과 반목으로 가득차 있다. 오늘날 세계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남북한간의 대립과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초기만 하더라도 민족의식의 동질성에는 남북한간에 피차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6·25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남북한간에 민족사회의 재결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알게 모르게 또 구조적으로 누적되었다.

남북한이 이념과 체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질화 현상마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정치적 통일(국가통일)을 일시에 당장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설령 외향적 통일인 정치적 통일이 실현된다 하여도 내면적 통일인 민족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을 하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통일을 보는 시각도 남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연히 달라지게 되었다.

남북한관계의 현실로 볼 때 국토의 통일보다 민족사적 관점과 시간적 차원에서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 실현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1945년 분단이전의 상태

로 돌아가자는 ‘과거 회귀로의 복고적 통일’이 아니라 현재의 상이한 남북한의 두 체제를 다시 묶어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미래지향적 창조적 작업’으로서의 새로운 통일이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의 전제조건이자 토대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통일이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²⁾

분단직후에는 통일이란 곧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했으나,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북이 사실상 두 개의 정치체제로 굳어진 후로부터는 통일이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일게 되었다.

이런 인식에서 이제 국민들은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통일은 단순한 국토와 정치적 통일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남북한의 모든 민족구성원의 삶의 터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통일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 남북한간의 갈등과 대결은 민족사회 구성원의 삶과 민족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남북한 모두에게 안겨 왔다.

우리는 흔히 통일이라고 하지만 통일에는 두 가지 차원이

2)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p.955.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적 통일이다. 정치적 통일이란 하나의 헌법밑에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 대외적으로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통일이다. 민족적 통일이란 남북한에 두 개의 정치체제가 존재하더라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사회가 되는 그런 동안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데 두가지 작업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외형적으로 통일된 국가체제를 형성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으로 남북한간의 대립과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일이다. 단순히 국가체제를 단일화시키는 것만으로 민족통일을 실현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남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양식에 있어 동질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국토분단이 통일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분단과 통일은 1차적으로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후 동족상잔의 6·25를 겪으면서 분단된 것은 민족사회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분단과 통일은 시간적·화학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분단과 통일은 공간적 차원에서의 국토분단과 통일 그리고 시간적 차원에서의 민족사회의 분단과 통일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통일문제는 ‘국토통일문제’라기 보다는 ‘민족통일문제’인 것이다.³⁾

3) 이흥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이념적 조명’, 이상우편, 「통일한국의 모색」(박영사, 1987), pp. 163~164.

국토의 통일만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의 토양인 사회·문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의 회복은 단지 민족의 내적 통합을 위한 외적 필요조건이지 자동적으로 사회내적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휴전선의 철조망만 제거된다고 민족통일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⁴⁾

우리는 흔히 통일이라고 할 때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을 모두 말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통일의 진면목은 민족공동체의 단일성 회복에 있다. 통일의 핵심은 민족통일이며 국가통일은 부차적인 것이다.⁵⁾

우리가 이룩하자는 통일은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민족사회를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민족통일이다. 다시 말하면 갈라진 국토나 정치체제를 단순히 하나로 묶는 외형상의 통일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아무 내왕도 없는 갈라진 상태에서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동질화시켜 온 겨레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민족통일을 이루자는데 있다.⁶⁾

민족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식은 남북한이 상당기간 공존·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체제의 단점을 수정하여 서로가 적응할 수 있는 유사한 체제로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 때 이질적 체제의 통일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⁷⁾

4) 21세기위원회, 앞의 책, p. 1218.

5) 이상우, 앞의 책, p. 166.

6) 자유평론사, 「분단현실과 통일논리」(1988), p. 57.

7) 21세기위원회, 앞의 책, p. 955.

거기에는 남북으로 둘로 갈라진 민족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민족통일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치적 통일(국가 통일)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통일실현 이후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정책인식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남북한간에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한 채 정치적 통일만을 추구한다면 통일은 이를 수 있을지 몰라도 통합에는 실패할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통일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⁸⁾

민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민족사회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80년대이후 우리의 통일방식은 북한을 적대자로서가 아니라 통일을 향한 동반자로 보고,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공존을 이룩하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것이다.⁹⁾

통일문제를 ‘민족’개념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82년

8) 21세기위원회, 앞의 책, p. 962.

9) 시대상황과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 왔다. 북한체제를 부정한 60년대까지는 국토통일만을 통일로 생각하였고, 북한체제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70년대는 정치적 통합이 되어야 완전한 통일이 된다고 보았으며, 북한을 공존의 대상, 동반자로 보기 시작한 80년대 이후는 민족통일을 거쳐 정치적 통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부터이다. 그 전에도 통일방안에서 민족문제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분단된 국토와 국가의 재통일이라는 공간적 차원에서 통일문제가 다루어졌다. 민족문제는 분열과 대결의 피해로부터 민족을 구출하겠다는 사명감에만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는 민족을 통일문제의 중추적 개념으로 놓고, 단순히 분단극복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민족번영의 민족사의 전개라는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북한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을 가져 온 것은 88년의 ‘7·7 선언’에서이다.

북한을 대결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포용하고, 남북관계를 한민족공동체안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족통일을 통해 국가통일(완전한 정치적 통일)을 실현한다는 점이다. 즉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남북이 상호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도모하면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남북연합단계가 민족통일의 단계이다.

기존의 통일방안과 남북한간의 합의사항도 수용하면서 세계사의 흐름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부응할 수 있게 보

완·발전시킨 것이 현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¹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하면, 통일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단계를 거쳐 즉 화해와 협력의 단계,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화해·협력단계가 남북한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 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단계라면 남북연합단계는 남북한간의 제도화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민족공동체를 이룩하여 민족공동생활권을 이룩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단계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단순히 두 개로 나뉘어진 국토나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한간의 공존공영을 위한 민족사의 전개라는 차원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명칭 그대로 남북한이 분단상황에서라도 우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룩해 나가는 바탕위에서 마침내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룩하자는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단계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정치통일은 당분간 뒤로 미루고 우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동질화시키는 경제·사회·문화적 통일을 선결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사회·문화 부문의 민족통일을 거쳐

10)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대통령의 광복 제49주년 경축사에서 제시된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통일방안'의 약칭이다.

정치적 통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민족공동체의 단일성만 유지된다면 정치통일은 언제라도 가능한 반면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정치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민족자체의 단일성마저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점진론을 펴게 된 것이다.¹¹⁾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토와 정치적 통일이라는 외형적 통일에 앞서 경제·사회·문화적 통일이라는 내면적 통일을 먼저 실현하여 실질적 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자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남북간에 체제연합을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이고 기능주의적이며, 남북한의 혈연·문화공동체라는 현실에 바탕을 둔 비교적 합리적인 접근방법이지마는 앞으로 정치·경제적 단일체에 의한 물리적·물량적 통일보다는 민족공동체로서의 생활공간의 형성이라는 사회·문화적 통합을 더욱 지향해야 할 것이다.¹²⁾

통일한국은 과거의 어떤 상태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아닌 민족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새로운 민족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통일한국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새

11) 21세기위원회, 앞의 책, p. 1212.

12) 21세기위원회, 앞의 책, p. 226.

로운 민족공동체로 창조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이상과 가치를 떠나가며 민족구성원 모두의 꿈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이어야 한다.¹³⁾

통일방식과 관련하여 남북한은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정치통일 우선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민족통일을 거쳐 정치적 통일(국가통일)이라는 점진적·단계론을 펴고 있다.¹⁴⁾

남한의 점진론은 외형적인 정치적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통일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내면적 통일인 민족통일을 우선 실현해 나가는 것이 통일후의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고 참다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이 정치적 통일 우선론을 펴는 논거는 간단하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남북한이 일시에 정치적 통일을 하기만 하면 남북한의 이질화문제는 동시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바탕에는 인간의 의식이란 인위적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레닌주의적 사회관이 깔려 있다.¹⁵⁾

우리는 왜 정치적 통일을 반대하는가?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고 교류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현단계에서 정치적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하려면 체제상용성이 있어야 한다. 체제

13) 21세기위원회, 앞의책 P. 1218.

14) 이상우, 앞의책, p. 164.

15) 이상우, 앞의책 p. 164.

상응성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하려면 '혁명'이나 '무력'이라는 무리한 방식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통일방식은 우리 민족 전체가 바라지 않고 있다.

현단계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통일 우선론을 따르게 되면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된다.

최근에 북한측도 정치통합 우선론이 무리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종전까지 주장하던 고려민주연방안을 약간 수정하여 제시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이다. 북한은 이런 식의 연방제를 제기하면서 제도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고 했다.¹⁶⁾

Ⅲ.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

8·15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일대 호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남북분단이라는 국제정치적 힘의 양극화로 남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그리고 북에는 소련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별개의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말았다. 이것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다.¹⁷⁾

분단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이념에 따라 각기 다른

16) 1991년도 김일성 신년사

17) 김종립, '남북한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형성 이론', 국토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논문집(1)』 (1989), p. 74.

정치·경제·사회·교육제도하에서 살아 왔다. 그 결과 찢줄로는 분명히 같은 민족이면서 상이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민족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래 동일민족에게는 동질의 문화가 있을 뿐이다. 언어가 같고, 사고방식이 같으며, 행동양식이 비슷하다. 남북한 주민은 해방전후까지는 동일한 민족문화를 가지고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동질성과 연대성이 있었다. 그러나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이 정치적 단위와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서로 단절된 생활권을 형성케 함으로써 이질의 문화를 부식시켜 놓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파괴하여 놓고 있다.¹⁸⁾

우리 민족은 분단상황에서 서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가운데 반세기동안 단절속에 살아 온 탓으로 원래 동질적인 민족이 이방인것 처럼 생활양식, 생활풍습, 행동양식, 가치관마저 서로 달라짐으로써 민족사회가 남북한간에 크게 달라지고 있다.

남북한 문화는 문화형성의 주체가 바로 한민족이라는 단일성에 근거하여 공통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문화는 분단시대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 경제적 질서의 대립에 의해 그 성격이 변화된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 따라 문화를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 다른 이념적 지표로 문화를

18) 고영복, '문화와 성격구조의 이질화,' 국토통일원, 『남북한이질화; 그 현황과 극복』 (1970. 10) pp. 57~58.

추구함으로써 남북한문화의 이질화가 초래된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에는 동질적인 기반을 이루는 것도 있고 이질화된 요소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문화통일을 위해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사회의 문화목표의 차이는 가치체계 등 여러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은 개방적 문화목표위에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며, 또한 무엇이 보람있고 가치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가치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물사관을 교조적으로 신봉하면서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계급투쟁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가치관을 북한 땅에 적용시켜 왔다. 더욱이 김일성 1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우상숭배의 문화’를 뿌리내려 왔다.¹⁹⁾

남북한간의 차이성과 이질성을 규명하는 비교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편이 전통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있는냐는 것이다.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가는 바로 정통성을 평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²⁰⁾

통일 이후 남북한이 사회·문화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에 형성된 이질성을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19) 국토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 현황 비교』 (1989), p. 80.

20) 이광규, ‘민족복리 우선원칙의 이론적 고찰’, 구영록·임용순편,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3), pp. 148~155.

동화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쪽의 체제 및 삶의 양식이, 그리고 성원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등이 어느 정도 이질화되었는지 서로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질화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은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제도와 규범, 이념과 가치 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목표로 하여 집단성의 이념에 근거한 인민의 문화를 강조해 왔다. 남한은 이와는 달리 자유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표현론적 요건과 가치론적 요건을 개인의 취향에 의해 조절, 개인성의 문화를 발전시켜 온 셈이다.²¹⁾

남한은 개인지향적 사회이고, 북한은 집단지향적 사회이다. 남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근거가 다르다.

이질화된 사회를 통일한다는 것은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공통의 준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통합은 대단히 어렵다.

남북한간의 이질화문제의 심각성은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는 면보다도 민족공동체 구성원간의 일상생활면에 있어서도 서로 통할 수 없는 이질적인 도덕관, 인간관, 활동관, 경제관, 종교관, 성공관 등에서 오는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삶의 가치

21) 21세기위원회, 앞의책 p. 979.

의 차이일 것이다.

남한에서는 산업화로 인하여 농촌에 남아 있는 전통문화가 많이 파괴되었고 특히 서구문화의 홍수로 인하여 생활문화나 의식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생활문화면에서 보면 남한이 북한보다 오히려 전통문화를 더 멀리하고 더 서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²²⁾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전통문화를 정치적·계획적으로 단절시켰다. 북한은 전통문화를 봉건적 잔재로 규정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전통문화의 일부 형식만 남기고 대부분의 전통문화 내용을 철저히 배제해 버렸다.

세시풍속은 전통문화의 단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영역이다. 남한의 경우 설날, 추석등의 전통적 명절이 간소화되긴 했으나 잘 지켜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전통적 세시는 처음부터 말살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등이 명절로 지켜지고 있다.

전통문화의 단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역은 종교상황이다.²³⁾ 1980년대 후반에 와서 북한에 장춘성당과 봉수교회 등

22) 도홍렬, '남북한체제 변화과정과 주요 사회적 배경의 변용양상: 사회문화 분야', 강광식의, 『통일후유증 극복방안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 93.

23)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민간신앙과 무속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종교이다.

이 정치적 선전목적으로 건립되긴 했지만 공산화 초기부터 북한은 맑스·레닌주의에 따라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말살하였다.

남한이 종교를 포함하는 사상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외래문화 수용에 탄력성을 갖고 국제화에 적응해 왔다면 북한은 전통문화의 단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또 다른 우려는 한반도에 서로 다른 두개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남북한에는 같은 민족성을 유지하며 살던 세대보다는 동질적인 생활경험이 없는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세대의 이질화는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²⁴⁾

해방당시 남북한은 다같이 농업중심의 사회였다. 그런데 분단 50년동안에 남북한사회는 공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도덕윤리의 변화 등 광범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경험했다.²⁵⁾

남북한 사회문화체제의 기본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²⁶⁾

첫째로 각기 추구하고 있는 문화의 이상과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24) 이서행, '남북한 사회관 및 일상적 사회생활관련 가치관의 갈등양상', 강광식의, 앞의책, p. 228.

25) 국토통일원, 『남북한 비교 총서』(1988) p. 101.

26) 국토통일원, 위의 책, pp. 102~103.

복지사회의 건설이다. 이는 국민 각자가 자유롭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즉 자아의 실현이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로운 수단이나 창의에 의해 추구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김일성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주민에게 강요하는데 있다. 즉 북한사회는 집단주의적 원칙이 획일적으로 준수되기 때문에 욕구충족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

둘째,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형하든가 아예 말살시키고 있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한 계급사관을 북한 땅에 이식시키고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내세워 전통문화의 정수를 왜곡시키고 있다. 우리의 민족사에 면면히 흐르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김일성의 개인우상화에 맞추어 제멋대로 변질시켰다. 결국 북한에서는 계급사관과 김일성의 ‘혁명전통’만이 역사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셋째, 북한사회에서는 문화민족주의의 이상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북한은 평화로운 사회, 복지사회,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과는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은 하나의 커다란 병영사회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이 말살된 사회이다. 김일성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해야 만 비로소 개인의 생존이 가능한 사회이다.

그러면 원래 하나였던 문화를 갈라놓은 요인은 무엇인가?²⁷⁾

첫째, 외래문화의 지배를 들 수 있다. 8·15해방후 남북한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남한에는 미국문화가 침투하게 되었고 북한에는 소련문화가 지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정치권력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들어섰고, 북한에는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양극화된 정치이념의 문화는 대립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의 지배속에서 생활문화의 차이를 심화시켰고, 남북한 각기 다른 사상체계를 갖도록 만들어 놓았다.

셋째, 상이한 경제체제의 양상을 들 수 있다. 남한에는 개인의 사유를 원칙으로 시장경제가 발달하게 되었고, 북한에서는 개인상공업의 철폐, 토지와 산업의 집단농장화, 국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중앙통제의 계획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차이는 주민들의 생활감각과 가치지향을 남북한이 서로 다르게 발전시켰다.

넷째, 상이한 사회구조의 특징을 들 수 있다. 남한의 사회구조는 개방적 계층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의 사회구조는 의도적으로 통제된 성분제적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당성과 투쟁경력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다섯째, 문화적 활동과 장치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북한에

27) 고영복, 앞의 글, 국토통일원, 앞의 책 (1977. 10) pp. 58~60; 자유평론사, 『분단현실과 통일논리』 (1988) pp. 172~174.

서는 모든 매스미디어를 당과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기능도 남한의 그것과는 달리 집단적 선전자, 집단적 선동자, 집단적 조직자로 일관되고 있다.

여섯째, 정치사회화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사회화는 계획적 정치사회화, 집단적 정치사회화이다. 가정으로부터 국가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사회화가 일관성을 갖고 철저히 통제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입한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북한주민들의 가치체계는 다음과 같다.²⁸⁾

첫째, 주체사상에 의거한 전체주의, 집단주의, 반이기주의, 반개인주의 등을 들 수가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 사회, 개인의 구분이 없으며,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와 같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닌다.²⁹⁾

둘째, 북한주민들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다. 정치사회화가 개인의 인센티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위를 선택하도록 된 것이 아니라 중앙계획과 동원에 의해 행동하는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집단주의의 강요는 자아의식을 버리게 하고 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인간형을 창조하는데 기여한다.

28)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74~76.

29)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3조

셋째, 북한주민은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주의적이며 폐쇄적 성격을 지닌다. 북한 주민은 유아기부터 조직적인 정치사회화에 의해 정해진 절차와 규율에 익숙하도록 행동의 폭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외적 적응성이 약한 자기중심적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

넷째,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은 전통문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김일성에 대한 절대복종과 결부되어 사회질서 전체에 권위주의를 강화시켰다.

남한의 전통적 가치체계는 유교적 도덕관에 바탕을 둔 신분적 위계질서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후 도입된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남한의 전통적 유교문화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첫째, 한국인의 가치체계는 명분을 중히 여기는 형식주의적 사고에서 합리주의로 변화되었다.

둘째, 산업화와 사회이동, 그리고 개인주의적 경쟁사회의 형성으로 대가족제도가 붕괴됨으로써 전통적 사회질서인 충효사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문화를 구조적 양식에 따라 이념문화, 행동문화, 용구문화로 구분하여 볼 때,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화 현상은 아직 제한적이며, 심층적 차원에서는 동질성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³⁰⁾

30) 국토통일원, 『남북한 비교 총서』(1988), pp. 12~13.

먼저 이념문화는 가치지향적 문화 또는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북한의 이념문화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집단주의 등이며, 한국의 이념문화는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 점진적 개혁주의 등이다.

이같이 남북한간에 이념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문화유산의 애호, 민족적 긍지의 제고, 주체적 역량의 양양 등의 측면에서 공통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행동문화는 사람들의 규범이나 관습을 의미하는 데, 행동문화의 측면에서는 남북한간에 공통부분이 더욱 많다는 것이다. 즉 전원적 정서감과 공동체적 유대의식, 가족에서의 전통적 인간관계, 상부상조의 관습, 서열주의 등의 한국의 전통적 특징은 아직도 남북한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구문화는 생활용품과 시설 등 생활수단을 말한다. 용구 문화 측면에서 보면 한복, 김치, 온돌 등 생활과 관련된 관습 등이 아직 남북한간에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사회·경제적 제도에 토대를 두고 있고 상이한 정치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이질화현상이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한간의 최소한의 공통요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민족적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IV. 민족공동체와 문화적 통합

지난 1세기 동안 독립되고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 왔다.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은 35년에 걸친 식민시대를 가져 왔고 그로 해서 우리 민족은 국가없는 민족으로서의 시련을 겪었다.³¹⁾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민족이란 개념이 국가적 범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는 민족국가의 형성기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19세기 후반부터 민족적 과제는 근대적 민족국가로의 전환이었다. 갑신정변은 바로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우리는 근대적 민족국가의 확립이라는 대역사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노력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³²⁾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란 민족공동체 복원에 바탕을 둔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정치적인 문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80년대이후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31) 이흥구, 앞의 글, 이상우편, 앞의 책, p. 165.

32) 이흥구 앞의 글, 이상우편, 앞의 책, p. 164.

있는 것은 민족공동체의 우선 건설이다. 이런 점에서 민족공동체란 무엇이며 민족공동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民族이란 인간이 객관적으로 언어, 지역, 혈연, 문화, 정치, 경제, 역사를 공통으로 하여 결합되고 민족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인간집단이다.

민족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이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의미하였다. 물론 북한의 민족관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맑스.레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관이 우리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민족을 자본주의의 발생과 더불어 나타난 역사적 산물이며, 부르조아민족은 자본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족공동체는 지연·혈연·언어·문화의 복합적 공동체이다. 민족공동체의 객관적 기준으로는 대개 혈연·지연·언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민족공동체에서 민족이라는 말만으로도 그 개념에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민족공동체는 민족구성원 모두에 의해 구성된 특이한 공동체이다.

어떤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면 1민족 1국가 즉 단일 민족국가로서 이 경우 민족공동체와 국가는 일치한다. 어떤 민족이 여러 개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1민족 다국가가 되는데 이 경우 민족공동체는 국가개념보다 상위이거나 동격이

된다. 그러나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면 다민족 1 국가가 되는 데 이 경우 민족공동체는 국가보다 하위이거나 최고로 동격으로 된다.³³⁾

우리 민족은 세계민족사상 유례가 없는 단일민족으로서 오랫동안 단일민족사회를 유지해 왔다. 일제시대에 국권이 상실한 상황에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민족의 생활과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면서도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일한국은 과거의 어떤 상태의 회복이나 복귀가 아닌 민족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의 통합된 민족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통일논리의 출발점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전통문화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주민은 우리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공동체의 같은 구성원이라는 데 있다. 북한동포는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와 더불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통일에 대한 발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문화통일 선행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인적·물적·교류를 확대·실시하여 생활양식의 동화를 촉진하며 문화교류를 실시하여 민족의식 차원에서 우선 동질성을 높여 가면 하나의 공동체 속에 함께 사는데

33) 한점수, ‘민족공동체와 한국의 민주적 통일논의’, 대학통일문제연구소편, 『통일논의의 제문제』 (대왕사, 1988), p. 142.

불편이 없게 된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통일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다.³⁴⁾

남북한간에는 공동체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³⁵⁾ 첫째,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 정치이념과 제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남한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공유재산제와 계획경제에 의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한에서는 이윤추구적인 경제활동이 생산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조직지향적 충성심이 그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정치적 통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공통의 지향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남북한에는 통일을 매개시킬 수 있는 공통의 성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남북한에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비슷한 사회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세력이 없다.

북한을 지배하는 사회세력은 노동계급이고 남한에서는 중간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남한에도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조직적으로 훈련된 북한의 노동계급과 질적으로 다르다.

셋째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조정하거나 절충할 수 있는 중

34) 이상우, 앞의 책, p. 166.

35) 고영복,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국토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제1집』(1990) pp. 79~80.

재자가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강대국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맡겨서는 안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남북한이 흥금을 털어 놓고 통일문제를 논의할 그런 입장도 아니다.

넷째, 남북한은 다른 한편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적화야욕을 두려워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의 침투를 두려워하고 있다. 남북한간에 상호불신이 존재하는한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부정적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남북한이 공동체의식을 갖는데 있다. 공통체의식은 공통문화에 근거할 수도 있고 합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우리'라는 공통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남북한이 공통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민족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민족주의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북한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동질성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민족적 공감대인 것이다. 아무리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정치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아직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단일 민족공동체 형성에는 다양한 과정과 방식이 존재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민족생활 전 분야를 포괄하는 성격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포괄적 공동체를 이루는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³⁶⁾

통일과 관련시켜 민족공동체를 보면 민족공동체에는 (1) 문화적 공동체 (2) 사회적 공동체 (3) 경제적 공동체 (4) 정치적 공동체라는 네가지 공동체가 있다. 이 네가지 공동체가 다 이루어지면 바로 통일이다. 그 중에서 궁극적인 것은 정치적 공동체이다. 정치적 공동체의 실행에 앞서 문화, 경제, 사회적 공동체만이라도 먼저 이루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남북한 사회를 현재의 분단상태로 방치해 두면 궁극에 가서는 두 개의 독립된 공동체로 정착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루려면 의식적 노력으로 사회·문화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문화통합이 이루어지면 정치적 의식도 서로 접근하게 되어 정치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단일성 회복이 민족통일의 과제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문화전통으로 묶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이 적어도 같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공존해 나감에 있어서 불만이 없을 정도의 생활문화, 가치정향 등을 공유해야 한다.³⁸⁾

한시라도 빨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민족통일

36)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1994) p. 1212.

37) 이상우, 앞의책, p. 179.

38) 21세기위원회, 앞의책, p. 1216~1217.

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의 기본조건인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란 남북한 주민 사이에 생활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이 같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의 통합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³⁹⁾

우리는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족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족의식이란 동일한 조상에서 유래된 혈연집단이 동일한 문화유산을 가졌으며 동일한 삶의 터전을 갖고 동일한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의식을 말한다.

민족의식을 이렇게 정의할 때 동일한 혈연집단과 동일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일한 삶의 터전과 동일한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⁴⁰⁾

그러므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식의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남북한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민족의식을 갖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혈연과 문화전통이다. 인종적 연계는 민족의식을 갖게 하는 가장 본원적인 요소이다. 문화전통은 사회화과정에서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된 사물인식의 층, 행위전형, 그리고 가치판단 기준 등으로 이러한 요소의 공유자간에는 '우리'라는 동류의식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

39) 21세기위원회, 앞의책, p. 1216.

40) 구영록·임용순 편,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3) p. 139.

혈연외에는 문화전통만이 우리의 통일의지를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문화전통의 확인, 승계, 발전, 보급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⁴¹⁾

문화가 정형화되고 정형화된 문화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 전통이 된다. 전통화된 문화는 그 공동체속에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사고, 가치정향, 행위방식 등을 규정하는 의식에서의 규범이 된다.

공동체속의 인간은 전통문화의 규제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제되게 되어 있으나, 문화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창조물이다. 어떤 계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전통과 다른 인식, 행동 등을 하게 되면 전통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⁴²⁾

문화전통과 공동체와의 사이에는 상호결정적인 복합관계가 존재한다. 문화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역으로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전통을 형성해 나간다. 우리 민족의 경우 이러한 복합관계가 분명하다. 우리 민족은 천년이상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 왔고, 그러는 동안 하나의 문화전통을 만들어 왔다.

아직까지도 남북한 주민을 하나로 인식하는 우리의 의식은 전통문화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공유하고

41) 이상우, 앞의 책, p. 171.

42) 이상우, 앞의 책, p. 158.

있는 전통문화를 발판으로 하여 새로운 남북한 문화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곧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길이 될 것이다.⁴³⁾

남북한사회는 아직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왜곡과 수정이 가해졌지만 아직 같은 문화를 공유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전통문화에 공통성이 존재하고 있다. 분단 반세기동안 일상의 생활문화에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전통문화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아닌것 같다.

남북한의 공통의 전통문화를 기초로 하여 점차로 남북한 주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통합을 추진하여 생활과 의식에서 남북한 사회를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만들어 간다. 이것이 문화통합 우선론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남북한이 문화적 공통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서로 다른 정치공동체 속에 살아 온 남북한 주민이 문화적 공통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는 넓은 의미에서 삶의 전체적 방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⁴⁴⁾ 남북한의 이질화된 문화현상을 극복하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문화의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43) 이상우, 앞의 책, p. 179.

44) 21세기위원회, 앞의 책, pp. 986~989.

통일문화 정책의 핵심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통합과정을 설명하는 분석의 틀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지배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상호의존모델이다.

지배모델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운데서 강자의 문화가 약자의 문화를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호의존모델이란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 관련성과 영향관계에 기초한 통합을 말한다. 이 모델은 통합되는 두 가지의 문화가 서로 비슷한 데서 출발한다.⁴⁵⁾

남북한의 경우 상호 대립과 경쟁속에서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사회가 처해 있는 경제적 난국을 생각한다면 지배모델에 의한 문화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이 모델은 북한의 붕괴 또는 몰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통합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문화통합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은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기반을 바탕으로 앞의 두 가지 모델에서 각기 장점을 취하여 새로운 문화통합의 틀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문화란 일반적으로 생활방식을 총칭하는 말이므로 그것이

45) 강정구,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통일원, 『민족동질화 촉진의 모색』(1993), p. 147.

포함하는 사항은 매우 광범하고 다양하다. 관례적으로는 문화란 정치, 경제, 사회구조와 구별되는 생활방식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전자는 광의의 문화개념이고 후자는 협의의 문화개념이다. 그러나 어느쪽이든 문화는 특정사회나 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생활방식을 가리킨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⁴⁶⁾

남북한 문화통합을 논의하거나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한의 '한국문화'와 북한의 '조선문화'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남북한 문화통합은 무엇보다도 먼저 한민족 공동체문화의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남북한의 문화통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족공동체 문화는 한국 민족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인본주의적 사상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인본사상은 먼저 단군신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한국전통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면면히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남북한의 문화통합이란 남북한의 정치·사회적 통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맞추어 남북한 문화통합의 방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한문화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의 내적 형성에 기

46) 고영복, '문화와 성격구조의 이질화', 국토통일원, 『남북한 이질화; 그 현황과 극복』 (1977. 10) p. 57.

여하는 요소들 예컨대, 언어, 관습, 민족성 등의 공통적 기반을 철저히 연구하여 그 동질성을 확보해야 한다.⁴⁷⁾

남북한 문화통합에 대한 모든 논의는 두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그 하나는 남북한의 문화가 민족분단이전에 민족문화의 전통을 지켜 온 단일민족의 문화였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민족분단이후 남북한의 문화가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체제의 요구로 인하여 서로 이질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가지 사실은 남북한문화의 통합을 요구하기 위한 전제이면서 동시에 출발점이 된다.⁴⁸⁾

문화는 접촉과 교류속에서 이입된다. 따라서 문화동질화 작업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은 남북한 사회간의 문화접촉의 기회확대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문화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3국에서의 접촉과 교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 시도해야 한다.⁴⁹⁾

대립관계가 통합적 관계로 바뀌는 과정은 우선 접촉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친화성의 정도에 따라 접근, 적응, 통합, 합일관계로 발전한다. 접근은 통합에로의 준비단계이고 적응은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일방적으로 혹은 상호간

47) 21세기위원회, 앞의책, pp. 978~979.

48) 21세기위원회, 앞의책, pp. 980~981.

49) 이상우, 앞의책, p. 177.

양자의 통합에 순응하는 과정이다. 통합은 차별이 극복되는 단계를 말하며, 합일은 상호간 협동을 결속하는 융합과정이다. 이러한 단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문화통합이란 통일을 촉진하는 수단적 의미의 개념이라기 보다 통일이후에 이루어야 할 최종단계, 즉 진정한 통일의 목표를 뜻하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은 사회·문화 동질성 증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모색되어야 한다.⁵⁰⁾

우선 현재의 남북한관계의 수준과 남북한 사회의 변화전망을 고려하여 남북한 통합의 객관적 조건과 제약요소들을 반영하고 이에 기초해서 접근해가야 한다. 둘째, 남북한간의 대립과 경쟁상태를 극복하고 조화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상호보완적 체제수렴을 통해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남북한 공동체 형성의 유형으로 흡수모형이나 평균적 결합모형보다는 발전적 통합모형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원칙과 내용을 세계사의 발전추세와 문명사의 진행모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을 전제로 구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동질성 증대를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⁵¹⁾

50)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pp. 124~125.

51) 윤덕희·김도태, 앞의책, pp. 125~127.

첫째, 남북한간 교류증대와 동질화작업을 통해 북한사회가 폐쇄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개방, 개혁을 추진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민족문화에 토대를 둔 전통적 가치의 공유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남북한 사회·문화의 변화전망에 비추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지향적 가치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사회의 개혁, 개방세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V. 결 론

남북통일은 민족지상과제이다. 통일이 아무리 민족지상과제라 하더라도 무리가 따르는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후유증 없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남북한간의 공존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를 우선 건설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할려면 무엇보다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이미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간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

로 합의하였다. 북한이 그들의 체제붕괴위협을 느껴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현재로선 기피하고 있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면 언젠가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응해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 두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통일방식이 민족공동체 건설 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정치적 통일에 앞서 우선 민족공동체 건설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책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북한의 문화적 특수성을 완화시키고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과 동질성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문제점들을 최소화해 가는 일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가 실현하려는 통일국가는 7,000만 민족이 다같이 자유와 인권과 복지를 누리면서 함께 잘 살수 있는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선진 민주국가이다.

빈 면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김 학 성*

- I. 서 론
- II. 통일문화의 개념설정문제
- III. 통일문화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재조명
- IV. 독일사례를 통해 본 통일문화연구의 방향
- V. 결 론

*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빈 면

I. 서 론

1. 문제제기

냉전시기동안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는 두가지 특징을 보여왔다. 첫째, 영토분단이라는 외형적 현실 극복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주도적이었다. 둘째, 그러한 접근은 대부분 규범적이며 제도중심적 - 특히 정치제도적 - 차원¹⁾의 인식기반위에서 이루어졌다.

분단현실을 규범적,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국내의 정치질서의 냉전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1970년대 남북한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남북한 당국은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표방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단지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체제경쟁의 논리가 상호관계를 지배함으로써 효용성과 기능성을 띤 통일지향적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정책은 실제 기능상 각 정권의 국내적 정통성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자기 체제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끌어 가려는 전략으로 이용되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현실적 시각에서 바라보

1) 여기서 제도중심적이라함은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의미한다. 즉 통일논의 자체가 정부를 비롯한 제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간에 통일을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통일정책과 연구의 저변에 깔려있다는 점이다.

면,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방법상의 세련화에 역점을 두는 통일정책 및 연구경향은 통일의 실현가능성이 암담한 국내외 정치환경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하에서 상황적으로 강요된 선택의 결과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한반도 통일문제는 규범적, 제도 중심적 인식틀을 넘어 문화적 인식에 이르기까지 접근방법면에서 다양성을 띠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환경의 변화로서 1) 한국내 민주화의 발전과 이에 따른 통일논의의 사회적 확산,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확립이후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문화의 기능에 대한 관심 고조, 3)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세계적인 탈냉전적 사고의 확산, 4) 독일통일과 독일의 통일후유증에 대한 관심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문화적 접근을 부추긴 한 요인으로서 사회과학적 연구경향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즉 복잡성이 더해가는 현대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포스트모던(postmodern) 이론의 유행적 확산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통일문제에서 제도중심적 접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통일이라는 실제상황이 닥쳐온다면 오히려 효율적 제도형성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문제는 제도중심적 접근이 어느 정도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전제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주의

권의 붕괴와 탈냉전적 思考의 확산이라는 범세계적 추세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독일통일을 접하게된 후 한반도통일 문제는 이제 더이상 규범적 차원에만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즉 국제적 환경변화가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밝혀주고 있는 가운데 규범적 논의를 넘어선 보다 현실적이고 효용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특히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고수적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상황하에 한국의 정부나 통일문제연구자들에게 부과된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제도중심적 접근이 불충분함은 자명하다.

비록 규범적, 제도적으로 효용성 있는 통일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내적 통합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통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통일의 사례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 분단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두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아무리 세련된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여도 분단기간 동안 개인 및 사회를 지배해왔던 체제종속적 규범, 가치, 신념 등의 타성이 쉽사리 극복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간의 이질성은 단순히 제도적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 둘째, 사회적 분화(differentiation)가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이나 갈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통일을 제도중심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는 제도

의 본질에서도 나타난다. 제도는 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특정 사회목표나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된 집단들, 혹은 사회적 역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의미부여(Sinngebung)의 소산이다.²⁾ 그러므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제도의 형성을 위해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 일반을 비롯하여 사회구조와 같은 포괄적 사회현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제도를 규범, 역할, 신분관계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통합이론, 지배계급의 억압구조 현상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갈등이론, 심지어 의도된 계몽의 도구로서 진정한 인간해방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는 비판이론 등의 서로 경쟁적인 이론들에서 조차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

통일의 실현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과거와 달리 제도중심적 전략 못지않게 남북한 체제의 사회관계 및 가치체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내적 통합을 도출할 수 있는 실천전략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분단 이래 남북한간에 형성된 흔히 ‘이질성’으로 불려지는 문화적 차이의 극복이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어떠한 통일

2) Shmuel N. Eisenstadt "So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4 (N.Y.: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68), p.410; Günther Hartfiel & K.-H. Hillmann, "Institution", *Wörterbuch der Soziologie*,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1972), p. 341.

방법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현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인 점진적·단계적인 평화통일의 경우 문화적 동질화 과정이 필수적 전제조건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한 체제가 다른 체제로 급격히 흡수통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사회통합을 위해서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은 이루어져야 한다. 후자의 경우 특정 체제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사회교육이 일차적으로 사회통합문제의 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를 예상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통일 이후의 통합에 소모되는 시간과 경비 - 흔히 말하는 후유증 - 를 가능한 최소화 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진적·단계적 통일에 전제되는 교류를 통한 남북한 상호간의 문화적 동질화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와 사회의 입장에서 그러한 노력은 북한의 자발적 변화에 대한 기대나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만 머물기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질성 극복을 위한 폭넓은 대비책의 마련과 남한 내에서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80년대 후반기 이후 분출하기 시작한 남한내의 다양한 통일논의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문학, 역사학, 철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하여 예술계 및 심지어 자연과학 분야에서 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문제연구의 내용들은 통일문제

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문제는 각 분야들의 연구과제와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켜 유용한 실천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각 분야들에 내재해 있으면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범주적 개념, 즉 문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마르크스주의자나 파슨스(Talcott Parsons)류의 구조기능주의자들은 문화를 다른 체계(또는 영역)들과 접합(articulate)하는 - 계급지배의 논리 혹은 체제유지의 필요에 따라 - 한 체계(또는 영역)로서 효율적이라고 보았으며, 나아가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은 현대사회가 극도로 다원화, 합리화, 상품화된 결과 모든 사회 영역에 문화의 편재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³⁾

‘문화’라는 다의적이고 구체화되기 힘든 범주적 개념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일은 자칫하면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절편화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접근상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다양한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현대사회에

3) Stephen Crook, Jan Pakulski & Malcolm Waters, *Postmodernization: Change in Advanced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1992), p. 75 참조; 포스트 모던 이론에 의하면 현대사회가 극도로 다원화(hyperdifferentiation)되면서 탈분화(dedifferentiation) 효과 - 즉 잘게 나누어진 문화적 의미가 현대적 문화들간의 경계와 문화와 사회의 경계를 넘는 능력을 갖게 되는 효과 - 가 나타난다. 이처럼 문화의 사회적 편재현상으로 말미암아 ‘문화’와 ‘사회’의 구분은 점차 소멸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 구조적으로 문화가 사회과정의 조형자(moulder)인지 또는 사회과정의 반영인지를 묻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

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일치된 인식들을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화의 이중성, 즉 인류의 문명사를 훑어 보면 언제나 규범적 이상으로서의 문화와 실제 행해지는 문화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명백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⁴⁾을 고려하면 통일문화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두된다.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서 통일문화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통일방법에 따라 그러한 규범적 미래상은 미래를 향한 지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허구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접근의 어려움이 지적될 수 있지만, 통일문화의 통합지향성을 강조할 때, 제도중심적 접근의 현실적 한계가 보완 및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접근은 유용성을 가진다. 특히 내적 통합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 인식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2. 독일사례분석의 필요성

통일문제연구에서 문화적 접근을 부추긴 배경들 중에 독일통일의 경험은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독일통일은 제도중심적인 통일이 미친 과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4) Benjamin I. Schwartz, "Culture, Modernity, and Nationalism - Further Reflections", *Daedalus*, Vol.122, No.3, (Summer 1993), p. 212.

독일은 한반도와 상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분단상황의 유사성이 라는 점에서 독일통일은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문화적 접근을 위한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구체화시키는 데 독일통일의 사례연구는 유용한 준거(reference)로서 가치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반도의 통일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통일에 대한 기대와 각각의 희망을 바탕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일의 과정, 방법,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 나름대로 이상주의적이거나 현실주의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한다. 이 그림이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물론이고 역사와 사회변동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식은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기존의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에서 보듯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주관성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새로운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⁵⁾ 여기서도 이론의 논리상 미래는 열려

5) 대표적인 학자로 니콜라스 루만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루만의 이론전반에 대한 요약된 글로는 다음 논문 참조. 김종길, "니콜라스 루만의 일반 체계이론: '복합성'을 극복하고자하는 시도," 「한국사회학」 제27집(여름호, 1993), pp. 25-51.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쓰여진 최근의 사회변동이론서로 Walter L. Bühl, *Sozialer Wandel im Ungleichgewicht*, (Stuttgart: Enke, 1990)을 참조.

있는 것으로써 예측의 문제와 관련한 한계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여하튼 미래적 사건과 관련하여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미래의 모습을 결정지우는 잠재태가 현재속에 가능성이란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통일문제연구의 본질은 통일이라는 미래적 사건을 두고 현재의 모든 가능성들을 검색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작업은 곧 복잡성을 축소하며, 인과성을 발견하기 위한 체계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비록 복잡성 때문에 인과성의 발견작업이 한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미래의 결과에 대해 최대한의 근사치를 찾아내려는 노력은 포기될 수 없다. 이 과정은 당연히 다양한 역사적 경험, 모델, 이론 등을 준거로 하여 전개된다. 지식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사유나 인식은 존재피구속적(seinsverbunden)이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한반도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상호관계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현실적 결과로서의 영향보다 아마도 한반도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태도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클 것이다. 즉 거시적으로 보면 북한정권은 동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게 되었으며⁶⁾, 남한에서는 통일을 당위적

6) 단기적으로 독일통일은 북한의 태도를 경직시킴으로써 남북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통일문제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한승주, 「전환기 한국의 선택: 민주화, 평화통일, 민족자존 외교의 미래를 향하여」, (서울: 한울, 1992), p. 61.

차원을 넘어 현실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⁷⁾ 특히 남한내에서는 남한주도의 통일가능성을 확신하는 동시에 예전에는 생각치 못했던 통일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만연하는 경향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인식태도에 미친 독일통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통일문제연구는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모색하도록 요청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넓은 의미의 통일비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맥락에서 ‘통일문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연성이 대두 되었다.

독일통일은 인식태도의 변화를 자극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흔히 독일통일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타산지석이 된다고 말한다. 이때 특히 독일의 통일후유증이 경계되어야 할 본보기로 지적된다. 그러나 정작 독일경험을 한반도문제에 적용시킬 때 항상 적실성 문제가 제기되며, 그러한 입장에서 독일문제와 한반도문제를 병렬적으로 서술하는데 그치거나 아니면 너무 단편적 혹은 너무 일괄적인 시각으로 교훈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독일과 한반도의 상이한 역사, 문화, 국내외적 환경,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문제로서 통일의

7) 독일의 사례는 남북한 당국 모두에게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줌으로써 남북합의서의 체결이라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일을 향한 결정적 추진력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Gerrit W. Gong,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U.S. and Northeast Asia", *Korea and World Affairs*, Vol.16, No.4 (Winter 1992), p. 659.

방법을 고려하면, 적실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단상황의 유사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더구나 한국의 통일정책은 통일원의 창설에서부터 북방정책, 남북한 기본합의서, 최근의 분단질서(Teilordnung)관리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독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 내지 동방정책(Ostpolitik)으로부터 적지 않게 영감을 받아온 것 역시 사실이다.

적실성 문제에 집착하거나 단순한 영감의 차원에서 독일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문제에 적용 가능한 좋은 예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경험은 통일문제연구를 위하여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를 들면 브란트 이래 서독의 동방정책 기저에서 통일에 대한 희망이 일단 유보됨으로써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동서독간의 교류 및 접촉은 소련의 변화를 계기로 재빠른 통일을 달성하는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통일후유증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서독의 독일정책과 통일의 결과 사이에 미처 파악되지 못했던 인과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제로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한반도 통일문제의 인과성을 찾는 작업을 보다 체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독일의 경험이 통일문제연구에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정책 및 사건들을 일면적 내지 단편적으로 살펴보기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역사적, 상황적 문맥(context)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상 먼저 독일의 경험을 분단이후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적 차원과 통일이후의 결과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의 노정에서 있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그러한 구분은 한편으로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 유용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양차원은 인과적인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을 배제하고 다른 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일경험을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려면 각 차원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양차원의 유기적 관계를 종합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통일후유증의 내용, 원인과 발생 배경을 분석 및 종합할 때, 독일의 경험은 통일문화연구에 직접적인 준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통일문화의 개념 설정 문제

문화적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통일문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통일문화라는 단어

는 아직 보통명사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80년대 중반부터 간헐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 개념이 사용자마다 자신의 지적 배경의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에 앞서 통일문화의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나아가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독일사례에 대한 분석시각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서도 통일문화에 대한 개념 설정은 반드시 요청된다.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통일문화의 개념적 일반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부터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몇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앞서서도 지적 했듯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지 일천할 뿐아니라, 그에 따라 개념의 일반화를 유도할만큼 충분한 연구결과나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했다. 비록 몇몇의 의미있는 중요한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통일논의의 가장자리에서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조어의 문제 또한 개념적 다양화를 이끈 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XX 문화'라할 때 'XX'는 집합적 내지 범주적 개념으로서 또 다른 범주적 개념인 '문화'를 수식하여 문화에 특정 테두리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XX 문화'는 'XX'의 속성, 규범, 가치, 상징 등을 분석하는 설명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통일문화라는 합성어는 이러한 일반적 조어양식에서 벗어나 있다. 통념상 ‘통일’이 ‘문화’를 수식할 때 특정 경계영역을 가진 문화적 범주가 상정되기 힘들다. 만약 통일이라는 단어를 의미맥락상 단순히 ‘분단의 극복’이라는 구체적 사실로 이해한다면, 통일문화는 언어규칙을 무시한 의미없는 합성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란 단어는 그렇게 단순히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통일’은 염원, 가치, 신념 등의 지향성을 띠고 있으며, 동시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주체, 대상 및 윤리의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이란 단어는 내용상 크게 보아 범주적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지향성의 정도와 방향, 그리고 문제인식의 초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일’이란 개념에는 다양한 하위범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하위 범주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통일문화’를 이해하는 바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셋째, ‘문화’라는 개념이 가지는 복합성, 추상성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총체”(E. Tylor)로 개념화된다. 그러나 문화는 이처럼 총체적으로만 이해되지는 않다. 예컨대 인문,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문화는 “관찰 가능한 어떤 도구, 행동, 제도 등에 이르게한 기준, 표준, 규칙 등”으로 파

약되기도 하며, 보다 좁은 의미에서 문화는 문학 및 예술적 행위의 분야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또한 문화는 사회적으로 ‘전통문화’ 또는 ‘고급문화’, ‘대중문화’ 또는 ‘하급문화’ 등의 층위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 개념의 복합성 때문에 통일문화를 이해하는 양식도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통일문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⁸⁾를 분석해 보면 다음 세가지 공통된 문제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첫째, 존재이유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통일문화’의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둘째, 실천내용과 관련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작업으로서 ‘통일문화’를 이해한다. 셋째, 통일과정과 관련하여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통일문화’의 효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통된 문제의식과는 별도로 개념 정의 및 연구의 초점과 관련하여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⁹⁾ 하나는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통일

8) ‘통일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포괄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다. 김용범, “현단계 통일문화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통일문화연구소 간담회를 위해 준비한 원고, 1994. 3. 16)

9) 언어, 역사, 철학 등의 인문학도 통일문화와 관련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통일관련연구는, 비록 연구방법면에서 인문학적 태도를 견지하지만, 연구내용상 순수한 인문학적 접근은 아니다. 이들의 연구는 각 전문분야에서 한반도 주민의 정신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연구의 전체나 적용성 면에서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고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통일연구가 궁극적으로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한반도주민 개개인의 정신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한, 이를 넓은 의미에서 사회과학적 접근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할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및 영역의 확대로 말미암아 학문적 접변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문화'를 “통일된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문화”로 규정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내지 세계관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치사회 내지 사회심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문화적 접근이 주류를 이룬다. 다른 하나는 문학·예술계의 ‘통일문화’에 대한 접근양식이다. 여기에는 문화정책적 이해가 각인되어 있으며 예술적 행위를 통하여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구체적 실천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연구현실상 대별되는 ‘통일문화’에 대한 두가지 접근태도는 문화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나누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즉 문학·예술은 고도의 추상성과 상징성을 통하여 문화를 함축적으로 수용하고 표현하는데 반하여, 사회과학은 문화를 분석적으로 해체하여 사회적 행위와 구조의 관계를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일문화’란 개념은 존재이유나 실제내용상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데 있어 단순한 영토적, 제도적 통합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의 통합, 즉 내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실천전략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유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문학·예술계의 접근태도는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과학적 접근에 속하는 한 분야의 실천영역으로 분류되어 자리매겨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개념 문제로 인하여 ‘통일문화’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엄밀히 말해서 사회과학에서 문화개념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사회현상에 대해 과학적 설명이 어려운 - 또는 불가능한 - 부분을 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자들의 게으름 내지 무능 탓인가 혹은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한계 탓인가?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발전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알몬드(G.A. Almond)와 베바(S. Verba)는 정치문화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¹⁰⁾ 그러나 이들도 정치문화는 아직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함을 고백한다. 즉 정치사회학, 사회심리학, 심리인류학의 가설과 이론의 바탕위에 사회과학 조사방법의 기술적 발전을 통하여 정치문화연구가 유용성을 갖게 되었지만, 이는 다만 이론의 구성을 위해 사용 가능한 일련의 변수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¹¹⁾ 이처럼 문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무엇보다 현대적 생활세계 내지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다소간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은 이러한 증상

10) Gabriel A. Almond,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Civic Culture Concept", *The Civic Culture Revisited*, eds. by G.A. Almond & Sidney Verb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pp.1-36. 이 논문은 시민문화를 중심으로 정치문화의 개념화, 연구와 관련된 지적 전통과 조류를 추적하고 현재의 수준을 밝히고 있다.

11) *ibid.*, p.22 와 26

(symptom)적 부분을 문화로서 이해하고 있다.¹²⁾

문화에 대한 이러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한계는 곧 바로 ‘통일문화’의 개념을 설정하는 문제에 직결된다. 기존의 ‘통일문화’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공동체를 열망하는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문화”라는 ‘통일문화’의 개념 정의¹³⁾가 연구자들의 보편적 생각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듯 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만을 놓고 보면, 이것이 과연 ‘통일문화’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비록 통일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것과 별개로 일반적 문화범주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사회통합의 기저로서 ‘문화’라는 포괄적 개념과 이 정의에서 말해지는 ‘문화’와의 차이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에 따른 ‘통일문화’는 곧 문화일반을 지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문화’의 개념적 특징, 즉 조어상 하나의 하위문화적 개념의 특성을 보이면서도 실제 내용상 문화현상 전반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문화’ 개념을 몇 마디의 말로써 정의하고자하는 노력은

12) Ulrich Sarcinelli, "Auf dem Weg in eine kommunikative Demokratie? Demokratische Streitkultur als Element politischer Kultur," *Demokratische Streitkultur: Theoretische Grundpositionen und Handlungsalternativen in Politikfeldern*, hrsg. von U. Sarcinelli,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0), p.33.

13) 조 민,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통일연구논총」, 제2권 2호 (1993), p. 236.

문화 개념의 복합성과 추상성, 그리고 ‘통일문화’라는 단어의 조어상 문제로 말미암아 개념의 혼란과 불명료성을 피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러한 작업은 대개 동의반복적 개념 정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개념적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 개념이 요청되어진 동기(motive)의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용하게 보인다.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 ‘통일문화’ 개념의 구성틀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동기분석을 위하여 사회과학에서 문화적 접근이 요구되는 일반적 동기와 통일문제에서 나오는 특수한 동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문화적 접근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 동기가 있다.¹⁴⁾ 이는 분석상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호간에 겹쳐지거나 또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¹⁵⁾

첫째, 순화적 동기(Domestizierungsmotiv)이다. 여기서 순화라함은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 정치·사회적 규칙, 페어플레이 원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상황에서도 서로를 헐뜯지 않고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

14) 갈등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좌파이론가들 - 특히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영향을 받아 - 은 지배 계급의 사회적 체계모니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문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에 반해 통합이론가들은 사회적 갈등을 통제하는 기제(mechanism)로서 문화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통일문화’라는 단어에는 이미 통합개념이 전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후자적 입장에서 그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성을 가진다.

15) Ulrich Sarcinelli, *op cit.*, p. 34. 참조

는 정치·사회적 교류형태를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효율적 동기(Effizienzmotiv)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적 갈등이 교화된(kultiviert)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마찰손실(Reibungsverlust)을 효율적으로 줄이려는 것이다. 셋째, 민주화의 동기(Demokratisierungsmotiv)이다. 이는 민주화라는 현대의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투명한 공동이익을 일깨우고 참여의 기회를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더욱 발전된 민주적 구조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통일문제에 문화개념이 요청된 동기는 분단이라는 특정 상황이 부여한 것이다. 즉 남북한체제의 대립성으로 말미암아 정부간의 합의에 의한 정치적 통일이 달성되기 힘들다는 현실 인식과 분단기간동안 남북한간에 고착된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통합을 전제로 하는 진정한 통일은 생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통일을 위한 실천전략적 동기에서 문화적 접근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동기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통일문화’ 개념의 구성내용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 정리될 수 있다. ‘통일문화’는 1)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행위 및 사회의 심층구조를 설명하는 사회과학적 개념이다. 2) 통일을 지향하는 실천전략적 개념이다. 3) 통일한국의 효율적 사회통합을 위해 최소한의 합의된 가치를 창출하는 질서들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4) 현대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개념이다. 즉 폭력이나 비민주적인 사회행위를 지양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5) 동태적이며 열린 개념이다. 즉 현시점에서 규범적으로 틀지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 나아가 전인류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역동성을 가진채 열려 있다.

Ⅲ. 통일문화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재조명

1. 통일후유증

통일이후 독일의 국내적 현실은 애초의 기대 내지 희망과 달리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통일비용과 관련한 독일정부의 재정압박, 구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사회심리적 혼란, 서독지역주민들의 과도한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불만, 동·서독지역 주민들간의 반목 및 동질성회복의 어려움, 독일민족의 정체성(identity) 위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소위 통일후유증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유증은 과거 서독사회가 구가했던 정치 및 사회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안정기반을 뒤흔들어 놓았다. 더욱 큰 문제는 비단 국내적 통합과정의 현실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통일후유증이 쉽사리 해결되기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우 짧았던 기간이나마 독일의 통일과정을 되돌아 보면

내적 통합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우려는 특히 사회경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통합으로 발생할 사회경제적 후유증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으며, 따라서 90년 5월 18일 동·서독간에 체결된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Staatsvertrag)’의 문제점을 이미 분명하게 지적하였다.¹⁶⁾ 또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동서독의 일부 사회세력이나 지식계층은 이념적 내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독일통일과정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이나 비판은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대세 속에 휩쓸려버리고 말았다. 사회문화적 통합의 문제는 환호와 기대 속에 달성된 정치적 통일이 가져다준 냉엄한 현실을 통하여 비로소 체감되기 시작하였다.

통일이후 나타난 사회문제는 상당부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동독지역에서의 급격한 탈산업화와 그에 따른 대량실업사태의 전개, 동서독지역간의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서독지역에서 통일비용부담을 둘러싼 계층간의 갈등은 통일독일의 사회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독정부도 통일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느정도 예상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과도기적 혼란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이면에

16) Jan Prieue & R.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eutschen Vereinigung* (Frankfurt a.M.: Fischer Verlag, 1991), pp. 88-90.

작동하는 사회심리적 갈등에 대하여 결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어떠한 대안적 처방도 가지지 못했다. 동서독 지역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마음의 벽(Mauer im Kopf)” 혹은 “한 국가내의 두 사회(zwei Gesellschaften in einem Staat)”라는 표현 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서로를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 - 즉 ‘서쪽 것들(Wessis)’, ‘동쪽 것들(Ossis)’ - 은 현재 통일독일의 사회가 사회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심리적 분열에 직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통일독일의 경제적 상황변화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설명만으로 독일의 통일후유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즉 통일된지 4년이 지난 현재 통일직후에 급속도로 전개되었던 동독지역의 경제적 황폐화는 최저바닥국면을 지나 점차 극복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서독지역간의 임금차 완화, 동독지역에서 실업률의 점진적 감소, 동독지역주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향상 등은 그러한 추세를 입증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지역간에 사회적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증폭되는 듯한 현상을 보인다.¹⁷⁾ 실제로 동독지역주민들은 개개인의 생활수준은

17) 독일의 시사주간지 <Der Spiegel>지는 1990년 가을, 1991년 중반, 그리고 1992년 말 각각 설문조사전문기관인 ‘Emnid-Institut’에 용역의뢰한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동서독주민들간에 ‘새로운 장벽’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첫번째 조사 결과 동서독주민들은 40여년간의 다른 체제에 익숙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점에서 일치성을 보였으나, 두번째 조사때는 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세번째의 설문조사에서는 반목이 첨예화되는 경향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Die neue Mauer wächst”, *Der Spiegel*, Nr.3 (1993), p. 52-59.

매우 호조되었다고 보는 반면 동독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사정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¹⁸⁾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다. 대체로 동서독지역간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격차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지배적이며, 또 일각에서는 상황을 과장보도하는 언론매체의 그릇된 상흔의 영향이라고도 말한다.¹⁹⁾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 차원 이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서독지역에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되면 그에 따라 사회통합이 저절로 달성될 것이라는 희망은 엄청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통일독일의 사회통합과 정치 및 사회문화적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보고서와 설문조사가 나왔다. 일반주민들의 통일이후 사회문제에 대한 적나라한 심정토로를 그대로 정리한 책자를 비롯하여 사회적 갈등현상에 대한 객관적 통계와 설문조사 보고서는 이미 상당한 양이 축적되었으며, 계속해서 그 추이가 관찰,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통일독일의 사회문화 및 심리적 현실을 記述하

18) 동독지역주민들의 개인적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과 전반적 경제상태에 대한 불만의 차이는 과거 서독에서는 결코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991년이래 최소 39%에서 최대 51%의 격차를 보인다. Thomas Gensicke, "Die Stimmung ist besser als die Lage: Stimmung- und Wertewandel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utschland Archiv*, Nr.8 (Aug. 1994), p. 804.

19) *ibid.*, p.804; *Der Spiegel*, Nr.8 (1993), p.72.

고자할 때 분명한 윤곽을 그리기란 쉽지 않다. 흑자는 통일 독일의 사회적 현실을 매우 암담하게 묘사하는 한편, 흑자는 부정적 현실묘사가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간극은 피관찰자는 물론이고 관찰자가 가진 인식배경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문제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내적 통합의 난제는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현실이다.

2. 통일독일의 사회현실과 내적 통합의 어려움

실제로 내적 통합과 관련된 통일독일의 사회적 문제는 발생요인과 내용상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 및 심리적 차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불만은 단순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거나 내용상 일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심리적 등의 모든 사회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이율배반적 내용들을 동시에 내포하기도 한다.²⁰⁾ 그러므로 어떠한 특정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면 자칫 단편적인 현실이해의 수준에 머무를

20) 특히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의 설문 결과들이 수미일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데, 그 원인은 대체로 설문환경이 너무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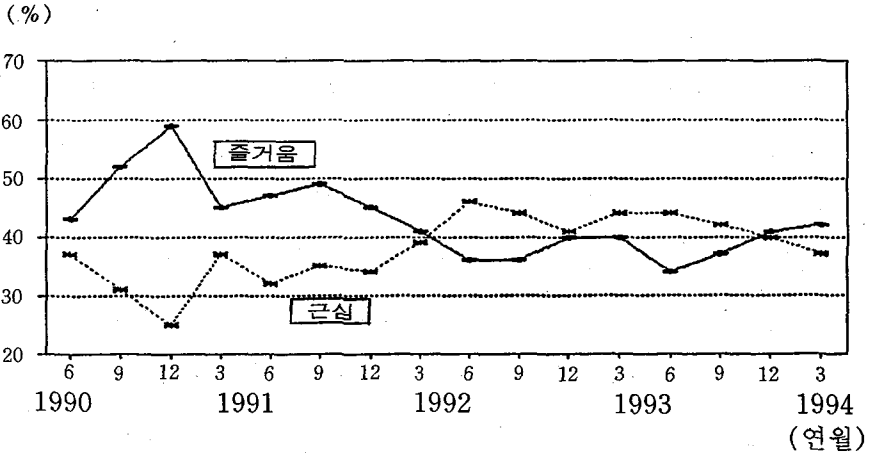
수가 있다.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통일독일의 사회문제를 조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비록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몇가지 커다란 주제를 중심으로 현실상황을 정리할 경우 대체적인 윤곽 파악은 가능하다.

가. 통일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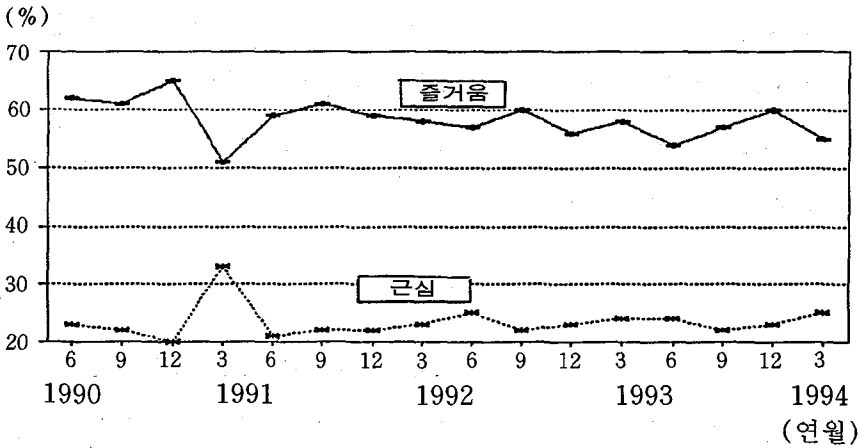
통일독일의 사회심리적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일반적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은 통일이 기쁨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근심을 주는 것인지를 묻는 설문을 통하여 동서독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서 보듯이 동서독주민들간에 상당한 견해차이가 나타나며,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구동독지역에서 통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겪게된 지배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통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서독주민들의 과반수는 불만을 표출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독지역주민들도 통일이 실현된 당시를 전후해서 통일에 대해 환호와 열광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기쁨은 잠시동안이었고, 통일은 곧바로 근심거리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다가왔다.

〈표 1〉 통일에 대한 동서독지역주민들의 만족도 (16세이상)

서독지역:



동독지역:



자료: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서독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이들은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서독사회에서 누려왔던 사회보장적 혜택의 감소라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물론이고 간접세의 형태를 띤 통일세를 부담해야만 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만족도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단지 경제적 요소만을 내세운다면 동독지역주민들의 견해를 이해하기 어렵다. 통일이 가져다준 경제적 어려움은 오히려 동독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절실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동독산업의 경쟁력 부재로 인한 탈산업화, 실업율의 급속한 증대, 실질임금의 감소 등 동독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문제는 서독지역주민들의 통일비용부담 정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동서독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차이는 기본적으로 경제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양 지역주민들의 상이한 반응은 각각 구동독체제에 대한 혐오감에서,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부족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나. 구동독지역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상태

통일독일의 사회문제들중 조만간에 해결되기 힘든 것으로서 동독지역주민들의 심각한 사회심리적 불안정 내지 혼란상을 들 수 있다. 비록 동독지역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대체로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구동독체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서 얻는

만족과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동독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현상으로서 주민들의 노이로제적 증상을 들 수 있다.²¹⁾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생활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서 실업, 사회보장, 시장경제체제에서 요구되는 경쟁능력 및 직업전환교육,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및 방향성상실, 점증하는 범죄율, 사회적 적대감의 증대,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엄청난 환경파괴, 구체제에서의 공산당 및 비밀경찰(Stasi)에 대한 협력의혹,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강요에 대한 불안을 열거할 수 있다.²²⁾

동독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의 원인은 상당히 복잡적이거나, 근본적으로는 급격한 체제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의 극복도,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다.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동독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통일이후 냉혹해진 사회적 환경, 유대감의 상실, 가족 및 친지간에 느꼈던 포근함의 상실, 분주함과 스트레스 등으로 요약된다.²³⁾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문제는 대

21) 체제전환기의 동독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현상을 분석한 대표적 저작으로 다음 책을 참조. Hans-Joachim Maaz, *Der Gefühlsstau: Ein Psychogramm der DDR* (Berlin: Argon Verlag, 1990)

22) Hans-Joachim Maaz, "Psychosoziale Aspekte im deutschen Einigungsprozeß",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 (1991), p. 5.

23) Ulrich Becker, H. Becker & W. Ruhland, *Zwischen Angst und Aufbruch: Das Lebensgefühl der Deutschen in Ost und West nach der Wiedervereinigung* (Düsseldorf: ECON Verlag, 1992), p. 54.

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적응력에 있어서 개개인은 물론 세대간, 계층간에 차이가 나타나며, 설령 적응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무의식세계에 잔존하는 기존의 심리구조를 극복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표 2〉 동독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생활조건에 대한 적응도

| | |
|----------------------------|-----|
|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 35% |
|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이제 잘 적응하고 있음 | 38% |
|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나아질 것임 | 21% |
| 영원히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임 | 6% |

자료: “Es wächst zusammen,” *Die Zeit* (1. Oktober 1993)

〈표 2〉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통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당수의 동독지역주민들은 점점 새로운 생활여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모든 세대와 계층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²⁴⁾ 적응을 잘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는 40대 미만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상 나이群에서는 적응이 쉽지 않다.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체제변화가 어떠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찌시대에서 성장하여 동독체제에서 적응을 강요당한 이들에게 통일은 중요한 사건일 수

24) Rainer Geißler, “Sozialer Wandel,”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hrsg. von W. Weidenfeld & K.-R. Kort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p. 592

도 있지만, 얼마남지 않는 여생동안 또다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것은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체제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우 낮다.

통일에 의해 가장 사회적 충격을 많이 받은 세대는 50대를 전후한 주민들이다. 구동독체제하에 사회화과정을 겪었으며, 구동독사회의 각분야에서 지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이들은 구체제에 매우 익숙해 있어서 새로운 체제가치에 적응하기 가장 힘들다. 설령 적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적 삶을 출발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문제는 이들이 통일후 대개 조기 은퇴, 혹은 직업전환을 강요받았으나 아직은 충분히 활동할 여력이 있다는 점이다. 활동여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와 달리 교육을 통한 직업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과 심리적 불안은 어떠한 세대보다 높은 것이 당연하다. 이에 비해 청소년과 젊은 세대는 새로운 체제하에서 보다 많은 사회적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직업전환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특히 동독지역 청소년의 경우 가치판단, 행위정향, 그리고 삶에 대한 흥미거리나 생각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서독지역의 청소년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보고서도 나오고 있다.²⁵⁾

25) 동서독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세계평화, 우정, 자유, 가족의 안전과 내적 조화, 그리고 다양한 삶의 영위 등을 손꼽고 있다. 그리고 자립적인 삶을 성취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과 개인주의적 경향의 부각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Thomas R. Henschel, "Jugend",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pp. 396-397.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지대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청소년 특유의 적응력과 동서독 지역 청소년간의 가치 및 행위정향적 유사성에 대한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내적 통합의 긍정적 미래에 대해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비록 조사보고를 통해 유사성을 발견했지만, 실제상황을 고려하면 그 조사는 방법상 문제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은 본질적으로 서독지역의 동년배와 다른 심리적,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⁶⁾ 이들은 통일을 통해 자유를 얻었지만 구체제에서 습득된 의식구조 - 예컨대 국가와 제도에 대한 불신 - 는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장래의 직업과 사회진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체제가치에 입각한 교육내용을 의무적이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²⁷⁾ 나아가 동서독지역의 경제적 하부구조 차이를 비롯하여 장래문제 등은 동독지역 청소년들이 서독지역의 청소년보다 훨씬 물질적 가치에 매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해 비록 높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독지역 청소년들 역시 실제로는 새로운 사회에서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26) *ibid.*, pp. 397-400.

27) Mary Fulbrook, "Aspects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Daedalus*, Vol.123, no.1 (Winter 1994), p.223.

다. 구동서독지역간의 상호불신

통일이후 독일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동서독지역간의 상호불신이다. 상호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 동질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45년간 서로 다른 체제에 익숙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호이해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통일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이해의 폭이 좁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상호간에 '마음의 벽'이 높아가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1993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독지역주민들의 22%, 동독지역주민들의 11%만이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는 동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각 71%, 85%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별개의 독일인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²⁸⁾는 상호간에 엄청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동서독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상대방을 범주화시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서 뚜렷이 나타난다. 소위 Wessi와 Ossi라는 상대방에 대한 비하적 호칭에는 각각 거만함, 신뢰성 부족, 이기적이며 기회주의적이라는 의미와 게으름, 무능함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표 3>은 상호불신의 현실과 정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이 자료는 각 지역의 상대지역에 대한 편견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추려서 양지역

28)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 Mai 1993)

의 독일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표화한 것이다. 즉 설문으로서 다음 열거되는 총 8가지의 항목이 채택되었으며, 각 항목의 수공여부에 따라 1점 또는 0점의 점수를 매기고 그 합산결과를 백분률로 표기했다.

서독지역에 대한 편견:

- 서독인들은 구동독지역을 식민지 형태로 정복했다.
- 서독인들은 복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 서독인들은 구동독지역을 단지 상품시장으로만 간주하며, 생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너무나 적게 투자한다.
- 서독지역에는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길 원하는 자들이 있다.
- 연방정부는 구동독의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동독지역에 대한 편견:

- 구동독주민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행동한다. 즉 그들은 서독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원하는 반면 구동독에서처럼 일하려 한다.
- 구동독인들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 구동독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서독수준의 노동성과를 널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표 3〉 동서독지역간의 불신정도

| | 서독지역에 대한 편견 자료 | | | | 동독지역에 대한 편견 자료 | | | |
|--------|----------------|----------|----------|----------|----------------|----------|----------|----------|
| | 서독지역 | | 동독지역 | | 서독지역 | | 동독지역 | |
| 지표수치 | 1992 (%) | 1993 (%) | 1992 (%) | 1993 (%) | 1992 (%) | 1993 (%) | 1992 (%) | 1993 (%) |
| 0(=낮음) | 12.9 | 10.8 | 1.4 | 0.9 | 12.8 | 14.7 | 51.7 | 52.7 |
| 1 | 19.3 | 18.2 | 2.9 | 2.6 | 16.4 | 16.2 | 25.8 | 21.6 |
| 2 | 20.5 | 21.4 | 9.9 | 5.9 | 25.3 | 23.8 | 15.6 | 15.7 |
| 3 | 18.5 | 21.1 | 14.4 | 13.3 | 45.5 | 45.3 | 6.9 | 10.0 |
| 4 | 17.7 | 16.4 | 28.1 | 21.8 | - | - | - | - |
| 5(=높음) | 11.1 | 12.1 | 43.3 | 55.5 | - | - | - | - |
| 총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EMNID-Institut; Max Kaase, "Innere Einheit",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hrsg. von W. Weidenfeld & K.-R. Kort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p. 379

이 조사결과는 불신의 정도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독일사회에 대한 전반적 평가, 불신의 발단에 대한 양지역주민들의 인식태도까지도 보여준다. 〈표 4〉는 〈표 3〉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적 갈등문제를 바라보는 양지역주민들의 성향을 비교, 분류한 것이다. 분류기준은 양지역의 설문대상자들이 두종류의 설문항목에 대해 각각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에 두어졌다. 즉 두종류의 설문항목에 각각 높은 수준(3-5점과 2-3점)의 결과를 보인 경우 '회의주의자'로, 각각 낮은 수준(0-2점

과 0-1점)의 결과를 보인 경우 ‘낙관주의자’로, 자신들과 관련된 불신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상대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일 경우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자(Internalisier)’로, 이와 반대되는 경우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Externalisier)’로 규정하였다.

〈표 4〉 통일독일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양지역주민들의 인식성향

| | 서독 지역 | | 동독 지역 | |
|---------------|-------|-------|-------|-------|
| | 1992 | 1993 | 1992 | 1993 |
| | (%) | (%) | (%) | (%) |
| 회의주의자 | 32.2 | 32.0 | 18.4 | 22.5 |
|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자 | 14.9 | 17.2 | 3.8 | 3.4 |
|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 | 38.6 | 37.2 | 67.5 | 67.9 |
| 낙관주의자 | 14.3 | 13.6 | 10.3 | 6.2 |
| 총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Max Kaase, "Innere Einheit",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p. 381.

〈표 4〉가 말해주는 바를 몇가지로 요약하면, 우선 동서독 지역 공히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상호이해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내적 갈등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가 서독지역보다 동독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동독지역주민들이 보다 큰 피해의식

을 가지고 있음이 반증된다. ‘낙관주의자’ 및 ‘회의주의자’에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바로는, 낙관주의자들은 대체로 사회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며, 회의주의자들은 통일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가진 자들로서 상대지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불신을 보이지는 않는다. 즉 낙관주의자나 회의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내적 통합과 관련하여 어떤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상호불신의 벽이 쌓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45년간의 이질적 체제하에 생활해온 결과 각각 서로 다른 생활양식에 익숙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양지역에 상이한 人性(Mentalität)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통일 당시 서독주민들은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본주의 및 복지사회 체제하에 개인주의, 비공식적 행위양식, 쾌락주의 등의 현대적 생활양식에 익숙한 반면, 동독지역주민들은 보다 독일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생활양식은 마치 서독의 50년대 분위기를 연상시켰다. 청소년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이미 1970년대 중반이래 동독청소년들 사이에 개인주의, 쾌락주의, 비공식문화의 만연이 감지되었고, 그러한 경향은 점증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²⁹⁾

29) 이러한 동독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현상은 동독작가 플렌즈도르프(Ulrich Plenzdorf)가 1974년에 쓴 소설 “젊은 W(베르테르)의 새로운 슬픔(Die neuen Leiden des jungen W.)”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Mary Fulbrook, *op cit.*, p. 224.

어찌되었던 생활양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분단기간에 상이한 인성이 형성되었다는 단정으로 귀결시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최근의 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보다 현대적이냐, 혹은 전통적이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45년간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 또한 동서독지역 주민들의 60-70%가 이 기간동안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 양지역주민들간에 인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³⁰⁾ 이 결과를 수긍한다면 사회문화적 동질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상호불신의 벽은 결국 생활양식의 차이, 사회경제적 불안 및 불균형, 사회심리적 불안, 정체성의 위기 등에서 연유하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상호이해를 위한 자세가 갖추어지지 못한 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라. 정체성(identity)의 위기와 정치문화적 혼란

통일이후 나타난 정치문화의 혼란상태는 독일의 내적 통합을 저해하는 큰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정치문화의 혼란상태는 통일독일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위기와 동서독지역간에

30) 이 결과는 1991년 겨울에 동서독지역에서 인구 1,100명정도의 산업화된 읍단위 지역공통체를 각각 선택하여 이루어진 현장조사보고에 근거한 것이다. Winfried Gebhardt & Georg Kamphausen, "Mentalitätsunterschiede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Das Beispiel zweier ländlicher Gemeind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6 (1994), pp. 29-39.

점증하는 이념적 가치의 양극화현상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체제붕괴를 경험한 동독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위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주민들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 통일독일의 민족공동체적 정체성이 쉽게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구호는 순수한 민족감정의 발로였기보다 경제적 풍요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사실은 경제적 난관이 가시화되면서 초기에 비취졌던 민족적 유대감이 퇴락하는 현상에서 뚜렷이 확인될 수 있다.³¹⁾ 즉 통일의 열광이 식어지면서 지나치게 이상화되었던 동독지역주민들의 가치관이나 감정이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지적 아노미(intellectual anomie)와 체제가치의 혼란상태에 빠지게 된 동독지역주민들이 정체성을 재확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들에게 정체성의 확립은 과거청산 및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서독지역주민들도 정체성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독일통일이 서독체제중심으로 이루어

31)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통일당시 “독일인이라는 데 긍지를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동독지역주민들의 7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반하여, 1년이 지난 1991년 여름에는 50%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Gebhard Herdegen & M. Schultz, “Einstellungen zur deutschen Einheit”,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p. 267.

어졌지만 통일로 말미암아 과거 서독사회에 정체성을 부여했던 바탕이 흔들리게 된 데 연유한다. 공동체의 내적 통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동체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대개의 민족국가들 경우 민족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구서독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나찌의 과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한다는 태도에서 민족주의를 금기시해온 서독에서 민족의식이 정체성의 근원이 결코 될 수 없었다. 실제로 서독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은 서유럽국가들 중에 가장 낮은 정도를 보였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서독국민들로 하여금 독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을 느끼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서독의 눈부신 경제발전 및 복지정책의 성과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는 안정된 헌법적 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였다. 따라서 통일이후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헌법적 합의의 붕괴현상이 대두되면서 구서독주민들의 정체성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헌법적 합의의 붕괴현상은 정당구조의 파편화 경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구서독에서 기민당(CDU)/기사당(CSU), 사민당(SPD), 자민당(FDP)을 중심으로 이루어

32) 1980년대 후반의 한 설문조사결과 서독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자들은 37%에 불과했으며, 주변서유럽국가들에서 나타나는 50-80%의 결과에 비교할 때 독일적 특수성이 부각된다. Werner Weidenfeld,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hrsg. von W. Weidenfeld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89), p. 33.

졌던 정당구조가 통일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미 80년대 중반이래 서독에서 녹색당(Die Grüne)과 공화주의자(Republikaner)의 등장으로 구조변화가 나타나긴 했지만, 정당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통일이후에는 극우정당인 공화주의자들의 득세, 구동독지역에서 구동독공산당(SED)의 후신인 민사당(PDS)의 점진적 세력확대, 녹색당과 구동독의 반체제세력과의 연대 등으로 정당구조가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비록 통일이후 실시된 최초의 연방의회선거와 구동독지역의 지방의회선거 결과는 구서독의 정당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의 폭은 커지고 있다. 한 예로 민사당은 최근의 유럽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괄목할만큼 세력이 증대되었다. 즉 구동독지역에서 세번째로 큰 정당으로 대두되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다득표정당으로 부상하였다.

민사당의 비약적 도약에 대한 우려는 단지 이 정당이 구동독공산당의 후신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구서독지역에서는 1%미만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점에 있다.³³⁾ 이처럼 극단적인 지지율 격차는 동서독지역간의 이념적 가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동독지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동독지역주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보다 평등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생

33) Andre Brie, "Null-Komma-Partei im Westen, Interessenpartei im Osten", *Frankfurter Rundschau* (6. Juli 1994)

각하는 추세를 보인다.³⁴⁾ 이처럼 양지역간에 나타나는 이념적 가치의 양극화추세는 통일독일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표 5>의 설문조사결과에서 더욱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

〈표 5〉 동서독지역간 이념적 가치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설문조사결과
(16세 이상의 주민 대상)

설문: 통일당시 이래로 당신은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탄생하길 원하여 왔습니까? 혹은 현재 독일연방정부의 형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 | 서독지역 | | 동독지역 | |
|------------------|--------|--------|--------|--------|
| | 1990년 | 1992년 | 1990년 | 1992년 |
| | 11월(%) | 10월(%) | 11월(%) | 10월(%) |
| 차라리 새로운 정부형태를 원함 | 13 | 11 | 39 | 47 |
| 현재의 연방정부형태에 만족함 | 74 | 72 | 41 | 33 |
| 미결정, 또는 다른 응답 | 13 | 17 | 20 | 20 |
| 총 계 | 100 | 100 | 100 | 100 |

34) “사회주의는 좋은 이념이며 단지 시행상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설문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 구동독지역주민의 약 60% 정도가 변함없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또한 통일당시 동독주민들의 46%는 자유를, 43%는 평등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데 반하여, 1992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35%가 자유를, 53%가 평등을 더욱 중요시한다.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IfD-Umfragen; Karsten Pöhl, “Integrating the German Mind”,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German-Korean Conference on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Seoul, Oct. 1993) 에서 재인용.

설문: 현재의 생활을 염두에 둘 때, 현재 형태의 사회질서는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 서 독 지 역 | | | 동 독 지 역 | | | |
|---------------|---------|-------|-------|---------|-------|-------|-------|
| | 1991년 | 1991년 | 1993년 | 1990년 | 1991년 | 1991년 | 1993년 |
| | 7월(%) | 8월(%) | 2월(%) | 12월(%) | 7월(%) | 8월(%) | 2월(%) |
| 보호할 가치가 있음 | 64 | 73 | 72 | 49 | 44 | 51 | 37 |
| 회의적임 | 24 | 18 | 22 | 33 | 39 | 32 | 50 |
| 미결정 | 12 | 9 | 6 | 18 | 17 | 17 | 13 |
| 총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IfD-Umfragen; Karsten Pöhl, "Integrating the German Mind",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German-Korean Conference on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Seoul, Oct. 1993)

통일독일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적 병리현상 - 즉 극우세력의 득세 및 반외국인 감정의 고조 - 은 동서독 양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정체성위기와 이념적 가치의 양극화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매우 제한된 부류에서 나타나며 발흥 배경에는 사회환경의 해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이 보다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심리적 불안을 포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문화적 바탕이 굳건했었다면,

나찌즘이라는 전체주의적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민족적 동질성 혹은 인종적 귀속성의 신화에 매몰되는 일부의 일탈적 행태는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었을 것이다.

3. 내적 통합의 문제를 초래한 배경

앞에서 객관적 통계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통일독일의 사회적 갈등현상은 각각의 문제영역마다 설득력 있는 원인을 가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한두가지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중첩된 요인들이 개개인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리적으로 복합적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갈등적 사회현상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분석은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까지 독일에서 나온 내적 통합 문제와 관련한 설문 내지 현장조사결과의 축적량에 비하여 원인분석연구의 결과가 그리 많지 않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단편적이거나 너무 포괄적인 분석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에서 내적 통합문제가 초래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분단시기에 형성되었던 상호편견, 이질적 체제속에서 형성되었던 삶의 양식차이, 민족공동체적 정체성의 부재, 통

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노정된 사회경제적 및 사회심리적 불안 등이 손꼽힌다.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서 문제를 야기하는 이 요인들의 발생배경은 분단상황하의 동서독에서 각각 잉태되고 구조화된 정치·사회문화적 문제, 그리고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흔히 제기되는 의문, 즉 통일이전 내독관계 및 양독간 교류가 비교적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 문화적 이질성이 왜 극복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도 통일이후 내적 통합문제를 초래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히 요청되는 부분이다.

가. 서독의 분단질서(Teilordnung)관리정책의 명암

소련의 개혁정치와 동구공산권의 붕괴가 독일통일을 가능케한 직접적인 동기라고 흔히들 말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동독정권의 붕괴와 급속한 통일의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서독의 분단질서관리정책적 영향력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즉 효율적인 분단질서관리의 결과로 외적으로는 독일 문제에 대한 전승 4대국 유보권 포기가 가능했으며, 내적으로는 동독정권의 내적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동독공산정권의 붕괴와 통일의 실현이 동일한 연장선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동독내부에 미친 분단질서관리정책의 영향력 덕분이었다. 만약 동독주민들의 통일요구가 그렇

게 강력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동독의 사회주의체제가 급격히 붕괴되지 않고 개혁을 통해 단기적이거나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의 원동력을 서독주도의 분단질서관리정책에서 찾는다면, 과연 이 정책의 요체는 무엇이고, 또 그러한 정책의 형성 및 실행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로 통일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통일이후의 내적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분단질서관리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요구된다.

1960년대 말 이래로 분단질서관리정책의 요체는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되기 힘든 통일을 역설하기보다 통일의 조건을 하나씩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분단현실을 감내하겠다는 서독정부의 의지에서 발견될 수 있다. 즉 “독일의 분단을 자유지향적 토대위에 평화적 방법으로 극복할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가 성취되지 못하는 동안에는 독일인들이 분단의 결과를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다”³⁵⁾ 라는 서독정부의 공언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러한 내용의 분단질서관리정책이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세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국제환경변화와 관련하여 독일문제가 동서간 긴장완화의 걸림돌로 등장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독일문제의 안정적 해결이 요구되는 상

35) *Text zur Deutschlandpolitik*, Reihe III/Bd.3 (1985), p. 17.

황이 전개되었으며, 따라서 서독은 그러한 상황적 강요에 부응할 수 밖에 없었다.³⁶⁾ 둘째, 진보적 정당인 사민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념적 적대감이 탈색된 독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셋째, 서독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서 통일문제는 독일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³⁷⁾ 더우기 분단극복을 위하여 민족주의나 반공주의에 대한 강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독인들이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소위 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정책(Ostpolitik)’은 내독관계가 체제경쟁적 차원을 떠나서 통일환경의 조성이라는 형태로 발전하는 근간이 되었다.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고 양독간에 교통, 통신, 여행에 대한 협정들이 속속 맺어짐으로써 인적, 물적 교류의 보장 및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민당(SPD) 정부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은 통일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동독정

36) William E. Griffith, *The Ostpolitik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78), pp. 131-223. 참조

37) 서독정부의 일반적 정책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문항으로 1951년 이래 통 일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통일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970년을 기점으로 확연한 변화를 보인다. 그 이전에는 대체로 25-40%정도의 비율을 차지한 데 반해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겨우 평균 1% 전후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기본조약의 체결로 인한 영향 탓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독주민들의 정치의식수준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Gerhard Herdegen & M. Schultz, *op cit.*, p. 258.

권을 비롯한 소련 및 동구공산권을 자극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가급적 통일이란 단어의 공식적 사용을 억제하였다. 그 대신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라는 대명제³⁸⁾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주의적인 독일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1982년 정권교체이후 기민당(CDU)/기사당(CSU)정권에 의해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내독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독의 동독정부에 대한 법적 인정이라는 정치적 양보와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적 인센티브는 내독관계의 중심축이었다. 서독의 경제적 원조가 증대할수록 동독은 경제원조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독이 요구하는 사회적, 인적 교류의 허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서독의 경제원조나 인적 교류확대정책이 결코 동독정부를 붕괴시켜 단시일내에 통일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38) ‘변화를 통한 접근’이라는 말은 사민당의 이론가이며, 동서독기본조약체결을 주도했던 에곤 바(Egon Bahr)가 1963년 7월 투징(Tutzing)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1969년 사민당정권이 들어선 이후 서독의 독일정책적 골격을 이루었다. 여기서 제시된 구체적 정책방향은 상호인정을 통한 현상타개, 동독정권의 안정, 대화를 통한 베를린문제해결, 평화적 방법으로 동독정권에 대한 영향력행사, 경제원조를 통한 동독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 등이다. Gottfried-Karl Kindermann, “Present and future contribution of bilateral Inter-system Detente policies to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regional and global peace”, *Inter-system Detente in Germany and Korea*, ed. by G.-K. Kindermann (Munich: tuduv Verlag, 1976), pp. 204-205. 참조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서독의 의도는 교류확대를 통하여 예측할 수 없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통일의 그날까지 최소한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동독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동독내부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독일통일과정에서 보듯이 서독정부의 그러한 의도와 달리 교류확대는 동독체제의 내적 붕괴를 유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 아이러니로 귀결되었다.

서독의 분단질서관리정책은 독일통일의 원동력이었음에 결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통일이후의 내적 통합문제를 바라볼 때 이 정책에는 적지않은 헛점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분단질서관리정책은 막연하게 통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하였지만, 통일의 방법, 과정, 통일이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일정책이라 부르기 힘들다. 사실상 이 정책은 국제정치적 환경상 통일을 강조할 수 없는 상황하에 나온 차선의 합리적 선택 결과이며 통일에 대한 구체적 대안의 마련과는 양립할 수 없었다.

실제로 통일환경의 조성, 즉 통일의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띤 서독의 분단질서관리정책은 단지 내독관계의 차원에만 국한시켜 이해될 수 없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단질서의 관리는 내독관계, 서독국내, 그리고 유럽질서의 각 차원을 포괄하며, 내용이나 실천면에서 세차원이 삼위일체적인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서독의 국내정치, 경제, 사회 및 외교적 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은 내독관계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면 분단질서관리정책은 통일이후 내적 통합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서독은 분단이래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및 발전, 대외적으로는 유럽분단의 극복을 통일의 조건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삼아왔다. 서독의 입장에서 대내적, 대외적 차원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독일분단 자체가 19세기 후반기와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유럽정치적 혼란을 주도했던 독일의 전과에 대한 응징 및 재발방지란 맥락에서 구상되었고 마침 냉전의 도래와 함께 들이킬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단극복을 위해서 독일사를 관류하는 “특유의 독자적 길(Sonderweg)”의 포기가 불가피했다. 다시 말해서 내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서구체제에 확실히 편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긴장완화와 상호협조를 통한 유럽분단의 극복과 중국에는 독일이 범유럽체제의 유익한 일원으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통일을 향한 최적의 조건이 창출될 수 있었다.

서독의 성공적인 서구화와 근대화 과정은 분단질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간이었다. 그런데 서구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체제를 지향한 서구화 및 근대화과정은 민족주의적 의식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채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유럽의 문제아였던 독

일의 과거, 특히 나찌의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민족주의는 금기시되었다. 서구 민주주의가 근대민족국가를 배경으로 발전해온 것임을 고려하면 서독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의도적 분리는 근대적 의미에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Staat)와 민족(Nation)을 개념상 구분해서 사용하는 독일전통의 맥락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분단과 통일이라는 문제를 두고보면, 그러한 정치문화체계는 큰 문제를 배태하고 있었다.

민족주의가 배제된 상황에서 서독주민의 국가의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경제적 발전 및 복지에 대한 긍지를 매개로 유지될 수 있었다.³⁹⁾ 물론 서독체제하에서 과거의 민족의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서독정부의 출범직

39) 이는 서독주민들이 자신의 국가에 대해 긍지를 느끼는 분야에 관한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 | 1959 | 1978 | 1988 |
|-------------|------|------|------|
| | (%) | (%) | (%) |
| 정치제도 및 헌법 | 7 | 31 | 51 |
| 경제 | 33 | 40 | 50 |
| 사회보장제도 | 6 | 18 | 39 |
| 주민들의 인성 | 36 | 25 | - |
| 과학분야에 대한 기여 | 12 | 13 | 37 |
| 예술분야에 대한 기여 | 11 | 10 | 22 |
| 기타 및 무응답 | 43 | 39 | 50 |

*각항의 백분율을 합산한 결과가 100이 넘는 이유는 중복된 질문 때문이다.
 자료: David P. Conradt, "Changing German Political Culture", *The Civic Culture revisited*, eds. by G. A. Almond & S. Verb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p. 230; David P. Conradt, *The German Polity* (N.Y.: Longman, 1993), p. 55.

후 동구지역에서 쫓겨난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정치 세력들에게 민족의식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와 탈민족주의에 역점을 둔 시민정치교육의 결과가 가시화되었다. 즉 1960년대말에 이르러 고도의 산업화와 복지정책의 실현과 함께 서독에서 사회적 가치체계의 대변혁이 발생하였다. 60년대말의 독일학생운동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60년대말 70년대초를 기점으로 서독에서 나타난 일종의 문화혁명적 형태의 가치변화는 포스트모던적인 가치가 근대적 가치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특징을 보였다.⁴⁰⁾ 즉 복종이나 예속 대신 독립과 자유의지가 강조되었으며, 환경운동, 여성해방운동, 풀뿌리민주주의운동, 평화운동 등 신사회운동의 맹아가 여기서 탄생했다.

새로운 정치 및 사회문화는 문화적 다양화를 가속시켰으며, 비록 현실정치를 주도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기존의 정치세력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정당들은 환경, 여성, 평화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점차 증대시켰으며, 80년대 중반이후 녹색당이 비약적으로 세력을 확대했던 예에서 확인된다. 문화적 변화를 겪으면서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형성에 대한 의지는 더욱 퇴색되었으며, 오히려 서유럽통합의 진전과 함께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민주

40) Werner Weidenfeld,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pp. 18-20.

주의적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체계와 경제적 발전 및 복지에 대한 긍지 이외의 다른 곳에서 서독이 국가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기반을 찾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서독사회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찾는 노력이 결코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정체성문제에 대한 논의가 서독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1980년대 중반, 특히 1986년 역사가논쟁(Historikerstreit)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나타난 민족적 정체성논의는 서독사회가 자원문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물질적 가치의 만연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하여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입각한 독일인의 위상을 찾고자하는 의도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서독사회에서 정체성의 추구는 1980년대 중반의 대토론에서도 드러났듯이 서독 내부적 국가의식과 전독일적 민족의식간에 긴장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졌다.⁴¹⁾ 독일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위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 “경제애국주의(Wirtschaftspatriotismus)”, 그리고 “탈민족적 민주주의(postnationale Demokratie)”라는 말들은 그러한 한계를 단적으로 입증한다.⁴²⁾

포스트모던 내지 탈민족주의적 정치·사회문화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깊이 내면화되었다. 통일이전 분단의식에 대한 설

41) *ibid.*, p.34.

42) *ibid.*, p. 34; Ulrich Becker, H. Becker & Walter Ruhland, *op cit.*, p. 41; Heinrich August Winkler, “Rebuilding of a Nation: The German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Daedalus*, Vol. 123 (Winter 1994), p. 107.

문조사결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젊은 세대에 속할수록 동독을 외국으로 간주하며, 동독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이후 서독지역에서 통일에 대한 불만이 청소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물론 불만을 표출하는 청소년들이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이들은 애초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가 통일로 인해 야기된 사회보장, 경제적 불안, 장래 직업문제 등의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⁴³⁾

〈표 6〉 서독주민들의 연령별 분단의식

| | 1984 | 1987 | | | | |
|------------|------------|------------|--------------|--------------|--------------|--------------|
| | 총인구 (%) | 총인구 (%) | 연령구분 | | | |
| | | | 14-29 (%) | 30-49 (%) | 50-59 (%) | 60세이상 (%) |
| 독일인은 | | | | | | |
| - 하나의 민족이다 | 73 | 78 | 65 | 74 | 93 | 90 |
| - 별개의 민족이다 | 27 | 21 | 34 | 26 | 6 | 9 |
| 서독과 동독은 | | | | | | |
| - 한 국가이다 | 17 | 21 | 16 | 15 | 22 | 32 |
| - 별개의 국가이다 | 83 | 79 | 83 | 85 | 77 | 67 |
| 동독은 | | | | | | |
| - 외국이다 | 33 | 32 | 51 | 38 | 17 | 12 |
| - 외국이 아니다 | 66 | 67 | 48 | 61 | 83 | 88 |

자료: WELT-Umfrage (27. Okt. 1987), Gerhard Herdegen & M. Schultz, "Einstellungen zur deutschen Einheit", p. 261

43) Ulrich Becker, H. Becker, & W. Ruhland, *op cit.*, p. 46.

분단시기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정치·사회문화가 서독에서 형성되기란 매우 어려웠으며, 만약 그러한 것이 가능했다면, 현재의 형태로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기란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단질서관리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정치·사회문화의 한 특징이 통일이후 독일사회의 내적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서독에서 형성된 정치·사회문화가 비록 독일 민족의식 내지 민족공동체적 정체성확립에 부정적 역할을 하였지만, 민주주의적 가치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측면 역시 가지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분단시기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병존하는 가운데 서독사회가 발전적 역량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나라들보다 민주주의적 갈등문화(demokratische Streitkultur)가 잘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서독주민들은 문화적 갈등을 민주주의를 중심축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익숙해 있다. 실제로 통일이후 내적 통합의 문제가 사회적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닫지 않는 배경에는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이 큰 힘으로 작용한다.

나. 동독의 ‘현존사회주의’의 유산

분단이후 동독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다. 즉 50년대의 체제형성단계를 거쳐 60년대 체제발전을 통한 사회주의적 기반을 확립한 이후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체제관리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전분야에 걸친 체제기반의 확립과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에 중점을 두었던 50년대와 60년대의 울브리히트(W. Ulbricht)시대가 끝나고 1971년 호네커(E. Honecker)가 서기장으로 등장하면서 동독정권은 소위 ‘발전된 사회주의사회(entwickelte sozialistische Gesellschaft)’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zialistische Demokratie)’라는 명제를 내세워 사회주의체제의 정통성을 재확립하려고 했다. 사회주의적 근대화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중앙집권주의(demokratischer Zentralismus)’ 원칙에 따른 사회주의통일당(SED) 중심의 국가운영, 즉 당국가(Parteistaat)라는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국가적 체제구조하에서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가치와 이익은 항상 당의 기본원칙과 목표에 부합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못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서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로 하달되는 당 독재지배체제하에서 동독주민 개개인들은 모든 사적, 공적 생활면에서 당의 권위에 예속되기를 강요받았다. 당의 권위주의적 지배는 한편으로 당의 지휘를 받는 사회단체들을 매개로,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각 부분 및 개인의 사생활에까지 침투한 비밀경찰(Stasi)의 활동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개개인들은 심적, 육체적으로 일방적인 적응을 강요받았으며, 당이 요구하는 규율, 질서, 의무감에 눌러 자신들의 심리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가졌다.

그러한 체제특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심리적으로 만성적 결핍증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소외와 주민들사이에 불안감, 자신감부재, 종속성을 부추기고 동시에 신뢰성, 확실성, 내적 안정과 자긍심을 소멸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분노가 잠재화된 형태의 긴장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바탕이 되었다. 그 결과 동독사회는 왜곡된 형태로 변형(Deformation)되었으며, 비정상적 행위유형이 일반화 되었다.⁴⁴⁾ 이러한 증상은 동독의 사회현실에서 세가지의 상이한 모습을 띠고 나타났다. 첫째, 일부 주민들은 적응, 예속, 규율, 노력 등을 미덕으로 여기고 당이 요구하는 업적을 달성함으로써 자족감을 얻으려했다. 즉 이들은 출세를 통해 물질적, 사회적 대가를 보장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심리적 결핍을 보상하려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자들은 대체로 당 기구의 간부층이다. 당간부가 되기 위해서 초기에는 노동자, 농민의 자녀라는 출신성분이 중요한 척도가 되었으나 점차 당간부의 자녀를 중심으로 소위 ‘붉은 귀족(Nomenklatur)’이라는 지배계층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속하는 부류는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이념중심의 교육이 주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 계층의 자녀들은 독일전통, 즉 고전적, 시민적, 기독교적, 철학적, 인문주의적 전통으로부터 차단되고, 다만 동독

44) Hans-Joachim Maaz, "Psychosoziale Aspekte im deutschen Einigungsprozeß", pp. 19-20.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종속, 규율, 능력만이 강조된 교육을 통해 왜곡된 인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일반주민과 일부 하급간부들은 사회심리적 좌절, 불안감, 자결성부족, 고립감 등으로 말미암아 생계유지와 주변의 일상생활에만 침잠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우에 따라 억압적, 권위주의적이며 모든 것을 간섭하려는 국가에 대해 소극적이며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일관하였다. 즉 이들은 동독사회에서 정치적 소외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당이 시키는 것에 마지못해, 즉 구조적 폭력 앞에 어쩔수 없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상황은 동독의 한 종교인의 말에서 단적으로 묘사된다.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망가져있다. 윤리적 성찰이나 숙고가 이 땅에서는 배척된다. 실증법에 얽매인 행동은 분별력에 의해서라기보다 불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상품화 되었다. ... 우리의 무관심은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인간적 존재의미에 대한 무관심이며, 어떠한 영화가 인기있으며 어떠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표출되듯이 자신의 성찰에 대한 게으름일 것이다.”⁴⁵⁾

45) Friedrich Schorlemmer, “Thesen zur gesellschaftlichen Erneuerung (Auszug)”, *Kirche im Sozialismus*, 14 Jg. H.8 (1988), p.131; Antonia Grunenberg, “Bewußtseinslagen und Leitbilder in der DDR”, *Deutschland Handbuch*, hrsg. von W. Weidenfeld & H. Zimmermann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89), p. 227 에서 재인용.

셋째, 동독의 사회체제에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소수의 지식인들이나 주민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동독정권은 여타 동구공산국가들과 달리 조직적인 반체제 활동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동독의 교회는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와 당국가간의 갈등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어느정도 담당하기는 했지만 교회자체의 생존문제 때문에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반체제조직의 구심점이 되기는 힘들었다.⁴⁶⁾ 반체제활동은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경우 정치범으로 투옥되거나 서독으로 추방되었으며, 체제억압을 견딜수 없는 일반주민의 경우 불법적 탈출을 감행했다. 동독에서 조직적 반체제활동은 1980년대 중반이후 소련의 개혁 여파에 힘입어 시작되었으며, 이 때 교회는 국가적 억압에 대한 방패막으로서 중요한 일조를 하였다.⁴⁷⁾

이러한 사회심리적 왜곡현상과 더불어 동독사회발전의 전 과정에서 정치·사회문화의 이중성이란 특징이 뚜렷이 부각된다. 체제성립이후 사회주의체제기반의 확립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에 대한 동독정권의 노력의 결과 어느정도 사회주의적 가치가 동독주민들에게 내면화되었다. 예컨대 동독

46) Erhart Neubert, "Eine protestantische Revolution", *Deutschland Archiv*, Nr.5 (1990), p. 704.

47) Vladimir Tismaneau, "Nascent Civil Society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Problems of Communism*, Vol.38, no.2-3 (1989), p.111; Hubert Knabe, "Politische Opposition in der DD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2 (1990), p. 22.

주민들은 공적 생활에서 강조되는 평등의 가치에 점점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주민들을 사회주의적 가치에 전적으로 동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1953년 6월 동독노동자들의 봉기와 1961년 베를린장벽의 형성 이전까지 많은 수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했던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물론 동독에 남았던 대다수의 주민들 경우도 사회주의적 가치를 전적으로 옹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통일이후 동독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성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동독사회에서 전통적 생활양식이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동독의 공식적 정치 및 사회문화는 전통적 가치와 사회주의적 가치가 공존하는 형태를 보였다.⁴⁸⁾ 그러나 공적 생활에서 동독주민들의 문화적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이들은 사실상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억압과 통제로 일관된 공적 생활에서 도피하여 사적 생활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적 영역에서 동독주민들은 공적 가치

48) 동독의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가지 요소가 혼재해 있다. 첫째, 독일의 전통적인 절대관료국가(Obrigkeitsstaat)적 요소로서 국민의 복종과 예속을 미덕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독일의 노동자문화적 요소로서 이는 동독정권의 근면과 규율을 강조하는 공적 문화에 흡수되었다. 셋째,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지향하여 동독정권에 의해 강조된 문화혁명적 요소이다. Gert-Joachim Glaessner, "Politische Kultur und nationales Erbe in der DDR", *Einheit-Freiheit-Selbstbestimmung: Die Deutsche Frage im historisch-politischen Bewußtsein*, hrsg. von Karl-Ernst Jeismann (Frankfurt a.M.: Campus Verlag, 1988), p. 127.

와 유리되어 전통적 맥락에 가까운 행위정향을 보였다. 단적인 예로써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서 독일의 전통적 미덕인 친숙함, 이웃사랑, 정확성, 청결, 근검 등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⁴⁹⁾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동독정권의 근대화 전략에 의거한 체제발전정책은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괴리를 더욱 가속시켰다. 서독과의 체제경쟁적 입장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정통성 기반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던 동독정권은 사회주의적 경쟁과 능력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사회구조의 변화와 계층 및 계급간에 분화가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으며,⁵⁰⁾ 경쟁력 확대를 위하여 유연해진 문화정책의 여파로 사회생활에서 사적 영역이 차지하는 공간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내독관계의 발전과 서독방송청취를 통하여 동독체제현실을 직시하게 된 동독주민들이 더욱더 공적 가치와 유리된 사적 생활에 빠져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동독사회의 곳곳에는 공적 가치와는 전혀 별개의 문화양식을 가진 사적 영역들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동독사회는 소위 “니셴게젤샤프트(Nischengesellschaft)”로 통칭되었다.

49) Winfried Gebhardt & G. Kamphausen, *op cit.*, p. 34.

50) Katharina Belwe, “Sozialstruktur und gesellschaftlicher Wandel in der DDR”, *Deutschland Handbuch*, hrsg. von W. Weidenfeld & H. Zimmermann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89), pp. 135-140.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괴리는 곧 체제의 정통성문제와 국가공동체적 정체성문제와 직결된다. 정통성 결핍은 체제형성의 시작에서부터 동독정권을 괴롭혀온 문제였다. 동독정권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통성은 물론이고 체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서독과의 체제경쟁에서 낙후되면서 70년대부터 경제적 업적을 배경으로 새로운 정통성 확립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1974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민족이론을 내세워 서독과는 다른 전통을 가진 독일민족임을 강조함으로써 양독관계를 ‘2 민족 2 국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종의 역사왜곡이 이루어졌다.⁵¹⁾ 그 과정에서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같은 사회주의이념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러나 역사왜곡은 정권의 의도와 달리 결국은 동독체제에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념적 기반을 사실상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동독정권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적 민족의식은 커녕 사회주의적 국가의식을 확보하기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체제발전의 전략에서 파생된 사회구조변화 및 계층적 분화 현상과 역사왜곡에서 나타난 민족전통의 강조는 중국에는 사회주의체제적 ‘사회계약’을 정권이 스스로 파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모순적인 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이념교육의

51) Bernd Riebau, “Geschichtswissenschaft und Nationale Frage in der ra Honecker”, *Deutschland Archiv*, Nr.5 (1989), pp. 534-538

차원에도 커다란 여파를 남겼다. 일방적인 주입식 형태로 이루어졌던 학교에서의 이념교육은 사회현실과 괴리를 보일수록 비효율성 역시 증대되었다. 청소년들은 학교교육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젊은 W.(베르테르)의 새로운 슬픔’이라는 소설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념을 매개로 하여 세대간의 대화가 더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의 전개는 동독체제의 발전능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 사회구조변화와 사회문화의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동독사회에서 문화적 다양화가 가속화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자유와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 대한 동경이 급증하였다. 소련의 개혁과 이로 인한 유럽 정치 및 내독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러한 동경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체제저항의지도 증대되었다. 결국 개혁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동독정권의 태도에 더이상 참을 수 없는 동독주민들의 서독이주신청이 급증하였다.⁵²⁾

52) 1960년대 말 이래 직장에서 은퇴한자나 정치범을 대상으로 허가된 서독이주민의 수는 평균 15,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4년 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원조를 배경으로 동독정권은 약 40,000명의 이주를 허가 했다. 이후 이주신청자의 숫자가 급증했다. 1987년 50,000명에서 1988년에는 250,000명으로 추산되는 이주신청이 쇄도했으나 실상 1984년 수준에 못미치는 일부분만 허가를 받았다. 이처럼 이주신청의 급증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가 증가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통계수치는 다음 참조. Alberto O. Hirschman,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World Politics*, Vol.45 (Jan. 1993), p.179; Walt Süß, "Perestrojka oder Ausreise", *Deutschland Archiv*, Nr.3 (1989), p. 297.

그러나 동독정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1989년 여름 본격적인 대탈출이 시작되었으며, 그 여파로 ‘숨을 쉬기 위한 공기(Luft zum Atmen)’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는 마침내 ‘10월 혁명’으로 이어졌다.

애초에 개혁을 요구했던 시위가 통일에 대한 요구로 변하면서 채 1년도 못되는 기간안에 통일의 실현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문제는 동독주민들의 통일 의지가 진정한 민족의식의 발로라기보다 주민들의 동독체제에 대한 혐오와 동경해오던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서독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동독주민들은 분단체제 속에서 형성되었던 생활양식의 차이가 가져다 줄 문제에 대해 결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 40여년간 익숙해왔던 삶의 양식과 사회심리적 왜곡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뛰어든 동독주민들이 새로운 체제에 금방 적응할 수 있거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적응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했다. 따라서 극복되지 않은 채 동독지역주민들의 심리와 생활양식에 여전히 잔존하는 구체제의 사회문화적 유산은 통일이후 내적 통합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한 주요 요인으로서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다. 내독관계의 허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도되었던 혹은 그렇지 않았던지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내독관계가 독일통일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통일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없다. 그러나 단순한 통일의 달성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통일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내적 통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독관계가 이루어놓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분단시기 양독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후 동서독사회의 이질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다. 아마도 혹자는 내독관계의 덕택에 그나마 최소한의 동질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우리는 내독관계를 진면모와 달리 과장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동서독간의 이질성극복문제에 대하여 내독관계가 기여한 바와 동시에 한계점을 냉철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 이질성문제와 관련하여 내독관계가 기여한 바는 주로 인적 교류, 문학·예술작품의 교류와 방송청취의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다. 인적 교류는 한편으로 일반주민들간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이질성의 극복 내지 최소한의 동질성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

며, 다른 한편으로 분단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의 교류를 가능케 했다. 또한 문학·예술작품의 교류는 상호간에 문화적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방송청취 역시 상대방 체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동독방송이 이념적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서독인들의 일상적 청취는 드물었지만, 동독주민들의 서독방송청취에서 일방적이거나 문화적 교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서독간에 이루어졌던 인적 교류의 규모는 매우 방대했다. 비록 동독측의 끊임없는 제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초기부터 동서독간의 인적 교류는 항상 가능했다. 특히 베를린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베를린을 경유하여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장벽이 건설된 1961년을 전후하여 몇년동안 교류량은 극도로 제한되었으나, 1963/64년 동독측의 완화조치로 다시금 활기를 띠었으며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이전까지 비교적 일정수준의 교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⁵³⁾ 이 시기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여행자수는 연평균 100만명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여행자수는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어 불분명하지만 연평균

53) 이하에서 제시된 인적 교류와 관련된 통계수치는 모두 다음 자료들에서 인용한 것이다.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Zahlenspiegel: Ein Vergleich - Bundesrepublik Deutschland/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Bonn: Gesamtdeutsche Institut, 1988), p. 124; Walt Süß, *op cit.*, p. 296.

150만에서 250만명에 이른다. 1971/72년에 동서독간 체결된 일련의 협정과 조약들 - 전화통화재개, 우편교환합의, 통과협정, 교통조약, 그리고 기본조약 - 의 결과 인적 교류의 폭은 훨씬 넓어졌다. 이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여행자수는 70년대말까지 연평균 750만을 넘었다. 이 숫자에는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의 여행, 하루동안의 방문, 며칠간의 여행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서 각각의 비율은 대체로 41%, 17%, 42% 정도로 나누어진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1985년까지 여행자수가 감소하여 연평균 500만명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1980년 동독정권이 서독여행자들의 의무환전하한액을 25 마르크(DM)로 상향조정 한 여파였다. 그러나 1986년이후 여행자수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1972년 이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여행자수도 소폭이나마 점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70년대말까지 연평균 130만정도였으며, 80년대에 들어와 중반까지는 약 160만으로 증가하였고, 중반이후 200만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소폭의 증가추세보다 여행자의 성격과 구성에 있다. 즉 기본조약체결이전에는 연금수혜자에 한해서 연 4주 내의 서독방문이 허용되었으나 조약체결이후 긴급한 가사 사유의 경우 - 즉 서독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예도 방문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긴급한 가사 사유에 따른 서독으로의 여행자수는 80년 중반까지 연평균 4만에서 6만정도에 이르렀다. 80년대 중반이후 친척뿐만 아니라 친지까지 적용

범위가 넓혀지고, 또 양독간의 청소년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체여행자수에서 비연금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1987년과 1988년에는 서독을 방문한 비연금수혜자의 수는 매년 약 120만에 달했다.

방대한 인적 교류에 비해 문화, 예술분야의 교류는 양적으로 뒤떨어지지만 결코 무시될 수 없다.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양독간 문화교류는 1986년 양독간의 문화협정체결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문화교류는 공연예술의 경우 인적 교류의 틀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70년대 후반부터 상호교류의 횟수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조형예술이나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대체로 일방적인 교류형태를 띠었다. 즉 동독의 작품은 어려움없이 서독에서 전시되거나 출판되었으나, 서독의 작품들은 동독에서 매우 드물게 찾아볼 수 있었다. 동서독 양국은 이미 기본조약에서 공식적 문화교류의 증진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협정이 한동안 체결되지 못한 것은 문화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견해차이 때문이었다. 즉 서독정부는 인위적 국경을 초월하는 문화민족(Kulturnation)의 개념을 바탕으로 동서독간에 문화적 공통성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반해, 동독정권은 사회주의문화의 독창성과 이념성을 강조하고 서독과의 문화교류를 외국과의 교류로 간주하였다. 사실상 동독정권은 문화교류가 체제유지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그러나 국제적 고

립문제와 폐쇄정책으로 인한 내적 불만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인 형태에서 문화교류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문화교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문학교류이다. 문학작품에는 삶의 양식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이를 통하여 분단으로 야기된 갖가지 문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 및 접근태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문학작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해부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매우 높다. 구체적인 문학교류의 실상을 살펴보면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1960년대부터 동독작가의 작품들이 서독에서 출판되었다. 크리스타 볼프(Christa Wolf)나 헤르만 칸트(Hermann Kant)와 같은 일부 동독의 작가들은 서독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70년대 중반이후 서독주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대개의 경우 서독사회에서 동독작품들은 문학으로서 수용되기보다 동독의 생활환경을 엿볼 수 있는 읽을거리로 간주되는 경향을 보였다.⁵⁴⁾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동서독 작가들은 분단 및 민족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동독에서의 작품활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문학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체제가

54) Karl-Rudolf Korte, "Literatur",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p. 449

념을 벗어나기란 매우 힘들었다. 또한 반체제적 성향을 띤 작가라 할지라도 이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독의 작품들은 대체로 체제유지 혹은 발전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었다. 서독의 경우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귄터 그라스(Günther Grass)가 중심이 된 ‘그룹 47’ 소속 작가들은 분단초기부터 분단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⁵⁵⁾ 이들은 정치적 분단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문화적 동질성, 즉 문화민족개념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 및 사회문제의 주제와 관련하여 서독작가들의 대다수는 분단문제보다 민주주의의 정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⁵⁶⁾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족적 정체성과 독일문제의 현위치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동독의 현실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였다.⁵⁷⁾

서독과 달리 동독주민들은 서독의 작품들을 읽을 기회가

55) *ibid.*, p. 448.

56) Stuart Parkes, “The Politics of Literature: Writers, Intellectuals and German Unity”, *German Politics*, Vol.2, no.3 (Dec. 1993), p. 452.

57) 분단문제에 대한 서독작가들의 인식태도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귄터 그라스와 같이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대신 문화민족개념을 바탕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작가들, 페트 슈나이더(Peter Schneider)와 같이 분단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적 정체성의 추구하고 동시에 독일인들의 현실만족에 대한 준엄한 비판으로 일관한 작가들, 과거 민족주의의 악몽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한 작가들, 그리고 동독 사회에서 독일의 전통적 문화유산을 찾는 데 열중한 작가들로 분류될 수 있다. Karl-Rudolf Korte, *op cit.*, pp. 449-452.

거의 없었다. 개인이나 각 기관은 정부의 특별허가 없이 서독작품을 반입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독작가들은 분단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70년대부터 독일문제를 ‘2 민족 2 국가’ 원칙으로 접근한 동독에서 분단은 기정사실이며 더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동서독 작가들간의 교류 역시 작가단체를 매개로 하는 양자간의 공식적 접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국제 펜(PEN)클럽이나 작가들간의 비공식교류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동독정권의 묵인하에 1981년 동베를린 회동을 시발로 몇차례에 걸쳐 동서독작가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모임의 목표는 애초부터 통일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서로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⁵⁸⁾ 동독정권의 평화적 선전, 선동전략이라는 의구심을 받기도 한 이 모임에서 쿤터 그라스는 다시금 문화민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페트 쉬나이드와 같은 작가는 동독체제의 비민주적 성격과 동독작가들의 비판의식부재를 공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⁵⁹⁾ 그러나 이 모임은, 통일이후 동서독작가들간의 ‘문학논쟁(Literaturstreit)’에서 나타나듯이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데 애초부터 한계를 가졌다.

문학작품이나 공연예술에 비해 전파매체를 통한 양독간의

58) *ibid.*, p. 449.

59) Stuart Parkes, *op cit.*, p. 458.

문화교류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TV를 통한 문화교류는, 비록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동서독주민들이 서로의 생활을 아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경우도 프로그램의 성격상 일방적인 교류형태를 띠었다. 즉 서독인들의 동독방송청취는 매우 미미한 데 반해 동독인들은 동독방송보다 서독방송을 즐겨 시청했다. 호네커의 등장이전까지 동독정권은 서독방송의 청취를 통제하였지만, 70년대에 들어 오면서 통제는 상당히 완화되었다.⁶⁰⁾ 70년대 대형의 공동안테나의 설치가 제약을 받지 않게되자 케이블을 통해 동독가정은 서독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 물론 방영방식의 차이, 즉 서독의 PAL, 동독의 SECAM이라는 차이가 있었지만 겸용 데코더(Decoder)가 동독내에서 개발되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80년대의 통계에 의하면 서독방송의 가시청지역에서 수상기를 가진 동독인구의 약 90%가 서독방송을 시청하였다고 한다.⁶¹⁾ 지역적 문제로 인하여 드레스덴(Dresden)과 멜켄부르크(Melkenburg)일부에서는 서독방송청취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를 제외하고 전 동독지역의 99%가 서독 TV의 가시청지역이었다.

이상의 인적 교류, 문화·예술교류, 방송교류의 예에서 보듯

60) Manfred Rexin, "Massenmedien in der DDR", *Deutschland Handbuch*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89), p. 402

61)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사례집」, 통일과정연구 93-V (1993), p.688; Kurt R. Hesse, "Mediennutzung in der DDR", *Deutschland Archiv*, Nr.10 (1988), pp. 1103-1105.

이 분단기간동안 동서독간 문화적 이질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이질성문제는 통일독일의 사회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문화적 이질성극복과 관련하여 통일이전 동서독간의 교류가 기여한 바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통일이후에 나타난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러한 교류의 기여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매우 방대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류가 문화적 차원에 미친 영향력이 그리 크지 못했던 이유는 교류의 진면목, 즉 형태, 질,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느정도 밝혀질 수 있다.

첫째, 동서독간의 교류는 매우 일방적인 형태를 띠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교류의 구체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독정권은 서독문화의 유입을 가능한한 차단(Abgrenzung)하려고 노력했다. 동독정권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양독간의 교류를 허용했다. 즉 체제불만의 폭발을 막기위한 예방적 조치 내지 서독의 경제적 원조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 혹은 협정이나 조약의 준수라는 맥락에서 교류의 범위가 정해졌다. 따라서 방대한 교류의 양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류 자체가 일방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기 때문에 문화적 이질성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균형적인 상호이해의 폭은 넓지 못했다.

둘째, 질적 차원에서 볼 때 동서독간의 교류가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의외

로 낮았다. 대표적인 한 예로써 동독정권이 허용한 서독방문은 주로 연금수혜자들에게 국한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미 분단이전에 사회화과정을 부분적이거나 마 겪었고, 대체로 동독의 사회주의적 문화보다 독일의 전통적 문화에 더욱 익숙했던 세대에 속했다. 사실상 문화적 이질화 문제는 분단이후 이질적 체제하에 사회화과정을 겪은 청·장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써 비교적 이질화정도가 낮은 이들의 서독방문이 동서독간의 문화적 이질성 극복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1980년대 후반 동독정권은 비연금수혜자의 여행기회를 대폭 넓힘으로써 교류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다. 특히 동서독의 청소년 교류확대는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위한 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도 맹점이 있었다. 즉 청소년교류에서 동독측 참가자들은 동독정권이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공산당산하 동독청소년조직(FDJ)의 핵심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 80년대 후반 동독정권의 교류정책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소련의 개혁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써 서독여행을 대폭 자유화하여 개혁거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려 했다.⁶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화적 시각에서 볼 때, 교류의 질적 증대를 가

62) Walt Süß, *op cit.*, pp. 286-301; Ernest D. Plock, *East German-West German Relations and the Fall of the GDR*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 82-83.

능케한 80년대 후반의 변화는 통일의 시기에 비추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즉 비록 새로운 차원의 교류확대가 통일을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음은 분명하지만,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에 사실상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란 시간적으로 너무 짧았다.

서독정부의 내독교류정책은 동독정권의 차단정책과 대비되었다. 즉 서독주민은 동독여행이나 동독의 문화, 예술작품들을 통하여 동독주민의 생활현실을 비교적 자세히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동독에 대한 서독주민들의 이해도와 문화적 동질화문제 간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었다. 보통 짧은 기간동안 평상적 친지방문, 직업상 여행, 단순한 관광 등의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개인적, 집단적 만남은 문화적 이질성을 확인하거나 동독주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문화적 동질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는 불충분했다. 사실 동독정권은 인적 교류를 통해 소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적 문화의 유입 및 반체제집단의 출현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교류가 확대될수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독주민의 방문금지와 비밀경찰(Stasi)의 활동을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막으려고 노력했다.⁶³⁾

63) 서독주민들의 동독방문은 서독정부로부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지만, 동독정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통제를 받았다. 예컨대 동독에서 이주한 자, 서독이주를 희망하는 동독주민을 친척으로 가진자들은 원칙적으로 동독방문이 금지되었다.

셋째, 교류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교류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러한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문화적 이질화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될 수 있다. 흔히 독일통일에 있어 문화적 차원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방송의 역할을 손꼽는다. 1970년대 동독주민들의 서독방송청취에 대한 동독정권의 통제가 완화된 이후 동독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서독방송만을 청취하거나 시청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독의 방송에서도 약간의 오락물과 영화들이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부분적으로 끌긴 했지만, 대체로 정치성이 강조된 동독의 방송물들은 서독주민은 물론 동독주민들로부터도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방송이 동독주민들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통일이전부터 서독에서는 내독관계에서 방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혹자는 동독주민들의 서독방송청취가 서독체제의 대동독 홍보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독방송은 동독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⁶⁴⁾ 이러한 주장은 서독방송을 통하여 동독주민들이 접하게 되는 실업문제, 가정문제, 범죄를 등 서구산업사회의 어두운 면이 동독체제의 정치적 자유, 인

64) Ernest D. Plock, *op cit.*, pp. 90-93.

권, 경제적 낙후성 등에 대한 부정적 차원을 상쇄시킨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나아가 동독정권을 안정시킨다는 생각은 서독방송에서 나타나는 서독의 사회현실이 동독주민들에게는 단지 환상의 세계로만 비춰지며, 따라서 그러한 방송과는 완전히 유리되어 정치적, 경제적 결핍이 지배하는 자신들의 현실세계에 대해 더욱더 체념적일 수 밖에 없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주장이나 생각은 단순한 가정의 차원을 넘어 통계적으로 어느정도 뒷받침되었다. 즉 동독주민들의 서독이 주자들 중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서독방송이 시청불가능한 드레스덴지역으로부터의 이주자의 수가 오히려 타지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⁶⁵⁾ 물론 이러한 사실 한가지만으로 서독방송의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논의가 공통적으로 문제삼는 바는 기본적으로 서독 방송이 동독주민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었지만, 그 영향은 방송내용 그대로 직접적으로 행사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인식을 매개로 재구성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서독방송이 미친 영향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서독방송은 동독주민들에게 소비자사회(consumer society)에 대한 매력을 심어 주었고, 둘째, 동독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정치적 사건들

65) Kurt R. Hesse, *op cit.*, p. 1105.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셋째, 동독체제와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러움을 더욱 유발시켰다는 점이다.⁶⁶⁾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곧 서독의 전반적 사회문화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동화가능성을 높혀주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즉 방송을 통하여 서독의 자본주의적 문화현실이 일반 동독주민들에게 이해되거나 직접적으로 수용되었다든지, 또 이를 통해 서독의 문화가 동독주민의 생활양식에 용해되어 침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반성면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1985년 250명의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동독주민들의 서독방송시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즉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자들은 대체로 서독방송에서 뉴스나 정치관련 특집물에 높은 시청도를 보였으나, 오락물이나 상업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실제생활과 동떨어져 있고 과장이 심하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내었다.⁶⁷⁾ 물론 일부 청소년들은 예외적으로 서독의 대중문화에 매력을 느끼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독으로 이주를 결행한 자들의 설문대답을 미루어볼 때 문화적 동질화측면에서 서독방송이 동독주민들에게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과 관련하여 내독교류가 기여한 바는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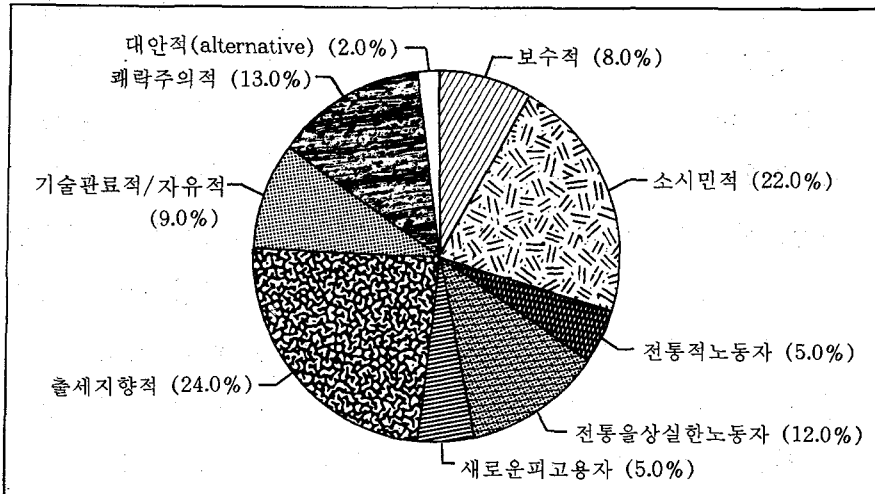
66) Ernest D. Plock, *op cit.*, p. 92.

67)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사례집」, 통일과정연구 93-V (1993), p. 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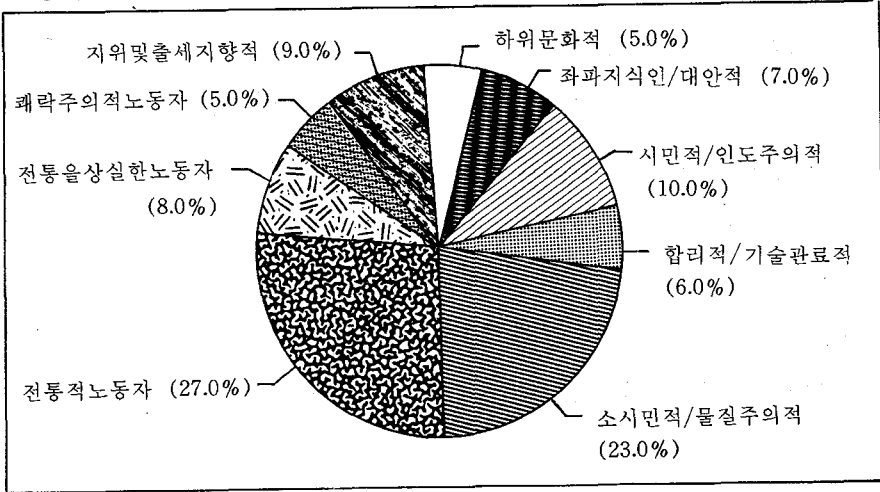
교류의 형태, 질,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찾아본 그러한 교류의 한계는 보다 실증적으로 입증된다. <표 7>은 통일직 후 사회조사기관에서 실시한 동서독지역의 사회적 환경 (soziale Milieus) 비교조사 결과로서 삶의 이해(Lebensauffassung) 혹은 삶의 양식(Lebensweise)에 대한 동서독 주민 개개인의 공통적 성향을 몇가지로 묶어본 것이다. 여기서는 방대한 규모의 내독교류에도 불구하고 분단기간동안 양지역 주민들간에 지속적으로 진전되었던 이질화의 현실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표 7> 동서독지역의 사회환경구조(Soziale Milieustruktur) 비교 (1991)
(14세 이상)

서독지역:



동독지역:



자료: Sinus Institut/ Heidelberg, Ulrich Becker, H.Becker & W. Ruhland, *Zwischen Angst und Aufbruch*, p.80 & 82

이처럼 통일이후 비로소 실증된 현실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분단시기 양독간의 교류가 사회문화적 동질화에 기여한 바는 아마도 주민들 개개인의 차원에서 느낀 민족적 유대감의 재확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도 동서독 공히 세대간, 사회계층간에 적지않은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민족적 애환으로서보다 비교의 관점에서 서로의 생활을 객관적 현실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았다. 기성세대의 경우도 사회계층간에 차이는 있지만 민족적 유대감과는 별개로 서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인적 교류는 양독간에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유대감을 발견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교류의 실제적 한계로 말미암아 각 체제가 생성한 이질적 생활양식을 극복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1982년에 이미 서독작가 페트 슈나이더에 의해 날카롭게 지적되었다. 분단의 비극을 다룬 자신의 소설 ‘장벽을 넘는 자(Mauerspringer)’를 통하여 동서독의 사회문화 및 심리적 상황을 해부하면서 극복되기 힘든 마음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으며,⁶⁸⁾ 이는 통일이후 현실로 나타났다.

라. 통합과정의 문제

독일의 통일후유증을 논할 때 예외없이 통일방법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이미 통일과정상에서도 단기간내 체제흡수적 형태의 통일이 초래할 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독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 모든 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통일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찾기란 매우 힘들었음은 자명하다. 사실 독일의 통일방법은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 상황적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였다. 이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직후 서독총리 콜이 제안

68)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보이는 장벽의 붕괴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Karl-Rudolf Korte, *op cit.*, p. 452 에서 재인용

했던 향후 독일문제에 대한 ‘10개항 계획’의 어디에도 급속한 통일의 구상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동서독의 일부 정치세력들 - 예컨대 서독의 야당과 동독의 반체제지식인 단체들 - 이 반대하는 가운데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이 관철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찾아진다. 첫째, 독일통일에 대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었던 소련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했다. 당시 소련 국내에서는 독일통일에 대체로 우호적이었던 개혁파의 국내적 입지가 약화되었고, 그대신 동독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서둘러 통일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시급했다. 이는 ‘2+4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통일을 주도한 서독정부당국자들의 촉각이 온통 소련의 국내정치적 상황변화에 쏠려있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둘째,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후 동독주민들의 서독이주행렬이 줄을 이었으며, 그 결과 동독의 경제적 황폐화의 가속은 물론이고 서독에서도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동독인의 이주행렬을 막기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다. 셋째, “우리는 민족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 대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Wir sind ein Volk)”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된 동독주민들의 급속한 통일요구 역시 적지않은 역할을 하였다. 넷째, 서독총리 콜의 정치적 야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즉 그는 통일의 열기를 몰아서 곧 닥치게 될 연방의회선거를

승리로 이끔으로서 통일독일의 초대총리가 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채택된 통일방법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부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생시켰으며, 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현실화된 것이 바로 내적 통합의 어려움이란 결과이다. 특히 분단시기에 동서독에서 생성되었던 이질적 삶의 양식을 감안할 때, 급속한 체제흡수적 통일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동서독 주민들 모두가 통일에 대한 단단한 마음의 각오를 갖출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동서독주민들은 대개 통일이 가져다줄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통일을 주도한 서독정부의 약속과 통일독일의 밝은 장래를 너무 쉽게 믿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서독정부의 예상은 상당부분 오판에 근거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된 사회보장비의 감축으로 말미암아 계층간에 불균형한 비용부담이 야기되면서 서독의 중간 및 중하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결과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민족적 정체성이 취약한 정치 및 사회문화에 익숙해왔던 서독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질적인 동독지역 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포용할만한 심적 여유를 가지기란 힘들며, 오히려 불만을 가진 서독주민들의 눈에 동독주민들의 생활양식은 부정적으로 비춰졌다.

급속한 체제흡수적 통일은 동독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큰 문

제를 안겨주었다. 사실 통일의 기반이 되었던 1989년 10월 동독주민의 ‘평화적 혁명’은, 비록 공산당지배체제를 붕괴시킨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정치적 투쟁이 아니었다. 구동독체제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속에서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경제적 실패, 기만, 불신, 편협성의 결과로 와해된 것이었다.⁶⁹⁾ 동독주민들은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그 자유를 구체제하에서 형성되었던 자신들의 내적 민주화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소비재구입, 여행의 자유, 서독화폐에 대한 동경, 동독에서의 경제적 기적에 대한 희망 등 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실제로 1990년 3월 동독의 민주선거는 동독사회의 내적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 그러나 동독주민들은 이 기회를 놓쳤다. 통일의 결과에 대한 환상이 선거에 임하는 동독주민들의 자세를 결정지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적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구체제하에서 형성되었던 정치·사회문화 및 사회심리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자명하다. 동독주민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회피하고 서독이 40여년간 애써 이루어 놓은 것을 단시간내에 쉽게 받아들이는 길을 택했다. 이 길은 쉬울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⁷⁰⁾

69) Hans-Joachim Maaz, "Psychosoziale Aspekte im deutschen Einigungsprozess", p. 4.

70) *ibid.*, p. 4

동독주민들은 통일로 인하여 구동독체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했지만, 통일이후 사회경제 및 체제적응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나타난 불만스러운 반응의 이면에는 구체제하에서 형성되었던 정치·사회문화의 잔존과 사회심리적 왜곡상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적응에 대한 불안, 막연한 피해의식 및 방어심리, 과거에 대한 향수 등은 결국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며, 나아가 내적 통합과정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통일독일에서 내적 통합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가치를 토대로 하여 분단기간동안 이질화되었던 생활양식이 수렴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의 공유화나 생활양식의 수렴화를 위해서 구동독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면에서 구동독주민의 서독체제로의 동화가 강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통일 방법상에서 연유하는 이러한 상황이 변화할 수 있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그러한 동화과정의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물질적 가치면에서 우월한 입장에 서있는 서독지역 주민들의 ‘나눔을 통한 분단의 극복(Überwindung der Teilung durch Teilen)’⁷¹⁾에 대한 마음자세와 동독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심리적인 과거청산 노력이다.

71) Ulrich Becker, H.Becker & W. Ruhland, *op cit.*, p. 39.

이러한 당위적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민족적 유대감의 증대가 요구된다. 독일정부나 사회각계는 경제성장과 생활의 질적 향상, 교육을 통한 가치의 동질화,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 동서독지역간의 상호이해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합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물론 그 결과는 단기간내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문제는 민족적 유대감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통합노력이 얼마나 효율적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독일의 공동체유지를 위한 구심력을 찾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일독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갑론을박이 거듭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독일민족사의 비극적 운명⁷²⁾인 동시에 유럽통합에 대한 독일의 입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민족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공동체에서 일차적 응집력은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독일민족주의가 유럽사에 끼친 과오 때문에 결국 분단의 비극을 맞이 했으며, 민족주의를 경원함으로써 통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더욱이 통일이후 다시금 국내외로부터

72) 독일의 철학자 니체(F. Nietzsche)는 '선과 악의 저편(Jenseits von Gut und Böse)'라는 저술에서 독일인의 특징은 끊임없이 독일(deutsch)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eter Pulzer, "Unified Germany: A Normal State?", *German Politics*, Vol.3, no.1 (April 1994), p. 16에서 재인용.

독일의 민족국가적 재발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유럽통합의 가속화와 더불어 탈민족주의적 가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적지않은 어려움을 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독일의 바람직한 공동체적 응집력 기반에 대하여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혹자는 통일독일의 정체성을 구태의연한 민족의식에서 찾는 것을 탈피하여 과거와 단절된 열려진 미래를 향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동질성의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³⁾ 이에 반해 중도우파적 정치성향을 지닌 자들은 공동체적 기반으로서의 민족의식과 역사적 과오에 연결되는 민족국가재건을 구분하면서 민족의식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독일민족국가의 역사는 끝났지만 독일인의 역사는 살아있다”라는 1960년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지적은 다시금 각광을 받는다.⁷⁴⁾ 물론 이러한 입장에서도 다양한 하위문화를 가진 현대의 서구산업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통합적 구심력이 와해되는 공통적 현상이나 유럽통합의 대과제가 결코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민족통합과 유럽통합의 균형이 강조된다.⁷⁵⁾

73) Mary Fulbrook, *op cit.*, p. 232. 이러한 주장은 독일의 진보주의적 지식인 내지 좌파 정치세력에 의해서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74) Karl Jaspers,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Über Aufgaben deutscher Politik*, (München: Piper Verlag, 1960), p. 53.

75) Ludger Kühnhardt, “Multi-German Germany”, *Daedalus*, Vol.123, no.1 (Winter 1994), p. 208-209.

이처럼 공동체의 구심력을 민족의식의 고양에서 찾을 것인지 혹은 탈민족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의 구심력을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 차원의 논란은 내적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통일독일이 피하기 힘든 딜레마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4주년의 기념사에서 독일 연방대통령인 로만 헤르쾅(Roman Herzog)의 다음과 같은 말은 매우 시사적이다. “나는, 고유한 ‘민족적 동질성’, 즉 우리에게 표면상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긴요한 ‘민족적 동질성’이 과연 무엇인지 나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만한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⁷⁶⁾ 물론 내적 통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민의 관용, 상호이해, 그리고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민족의식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위성은 실천되기 쉽지 않으며, 따라서 내적 통합의 과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협력을 겪어야 할 것이다.

76) Bundespräsidialamt, Ansprache von Bundespräsident Roman Herzog bei einem Festakt aus Anlaß des Tages der Deutschen Einheit in Congress-Centrum Bremen (3. Okt. 1994)

IV. 독일사례를 통해 본 통일문화연구의 방향

독일사례는 정치적 통일이 이질성 극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반세기 가까이 상이한 체제하에서 형성된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란 통일방법과 상관없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독일사례분석의 의미는 단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에 있어서 독일사례분석은 오히려 문화적 이질성의 진면모를 밝히는 데 유용성을 가진다.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독일과 같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독일경험을 교훈삼아 우선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성의 배경과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접근방법 내지 인식방법이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규명과 이질성 극복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통일문화연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점 과제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인식방법

통일문화는 기본적으로 분단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분단 이래 남북한간에 형성된 흔히 '이질성'으로 불리는 문

문화적 차이의 극복 문제가 일차적으로 제기된다.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의 사회 및 문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문제의 원인과 그 내용을 정확히 알 때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괄적으로 보면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한반도에 지난 50년간 상응하기 어려운 두 사회체제가 존립해온 귀결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남한체제와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체제간에 체제상응성(system compatibility)이 전혀 없다⁷⁷⁾는 사실이 문화적 이질성의 심화를 이끈 한 조건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 문화적 이질화의 주 원인은 오히려 두 체제간의 대립과 교류의 단절에서 찾아져야할 것이다. 문화의 속성 - 즉 사회화(socialization)를 통하여 재생산되며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서 구조화되는 특성 - 을 감안하면 이질성은 대립과 상호폐쇄적인 분단상황의 지속에서 생성되고 확인된 것이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문화적 이질성을 체제적 이질성에서만 찾을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독일사례를 통하여 분명히 실증되었으며, 한반도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의 각 부분에서 체제의 지도원리 내지 이념

77)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서울: 나남, 1993), p. 166.

이 표방하는 규범적 문화와 실제로 나타나는 실천적 문화 사이에 분명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상적인 측면만을 보더라도 남북한 체제의 이념과 사회현실상에 불일치가 확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 개개인들에게 있어 그러한 지도원리와 이념의 내면화 정도가 일률적으로 측정되기 힘들다. 물론 남북한의 이질적 체제가 각각 주민들의 생활양식, 가치관,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의 보장을 바탕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경쟁지향적 사회와, 일당지배하에 집단주의와 조직지향적 성격을 띠며 사적 소유를 금하는 국가통제사회에 각각 익숙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양식은 큰 차이를 보일 것이 명백하다. 특히 남북한 각 인구의 70% 정도가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 문화의 체제피구속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공식적 체제가치의 내면화 정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심리분석적 한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분단 이전에 존재했던 한반도내 사회적 동질성의 기반이 아직도 어느 정도 존속할 가능성과 인간과 사회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문화적 이질성의 진면목을 찾고자 함이다.

남북한의 정치·사회문화가 상당부분에서 각각 공언된 체제 이념에 걸맞지 않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남한에서는 지난 세월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권위주의문화가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군사 정권의 통치하에서 일상적인 문화현상으로 뿌리를 내렸다. 민주화가 가속화되는 현재에도 그러한 성향은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시민문화의 부재에 대한 탄식에서 증명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전체주의적 통치행태의 불일치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당관료 중심의 새로운 계급(nomenklatur)의 형성, 그리고 관료화, 산업화에 따른 계급구조의 변화가 일면서 사회주의적 평등원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⁷⁸⁾

이러한 괴리현상은 전후 탈식민화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즉 비록 정도와 형태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전통과 근대적(modern) 문화가 혼재하는 가운데 문화의 전이(transfer)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남한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익히 알려져 있

78) 북한의 계급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고현욱 외,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pp. 187-218; 도홍렬, “북한의 사회통제,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변동”,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세미나시리즈 91-0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548-574; 서재진, “북한사회 계급구조의 재편과 사회변동”,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세미나시리즈 91-0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575-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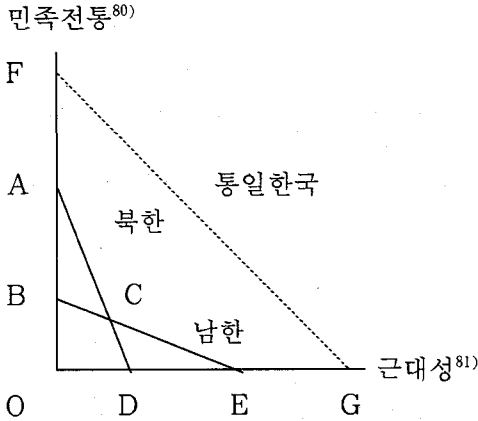
고 비교적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알려진 사회현실을 바탕으로 추론될 수 밖에 없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공언하는 체제가치는 기본적으로 한민족의 전통문화토양에 충격적으로 심어진 외래의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 북한 '현존사회주의'의 체제경영도 근대화 전략이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⁷⁹⁾ 비록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민족전통과 사회주의적 가치를 접목시킨 이념적 변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발전전략

79) 사회주의체제를 근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70년대 서구 공산권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산권연구가 방법론적으로 다원화 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근대화의 특성들이 분석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특히 90년을 전후한 소련,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은 근대화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비록 몰락의 과정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근대화에 따르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작용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근대화론의 유용성은 자명하다. 물론 북한이나 중국의 사회주의는 사회발전전략적 면에서 소련, 동구와 다르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발전방향이란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80년대말 한국의 진보학자들 사이에 북한 연구의 한 대안적 방법으로 관심을 모았던 '내재적(immanent) 접근법'도 내용면에서 동독을 위시하여 소련, 동구국가들 역시 근대화된 산업사회로의 요구를 피할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70년대 초반 P.C.Ludz와 K.v.Beyme를 중심으로 하는 몇몇 서독학자들의 연구방법이었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선구적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F.J. Fleron, Jr. ed., *Communist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Chicago: McNally, 1969);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1970); C.Gati, ed.,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in Eastern Europe*, (N.Y.: Praeger, 1974); P.C.Ludz, *Parteilite im Wandel*, 3. Aufl.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70).

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바탕으로서 문화적 토양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새로운 가치체계의 조성과 이를 통한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목적이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정치, 사회문제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때 천편일률적으로 국가의 공식적 견해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체제가치가 주민들 개개인에 완전하게 내면화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폐쇄적인 통제사회에서 주관적 견해가 표출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주민들의 속마음은 비록 표출되지는 않지만 정권의 공식적 목표문화(goal culture)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보도되고 있듯이 북한에는 70년대 이래 지속되는 경제적 침체로 말미암아 관료들의 부패와 배급사정의 악화가 더욱 심해지고, 그에 따라 근자에 들어오면서 암시장의 활기, “돈이면 최고”라는 반사회주의적 의식의 팽배, 그리고 청소년 비행을 비롯한 갖은 사회적 일탈행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정권은 경공업의 발전과 사상·기술·문화의 이른바 3대 기술혁명을 지속적인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북한사회에는 정권의 목표문화와 별개로 제한적이거나 의식과 행위를 지배하는 다층적 정치·사회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문화현실을 바라보면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은 체제중심적 사고에 의하여 범주화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진다. 그러므로 문화적 이질성을 체제이질성에서만 찾으려는 기존의 인식방법상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적절한 인식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분단과 함께 남북한이 상이한 근대화전략을 택하면서 이전의 동질적이었던 한반도 문화가 이질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점에 시각을 맞추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는 곧 문화의 역사성,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성, 그리고 이중성의 고려하에 남북한의 문화변동과정을 바라보는 인식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인식태도에 따르면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는 분단기간 동안 생성된 각각의 체제이념순종적 삶의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전통과 근대성의 상이한 공존상태에 기인하는 이질성이라는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다. 물론 두 측면은 서로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림 1〉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 정도*



*〈그림 1〉은 민족전통과 근대성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문화현실을 일반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사회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하위문화현상은 여기서 도식된 기울기와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예시된 남북한의 기울기가 뒤바뀔 수도 있다.

체제이념순종적 삶의 양식이란 측면에서만 이질성을 강조하면 문화적 동질화를 통한 정치적 통일의 추구라는 목표는

80) 여기서 말하는 민족전통은 남북한의 체제가치를 바탕으로 창조 혹은 재해석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유교적 공동체윤리, 샤머니즘적 종교관 등과 같이 민족구성원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전통적 생활양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한민족 고유의 인성을 결정짓는 틀을 통칭하는 것이다.

81) ‘근대성’이란 단어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며, 포괄적 의미를 가진 범주적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학의 중요한 지적 전통을 살펴보면 어느정도 특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다. Durkheim, Marx, Weber의 전통에 따르면 근대화는 각각 ‘분화(differentiation)’, ‘상품화(commodific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성이란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 기인하는 개인주의, 사회구조의 분화, 문화적 다원주의, 분업의 발달 및 산업화, 대량생산, 도시화, 매스미디어의 발달, 관료주의, 민족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고도로 일반화된 이념과 가치의 등장 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Stephen Crook, J. Pakulski & M. Waters, *op cit.*, pp.3-6. 참조

매우 회의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의 이질성은 남북한이 공동의 체제목표와 가치를 가질 때 교육과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제이념순종적 삶의 양식이란 측면에서 이질성을 바라보는 인식태도의 이면에는 체제중심적 사고, 즉 체제대결 내지 경쟁이라는 입장이 전제되고 있다. 독일사례는 이러한 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독일의 통일후유증은 문화적 이질성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상대체제를 범주화하여 바라보았던 결과 생성된 상호편견에 의해 증폭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그림 1>과 같은 인식방법에 따르면 통일이후는 물론이고 통일과정에서 문화적 동질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실제로 남북한의 문화에 이질성만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공유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 AOD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근대화 전략에 의해 이루어진 북한의 문화현실이며, △ BOE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대화 전략으로 삼은 남한의 문화현실을 의미한다. 위의 두 부분의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겹쳐지는 □ BODC는 남북한간에 동질적 문화의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질성 극복 방향은 □ BODC의 확장과 일맥상통하며, 나아가 가장 이상적인 극복형태로는 통일한국의 미래에 걸맞는 △ FOG라는 통일문화를 정립하

는 것이다. 결국 이질성 극복의 문제에 있어서 방향성이 전제되는 한 통일문화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이며, 이를 향한 실천방법을 찾는 것이 곧 통일문화연구의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2.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문화

이질성 극복 문제는 〈그림 1〉에서 선분 AD와 BE가 일치된다는 의미의 산술평균적 차원으로 단순히 이해될 수 없으며, 점선 FG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걸맞는 통일문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질성의 극복은 동질성의 회복 및 창조라는 의미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질성의 회복과 창조는 곧 객관적 역사해석과 긍정적인 미래상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관과 미래관의 바탕위에 형성되는 통일문화는 역동적인 미래지향성을 띠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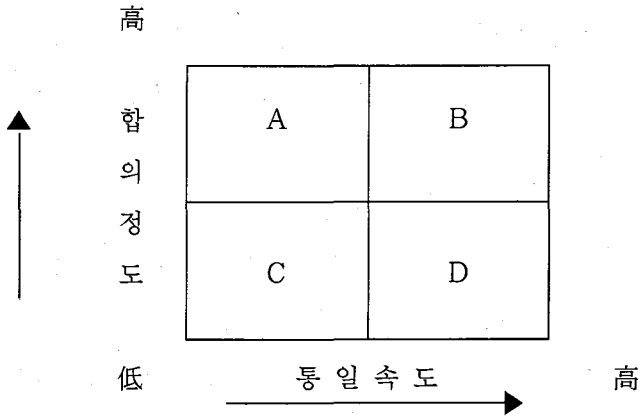
현재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이에 걸맞는 통일문화상을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 나은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문화규범으로서 통일문화를 상징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노력과 방법의 제시는 아마도 지성인들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화를 규범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는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사회 및 문화변동론과

분단현실을 감안하면 규범화된 통일문화는 자칫하면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 차원에 머무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사회나 문화의 변화 방향은 어떤 특정 목적을 향해서 인위적으로 조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복잡해지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 비록 사회변동론이나 문화변동론에서 변화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론들이 밝히는 인과성은 현실을 설명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⁸²⁾ 더구나 남북한의 갈등적 체제이념하에서 어느 한쪽이 생각하는 문화규범은 서로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체제이념을 넘어서는 바람직한 통일문화상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객관성을 가지기 힘들며, 규범론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나아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통일문화상의 실현 가능성도 통일의 방법 및 과정에 따라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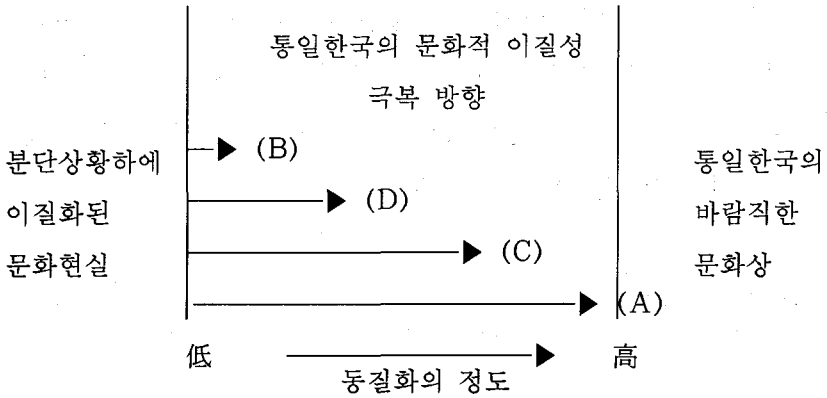
82) 레이몽 부동은 기존의 모든 사회변동이론을 비판하면서 보편적 인과성을 제시하는 일반이론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레이몽 부동, 「무질서의 사회학적 위치 - 사회변동이론들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비판」, 민문홍 옮김, (서울: 교보문고, 1990); 루만은 이에 대해 더욱 극단적 입장을 취한다. 그의 체계이론적 인식에 따르면 고도의 복잡성을 가진 현대사회와 문화에는 인과적인 사건이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복합성'에는 언제나 가능성만이 존재하며,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결과는 기대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모든 체험이나 행위의 결과는 항상 우연적(contingent)이다. Niklas Luhmann, *Soziologische Aufklärung I*,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84), p. 32.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특정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이나 이에 상응하는 통일문화규범을 제시하기보다 현실적 바탕위에 통일문화를 특정한 미래를 향해 열려져 있는 것으로 보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규범적 측면 못지않게 현실에 바탕을 둔 실제적 측면이 중요하다. 통일의 방법과 과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각각 다른 통일한국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며, 그에 따라 통일문화의 모습도 규범이나 실제의 양면에서 공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통일문화개념에 내재된 최소한의 규범성이 배제될 수는 없다. 통일한국의 효율적 사회통합에 필요한 가치의 추구는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Zeitgeist)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문화는 평화, 복지,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2>와 <그림 2-1>은 현 분단상황을 기초로 하여 통일방법 및 과정에 따라 예상되는 통일한국의 모습과 통일문화 형성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림 2〉 통일방법 및 과정에 따른 통일한국의 미래상



〈그림 2-1〉 통일방법 및 과정에 따른 통일문화 형성과정의 문제



A: (점진적·단계적 합의통일⁸³⁾)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향하는 바로서 통일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이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에서보다 통일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또한 교류접촉을 통하여 접근, 적응, 동화, 그리고 중국적으로 합일에 이르는 과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일한국과 통일문화의 미래상은 무한히 열려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한국의 체제는 아마도 소위 ‘제3의 길’이라는 차원에서 찾아질 것이다. 이 경우 적어도 현재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체제적 목표문화와 현실문화간의 괴리 현상과 같은 문제점은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충격적으로 심어진 특정 가치체계가 문화를 선도하는 왜곡된 형태가 아니라 통일지향적 문화의 내적 동인이 체제변화를 야기시킴으로써 남북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는 과정이 예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바람직한 통일한국과 통일문화의 미래상에 대한 구상은 그러한 과정이 인간의 자유와 공동체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호 접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83) 여기서 말하는 ‘합의’ 혹은 ‘체제흡수’는 통일과정의 법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후의 체제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다. 즉 통일한국의 체제가 남북한의 기존체제 중에 어떠한 하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체제흡수적이라 일컬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서로간의 체제가 융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체제를 만들어 낸다면, 이는 합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개념들이다.

민족전통의 재발견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남북한의 체제 및 문화 현실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B: (일괄타결식 합의통일) 예멘식 통일방법을 연상시키는 이 방법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문화적 역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다. 또한 아무리 바람직한 통일한국과 통일문화의 미래상을 미리 구상해 놓는다고 하여도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물론 연방제 통일방식에서 제시되듯이 과도적 국가연합상태를 전제로 하는 일괄타결식일 경우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보아 앞에서 언급한 점진적·단계적 합의 통일의 범주에 귀속될 성질의 것이다. 급속히 이루어지는 일괄타결식 통일의 경우 체제와 문화의 관계는 (A)의 경우와 정반대적 현상을 보일 것이다. 즉 특정의 '제3의 체제'가 문화를 선도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과정의 이중적 어려움을 노정시킬 것이다. 실제로 남북한 체제를 인위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대안적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며, 인류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대안적 체제는 문화적 기반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고려하에 이 경우의 통일문화는 아마도 남북한의 공통된 민족전통에 주안점을 두는 과거지향성을 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

한 가운데 과거지향적인 통일문화유형은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서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던 근대화과정의 산물, 즉 비동시적인 것들을 동시적으로 경험하는 남한의 사회가 과거지향적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통일방법에서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남한의 소비문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화가 신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어두운 측면이 건전한 통일문화의 형성에 장애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C: (점진적·단계적 체제흡수통일) 이러한 통일방법은 실제로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적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즉 남한내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고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끌려는 북한의 대남전략이나, 체제우월성을 바탕으로 기능주의적 접근을 모색하는 남한의 통일정책은 공히 자신의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점진적·단계적 흡수통일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통일이 가능하다면, 현실상의 객관적 조건들 - 사회주의권의 몰락, 체제능력의 현격한 격차 등 - 로 인하여 남한체제중심의 통일이 될 개연성이 훨씬 높다. 이 경우 통일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통일한국의 문화상은 궁극적으로 현재 남북한의 문화적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며, 따라서 미래 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통일은 북한의

변화는 물론이고 남한의 문화 역시 북한의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일문화가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A)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특정 체제가치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A)의 경우와는 달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이 지배하는 문화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 남한의 문화와 비교해본다면, 자기이익중심적인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시민문화의 성숙이라는 차원에서 적지않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경우에 예상되는 통일문화는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가장 구체화된 현실주의적 문화유형이라 말할 수 있다.

D: (급속한 체제흡수통일)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이러한 통일의 가능성은 남한과 북한 중심의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C)의 경우에서 언급했던 맥락에서 북한체제의 내적 붕괴(implosion)로 인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은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구체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이 거의 없을 것은 분명하며, 통일 후에도 통일문화를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체제가치가 질서틀로 작용하기 때문에 (B)의 경우 보다 혼란의 정도는 덜할 것이다. 이 경우 통일문화는

내용상 현재 남한의 문화를 북한에 이식시킨 형태로써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대체로 남한의 가치를 통하여 본 민족전통과 문화현실을 북한주민들에게 주입하는 정치교육 내지 사회화 과정이 통일문화형성의 일차적 기반이 되는 한, 미래지향적인 통일문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문화적 이식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한 동안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남한의 체제가치를 고집하는 보수적 경향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적어도 (재)사회화 과정동안 북한의 문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남한의 문화적 포용성이 기대되기는 힘들며, 그러한 가운데 갈등과 동화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아마도 갈등보다 동화가 우세해지는 시점에 도달할 때야 비로소 통일문화는 현상유지적 성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 경우에는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각 체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바람직한 통일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이상의 경우들은 통일방법 및 과정에서 합의의 정도와 통일속도를 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극단적인 예에 불과하며, 실제상황하에서는 아마도 서로 겹쳐져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체계화를 위해서 이러한 예상적 사례분석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대처

할 수 있는 포괄적인 통일문화연구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검증해볼 도리는 없지만, 통일방법 및 과정과 통일문화의 상관관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들은 통일문화연구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제공한다.

- 통일문화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의 문화상일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 - 혹은 이질화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달성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을 이끌어가는 문화적 실천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과 기능은 통일속도가 낮을수록, 또한 동시에 합의정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 통일과정에서 문화의 역할과 기능이 낮을수록 통일이후 문화적 동질화과정의 어려움은 높아지며, 동질화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적응노력 또한 더욱 많이 요구된다.
- 통일과정에서 합의의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통일문화의 윤곽을 그리기 힘들다.
- 통일과정에서 통일속도와 합의의 정도에 따라 통일문화형성의 기반은 과거지향적, 현상유지적, 미래지향적, 혹은 이것들의 복합적 형태를 띤다.

3. 통일문화연구의 방향과 중점과제

<그림 2>와 <그림 2-1>에서 보듯이 (A)형의 통일방법과

과정은 통일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 모델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남한의 문화현실, 북한의 문화현실, 그리고 양자간을 연결해주는 남북한관계의 세가지 영역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향한 조화로운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상황을 고려하면 그러한 전제조건 충족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특히 북한의 문화현실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의문스러우며, 설령 북한문화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가능성과 방향은 현재로서는 북한정권이나 주민들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질화된 문화간에 발생할 마찰손실을 최소화하는 통일을 지향할 경우 이질성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는 남한사회의 몫으로 남게 된다. 남북한의 어느 편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질성 극복이 전제된 통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일방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남한만이라도 내용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걸맞는 문화를 지향한다면, 이질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즉 <그림 1>의 선분 BE가 점선 FG로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남한사회가 북한의 문화까지도 담을 수 있는 문화적 포용성을 가진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이질적 문화로 인한 내적 통합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다. 현재 한반도통일이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겪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통일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통일문화를 염두에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중·장기적인 접근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실행 가능한 부분에서부터의 점진적 실천이다. 즉 현재 북한정권이나 북한사회의 변화가 남한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독일의 통일후유증과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는 인내심과 굳건한 실천의지를 갖는 것이다. 그 바탕위에 과연 한국사회의 문화현실이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에 걸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정책이 남북한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해 효율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급선무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접근태도의 필연성을 인정한다면, 장차 통일문화연구는 크게 다음 네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문화형성을 위한 실천가능성을 확대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족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통일의 당위성은 남북한이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기반 위에서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이러한 당위성은 결코 부인될 수 없지만, 통일이 이루어질 때 국민 개개인들의 민족의식이 체제적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 크게는 정

치, 경제, 사회의 각부분에서부터 작게는 일상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 을 실제로 어느정도 포용하여 상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사실 한·중관계의 개선 이후 중국거주교포들의 입국이 허용된 이래 중국교포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일반적 태도는 그러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초기의 민족감정에 근거한 환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거리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어느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따른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공동체의식의 해체와 그대신 현대 산업사회의 생활양식에 걸맞는 가치체계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험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닥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연 남한의 국가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가치체계와 공동체적 정체성이 장차 통일에 의해 비로소 완성될 민족공동체의 구심력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가공동체의식과 민족공동체의식간에 현실적인 괴리가 나타난다면,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현재 국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화 내지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미래지향적인 생활양식과 가치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민족통일의 과제를 안

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턱대고 미래에만 시선을 고정할 수가 없다. 민족공동체의 당위성을 염두에 둘 때, 과거와 단절된 미래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족전통의 재인식과 그 전통에 접맥된 가치체계의 재발견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적 생활양식만이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터전을 닦는다는 의미에서 민족전통과 근대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해야만 한다.

둘째, 건전한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민족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체라는 큰 그릇에 담길 내용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민족공동체의 정체성 확립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정치교육은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 특히 분단현실과 통일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인식태도를 형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시민정치교육의 역할 및 기능은, 다원화되어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적 구조를 가진 현대사회가 평화, 자유, 평등, 복지, 인간의 존엄성 등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보장하는 미래를 향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정치교육은 민주주의적 가치의 확립과 일맥상통한다. 민주주의는 제도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는 결코 완성된 형식으로서의 의미보다 열려진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는 재창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제(mechanism)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가치의 측면에서도 민주주의는 보다 살기좋은 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사회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의식의 함양과 직결된다. 이러한 기회와 비판적 의식의 함양은 바로 시민정치교육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 가치의 정립이라는 의미에서 시민정치교육의 위력은 독일의 경험에서 실증되었다. 비록 내적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일독일의 사회가 위기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것은 과거 서독의 민주시민교육의 덕분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장차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때, 통일한국의 사회는 생활양식이나 가치의 측면에서 더욱 다양화될 소지가 많다. 그러할 경우 더욱 복잡해질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적 가치의 정립은 필수적이다.

셋째, 문화중심적 통일논의 및 남북한 문화교류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한내에서나 남북한 관계에서 다루어진 통일논의는 거의 대부분 정치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비록 일각에서는 문화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한적이거나 남북한의 문화교류도 성사되었지만, 이는 모두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독일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정권이 변화를 향한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남북한관계가 장차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문화적 이질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인적·문화적 교류는 최소한의 상호이해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남북한교류의 확대, 발전을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북한정권의 내적 붕괴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선부른 전략은 금물이다. 이는 북한정권이 남북한관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로서 남북한관계의 발전가능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결과적으로는 의도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내북관계에 대한 서독의 기본태도는 남북한관계에 대한 남한의 정책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남북한 관계발전의 기본목표는 예측할 수 없는 통일의 그날까지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며, 북한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북한 내부환경의 조성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을 염두에 둔다면, 남한사회의 통일논의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치성을 배제하는 접근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남북관계개선이 선결되어야 하며, 설령 그러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동독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문화교류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쉽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포용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남북한 관계에 접근함으로써 주어지는 모든 계기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의 문화현실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분석 및 연구결과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에 대한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 주로 체제나 정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특수성에 너무 집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자료의 부족과 북한사회에의 접근상 한계로 말미암아 북한의 문화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북한의 문화현실을 추론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예컨대 귀순자의 증언, 북한의 소설, 언론 및 방송내용 등은 북한의 문화현실을 제한적이거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문화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문화교류나 문화중심적 통일논의는 소리없는 메아리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나아가 포용해야할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화적 포용성을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하위문화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의 문화현실을 개괄해보는 노력을 배가해야할 것이다.

V. 결 론

1990년을 전후하여 급격하게 변모한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도 이에 걸맞게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모색하도록 요청받게 되었다. 특히 독일통일을 바라보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는 없지만, 엄청난 후유증을 동반하는 형태의 통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적 통일을 넘어 내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한반도문제에 접근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분단이래로 증폭되어온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사실 문화라는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형성된 문화적 이질성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이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문화적 이질성 극복의 필연성을 강조하려는 소박한 의도에서 나온 통일문화라는 새로운 개념은 충분히 존재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제는 통일문화를 어떻게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통일문화는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현재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특히 이질성극복을 위한 방향

모색과정에서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이에 걸맞는 통일문화상은 필수적으로 전제된다. 더 나은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문화규범으로서 통일문화를 상정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노력과 방법의 제시는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화를 규범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는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사회 및 문화변동의 실태와 분단현실을 감안하면 규범적으로 틀지워진 통일문화는 자칫하면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 차원에 머물고 말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미래상이나 통일문화규범의 창출에 매달리기보다 통일문화를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것으로 보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최소한의 규범성조차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다. 통일한국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가치의 추구는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Zeitgeist)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문화는 평화, 복지,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현실주의적이며 실천전략적 차원에서 통일문화를 바라볼 때, 독일통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유용한 준거로서 가치가 있다. 특히 독일사례는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내적통합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과 한반도의 상이점을 고려하면, 독일사례의 대한반도 적용

에는 적실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사례를 역사적, 상황적 문맥에서 이해한다면, 독일의 경험은 한반도 문제에 창조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앞에서 내적 통합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독일의 통일후유증 내용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는 정치적 통일이 이질성 극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물론이고, 반세기 가까이 상이한 체제하에서 형성된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란 통일 방법과 상관없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사례 분석의 의미는 그러한 사실확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한반도 상황에서 문화적 이질성 및 통일문화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식틀과 연구방향을 모색하는데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독일사례에서 실증된 사실들에 따르면, 먼저 통일문화와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인식적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까지 문화적 이질성은 대체로 체제적 이질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왔다. 물론 분단기간동안 형성되었던 이질적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은 통일문화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화의 역사성, 보편성, 이중성을 감안하면, 한 체제의 문화현실은 체제가 표방하는 문화규범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식민화를 경험한 남북한사회는 모두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전통문화와 근대적 문화가 혼재하는 문화적

전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은 민족전통과 근대성이 상이한 정도로 혼합되어 있는 결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방법에 의하면 남북한간에는 이질적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질적 부분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질성의 극복은 그러한 동질적 부분의 확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물론 인식방법의 전환만으로 이질화된 문화현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제경쟁 내지 대결적 사고가 介在되어 있는 체제중심적 인식태도로는 문화적 동질화가 전제된 통일을 생각하기란 매우 힘들다. 독일의 통일후유증은 문화적 이질성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상대체제를 체제중심적으로 범주화시켜 바라보았던 결과로써 생성된 상호편견에 의해 증폭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질성의 극복은 단순히 동질성의 회복 뿐만 아니라 동질성의 창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문화는 이질성 극복의 지향점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미래의 사건이 될 한반도통일을 두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통일문화를 바라보면, 통일의 방법과 과정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의 공식적 입장에 의하면 점진적·단계적인 합의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동질화를 전제로 하는 통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문화현실, 북한의 문화현실, 그리

고 양자간을 연결해주는 남북한관계의 세가지 영역에서 통일 한국의 미래를 향한 조화로운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상황을 고려하면 그러한 전제조건 충족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북한의 문화현실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의문스러우며, 설령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북한정권이나 주민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질화된 문화간에 발생할 마찰손실을 최소화하는 통일을 지향할 경우 이질성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는 남한 사회의 몫으로 남게 된다. 남북한의 어느 편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질성 극복이 전제된 통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일방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남한만이라도 내용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걸맞는 문화를 지향한다면, 이질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즉 장차 남한사회가 통일문화에 걸맞는 문화적 포용성을 가진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이질적 문화로 인한 내적 통합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다.

사실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통일문제를 논의하는 자체가 이미 중·장기적 시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실행가능한 부분에서부터의 점진적 실천이다. 현재 북한정권이나 북한사회의 변화가 남한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독일의 통일후유증과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는 인내심과 굳건한 실천의지를 갖는 것이다. 그 바탕위에 과연 한국사회의 문화현실이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에 걸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정책이 남북한 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해 효율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급선무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접근태도의 필연성을 인정한다면, 장차 통일문화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족전통과 근대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토대로 하는 민족공동체적 정체성의 확립,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건전한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 문화중심적 통일논의 및 남북한 문화교류의 확대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문화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연구결과의 축적이다. 이러한 과제는 단순히 연구의 차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가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동반해야만 한다. 통일문화의 형성문제는 단지 머리와 가슴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행동 및 실천의 차원에서 중요성을 더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레이몽 부동. 『무질서의 사회학적 위치 - 사회변동이론들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비판』. 민문홍 옮김. 서울: 교보문고, 1990.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서울: 나남, 1993.

한승주. 『전환기 한국의 선택: 민주화, 평화통일, 민족자존의 교의 미래를 향하여』. 서울: 한울, 1992.

Becker, Ulrich, H. Becker & W. Ruhland. *Zwischen Angst und Aufbruch: Das Lebensgefühl der Deutschen in Ost und West nach der Wiedervereinigung*. Düsseldorf: ECON Verlag, 1992.

Bühl, Walter L. *Sozialer Wandel im Ungleichgewicht*. Stuttgart: Enke, 1990.

Crook, Stephen, Jan Pakulski & Malcolm Waters. *Postmodernization: Change in Advanced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1992.

Griffith, William E. *The Ostpolitik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78.

Jaspers, Karl.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Über Aufgaben deutscher Politik*. München: Piper Verlag,

1960.

Luhmann, Niklas. *Soziologische Aufklärung I*.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84.

Maaz, Hans-Joachim. *Der Gefühlsstau: Ein Psychogramm der DDR*. Berlin: Argon Verlag, 1990.

Plock, Ernest D. *East German-West German Relations and the Fall of the GDR*.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riewe, Jan & R.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eutschen Vereinigung*. Frankfurt a. M.: Fischer Verlag, 1991.

Weidenfeld, W. & K.-R. Korte.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2. 논문

김용범. “현단계 통일문화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통일문화연구소 간담회를 위해 준비한 원고 (1994. 3. 16).

김종길. “니클라스 루만의 일반 체계이론: ‘복합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한국사회학』. 제27집 (여름호, 1993).

도홍렬. “북한의 사회통제,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변동,”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세미나시리즈 91-03.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서재진. “북한사회 계급구조의 재편과 사회변동,”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세미나시리즈 91-0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조 민.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통일연구논총』. 제2권 2호 (1990).
-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사례집』. 통일과정연구 93-V, 1993.
- Almond, Gabriel A.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Civic concept,” *The Civic Culture Revisited*. Eds. by G.A. Almond & S. Verb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 Belwe, Katharina. “Sozialstruktur und gesellschaftlicher Wandel in der DDR,” *Deutschland Handbuch*. Hrsg. von W. Weidenfeld & H. Zimmermann.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89.
- Conradt, David P. “Changing German Political Culture,” *The Civic Culture Revisited*. Eds. by G.A. Almond & S. Verb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 Eisenstadt, Shmuel N. “So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4. N.Y.: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68.

Fulbrook, Mary. "Aspects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Daedalus*. Vol.123. No.1 (Winter 1994).

Gebhardt, Winfried & G. Kamphausen. "Mentalitätsunterschiede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Das Beispiel zweier ländischer Gemeind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6 (1994).

Geißler, Rainer. "Sozialer Wandel,"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Hrsg. von W. Weidenfeld & K.-R. Kort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Gensicke, Thomas. "Die Stimmung ist besser als die Lage: Stimmungs- und Wertwandel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utschland Archiv*. Nr.8 (1994)

Glaessner, Gert-Joachim. "Politische Kultur und nationales Erbe in der DDR," *Einheit-Freiheit-Selbstbestimmung: Die Deutsche Frage im historisch-politische Bewußtsein*. Hrsg. K.-E. Jeismann. Frankfurt a.M.: Campus Verlag, 1988.

Gong, Gerrit W.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U.S. and Northeast Asia," *Korea and World Affairs*. Vol.16. No.4 (Winter 1992).

- Grunenberg, Antonia. "Bewußtseinslagen und Leitbilder in der DDR," *Deutschland Handbuch*. Hrsg. von W. Weidenfeld & H. Zimmermann.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89.
- Hartfiel, Günther & K.-H. Hillmann. "Institution," *Wörterbuch der Soziologie*.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1972.
- Henschel, Thomas R. "Jugend,"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Hrsg. von W. Weidenfeld & K.-R. Kort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 Herdegen, Gebhard & M. Schultz. "Einstellungen zur deutschen Einheit,"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Hrsg. von W. Weidenfeld & K.-R. Kort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 Hesse, Kurt R. "Mediennutzung in der DDR," *Deutschland Archiv*. Nr.10 (1988).
- Hirschman, Alberto O.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World Politics*. Vol. 45 (Jan. 1993).
- Kaase, Max. "Innere Einheit,"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Hrsg. von W. Weidenfeld & K.-R. Kort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Kindermann, Gottfried-Karl. "Present and future contribution of bilateral Inter-system Detente policies to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regional and global peace," *Inter-System Detente in Germany and Korea*. Ed. by G.-K. Kindermann. Munich: tuduv Verlag, 1976.

Knabe, Hubert. "Politische Opposition in der DD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2 (1990).

Korte, Karl-Rudolf. "Literatur,"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Hrsg. von W. Weidenfeld & K.-R. Kort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Kühnhardt, Ludger. "Multi-German Germany," *Daedalus*. Vol.123. No.1 (Winter 1994).

Maaz, Hans-Joachim. "Psychosoziale Aspekte im deutschen Einigungsprozeß,"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 (1991).

Neubert, Erhart. "Eine protestantische Revolution," *Deutschland Archiv*. Nr.5 (1990).

Parkes, Stuart. "The Politics of Literature: Writers, Intellectuals and German Unity," *German Politics*. Vol.

2. No.3 (Dec. 1993).

Pöhl, Karsten. "Integrating the German Mind,"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German-Korean Conference on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Seoul (Oct. 1993).

Pulzer, Peter. "Unified Germany: A Normal State?" *German Politics*. Vol.3. No.1 (April 1994).

Rexin, Manfred. "Massenmedien in der DDR," *Deutschland Handbuch*. Hrsg. von W. Weidenfeld & H. Zimmermann.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89.

Riebau, Bernd. "Geschichtswissenschaft und Nationale Frage in der Ära Honecker," *Deutschland Archiv*. Nr.5 (1989).

Sarcinelli, Ulrich. "Auf dem Weg in eine kommunikative Demokratie? Demokratische Streitkultur als Element politischer Kultur," *Demokratische Streitkultur: Theoretische Grundpositionen und Handlungsalternativen in Politikfeldern*. Hrsg. von U. Sarcinelli.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0.

Schwartz Benjamin I. "Culture, Modernity, and Nationalism - Further Reflections." *Daedalus*. Vol.122. No.

3 (Summer 1993).

Süß, Walt. "Perestrojka oder Ausreise," *Deutschland Archiv*. Nr.3 (1989).

Tismaneau, Vladimir. "Nascent Civil Society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Problems of Communism*. Vol.38. Nos.2-3 (1989).

Weidenfeld, Werner.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Hrsg. von W. Weidenfeld.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89.

Winkler, Heinrich August. "Rebuilding of a Nation: The German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Daedalus*. Vol.123. No.1 (Winter 1994)

3. 기 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Zahlen-
spiegel: Ein Vergleich -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Bonn: Gesamt-
deutsche Institut, 1988.

Bundespräsidialamt. *Ansprache von Bundespräsident
Roman Herzog bei einem Festakt aus Anlaß des
Tages der Deutschen Einheit in Congress- Centrum*

Bremen (3. Okt. 1994)

Der Spiegel Nr.3 (1993); Nr.8 (1993)

Die Zeit (1. Okt. 1993)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 Mai 1993)

Frankfurter Rundschau (6. Juli 1994)

Text zur Deutschlandpolitik. Reihe III/Bd.3, 1985.

빈 면

남북한 문화예술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이헌경·최대석*

- I. 서론
- II. 통일문화연구의 현황 및 남북한 문화정책
- III. 북한문화예술의 실상
- IV. 남북한 문화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
- V. 결론

* 이헌경(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사업부 정치학박사)
최대석(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사업부 정치학박사)

빈 면

I. 序 論

1. 研究目的

남북한은 분단 이후 상이한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각각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문화와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 문화라는 구조적으로 독립된 문화체계 및 문화유형을 가지게 되었다. 즉 남북한 사회는 언어, 언론, 문학, 예술, 종교 등의 문화일반에서 광범한 이질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질화가 심화되면서 상호간에 문화적 배타성이 증대하였다. 그에 따라 서로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현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분단 이전 전통적 맥락에서 공유했던 가치 및 행동정향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생활양식의 동질성조차 점점 소멸되기에 이르렀다.

남북한간의 문화적 상호적응 내지 동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문화적 배타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한다. 이는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현을 위해서도 항상 필요한 것이다. 즉 흡수통일에 의한 문화적 흡수, 현재의 정치적 대립상황 속에서 제한적이거나 가능한 문화예술교류, 혹은 점진적·단계적인 통일을 위해 요구되는 상호신뢰와 상호 문화교류 등의 모든 경우에도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문화예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남북

한 사회 모두 이를 위한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경험을 되새겨 보면 민족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두 경우 모두 정치적 통일은 실현되었지만 내적 통합의 문제는 결코 극복되지 못했다. 물론 양 경우의 문제를 동일한 차원에 놓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로 막을 내린 예멘통일과 달리 독일은 분단상황하에서도 다방면에 걸친 문화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문화적 배타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현재 갈등과 대립상태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통일목표는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즉 완전한 통일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기능적이며 효율적인 통합은 물론이고 문화적 통합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통일은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해야만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가 “이질화되고 양립된 문화를 민족사적 정통에 맞게 융화통합”¹⁾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민 모두가 우리는 하나라고 느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제도적 통일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문화 창출을 향해 꾸준히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통일문화의 창출을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들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

1) 이병룡, 「통일문화 지향과 문화예술」(서울: 국토통일원, 1985. 11), p. 8.

이다. 첫째, 문화접변을 위해 각각 상대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문화를 너무 포괄적 또는 지엽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여 균형 잡힌 이해 태도를 가져야 한다. 셋째, 초기 교류협력단계에서는 문화적 갈등해소에 주력하기보다 이질화된 부분의 발견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문화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출발한다. 첫째, 남북한의 문화교류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여기서 흡수통일 또는 무력통일로 인한 문화적 흡수의 가능성은 배제된다. 둘째, 점진적·단계적 통일방법에 초점을 맞춰 문화적 접근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남북한 문화교류의 실상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남북한 관계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특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화해와 협력의 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일민족 일국가의 통일이라는 3단계 과정의 실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즉 남북한 문화에 관한 분산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분류함으로써 통일문제연구자들이나 남북문화교류를 담당하는 기관, 민간단체, 개인들에게 유용하게 참고될 수 있는 지침서로서 뿐만 아니라, 종합적 방향제시를

통하여 북한문화연구와 통일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성있는 발상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 본 연구의 중점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전제로 하는 남북한의 문화예술정책 전반과 상호간의 교류현황 파악에 두어질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현실을 조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정치적 갈등이 문화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추세이며, 따라서 민족공동체 형성은 요원하게 보인다. 나아가 통일방법에 대한 남북한의 상이한 접근방식 역시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즉 남한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적 이질화 내지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진데 반해, 북한은 자신의 의도대로 연방제 통일이 되면 문화적 이질화는 자연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상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문제해결의 큰 장애는 아닌 것 같다. 남북한의 접근방법은 단지 순서의 문제일 뿐이며, 문화적 이질성 극복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논리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욱 중요한 문제는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이 늦어질수록 민족통합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더욱 더 많이 요구될 것이며, 동시에 그 과정에서 후유증 역시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족적 사명으로서 민족공동체 형성의 당위성은 본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준다.

2. 研究方法

이질화된 남북한의 문화가 민족공동체 형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쌍방의 동시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문예와의 비타협성을 고수하는 북한의 문예사상 및 조류를 감안하면, 현재의 북한문화예술관과 정책하에서는 북한이 교류 및 접근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한의 문화정책과 상호교류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남북한 모두 문화적 접근을 민족공동체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보다 통일을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문화교류를 체제홍보적 차원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남북한의 문화예술 정책, 현황, 그리고 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 문제점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各章을 부분별 주제로 나누었다. 第Ⅱ章은 통일문화 연구의 현황과 남북통일문화정책의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문화적 이질화 요인으로서 남북한의 문화론과 문화정책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다. 第Ⅲ章에서는 북한문화의 실상이 총체적으로 조명될 것이다. 즉 북한의 문학, 미술,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가극, 교예) 등의 현황 및 주요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분야별로 남북한의 문화

적 이질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第Ⅳ章에서는 남북한 각각, 그리고 양자의 관계라는 세 차원에서 현재까지의 남북문화교류 및 협력의 실태를 분석, 정리함으로써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문화교류협력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 第Ⅴ章은 앞 章들에서 분석, 정리된 남북한 문화정책 및 교류현황의 전반을 진단하는 동시에 도출된 문제점의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남북한 문화교류가 긴장완화의 수단이 아니라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태도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종합, 정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문화의 각 영역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개별적 문화부분들을 종합하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한은 매우 상이한 문화정책이나 문화교류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접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영역의 구체적 현황과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적어도 남북한 문화교류의 실상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종합적 처방을 모색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구범위와 관련해서는 분단 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통괄하며, 이때 남북한 문화정책과 문화교류협력의 변화 추이를 배경으로 시기구분을 하였다. 문화정책 및 교류가 한반도 내외적 정세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 구분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가능한 객관적 시각을 통하여 남북한 문화교류의 실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章에서 사용된 분석기준은 원칙적으로 남북한의 공식적 입장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범적으로만 볼 수 없는 현실이나 정부의 입장과 다른 생각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즉 정부의 정책 이외에 민간단체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견해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이 객관적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원과 문화체육부, 나아가 문예진흥원, 민예총, 문화정책개발원,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송학회,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출판연구소 등의 가능한 많은 문화관련기관들을 방문하여 일차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문학, 예술, 언론, 종교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많은 자문과 조언을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II. 統一文化研究의 現況 및 南北韓 文化政策

1. 統一文化研究의 現況

통일문화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은 1985년 2월 한국공연예술평론가협회가 주최한 「통일문화지향과 예술교류」이라는 심포지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통일문화라는 개념을 통하여 그동안 문화예술계 일각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되었던 북한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¹⁾ 특히 같은해 9월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문화예술을 비롯한 비정치적 영역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의 기미가 보이면서 통일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층 고조되었다.

당시 국토통일원은 학계, 문화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통일문화창조 분위기선도를 위한 통일논단”이라는 주제 아래 1985년 5월 「통일문화 지향과 문화예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일련의 심포지움을 통하여 문학, 예술, 언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토론을 활성화

1) 이 모임에서 당시 국토통일원의 정세현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문화 창조’라는 표현으로 남북한 융합을 전제로 한 통일지향의 문화와 통일후에 정착되어야 할 문화를 전망하였다. 이보다 앞서 통일문화를 언급한 아래와 같은 글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통일문화가 학술회의 등에서 본격적인 주제로 논의되기는 「통일문화지향과 예술교류」심포지움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황성모, “민족화합과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접근” 국토통일원 주최 「통일문제학술회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 2주년 기념」(1984. 1); 김창순, “통일문화의 창조운동을 논한다,” 「북한」(1984. 3) 참고.

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²⁾ 이러한 배경하에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 즉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적인 요인은 정치체제와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넓게 보면 삶의 양식 곧 문화의 차이 역시 무시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변화에 편승하여 그동안 군사·정치분야에 가려서 거론조차 어려웠던 통일을 위한 문화예술, 통일 이후의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통일문화에 관한 논의는 명백한 한계를 가졌다.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한의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목적의 지향점을 모색하기보다 장차 예상되는 남북한간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및 회담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³⁾ 이렇게 체제경쟁이나 대결심리에서 비롯된 초기의 통일문화 연구는 단지 통일문화의 개념을 확립하려는 노력⁴⁾ 내지 북한문화의 이질화 정도를 규명하려는 노력⁵⁾에 그침으로써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정립이

2) 예를 들면 국토통일원 주최 학술회의 「통일문화 지향과 문화예술」(1985. 5. 9-10); 「통일문화 지향과 언론의 역할」(1986. 5); 「통일문화 지향과 교육계의 역할」(1986. 10) 등과 정신문화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1985. 6) 등이 있다.

3) 「통일문화지향과 문화예술」, pp. 53-54.

4) 예를 들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1985. 6); 「통일이념 정립을 위한 연구」(1985. 6) 등을 들 수 있다.

5) 예를 들면 국토통일원, 「북한의 문화예술」(서울: 국토통일원, 1981); 안계춘, 「북한 사회의 이질화 실태조사 분석」(서울: 국토통일원, 1980) 등을 들 수 있다.

나 지식축적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남북한 문화교류 등 통일문화에 관련된 정책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학술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통해 심도있게 거론되었던 여러 실천적 제안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단지 일회용 발제 아이디어에 머무는 결과를 낳았다.⁶⁾

1980년대 후반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통일문화는 또다시 의미있는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인식이란 냉전구도의 급격한 와해와 더불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재편되어감에 따라 남북한이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 민족으로서의 공동번영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 관계에 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남한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과 후속조치들을 발표하였으며,⁷⁾

6) 이상일, “민족문화예술의 근원과 원형에서의 접근,”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pp. 190-91.

7) 7·7선언은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통일이념과 원칙에 입각하여 1) 남북 상호교류와 자유왕래, 2) 이산가족의 서신왕래 및 상호방문, 3) 남북한 교역 문호개방, 4) 남북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우방국의 북한교역에 반대하지 않음, 5)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조, 6) 북방외교의 추진 및 북한과 우방과의 관계개선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남한정부는 7·7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문화교류의 5대원칙」(1990. 1),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1990. 8) 등을 제정·발표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곧 이어 해방 이후 금서로 여겨져 왔던 많은 북한 및 공산권 자료와 도서를 일반에게 개방하였다(1988. 10).

획기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7·7선언과 그 후속 조치들은 그 동안 정부측이 독점하다시피해온 통일논의를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북한원본의 개방은 북한연구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⁸⁾ 이무렵 발간된 을유문화사의 「북한의 인식」시리즈, 한국문예진흥원의 「북한문화예술의 이해」시리즈, 「북한문화예술자료」,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한국비평문학회의 「북한문화예술 40년」시리즈 등은 과거와 같이 흑백논리에 의하여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던 태도를 벗어 버리고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북한 문화예술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통일문화 창출의 첫 걸음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보면,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통일문화의 차원에서 북한을 바로 알려는 그러한 노력들은 주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990년대 들어와서 통일문화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문예진흥원산하의 문화발전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북방문화교류와 정책의 방향」(1990. 10. 27), 「분단국의 통일과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8) 이러한 국내 분위기를 편승한 북한원본의 출판활동이 이념서적 전문출판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지하 유통물로 유포되었던 북한원본들이 공식통로를 거쳐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1991. 12),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1991. 12) 등 남북한 문화교류의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를 축적하였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1991. 8),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1993. 12) 등 문화나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시도와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 및 토론과 나란히 정부는 1990년 문화부 발족이후 수립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의 일환으로 「통일문화의 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통일문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⁹⁾ 정부는 통일문화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첫째, 한반도 평화정책과 통일 지향적 남북한 협력시대 마련, 둘째,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통일후의 체제 초월적 사회에 적응하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 셋째, 정통성에 뿌리를 둔 통일문화의 기반 구축등을 제시하였다.¹⁰⁾

한편 1990년 2월 문화부와 통일원 장관 명의로 「남북 문화교류 5대원칙」이 발표되었다. 「남북 문화교류 5대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분단이전의 우리 민족

9)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은 ‘통일문화의 틀’과 함께 4가지의 틀의 구축을 그 주요 목표로 한다. 나머지 4가지 문화의 틀은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 갈등구조를 푸는 ‘화합문화의 틀’, 한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민족문화의 틀’, 후기산업시대에 적응하는 ‘개방문화의 틀’ 등이다. 문화부, 「문화발전 10개년계획」(서울: 문화부, 1990), p. 3.

10) Ibid., p. 5.

전통문화의 우선교류, 들쑤,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셋째,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경, 훼손한 표현방식 지양, 넷째, 쉽고 작은일에서부터 시작, 다섯째,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경주 등이다. 이처럼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는 통일문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한 문화교류의 차원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는 「신 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통하여 민족우선주의 입장에서 통일문화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문민정부는 통일문화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통일문화의 기반조성,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극복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대 마련, 점증하는 남북한 문화교류에 대한 체계적·효과적 대처방안 마련, 남북한간 화해와 이해를 위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과 같이 이전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¹⁾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일문화 연구 역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통일문화관련 세미나, 심포지움, 좌담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으며,¹²⁾ 본격적인 북한문화

11) 문화체육부, 「신 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서울: 문화체육부, 1993), pp. 25-26.

12) 예를 들면 문화부 주최 심포지움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남북문화정책」(1992. 12); 남북문화교류협회 주최 세미나 「남북한 문화교류 활성화방안 모색」(1992. 9);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주최 심포지움 「새정부의 문화예술·교육·방송정책진단」(1993. 3); 한국심리학회 주최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1993. 6); 남북문화교류협회 주최 세미나 「남북한 문화공동체 형성방안」(1993. 11) 등이 개최되었다.

전문학술지인 「북한문화연구」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문화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통일관련 문화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학자,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¹³⁾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로 북한문화를 조망하는 동시에 남한문화의 내면도 살펴보는 내향적 성찰(Introspective Reflection)을 시도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문화 창출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 내의 왜곡된 문화구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향적 성찰은 통일문화 연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정부는 1993년 12월 통일부총리 주최로 문화예술인 초청 「문민정부 통일정책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일관련 문화정책에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통일문화는 규범적 가치체계인 동시에 남북한 문화의 공통기반을 확산하려는 실천적인 사회, 문화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통일문화의 실천을 위하여는 학문, 예술, 문학, 언론 등 다방면에 있어서 광범위한 민간부분의 역할이 기대되며, 이러한 민간부분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통일문화 운동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 하겠다. 지금까지 통일문제 관련정책들이 정부측에 의해 배타적으로 독점되어온 실태를 감안할 때, 통일문화 창출을

13) 예를 들면 과거 비제도권 문예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의 이사장 염무웅, 구중서의 논문 등이 실려있다. 과거, 민예총은 정부의 남북교류정책을 “통일을 병자한 체제유지의 선전”으로 인식하였다. 원동석, “남북예술교류와 민예총의 입장,” 「민족예술」(1989. 3), p. 9.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상호신뢰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있는 진전이라 하겠다.

현 시점에서 통일문화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통일문화 연구를 통하여 통일문제에 관한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식되었다. 통일연구나 통일정책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은 항상 정치·군사적 측면에 부수적으로 취급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정치·군사 중심의 통일접근방법이 남북한 관계개선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였다. 동시에 문화적 접촉 및 이해를 통해 체제이질성에 기인하는 상호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민족화합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관한 문화적 차원의 접근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둘째, 통일문화가 통일의 목표인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즉, 남북한의 실질적인 민족통합은 남북한 주민들간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내적 통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사례에서 보듯이 제도적으로 통합되었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체제에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상호간에 갈등이 지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1990년대 들어 통일문화 정책은 정부 문화정책의 중요부문으로 정착되었다. 정부는 1990년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을 바탕으로 통일문화 정책을 구체화하여 남북한 협력시대의

구축과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신 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을 통해 통일문화 사업을 보다 폭넓게 실천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출연연구소들에서도 통일문화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일문화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1994. 2), 문화발전연구소는 문화정책개발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북한문화 연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였다(1994. 7).

그러나 기존의 통일문화 연구는 크게 세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념정립상의 문제점이다. 즉 통일문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채, 마치 이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인양 통일문화를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경우에도 각자마다 나름대로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¹⁴⁾ 통

14) 예를 들면,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통일체를 열망하는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문화”, 조민,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통일연구논총」 제2권 제2호(1993); “남북동포 누구나... 받아드릴 수 있는 평화통일에 관한 이념, 지식, 법률, 정치와 경제제도, 예술, 도덕 등의 총체적인 생활양식”, 양홍모, “통일문화 형성론 서설,” 「통일논총」, 제5권 제1호(1985); “통일문화란 40년동안 남북한 분단생활을 통하여 각자성을 갖게된 이질화한 생활양식 및 그 속에 들어 있는 법률, 도덕, 신앙, 지식, 예술, 관습 등의 각자성을 민족사적 정통성 전계에 맞게 민족적 단원으로 통합해 나가는 능력과 의지 및 관습의 복합적 총칭이다”, 김창순, “통일문화의 창조운동을 논한다” 「북한」(1984. 3); “그리고 통일문화라는 말 속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라는 뜻과 아울러 통일 후에 마땅히 이 땅에 자리잡아야 할 문화의 뜻까지도 포함된다”, 정세현, “통일문화 창조의 전망,” 한국공연예술평론가협회 주최 통일문화 심포지움 「통일문화 지향과 오늘의 공연예술」(1985. 2).

일문화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개념상의 복합성과 다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개념적 불일치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문화 연구를 종합화 내지 체계화 시키기 위하여 통일문화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일치된 개념정립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통일한국의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화 극복이라는 두 측면을 연결시키는 문화규범 및 그 실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통일문화를 바라본다면, 통일문화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문화란 통일한국의 사회구성원이 다 같이 지향해야 할 신념, 가치체계, 행동양식으로서 통일한국의 이념에 부합하는 민족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과정을 통해 분단된 사회·문화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를 의미한다.¹⁵⁾

둘째, 통일문화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접근이 미흡하다. 기존의 통일문화 연구는 각 분야의 단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주로 당위론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통일문화 연구의 축적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변동론, 사회변동론, 문화융합론 등이

15)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발표논문(1994. 11. 29), p. 10.

론적인 틀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문화 정책은 일관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날의 남북한간의 문화협력 및 교류사업은 늘 정치적인 변수에 종속되어 왔다. 최근에도 핵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써 통일문화 정책은 실제적으로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통일문화 정책이 남북한간의 다른 정치·군사적 사안과 전혀 별개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장차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나는 엄청난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장차 통일문화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北韓의 文化政策과 理念

남북한의 문화와 문화체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이고도 동질적인 문화구조를 지녀온 남북한이 분단 이후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문화적으로 이질화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현재 남북한간의 이질적 문화구조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가치체제의 산물이며, 체제 내부적 요인에 의해 한층 심화된 것이다.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 요인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이후 남북한은 미군과 소련군에 분할점령되면

서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문화가 그리고 북한에는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 문화가 지배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개인의 사상이나 행동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집단주의가, 남한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시되었다.

둘째, 분단체제의 고착화이다. 남북한 상호 배타적인 정치체제와 한국전쟁의 경험은 남북한 정치주도 세력들간의 첨예한 이념적 갈등을 낳았고, 이는 남북한간 극단적인 체제대결로 발전하는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이처럼 양극화되어 대립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속에서 남북한의 생활문화와 의식구조의 이질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였으며, 북한은 급진적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토지와 산업의 국유화, 집단농장화 등 중앙관리적 경제체제를 성립시켰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차이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생활감각과 가치체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남한에서는 개인의 책임 아래 모든 경제생활이 영위되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책임지는 경제사회구조가 정착되었다.

넷째, 남북한의 상이한 사회구조를 들 수 있다. 남한사회는 개방적이며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북한사회는 통제된 신분제적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계층상승은 당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타도의 대상인 부르조아는

남한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문화가 남한문화의 중추를 이루는 반면, 북한사회는 공식적으로 노동자 계급 중심 사회로서 이들의 문화가 북한사회의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전반을 지배한다.¹⁶⁾

다섯째, 남북한의 문화정책과 문화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국가계획체계의 하위개념으로서 사실상 정치체제의 유지 및 우월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적으로 선전과 선동을 수행하는 문화선동정책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국민교화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화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화활동을 통제한다. 남한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에의 접근기회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증가시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문화지원정책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문화활동은 개인이 담당하고 정부는 직접 간여하지 않는다. 남북한의 이러한 문화정책과 문화관의 차이는 문화의 이질화를 초래하는 중요 요인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문화의 상이성 속에서 남북한의 문화구조가 형성되고, 변모됨으로써 문화적 이질성의 심화를 야기시켰다.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이념 정립을 위한 연구」(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6), pp. 138-39.

가. 北韓의 文化論

북한의 문화에 접근하려면 먼저 북한에서 문화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만 한다. 북한에서의 문화에 대한 개념규정은 북한 고유의 철학적 세계관이자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다. 주체사상에 의거하면 문화란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 것이며, 이는 사람이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 부, 사람의 고유한 활동양식, 그리고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지워진다.¹⁷⁾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북한 문화론의 주요 목표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것과 민족을 문명화하는 것에 두어진다.¹⁸⁾ 여기서 민족을 문명화한다는 것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 즉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을 더욱 더 문화적인 사회적 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¹⁹⁾ 즉,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 결합된 사회주의 민족문화를 주체적으로 건설할 때 인민대중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성장하며, 자기 민족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17)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8-10.

18) Ibid., p. 16.

19) 이춘길,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북한문화연구」 제 1집(1993), p. 14.

모든 문제들을 민족적 특성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화는 민족적 특성과 함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다. 북한의 문화론에 따르면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요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복무하는 문화는 진보적인 문화이며, 착취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복무하는 문화는 반동적인 문화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노동계급적인 문화를 건설하는 것만이 사람들을 낡고 반동적인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민족적·계급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문화는 혁명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화혁명은 사상·기술혁명과 함께 3대혁명의 주요한 구성부문이다. 3대혁명이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들이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한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의 혁명을 계속하여야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3대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이룩할 때 까지의 과도기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략적 과업으로 강조되고 있다.

문화혁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혁명이란 첫째, 근로인민대중의 일반 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여 그들을 능

력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워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낡은 문화의 잔재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이룩하는 것이며, 셋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등 사회주의의 모든 문화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이다. 곧, 문화혁명이란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진실로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하여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의 힘있는 개조자,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만들며 인민대중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분야에서의 변혁을 의미한다.²⁰⁾

나. 北韓의 文化政策

해방이후 북한은 문화기관의 정비, 문화시설의 확충, 그리고 문화관련 각종 법령제정 등에 문화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문학예술인들을 포괄하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1946년 3월 25일에 창립되었고, 1949년에는 평양미술대학이, 1952년에는 평양음악대학이, 그리고 1959년에는 평양연극영화대학이 설립되었다. 한편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1946), 「국립극장설치에 관한 결정서」(1947),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1948) 등의 법령제정을 통해 전통문화와 문화유적지 보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예술인들을 정책적으로

20) 「김일성 저작선집 7」, p. 272.

배려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²¹⁾ 이 시기 북한 문화정책의 목적은 무엇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제 잔재의 청산과 함께 문화기관의 정비와 확충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의 내면화에 있었다 하겠다.

1960년대에 들어서도 북한의 문화시설 확충과 조직정비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1962년에는 교육부와 통합되어 있던 문화부가 신설되었으며, 1960년에는 평양대극장이 완성되었다. 1961년에는 조선혁명박물관과 중앙미술박물관이 재개관되었으며, 1961년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창립되어 산하에 작가동맹, 미술가동맹, 작곡가동맹, 연극인동맹, 영화인동맹, 무용가동맹, 사진가동맹을 망라하게 되었다.

1960년대는 북한에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가 성립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북한의 문화정책도 이전시기와는 달리 김일성 유일사상을 문화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문화정책을 통해 천리마운동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천리마시대의 영웅을 전형화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독려하여 주민 노역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문화정책을 통한 김일성 우상화작업의 일환으로 항일혁명문학이 강조되었다. 1967년 발표된 소위 「10대 정강」에서 김일성은 모든 문학창작에서 항일혁명문학

21) 예를 들면, 1950년에는 ‘이동예술대에 관한 규정’과 ‘극장에 관한 규정’이, 1952년에는 ‘무대예술인들을 우대함에 관해서’가 내각의 의결로 결정되었다.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제3장 참조.

을 중심으로 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문화전반에 국가의 간섭이 한층 강화되었다.²²⁾

1960년대 북한 문화정책에서 특기할 사실은 김정일이 문화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1966년 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1968년 선전선동부 영화예술과장, 1969년 선전선동부 부부장, 1970년 선전선동부 문화예술담당 부부장을 거쳐 1972년 북한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선전선동부 부장의 자리에 오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던 시절에 직접 창작하였다는 소위 「혁명문학」작품들을 재 창작하여 무대에 올리기 시작하는 등 문화정책을 통해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시도하였다.

다. 文化革命政策의 展開

1970년대는 북한이 헌법개정(1972)과 더불어 주체사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 시기이다. 이 시기 북한 문화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3대혁명의 차원에서 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973년 9월에 개최된 당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사상·기술·문화혁명을 하나로 묶어 3대혁명이라고 명명하였다. 3대혁명은 당시 북한체제의 궁극적인 발전목표였다.

22) Ibid.

3대혁명론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문화혁명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1945. 8 - 1947. 2), 「사회주의 혁명단계」(1947. 2 - 1960), 그리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단계」(1961 - 현재) 등 노동계급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주장된다. 3대혁명론의 시각에서 본 북한 문화체제의 변모과정은 다음과 같다.

문화혁명의 제1단계인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는 북한이 문화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문화혁명의 기본과업은 근로자들의 문맹퇴치, 초등 의무교육 준비, 그리고 낡은 사회의 악습극복 등이었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내용은 당시 북한의 혁명발전의 단계와 사람들의 문화정도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하겠다. 즉, 식민지 처지에서 막 벗어난 북한은 사람들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의 사상과 의식수준을 높여서 새 조국건설에 동원하는 과업이 필수적이었으며,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야 했으며, 그리고 생활분야에 남아있는 허례허식과 미신을 없애 구 시대적 잔재를 청산해야 하였다.²³⁾ 실제로 북한은 1946년 7월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표하여 여성을 구속하는 낡은 생활관습의 타파를 시도하였다.

23) 이춘길,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pp. 31-32.

사회주의 혁명시기의 문화혁명의 주요과업으로는 중등무료 의무교육 실시와 함께 문화예술 창조와 보급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58년 11월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으며, 성인교육을 강조하여 노동계급의 새로운 지식인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극장과 영화촬영소를 비롯한 문화예술기관들과 시설들의 복구를 인민경제계획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하였으며, 민족 문화예술 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수집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²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문화혁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역점을 두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을 노동계급화한 기초 위에서 그들이 대학졸업 정도의 문화수준을 지닌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시기의 문화혁명의 목표가 모든 사람들이 문맹에서 벗어나고 인민학교 졸업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수준을 지니게 하는 것이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에는 사람들이 높은 문화지식수준을 소유하여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전체 인민의 고등교육화의 실현,

24) Ibid., pp. 32-34.

보건과 체육사업의 과학화, 사회주의적 생산문화와 생활문화의 확립, 문학예술에 있어서 당성, 인민성, 계급성의 구현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²⁵⁾

북한은 이러한 문화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노선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발전은 인민대중들의 민족 자주정신과 창조적 능력을 고양하여 민족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며, 또한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문학예술 분야에서 「주체의 문예이론」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²⁶⁾

라. 朝鮮民族第一主義와 北韓의 文化政策

북한은 1980년대 중반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 이론을 개발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⁷⁾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정의하고 북한

25) Ibid., pp. 34-38.

26) ‘주체의 문예이론’은 제Ⅲ장 “북한 문화예술의 실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7)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한 개념은 1986년 7월 김정일이 당중앙위 책임일꾼들과 가진 담화인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 이론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나 주체사상의 실천이론으로서 북한주민에게 교육되고 있다.

을 “사회주의의 모범나라”라고 자찬했다.²⁸⁾ 이는 여타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한 상태에서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즉 조선민족제일주의 이론이란 북한이 가중된 국제사회의 압력하에서 국가의 존속과 김정일 세습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 주체사상을 강화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확인된다.

우리의 문학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도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문학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실감있게 형상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 자기민족의 훌륭한 창조물과 자기민족의 힘과 지혜에 대한 긍지와 믿음, 민족의 장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산업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수 없다.²⁹⁾

28)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 12. 2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248-73.

29)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7.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문화 사업으로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일성은 1992년 5월 황해도 개풍군에 소재한 고려태조 왕건의 무덤을 방문하고 “왕건이 우리나라의 통일국가를 세운 첫 사람”이라고 말하고 왕건릉의 증축을 지시했다. 1993년 9월에는 단군의 유물과 유골이 출토되었음을 발표하였으며, 「로동신문」은 사실을 통해 단군 유골 및 유물의 발견은 평양이 “조선민족의 발상지이며 우리 민족의 국가형성과 발전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깊이 간직하고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³⁰⁾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은 문화정책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하고 정당하다는 사상적 통일단결을 보다 굳건히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앞으로 북한 문화의 이론과 실제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南韓의 文化政策과 理念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문화정책은 대체로 네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공동체의식의 함양이다. 공

30)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어 나가자,” 「로동신문」, 1993. 10. 4.

동체의식은 국가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모든 국가는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노력한다. 사회성원들의 연대의식은 동질성에 기초한 일체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동질성의 기반이 문화이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은 국민공동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또 이를 모든 국민이 고르게 향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둘째,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국민의 정서를 순화하여 가치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도하는 것이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국가는 일정한 가치체계, 이념체계의 기반 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나 이념의 공감대를 국민들 사이에 넓고 확고하게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화행정의 기본목표이다.

셋째, 문화정책은 국민의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한다. 모든 사람은 감정을 표출하려 하고 심미적 충동을 만족하고자 하는 정서적 욕구가 있고 이러한 욕구는 인간의 활동 영역중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의 예술에 농축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의, 식, 주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직접·간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국민들의 보편적인 욕구가 행정수요가 되어 정부는 문화정책을 통하여 이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책은 예술 그 자체의 발전을 목표로 한

다. 순수예술론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의 가치는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역량이 얼마나 완전하게 또 독창적으로 표현되었는가에 의해서 평가된다. 이러한 예술활동에 내재된 원리에 따라 문화정책은 사회경제적 효능과 관계없이 예술을 위한 예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¹⁾

가.南韓文化政策의 展開

일반적으로 정부수립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한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은 크게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²⁾ 제1기는 1948년 정부 수립후 부터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의 남한의 문화정책은 단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국한되었던 시기라 하겠으며, 제2기(1972-1980)는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문화정책이 새롭게 태동하였던 기간이며, 제3기(1980-1990)는 헌법에 국가의 문예진흥 의무를 명기하여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제4기는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행정의 전담부서로 문화부가 발족된 이후 문화예술 전반에 활발한 문화운동이 계획되고 전개되는 시기이다. 문화정책의 변천을 시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제5집(1993), pp. 53-55.

3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서울: 문화발전연구소, 1992), p. 12.

남한의 문화정책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³³⁾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는 1950년대 말까지는 「문화보호법」 제정(1952)과 「저작권법」 제정(1957)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문화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즉, 1950년대에는 문화정책이라고 불릴 만한 뚜렷한 정책도 법적·제도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부재상황은 외국원조에 의존하던 당시의 국가 경제사정과 전쟁 피해복구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했던 정부의 형편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하면서 문화재 보호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화행정을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의 창립으로 정부의 지원아래 본격적으로 민간차원의 문화예술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³⁴⁾ 또한 1968년 정부는 문화공보부를 창설하여 문교부와 공보부로 이원화 되었던 문화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문화진흥계획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전국역사업과 한글전용화정책을 시행하고,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였으며, 건전가요 보급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불

3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 15년사」(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op. cit.; 김여수,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예술논총」 제1집(1988), pp. 19-32; 박종국, “문화정책의 기초와 과제,” 「문화예술논총」*제1집(1988), pp. 33-63.

34)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는 건축,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음악등 10개분야의 예술협회가 결성하여 1962년 5월 창립되었다.

때 이 시기는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입법과 행정체계를 갖추어 가는 시기였다 하겠으며, 빈약한 정부재정,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부족, 경제제일주의 발전전략 등으로 인하여 문화정책은 문화재 보호관리 등 현상유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³⁵⁾

1970년대는 남한에 있어서 종합적인 문화정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문화예술진흥법」(1972)을 제정하여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좌표를 설정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73)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제1조에는 “이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증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문화정책의 정책적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74년 정부는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4-1978)을 설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려는 문화중흥계획을 추진하였다.³⁶⁾ 1979년 정부는 1차계획에 이어 「제2차 문예진흥계획」(1979-1983)을 수립하여 1차와 마찬가지로 문화전통의 개발, 민족

35)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op. cit., p. 19.

36) 이를 위한 세가지 중점목표는 첫째,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민족예술을 창조하며, 둘째, 예술의 활성화·대중화로 국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셋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적극화함으로써 문화한국의 국위를 선양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의 연구개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균등한 문화생활 향유,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증진 등을 추진하였다. 요약하자면 1970년대 들어서야 남한의 문화정책은 비로소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의 중흥기반이 조성되었다.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으로 볼때 제3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는 문화정책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은 헌법 제8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문화진흥의 의무를 명기하였으며,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문화창달을 제시하여 문화진흥의 의지를 밝혔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문화예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여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³⁷⁾

1981년에 발표된 「새문화정책」은 그동안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지향적이던 정부의 문화정책이 점진적으로 개방적인 문화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³⁸⁾ 즉, 「새문화정책」을 통해 정부는 문화정책의 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부터 국민전체로 확대하였으며, 문화예술의 발전계획을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대 문화정책의 중요성은 1986년 발표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

37) ‘문예진흥법’ 자체가 개정되었으며 ‘공연법’ ‘문화재 보호법’ ‘저작권법’ 등이 개정되는 한편 ‘박물관법’ ‘전통건조물보호법’ 등이 새로 제정되었다.

38) ‘새문화정책’의 정책기조는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 문화적 혜택의 복지적 분배, 창조적 문화역량의 제고, 문화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각종 문화시설의 사회교육 역할제고 등이다.

획」(1987-1991)의 문화부문계획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문화정책이 경제사회정책의 부수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³⁹⁾

1980년대 말부터 정부는 북한 문화예술의 개방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방정책으로 남·월북자가 해방전 문학작품 출판허용(88. 7. 19),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확대(88. 9. 3), 남·월북자의 음악·미술작품 규제해제(88. 10. 27)조치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방적 문화정책의 기조는 1990년 1월 문화행정의 전담부서인 문화부의 발족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문화예술인들과 관련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문화발전 10개년계획」(1990-1999)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의 방향이 분명히 나타난다.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은 「문화복지국가의 실현」을 그 주요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가지의 「문화의 틀」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섯가지 문화의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 둘째, 갈등구조를 푸는 「화합문화」의 틀, 셋째, 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민족문화」의 틀, 넷째, 후기산업시대에 적응하는 「개방문화」의 틀, 그리고 다섯째, 남북한 협력시대를 준비하는 「통일문화」의 틀 등이다. 이는 1980

39)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op. cit., p. 23.

년대에 들어 정부가 국가정책에 있어 경제 못지않게 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와 함께, 1988년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등을 비롯하여 문화시설과 활동에 대한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였다.

1993년 새롭게 등장한 현 정부는 기존의 문화정책을 문민 시대의 이념에 맞게 개편하여 「신 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발족시켰으며, 문화체육부는 정책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동안 제도권 문화예술계에서 소외되었던 진보적인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⁴⁰⁾

「결에 있고 함께하는 문화, 누구나 즐기고 신명나는 문화」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문화를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화발전 10개년계획」과 이념적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⁴¹⁾ 그러나 1. 규제에서 자율로, 2. 중앙에서 지역으로, 3.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 4. 분단에서 통일로, 5. 보다 넓은 세계로라는 정책기조들은 궁극적으로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문민정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반

40)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창달 5개년계획연구」(서울: 문화발전연구소, 1993), p. 9.

41)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논총」 제5집 (1993), p. 101.

영하고 있다.

나.南韓文化政策의 理念指向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50년대의 남한은 문화정책이 부재한 시기였다. 그러나 문화를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1950년대는 반공과 자유민주주의가 남한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이념으로 작용한 시기였다. 이렇게 정치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이념이 사회 각 부문을 지배함으로써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문화영역의 발전에는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문예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반공이나 자유민주주의는 우선적인 가치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창작활동도 좌파적 개념을 배제한 상태에서만 존재가 가능하였다.⁴²⁾

남한의 1960-70년대는 조국 근대화의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경제발전에 쏟던 시기였다. 아울러 국가 지배이념 차원에서는 반공이념이 지속적으로 강조된 반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상대적으로 퇴색하던 시기였다. 정부는 이 시기의 문화정책의 이념지향으로서 민족문화를 강조하였다. 민족문화의 중흥이라는 기치 아래 수행되었던 당시의 문화정책은 구체적으로는 올바른 민족사관의 확립, 전통문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민족예술의 창조 등을 강조하였다.

42) Ibid., pp. 93-94.

민족적 전통을 강조하는 문화정책의 이념지향은 오늘날까지도 정책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의 문화정책은 문화계 내부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소위 「실천문학」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비판적 문화운동은 단순히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당시의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는 정치적 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문학의 문제가 곧 삶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이들 참여문학가들은 근대화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다루고, 정권의 독재화 등 장기집권에 따른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들은 민족현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민족의 문제로서 통일을 바라보려 하였다.⁴³⁾

이러한 1970년대의 비판적 문화운동은 1980년대 들어 민중문화운동으로 발전하여 권위주의적인 제5공화국 정부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을 이루었다. 당시 정부는 「새 문화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민족문화의 창달과 같은 문화이념을 구현하려 하였으나, 정권의 정통성 결여로 인하여 정부의 문화정책은 사회통합의 기능을 전혀 수행치 못하였으며, 오히려 민중세력에 의해 문화운동은 전적으로 주도되었다. 즉, 민중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의 주체를 우리의 역사과정에서 억눌려 왔던 피지배계급에서 찾고 이러한 계층에게서 나타났던 문화의 양식을 전통문화의 주된 흐름으로 파악하며 이것

43) 백낙청, 「민족문화와 세계문학」(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8) 참조.

의 정신과 양식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당시 문화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민중지향적 문화운동이 점차 사회과학적인 논리로 무장되면서 문화 고유의 특성인 다양성을 차츰 상실하고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예술성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⁴⁵⁾ 즉, 민중문화운동은 분단극복과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면서 점차 대중성을 잃게 되었다.

직선제 대통령선거를 통해 출범한 6공화국 정부는 문화복지의 실현을 문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하였으며, 과거와는 달리 「문화발전 10개년계획」과 같은 장기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여 문화입국을 지향하였다.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은 통일을 대비한 문화적 역량축적,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의 강조, 문화발전의 차원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의 강조 등 기존 문화정책의 이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계 일각에서는 6공화국의 문화정책이 근본적으로 5공화국의 문화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들은 “전혀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문화정책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과정의 실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

44)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pp. 106-107.

45) 박현채, “80년대의 민족사적 의의,” 「실천문학」(1987), p. 48.

을 지적하고 있다.⁴⁶⁾ 곧, 정부의 문화정책의 기초가 여전히 구체적 문화현실과 괴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은 문화를 지배-피지배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6공화국의 문화정책이 문화적 지배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1970년대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을 정부가 국가주도의 급속한 개발전략에 편입시키는 전형적인 문화통제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1980년대의 문화정책은 지배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회유, 강제적 통제합 등을 통한 전형적인 파시즘적인 문화정책이며, 6공화국의 문화정책은 지배의 안정화를 위한 개량주의적 대안들이 골조를 이루며, 관료적이고 억압적인 문화기구의 존속, 문화시설과 예산의 비민주적 사용 등을 통해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⁴⁷⁾ 이러한 지배-피지배의 분석틀에 의하여 문화정책 주도세력에 의한 「문화의 정치수단화」를 지적한 논리는 1980년대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정치세력간의 첨예한 갈등을 전제로 하는 지배-피지배의 틀에 의한 분석은 그 유용성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통성 확보를 통해 문화정책에서도 정부와 비판세력간에 이념적 공감대를 형성할 의

46) 심광현, "90년대 문화정책 비판," 민예총 주최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3. 11), p. 4.

47)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p. 109.

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현 정부는 「신 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통해 문화의 민주화와 국제화를 강조함과 더불어 문화정책의 이념으로 민족정기의 확립을 설정하였다. 과거 문화정책을 주도한 세력이건 비판세력이건 간에 다 같이 민족문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문화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정기에 대한 이념적 강조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남한내의 문화적 공감대의 확보가 남북한 문화동질성 회복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Ⅲ. 北韓文化藝術의 實相

1. 北韓文學의 現況 및 主要 흐름

가. 北韓의 文藝政策 및 理論

북한은 문학예술을 “당의 정책을 구현하여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¹⁾ 즉, 북한의 문학예술은 무엇보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근본조건으로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당의 사상이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의미하며, 당의

1)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13.

정책이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문학예술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이어받은 당의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시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당의 혁명적 무기로 규정된 북한의 문학예술은 따라서 개인의 근본적 재능을 무시하는 집단주의 미학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며, 개인의 재능과 노력을 국가적 목표로 단일화하고 그것을 다시 체계적으로 흡수하여 선전, 선동 및 인민교양과 혁명화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²⁾ 이는 북한의 문예정책이 예술의 본질인 미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전파, 사상의 전달과 같은 기능적 역할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논리는 북한의 문학과 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이러한 북한 문예의 논리는 1962년 11월 김일성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내렸다는 교시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문화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한 혁명적 문화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습니다.³⁾

2) 홍기삼, 「북한의 문예이론」(서울: 평민사, 1981), p. 15.

3) 「김일성저작선집 2」, p. 579.

이상과 같은 내용의 북한 문예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의 건설을 위해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제41조)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즉, 북한의 문예정책은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사상 문화의 침투를 막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1) 社會主義的 事實主義

북한 문예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미학적 요건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이란 한마디로 민중이 선호하며 향수하고 있는 민족적인 문예의 형식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 혁명적인 의식, 계급적 요소들을 구현하고 형상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 창작은 무엇보다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속에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가 가능한 작품을 내놓되 그것이 사회적 본질이어야 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일반적 합법칙성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론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내용은 민족적 형식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여기서 민족적 형식이란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의 문제이며,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이 토대하고 있는 민족적 바탕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적 형식은 무엇보다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⁴⁾ 형식인데, 이것은 단순히 형식에 관한 문제, 예술성에 관한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품의 교양적 기능과 선전 선동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내용의 효과적 전달과 그것을 통해 혁명사상을 고취시키고 혁명투쟁의 당의 과업을 완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⁵⁾

또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낡은 것은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는 내용, 근로 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내용,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내용,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하자는 내용을 말하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실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혁명적이며 계급적인 내용이다.⁶⁾

4) 「김일성저작집 25」, p. 28.

5)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 156-58.

6) Ibid., pp. 160-63.

(2) 主體의 文藝理論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대변되는 북한의 문예창작 논리는 1970년대 이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결합시킨 주체의 문예이론으로 대체된다. 주체의 문예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은 특정한 국가의 사회·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경우 북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혁명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이 개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의 문예이론이란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실현하여 자기나라 인민과 자기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과 방도”⁷⁾를 뜻하며, 그 방향과 방도의 핵심은 모든 문학작품에서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체사상의 요구에 따라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당의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주체의 문예이론이라는 것이다.

주체의 문예이론은 그 논리적인 성격으로 볼 때 문학예술의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혁명이념이라는 내용을 통합론

7) Ibid., p. 111.

적으로 재 해석하고 있는 것 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주체의 문예이론에 따라 창작된 문학예술을 보면 몇가지 중요한 개념의 변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주체의 문예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예의 민족적 형식이란 전통적인 민족 문학예술의 형식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재 인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 시대에 김일성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혁명적 문예형식」을 의미할 뿐이다. 주체의 문예이론에서는 민족적인 문예의 형식을 혁명적인 소재에서 찾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혁명사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혁명적 문예형식」을 민족 문학예술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있다.⁸⁾

주체의 문예이론의 사회주의적 이념이라는 내용적 요건도 실제로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불멸의 혁명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내용을 깊이있게 구현하고 있다.”⁹⁾ 즉, 사회주의적 이념이라는 것도 결국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놓고 볼 때, “주체의 문예이론이란 김일성의 혁명사상에 대한 철

8) ‘혁명적 문예형식’이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김일성의 지도 아래 창작되었다고 하는 항일혁명 문학예술 즉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의 형식을 지칭한다. 권영민, “북한 문학의 현황과 그 특성,”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서울: 한국문예진흥원, 1990), p. 56.

9)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 p. 74.

저한 신봉을 목표로 하는 문학예술에 있어서의 교조적인 하나의 강령”이라 할 수 있다.¹⁰⁾

(3) 黨性, 勞動階級性, 人民性의 原則

주체의 문예이론은 당성, 노동계급성, 그리고 인민성이라는 세가지 요건의 충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김일성은 문학의 당성을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입니다. 그것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자각이며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노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입니다.”¹¹⁾

위의 교시에서 보듯이 당성은 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정신의 두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서의 당성의 논리는 당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대표자라는 이론적 기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의 노선과 정책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당에 대한 충실성은 곧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한다. 당성은 또한 「혁명정신」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혁명정신이란 물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당성은 크게 보아 네 가지 실천적 원칙에 의해 문학예술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그 네 가지는 첫째,

10) 권영민, “북한 문학의 현황과 그 특성,” p. 63.

11) 「김일성저작집 35」, p. 378.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의 실천을 위한 투쟁, 둘째, 당의 정책적 요구의 반영과 실천, 셋째,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당의 교양기능에 복무, 넷째, 조국통일을 위해 반동적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 등이다.¹²⁾ 요컨대 당성이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주체사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하며, 당의 정책을 잘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성과 함께 북한에서 문학예술의 본질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또 하나는 노동계급성이다. 노동계급성이란 계급사회에는 “착취계급의 이해관계와 계급적 입장을 대변”하는 지배계급의 문학예술과 “피착취계급의 이해관계와 계급적 입장을 반영하여 근로대중에게 복무하는 진보적인 문학예술”이 존재하는데, “노동계급성이란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장 철저히 대변하며, 인민대중을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혁명 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이와 함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역시 계급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완전하고도 철저히 반영하며 온갖 계급적 차이를 완전하게 없애고 노동계급의 세계사적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복무하는 계급적이고 당적인 문학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⁴⁾ 요컨대 노동계급

12)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II」(서울: 고려원, 1989), p. 71.

13)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p. 143.

14) Ibid., p. 144.

성은 노동계급의 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과 적대되는 다른 계급의 문학예술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끝으로 인민성이란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고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으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뜻한다.¹⁵⁾ 이러한 인민성의 높이는 작가·예술인들이 작품을 통해 당대 근로 인민대중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얼마나 심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복무했느냐에 따라 규정된다. 즉, 인민성의 본질은 인민대중에 대한 철두철미한 복무의 정신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에게 복무한다는 것이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과 내용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때, 인민성이란 결국 문학예술을 인민대중의 사상 교양 및 개조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4) 文藝創作方法論

문예의 본질을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문예이론은 이 원칙에 입각하여 문예창작 방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북한 문학예술의 창작방법론은 종자론, 속도전, 그리고 전형화로 대표된다.

종자론은 북한의 문예이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15) 한중모·정성무, 「주체적문예이론의 기본 I」(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130.

용어이다. 북한의 문예이론은 다음 몇가지로 종자의 개념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 예술인들이 말하려는 기본문제와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 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다.
- 작가, 예술인들은 생활에 대한 체험과 연구에 기초하여 그가 해명하려는 근본문제를 형상의 요소들과 유기적 연관 속에서 골라잡아야 한다.
- 소재 선택, 주제 설정, 예술적 창조와 전 과정에 관련된다.
- 소재·주제·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단일한 개념이다.
- 종자에 있어서 기본은 사상에 두어야 한다. 즉 종자는 「사상적 알맹이」인 것이다.
- 종자에 의하여 유기적·전일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 종자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일성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¹⁶⁾

결국 종자란 한마디로 모든 사상체계를 단일화한 북한식 문예학의 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자=김일성주의」임을 볼 때 그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김일성주의의 실천적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자를 바로잡는 것이 북한 문예 창작론의 제일 요건이다.

16) Ibid., pp. 178-87.

사회주의 문학에서 전형이란 개념은 “개별성을 통해서 보편적·사회적 의의를 가진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¹⁷⁾ 따라서 전형이란 결국 일정한 계급·집단의 공통된 본질적 특성이 문학작품 속에서 개별화된 인물에 반영됨으로써 일반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문예의 전형화의 강조는 결국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느냐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 방법론 문제에 귀착된다. 따라서 전형이론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법의 기본 골격을 이룬다 하겠다. 전형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갈등은 전형화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사회계급관계와 계급투쟁의 성격에 맞게 갈등관계를 설정한다.
- 자본주의 사회를 작품화할 때는 계급투쟁을 심각하고 첨예하게 표현한다.
- 사회주의 사회를 작품화할 때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협조관계를 보여 주어야 한다.
- 비타협적 투쟁으로 긍정 인물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사회주의 사회를 작품화할 때는 부정적인 인물은 결국 교양·개조되는 인간으로 그려야 한다.
- 사회주의 우월성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에서는 갈등을

17) 유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II」, op. cit., p. 82.

설정해서는 안된다.¹⁸⁾

이상과 같은 전형이론의 핵심을 통해서 볼 때, 전형화의 문제가 단순한 창작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간학」으로서 북한 문예이론의 중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형의 대표적인 존재는 김일성, 김정일이며 김부자가 제시한 주체사상을 성실하게 추구하는 전형이 가장 필요한 전형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주체의 문예이론에서 속도전이란 창작의 빠른 속도와 함께 작품의 높은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앞서 종자론이란 결국 「사상적 알맹이를 붙잡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속도전의 핵심은 그러한 종자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이다. 북한은 속도전의 성격을 “사상분야에서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을 벌여 문화예술부문 일군들의 사상의식을 좀먹고 속도전을 방해하는 사상적 잡귀신들을 극복해 나감으로써만 창작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문화예술창작에서 최단기간 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것”으로 합리화하고 있다.¹⁹⁾

속도전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북한의 문예이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문학예술 창작에서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사색을 중단

18)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 op. cit., pp. 195-208.

19) Ibid., p. 230.

하지 않고 집중시키며 창작적 열정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만 사상미학적 의도를 제때에 관철하여 훌륭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 속도전은 작가, 예술인들의 자각성과 책임성을 높여 창작에 모든 사색과 열정, 온갖 지혜와 재능을 쏟아붓게 함으로써 비상이 빠른 창작속도와 함께 작품의 높은 질을 보장하게 한다.
- 속도전은 창조과정을 통해서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촉진시키고 그들의 정치사상적 수준을 높이게 함으로써 창작의 바른 속도와 함께 작품의 높은 질을 보장하게 한다.²⁰⁾

주체의 문학이론에서 이러한 속도전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과 당이 제시하는 노선과 정책을 빠른 속도로 문예작품에 반영함으로써 근로대중의 사상의식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속도전은 실제의 창작에 임함에 있어서 개인의 창조적 역량보다는 조직을 통한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을 조직화·집체화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속도전의 성과사례로 소위 기념비적 대작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40일만에 창작한 백두산 창작단의 일습씨나, 가극예술 발전에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 「피바다」식 혁명가극을 불과 2년만에 5편이나 창조

20) Ibid., pp. 629-36.

해낸 것 등을 꼽는다.

결론적으로 종자론, 속도전, 전형화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문예 창작법은 결국 문학예술의 창작과정을 통해 김일성의 교시를 관철하려는 사상사업의 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종자론, 전형화, 속도전 이외의 북한의 주요 문예이론 및 창작방법론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 통속예술론이다. 즉,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제한된 사람들이나 전문가를 위한 문화예술이 아니라 노동계급 등 인민대중을 위한 문화예술이다.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통속적으로 되어야 그들의 영원과 투쟁이 옹기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바다」식 가극은 절가화 방침에 기초하여 가극음악을 통속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인민적 가극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군중예술론이다. 즉, 문예작품 창조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군중 또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창조적 재능보다는 집단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자는 의미로 오늘날 북한에서 독창, 독주보다는 중창, 합창 등이 중시되고 개인의 창작보다는 집체작이 강조되고, 종합예술인 영화가 개인의 시, 소설보다 우수한 예술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 공산주의 인간학을 들 수 있다. 김일성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해 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를 예술작품에서 묘사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공산주의

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의 중심 주인공들인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견결한 혁명투사인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 가장 고상한 인도주의자로 묘사되고 있다.

넷째, 반추상주의이다. 북한의 예술론에서 가장 극렬하게 경계와 증오의 대상이 되는 문예이론상의 문제의 하나가 추상적 경향이다. 북한은 예술에서의 추상성을 언어의 유희를 일삼으면서 인간의 현상을 기형화하고 불구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오직 묘사대상을 「현실과 구체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이론은 오직 혁명과 건설로 매진해야 할 주민들에게는 다만 김일성주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묘사만 필요하다는 주장아래 제기됐다.

(5) 主體文學論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라는 1990년대라는 변화된 현실을 맞이하여 주체사상의 강화를 통해 체제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김정일은 90년대 들어 문화정책의 새방향을 제시하는 많은 문건들을 잇달아 발간하고 있다.²¹⁾ 이중 가장 주목을 요하는 문건은 「주체문학론」이다. 김정일은 「주체문학론」을 통해 북한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1) 예를 들면 「무용예술론」(1992. 5), 「미술론」(1992. 6), 「음악예술론」(1992. 6),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1992) 등이 있다.

「주체문학론」은 “새 시대는 주체의 문예관을 요구한다”에서 출발한다. 즉, 90년대라는 상황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과 방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주체문학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은 자주성이다. “나라와 운명의 문제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의해 민족 스스로의 올바른 삶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²⁾

「주체문학론」은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길로 수령-당-인민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루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한다. 뇌수에 해당하는 수령과 중추조직에 해당하는 당, 그리고 행동부대인 인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학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²³⁾ 결국 북한은 90년대의 위기적 상황을 자주성의 실현을 통해 넘고자 하며, 그 자주성의 실현을 수령의 형상화에서 찾고 있다.

「주체문학론」은 새 시대에 필요한 미학적 방법으로 「주체사실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를 문학예술창작에 구현하는 과정에 형성된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창작방법이다. 주체사

22)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4.

23) Ibid., p. 126; 문화발전연구소,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서울: 문화발전연구소, 1993. 9), pp. 48-51 참조.

실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주체사실주의와 선행한 사실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을 어떤 견지에서 보고 그리는가 하는데 있다.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는 주로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화로 보고 그리었다면 주체사실주의에서는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보고 그린다. 관점상의 이러한 차이로 하여 인간을 보고 그리는 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²⁴⁾

즉, 북한의 문학예술은 자주성을 인간 파악의 기본 척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아닌 주체사실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체사실주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민족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서도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이라는 명제가 강조되고 있지만, 주체사실주의에서는 이 민족적 형식이라는 명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90년대 들어 북한이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주체문학론」에서 말하는 민족적 형식이란 단지 「우리의 것」의 현대화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것이 인민들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당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기능적 의미의 강조이다.²⁵⁾

결론적으로 북한은 90년대 들어 주체사상의 강화를 통해

24) 김정일, 「주체문학론」, op. cit., p. 100.

25) 문화발전연구소,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p. 56.

변화된 국제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문예 창작 지침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주체사실주의로 대체 하였으며, 문예창작에서 인간의 자주성과 수령의 형상의 전형화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고 정당함을 인민대중에게 선전하고 있다.

나.北韓文學의 史的展開

해방 이후 북한의 문학 변천과정은 크게 혼란기(1945. 8 - 1953. 7), 진행기(1953. 7 - 1967), 그리고 확정기(1967 - 현재)의 세 시기로 진행되었다.²⁶⁾ 혼란기의 문학은 다시 「평화적 건설시기」의 문학(1945. 8 - 1950. 6)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문학(1950. 6 - 1953. 7)으로 나뉘어지며, 진행기의 문학은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시기」 문학(1953. 7 - 1960)과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시기」 문학(1961 - 1967)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북한에서의 문학예술이 북한사회의 내부변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1) 混亂期의 文學

해방이 되자 서울에서는 카프 출신 작가들에 의해 「조선문학건설중앙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주요 인물로는 립화를

26)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II」, op. cit., p. 141.

중심으로 리기영, 한설야, 리원조, 리태준, 송영 등이었으나, 자체 내분으로 한설야, 리기영 등은 「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이라는 조직을 새로이 결성하였다. 그러나 립화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박헌영의 지지에 힘입어 주도권을 잡게 되었으며, 1945년 12월에는 「조선문학동맹」을 발족시켜 좌익계 문단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였다. 「조선문학동맹」은 1946년 2월 대규모의 「조선문학자대회」를 개최하여 세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46년 5월 소위 「정판사 위폐사건」으로 남로당이 불법화되고 박헌영 등 남로당 간부들이 지하에 잠적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조선문학가동맹」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문학가들이 월북하게 되었다. 이때 월북한 주요 문인들로는 립화, 한설야, 리기영, 리태준, 리원조, 립학수, 송영 등이 있다.

같은 시기 평양에서는 좌익 예술단체로 「평남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결성되었으며 고일환, 한재덕 등이 중심이 되어 활약하였다. 「평남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은 김일성의 후원으로 1946년 3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산하단체로 「문학가동맹」 등 7개 분과를 두었으며 총동맹의 위원장은 리기영, 부위원장은 안막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해방 이후의 문학은 카프 계열의 문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문단은 리기영, 한설야 등과 립화계열 문인들과의 치열한 문단 주도권 다툼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6·25전쟁이 끝

난후 표면화 되었다.

1947년 9월 조선노동당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사업을 검열하고 문학에 관한 당의 방침을 설정하였다. 즉, 1947년 9월에야 비로소 당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북한에서의 유일한 문학관으로 제창하였다.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는 인간의 의지를 개조하는 기사다. 둘째, 문학의 교양적 역할 강조, 세째, 문학은 과거제도의 부패성을 폭로할 것, 네째, 현실에 기초하여 현실을 예술화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유일한 창작방법임 등이다.²⁷⁾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해방 직후의 북한문학은 아직 혼란기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사회주의 문학관이 뿌리 내리지 못하였다 하겠다.

해방 직후의 북한문학은 그 소재나 주제에서 김일성 찬양, 사회제도의 변화찬양, 노동의 중요성 찬양, 조·소 친선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²⁸⁾ 이 시기의 북한문학의 대표작을 살펴보면 리기영의 소설 「땅」(1947)을 들 수 있다. 「땅」의 주제는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의 정당성과 변화된 사회체제에 관한 것이다. 즉, 북한문학의 계급적 사상과 투쟁성을 잘 드러내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토지개혁을 주제로 다룬 소설로는 한설야의 「마을사람들」(1946), 황건의 「산곡」(1947)을 들

27) 「조선문학통사」, p. 193내용을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II」, pp. 156-57에서 재인용.

28)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II」, op. cit., p. 186.

수 있으며, 노동과 노동계급을 찬양한 작품으로는 황건의 「탄맥」, 한설야의 「탄갱촌」, 리복명의 「노동일가」 등이 있다. 한설야는 「혈로」, 「개선」 등을 통해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을 다루고 있다. 조기천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은 보천보전투를 소재로 김일성의 절대성을 그리고 있다.²⁹⁾

6·25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195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반종파투쟁의 문제가 제기되어 남로당계의 박헌영, 리승엽등의 숙청이 이루어졌으며, 곧이어 립화, 리태준 등의 카프계열 문인들의 숙청이 뒤따랐다. 이들 카프계열 문인들은 그들의 작품에 극단주의적 개인사상, 부르조아의 타락과 색정주의, 패배주의 등이 들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문단에서 자취를 감췄다.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북한문학은 첫째, 사상성의 강화를 통한 문학의 체제선전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둘째, 애국심, 투쟁성, 민족적 자부심 등을 강조하여 전투의식을 고취하였다. 이 시기 소설의 특성은 종군작가들에 의한 실화문학이 많이 나타났으며, 정론이 새롭게 나타나 문학의 장르에 편입되었다.³⁰⁾ 이 시기 실화문학으로 대표적인 것은 황건의 「암흑의 밤은 밝았다」(1950), 리동규의

29) Ibid., pp. 174-80.

30) 정론이란 사회정치적인 문제, 위대한 역사적 사변들을 예술적인 형식으로 쓴 필자의 주장이 명백하고 선동성과 호소성이 강한 글을 말한다. 「문학예술사전」. p. 621.

「해방된 서울」(1950) 등이며, 정론으로는 백인준의 「아이젠 하워의 발작」 등이 있다.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인민군의 전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늘어났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황건의 「불타는 섬」(1952), 천세봉의 「고향의 아들」(1952)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소설문학의 주제의 하나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다. 한설야의 「승냥이」(1951), 리북명의 「악마」(1951) 등이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시문학의 경우도 소설과 같은 주제에 의해 작품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특히 백인준의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 김상오의 「증오의 불길로써」 등은 극단적 배미감정을 표출하고 있으며, 백인준은 「크나큰 그 이름 불러」를 통해 김일성의 40회 생일을 찬양하고 있는 등 당시의 문학의 경향은 극단적이며 절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2) 進行期の文學

전후 북한은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파 등의 숙청을 통해 김일성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천리마 운동」 등 인민 경제복구발전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열린 「전국작가예술가대회」(1953. 9)는 처음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방법으로서의 「전형화」의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전형화를 위하여 작가들이 근로인민들의 생활과 사업 속으로 들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반동적 문학조류를 청산하고 항일혁명

문학의 유산을 계승하는 문제, 도식성과 무갈등주의를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고전과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한편 작가들의 사상 개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북한 문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당성, 인민성, 계급성이 이때 처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³¹⁾

이러한 「기초건설 시기」의 문학적 특징은 첫째, 김일성의 지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그를 찬양하는 작품들이 대거 출현하였으며, 둘째,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 셋째, 전후복구 건설을 주제로 한 작품, 넷째,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이 등장하였다는 점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문학에는 김복원의 「춘경 이야기」 등 농업의 협동화를 찬양하는 작품, 노동의 현장을 노래한 안용만의 「당의 부름을 들으며」, 민병균의 「조선의 노래」 등 장편의 서사시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조벽암의 「광장에서」, 원종소의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 등이 발표되었다. 소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동자들의 노력투쟁을 표현한 윤세중의 「시련속에서」(1957), 리북명의 「새날」(1954) 등과, 김일성을 찬양한 리기영의 「두만강」, 송영의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 등이 있다.

1960년대 「전면적 건설 시기」의 문학은 「기초건설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 시기의 문학작품은 전 시기에 비

31)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II」, p. 247.

해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시문학의 경우 박세영의 「밀림의 역사」와 같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장편 서사시들이 발표되었으며, 천리마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주조를 이룬다. 소설에서도 장편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 시기의 소설들도 역시 천리마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많았으며 조국해방전쟁과 항일문학투쟁을 그린 작품이 주조를 이루었다. 김홍무의 「회답」, 현희균의 「청춘의 고향」, 석윤기의 「시대의 탄생」, 정창윤의 「포성」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³²⁾

(3) 確定期의 文學

북한의 문학은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는 1967년을 기점으로 구분된다. 1967년 이전이 맑스-레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면, 그후의 문학은 주체문학에 닿아 있다. 또한 1967년 이전까지는 카프문학이 핵심적인 전통으로 받아들여진 반면, 그후에는 항일혁명문학이 유일한 혁명적 전통으로 자리잡게 된다.³³⁾ 즉, 주체의 문학이 북한문학 전체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이루어진 북한문학의 주요 변화는 첫째,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중심으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졌지만 4·15 창작단에 의한 집체작 「불멸의 력사」총서가 이를 대표한다. 즉, 이 시기에 와서 집체창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32) Ibid., pp. 279-89.

33)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p. 125.

되었다. 둘째, 이 시기의 북한문학에 일어난 변화는 과거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창작된 항일혁명문학을 새롭게 개작하는 작업이다.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을 영화, 소설로 옮기는 작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작업이 진행되었다. 셋째, 이 시기에 이르러 문예분야에서 김정일의 활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4·15 창작단 등 여러 창작단을 조직하여 당시 북한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였다.³⁴⁾

이 시기 북한 시문학의 특징은 김일성에 대한 찬양의 시와 함께 전에 없었던 김정일 찬양, 김일성가계 찬양의 시들이 많이 집필되었으며, 또한 많은 시들이 작곡되어 노래로 불려졌다. 집체작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등 김일성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는 시,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대등하게 찬양하는 김철의 「백두의 새날」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소설로는 앞서 언급한 「불멸의 력사」총서 이외에 김일성일가의 혁명적 전통을 강조하는 작품들, 특히 김정일을 찬양하는 작품이 발표되었다.³⁵⁾

다.北韓文學의 最近傾向

1980년대 들어 북한문학은 이전의 주체문학에서 볼 수 없

34) Ibid., p. 161.

35) 김정일을 찬양하는 작품으로는 이종렬의 ‘고요’, 석윤기의 ‘기억’ 등이 있다.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II」, p. 314 참조.

는 새로운 점들을 보여 주고 있다. 1980년 1월에 열린 「제3차 조선작가동맹회의」에서 김정일은 1980년대 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숨은 영웅을 찾아내어 그들의 품모와 정신세계를 형상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투쟁을 추동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주의와 도식주의를 극복하여 사상 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등이다. 즉, 문학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듯 하다.

예를 들면 백남룡의 「벗」, 김규엽의 「새봄」, 고병삼의 「대지의 아침」과 같은 1980년대 주요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숨은 영웅에 해당하는 보통 인물들이다. 이는 60년대 이후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대사건을 움직이는 주체형의 영웅적 주인공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80년대 북한 소설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북한사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절실하고 의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³⁶⁾ 즉, 1980년대 북한소설들은 실제 일반 사람들이 현실생활에서 느끼고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소설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로 빚어지는 갈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김동욱의 「병사의 고향」, 김삼복의 「세대」, 「향토」, 조의철의 「정든 고향」 등이 대표 작품들이

36) 김제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op. cit., p. 263.

다. 둘째, 세대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백남룡의 「60년 후」, 「세대」, 「나의 동무들」 등에서 참여한 세대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셋째, 여성문제이다. 김교섭의 「생활의 언덕」은 북한 인텔리 여성이 결혼후 남편과 자식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습관적으로 살다가 창조적인 삶을 잃어간다는 절실한 문제를 제기한다.³⁷⁾ 이렇게 북한사회의 내부적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 1980년대 북한소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술적 기량의 성숙이다. 즉, 인간의 미묘한 내면심리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고 세밀한 예술적 표현능력이 요구되었으며, 이와 함께 1인칭 시점의 활용 등 다양한 소설 창작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문학의 흐름은 과거로 회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의 북한문학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령의 형상화」이다. 특기할 것은 김정일의 형상화이다. 이미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의 「불멸의 력사」를 본뜬 「불멸의 향도」라는 김정일을 형상화하는 총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김정일의 승계가 문학 쪽에서 일찍부터 준비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된 주제이다. 작품과 평론을 통해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와 美 제국주의자와의 투쟁 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셋째, 조국통일의 주제이다. 전통

37) Ibid., pp. 263-71.

적으로 조국통일 주제의 소설은 으레 남한의 현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사람들이 겪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문학의 변화는 결국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북한의 고립 및 체제유지의 중요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겠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주체사상과 길항관계를 이루던 맑스-레닌주의를 지워내고 오로지 주체사상의 원리만으로 사회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변화된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1992. 1)과 1992년 4월의 헌법개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1990년대의 변화된 국제상황을 북한은 주체사상의 강화라는 방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겠다.³⁸⁾ 이에 따라 1990년대의 북한문학은 기본적으로 변화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당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北韓美術의 現況 및 主要 흐름

가. 北韓美術의 概觀

북한에서 미술은 “조형적 언어를 가지고 현실을 사상 미학적으로 파악하며 시각적 구체성, 직관적 명료성을 특징으로

38) 문화발전연구소,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op. cit., p. 44.

하는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의 사상 정서교양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³⁹⁾ 따라서 북한이 지향하는 미술의 세계는 목적 의식과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강조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북한에 있어 예술의 사회적·정치적 기능의 중요도는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이바지라는데서 뚜렷이 표현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다.⁴⁰⁾

북한미술을 분석·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미술이 지향하는 미술의 세계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술은 분명 우리가 미술이라고 했을때 관행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학적 특성들인 추상, 유희주의, 예술지상주의 등을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김일성은 교시를 통해 추상화를 “썩어빠진 부르조아적 사상조류”로 인식하여 “우리나라 미술계에 밀려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투쟁”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⁴¹⁾

그러나 북한이 지향하는 미술의 세계가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 미적 정서 등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9) 「문학예술사전」, p. 377.

40)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op. cit., p. 141.

41) 김일성,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pp. 5-6. 유희준, “북한 미술의 사적전개와 그 이해,” 「북한의 예술」(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6에서 재인용.

다만 아름다움이라는 관념을 우리와 달리 해석하고 있다 하겠다. 즉, 북한에서는 “참다운 미감은 오직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에게만 있을 수 있다”고 보며 착취계급의 미감은 퇴폐적이며 기형화된 것임을 강조한다.⁴²⁾ 이러한 북한의 미적 관점에서 볼 때, 인민대중이 그림을 보고도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추상화는 예술작품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김일성의 교시는 이해 가능하다. 즉, 인민대중이 정서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주의 미술을 창작해야 하고, 당과 혁명의 이익에 복무하는 인민적인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담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앞의 교시에서 조선화를 “오랜 세월을 두고 조선 인민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반영하고 창조적 재능에 의하여 창조발전된 전통적인 민족회화”라고 역설하여 여러 미술유형 중에서 가장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⁴³⁾ 조선화가 북한미술에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이유는 조선화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장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조선화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인간 성격 창조」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인간 성격 창조란 사회주의 건설이나 혁명적인 인간상, 그리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충실한 인민대중이나 김일성의 모습에 대한 재창조를 뜻한

42) Ibid., pp. 5-6.

43) 이일·서성록, 「북한의 미술」(서울: 고려원, 1989), p. 122.

다. 즉 주체의 미술이다.

북한의 문예이론에 의하면 주체미술이란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미술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미술이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이론적 및 방법론적기초로 삼게됨으로써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결과이다. 즉, 주체미술이란 주체사상의 요구에 답하여 이루어진 미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미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혁명적사명으로 한다”고 말한다.⁴⁴⁾

「주체미술의 대전성기」에 의하면 주체미술의 시원은 항일 무장기부터 뿌리를 두고 60년대 조선화의 성과와 70년대 김정일의 지도아래 완성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지도 중에서 “미술부문에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창작 지도체계를 세워야겠습니다”라는 명제를 통해 당의 지도, 집체적 심의, 그리고 주체적인 창작방법 등이 도출되었다고 한다.⁴⁵⁾ 한마디로 주체미술은 소위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적 미술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 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이라고 주장되며,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화는 수묵화나 담채화로서의 조선화가 아니라

44)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 p. 564.

45) 홍의정, 「주체미술의 대전성기」(평양: 조선미술출판사, 1987), p. 17.

객관적 현실감이 있는 선명하고 간결한 화법의 채색화를 말한다. 즉, 조선화는 묘사의 생동성과 형상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표현기법을 강조한다. 따라서 내면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전통적인 산수화나 사군자 등보다는 혁명의 전통을 내용으로 한 작품,⁴⁶⁾ 김일성 우상작품,⁴⁷⁾ 노동자나 농민의 작업 광경을 그린 작품,⁴⁸⁾ 조국 산하의 아름다움을 그린 작품⁴⁹⁾ 등이 조선화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조선화와 함께 북한미술에서는 출판화를 독특한 기능과 고유한 특성을 가진 미술의 한 장르로 중요시하고 있다. 출판화는 출판된 모든 그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화, 수채화, 정치만화, 삽화, 포스터 등을 포함한다. 특히 북한에서 포스터는 그것이 지닌 대중성과 선전성 때문에 미술의 독립된 중요한 장르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미술은 이례적으로 무대미

46) 조선인민군 대원들의 정신세계를 형상화한 김영호의 ‘사향가’, 해방 직후 헤어졌던 어린자식들과 눈물 속에서 상봉하는 한 여성 혁명가를 그린 양문봉의 ‘해방된 조국에서’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47) 혁명가의 유자녀들과 어울려 이들의 씨름놀이를 지켜보는 김일성을 형상화한 이문길의 ‘유자녀들의 친부모가 되어’, 대동강의 배위에서 새로운 평양을 건설중인 김일성을 주제로 한 홍성철의 ‘오늘의 평양을 구상하시어’ 등이 대표작으로 꼽히며, 김일성 형상화는 조선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48) 여름철 폭우를 뚫고 나무기둥과 밧줄을 들고 달려오는 청년을 형상화한 김영철의 ‘폭우를 뚫고’, 소작농민이 토지개혁 덕분에 얻게된 자기 땅의 경계표지를 안고 감격하는 김행식의 ‘장군님께서 주신 땅’ 등이 대표작이라 하겠다.

49) 1993년 10월 코리아통일미술전에 출판된 황영호의 ‘구룡폭포’, 선우영의 ‘채하봉’, 정영만의 ‘금강산’ 등을 들 수 있다.

술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 혁명가극의 출현 이후 무대미술 부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북한미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집체창작의 대형벽화, 걸개그림, 조각 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작품들을 「기념비 미술」이라 하는데 이 대형 작품들은 선전 선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념비 미술 중에는 대기념비들과 김일성동상, 그리고 대형벽화 등이 있다. 또 집단체조의 배경무대 미술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北韓美術의 史的展開

(1) 民主建設時期

이 시기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성립시기이다. 1947년 3월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29차 회의는 사회주의 이념의 예술적 실천을 목표로 “북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문화 건설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문화예술은 조국과 인민에 봉사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에서 민족문화는 사회주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건설 과정을 소재로 하는 작품, 김일성의 초상화와 업적을 찬양하는 작품, 농민을 주제로 한 작품, 인민군에 대한 형상과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 등이 당시 작품들의 주종을

이루었다. 1947년 9월에는 평양 국립 미술학교(후에 평양 미술대학)가 설립되었다.

한편 북한미술계는 월북 미술가들인 김주경, 조규봉, 길진섭 등과 북한화단을 주도하던 선우담, 정관철 등이 주축이 되어 1947년에 제1회 북조선 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부터 사회주의혁명 찬양과 김일성을 부각시킨 그림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들은 「북조선미술동맹」을 조직하여 「미술을 인민의 것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맹원 미술가들을 공장, 광산, 농어촌 현장에 보내어 근로인민들의 투쟁상을 주제로 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2) 祖國解放戰爭時期

6·25전쟁 기간 중 북한미술인의 활동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기치아래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인민성을 강조하는 회화·조각·포스터·만화 등의 제작에 집중되었다. 1952년 7월 개최되었다는 「조선해방전쟁미술전람회」에는 전쟁을 소재로 한 많은 작품이 전시되었다. 선우담의 「돌다리 전투」, 문학수의 「영웅 조옥희」, 김용준의 「침략자의 만행」 등이 이 시기의 대표작이라 하겠다.

(3) 戰後復舊와 社會主義 基礎建設時期

이 시기는 사상적으로 북한에서 주체의 논의가 처음 나오고 천리마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인민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데 창작의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1954년 김일성은 앞서 언급한 교시를 통해 조선화를 시대에 맞춰 발전시키고 모든 미술 종류는 조선화를 중심으로 유기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한다. 이에 따라 조선화가의 활동이 폭넓게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종전의 유화가가 조선화에 손대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 시기의 미술의 경향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에 대한 영웅적 묘사가 활발하였다.⁵⁰⁾ 둘째, 노동당의 혁명전통을 다룬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였다.⁵¹⁾ 셋째,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는 근로자의 일상을 담은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⁵²⁾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행복을 누리는 소재의 작품들이 등장하였다.⁵³⁾

1950년대 북한미술계의 특기할만한 사항은 평양미술대학 등에서 신진 미술가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여 이들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치아래 새롭게 창작투쟁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미술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미

50) 대표작으로 ‘전선을 시찰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작가미상), ‘전쟁이 끝난 강선 땅에서’(작가미상), 문학수의 ‘평양시 복구건설을 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 등이 있다.

51) 정종여의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 ‘붉은 넥타이’(작가미상), ‘조국을 위하여’(작가미상) 등이 있다.

52) 대표작으로 ‘영웅 최영근, 고향에 돌아오다’(작가미상), ‘아버지의 후회’(작가미상) 등이 있다.

53) ‘5월의 농촌’(작가미상), 김체작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들고 지상낙원을 이루자’ 등이 대표작이다.

술소조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며, 많은 국제 교류전에 참가하게 된다.⁵⁴⁾

(4) 千里馬時期

1960년 11월 27일 김일성은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라는 연설에서 문예활동의 당면문제를 비판, 이를 계기로 문예활동의 조직이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재정비되고, 이를 통해 북한미술은 큰 변모를 보게 되었다.

혁명적 대작주의라 부르는 집체창작이 크게 일어나고 조선화 개념이 확립되어 전통적 수묵화의 기법·재료적 한계를 극복하고 채색화와의 결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명확하게 들어나는 이 시기 조선화의 특징은 서구 사실주의 미술의 치밀한 묘사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전체적으로 화면이 밝고 경쾌하게 변한 점, 그리고 먹선이 거의 완전히 배제되고 색채를 다양하게 구사하여 여백을 없앴점 등이다.⁵⁵⁾ 이와 같은 창작 기법상에서의 일대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있던 덕택에 천리마시대 미술의 가장 큰 성과는 조선화 분야에서 나오게 된다.

천리마시대의 작품경향과 대표작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에 대한 영웅적 묘사를 소재로 한 유화 「조국」, 「진격의

54) 유흥준, “북한미술의 사적전개와 그 이해,” pp. 26-27.

55) 이영욱·최석태, “주체 미술의 개념과 실제,” p. 64.

길목에서」는 미술 창작의 모범이라는 찬사를 받은 작품들이며, 둘째, 조국 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조선화인 리창의 「락동강 할아버지」, 김의관의 「남강마을의 여성들」 등이 있으며, 셋째, 사회주의 건설을 주제로 한 조선화인 최계근의 「강철의 전사들」, 「눈내리는 밤」, 리석호의 「소나무」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1963년의 「공화국 창건 15주년기념 국가미술전람회」 등을 통해 널리 선전되었다.⁵⁶⁾ 이와 함께 조각분야에서는 1961년 집체창작으로 「천리마동상」⁵⁷⁾이 제작되었으며 판화와 포스터분야의 발전도 주목할 만하다.

(5) 社會主義 建設時期

1970년 제 5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의 이념전통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규정하여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던 주체사상의 고취는 이 시기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된다. 아울러 1972년 북한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등 3대 혁명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에 들어 북한은 미술에서 주체의 면모를 확립하게 된다. 이 시기는 주체미술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미술가들의 사상의식, 즉 주체의 혁명관과 세계관, 기량, 탐구정신을 키우기 위해 당은 전국적으로 미술소조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56) 이구열, “북한의 미술, 그 체제종속의 실상,”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p. 206.

57) 천리마동상은 총 높이 50.2m, 동상만 16m이다.

미술 발전을 대중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젊은 주체미술가들을 양성하였다.

주체미술이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창조되고 발전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 미술이다.”⁵⁸⁾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주체미술은 수령형상의 창조와 주체의 다양한 확대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수령의 품성을 미술작품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존경심을 일으키자는 의도이다. 물론 70년대 이전에도 수령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전의 수령 형상이 역사적 사실 속의 한 인물로 형상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면 이 시기 이후의 수령의 형상은 보다 현실적이며 인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을 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면모는 우선 혁명적 대기념비 미술이라고 불리우는 조각작품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념비로서 대표적인 것은 1972년 김일성의 60회 생일을 기념하여 건립된 「만수대기념비」이다.⁵⁹⁾ 이와 함께 조선화인 리상문과 김정태의 공동작인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신영기의 「수령님 이 밤도 어데 가시옵니까」 등을 대표작으로 들 수 있다.

주체의 다양성은 이 시기의 미술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즉, 주체미술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생활에 대한 주제를 개

58) 홍의정, 「주체미술의 대전성기」, p. 11.

59) 만수대 기념비는 김일성의 동상을 중심으로 2개의 군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동상의 높이는 20m나 되며 총 219개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하여 현실의 혁명적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인간과 그의 생활을 다양하고 새롭게 표현하고 있다. 즉,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 혁명, 조국해방전쟁, 남조선 혁명 등의 주제에서 일관되게 자주성의 문제, 자주적 인간의 문제, 새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간 전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⁶⁰⁾

1970년대 북한미술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시기부터 북한이 주체미술의 성과가 김일성의 「독창적 지침」과 함께 김정일의 천재적 민족미술 건설방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선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⁶¹⁾ 이러한 김정일 지도의 주체 미술 성과론은 80년대에 가서 주류를 이루게 된다.

다.北韓美術의 最近傾向

1982년 4월 15일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하여 평양중심부와 모란봉 기슭에 김정일이 지도하였다는 높이 170m의 「주체사상탑」과 높이 60m, 폭 52.5m 규모의 「개선문」이 건립되었다. 이는 1972년 건립된 「만수대기념비」와 함께 김일성 위상화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1982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돌 경축이라는 부제의 「국가미술전람회」도 대대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전람회는 그동안 다른 전람회에서 이미 발표되고 정치적으로 널리 선전된 김일성 주

60) 이영옥·최석태, “주체 미술의 개념과 실제,” p. 71.

61) 이구열, “북한의 미술, 그 체제종속의 실상,” p. 208.

체의 작품들과 새로운 층성의 작품들을 총망라한 특별 기획전 형식으로 열리었다. 이 특별전은 김일성 중심의 혁명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연대별로 전시되어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교양의 전당이 되었다”고 한다.⁶²⁾

1985년에는 「조선해방 40돛과 조선노동당창건 40돛기념 국가미술전람회」가 열렸다. 이 전람회에는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미술작품」 18점을 비롯하여 조선화·유화·출판화·서예·조각 등 총 천여 점이 전시되었다. 이 전람회의 성과에 대해 1986년판 「조선미술연감」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밝혀주신 미술분야에서의 주제를 더욱 확대하여 현실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보여줄데 대한 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의 영도 밑에 해방후 40년간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싸워온 인민의 보람찬 투쟁모습과 다양한 생활 내용을 폭넓게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⁶³⁾

한편 이 전람회의 출품작은 김일성의 영웅적 면모를 형상화한 것, 조국해방과 당 창건 당시를 주제로 한 것, 국제주의적 친선을 주제로 한 것, 해외공민들의 애국투쟁을 주제로 한 것, 인민의 행복한 삶을 주제로 한 것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각 분야별 출품작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선화에서는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 화법에 근거하여 부드럽고 연하면서 명료한 색채적 특징과 대담한 필치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유

62) 「조선미술」(1982. 8)에 게재된 조인규의 논평. Ibid., p. 214에서 재인용.

63) Ibid., pp. 217-18.

화에서는 인민의 정서에 맞게 그 기법을 발전시킨 흔적이 두드러지며, 출판화는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판화는 기법들이 세련된 것이 특징이다. 조각의 경우 작품의 주제적 특성과 인간 성격창조에 맞는 대담한 구조와 섬세한 조각기법, 독특한 색채수법을 여러모로 시도했다.⁶⁴⁾

1989년은 세계청년학생축전 제13차 대회가 7월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던 해이다. 이 축전을 기념하여 국가미술전람회는 「조선청년들의 기상」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전국청소년미술전람회는 「조선은 하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또한 축전행사의 하나로 최계근 등 34명의 화가가 집체작으로 제작한 대형 4부작의 조선화 「국제평화대행진」이 선보였다. 이는 백두산-판문점간의 평화행진을 주제로 삼은 각각 3×10m의 네 그림을 연결시킨 작품이다. 북한은 이 그림에 전대협 대표로 북한에 밀입국하여 그 행진에 참가한 임수경을 주요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1993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코리아통일미술전」에는 남북한의 미술가, 그리고 일본 조총련소속 미술가들이 각각 30여점의 미술작품을 전시하였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나타난 북한미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측의 출품작 32점중 조선화가 18점을 차지하여 북한미술에서 조선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화가들의 전언에 의하면 실

64) 유홍준, “북한미술의 사적전개와 그 이해,” *op. cit.*, p. 39.

제로 작가의 7할 이상이 조선화 전공이며, 조선화의 발전을 위해 조선 참지와 물감의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반대로 유화의 경우 기법자체도 단순하고 유화 물감 자체의 개발이 미흡함이 두드러졌다. 셋째, 예술가에 대한 우대정책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전업작가들은 국가로부터 주택과 작업실을 별도로 제공받으며, 개인 작품을 국가가 구매할 경우 따로 작품값을 받는다는 것이다. 넷째, 통일을 강조한 그림들은 집체작이 단연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작품을 여럿이 어떻게 분담하여 그리는지 등 집체 제작의 과정은 분명치 않다. 즉, 집체작 제작의 경우 화가들이 스스로의 개성이나 기법의 차이를 없애고 이를 통일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선전화·포스터·판화 등의 출판화의 경우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영화적 기교의 접근법과 문자 디자인의 과장법을 즐겨 사용함이 주목된다.⁶⁵⁾

결국 「코리아통일미술전」은 출품작을 통해 북한미술이 주체사상 아래 민족적 형식을 정립해 나가면서 사회주의적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북쪽 그림다운 양식의 공통성”을 갖고 있음을 실제로 확인하는 자리였다.⁶⁶⁾

65) 원동석, “코리아통일미술전에서 본 남북미술의 성향,” 『민족예술』(1994), pp. 115-17.

66) Ibid., p. 115.

3. 北韓公演藝術의 現況 및 主要 흐름

북한에서의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의 각 장르는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물론 각 장르의 독자적 활동도 있지만 그러한 독자적 활동보다는 종합화되어 무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연예술의 새로운 장르가 형성되어 빈번히 공연되기도 한다. 즉, 음악무용 서사시극, 무용극, 음악무용이야기, 음악무용서사시 등이 그 예이다.⁶⁷⁾ 그러므로 북한 공연예술의 각 장르는 분리되어 고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북한의 음악·연극·무용·가극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北韓音樂의 現況 및 主要 흐름

(1) 北韓音樂의 概觀

북한에서는 음악을 “소리를 형상수단으로 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예술의 한가지”라고 정의한다.⁶⁸⁾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현실을 소리으로써 묘사하고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란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과 인간이 창조한 자연,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자신을 모두 포함하는 개

67) 예를 들면 음악무용이야기란 새로운 詩·歌·舞의 통합인 무대종합예술을 말하며, 음악무용서사시란 음악과 무용을 기본으로 하고 전통적인 설화시, 영화화면, 흐름식 입체 무대미술 등을 배합한 것이다.

68) 「현대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843. 노동은·송방송, “북한 음악의 이해,” 「북한의 예술」, op. cit., p. 92에서 재인용.

념이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성을 표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⁶⁹⁾ 즉, 북한의 음악은 주체철학적 관점에서 이론화되고 개념화되어 있다.

북한의 음악은 선율을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음악적 표현의 기본 수단으로 선율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연히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음악이 강조된다. 김일성은 교시를 통해 “우리의 음악은 반드시 조선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아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⁷⁰⁾ 주체사상적 관점에서도 민족음악의 발전은 북한음악 전체의 실천적 과제이기도 하다. 즉, “민족음악을 위주로 발전시키는 것은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한 당의 방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¹⁾ 음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근본이 바로 민족음악이고, 더욱이 인민대중이 좋아할 뿐 아니라 그들의 현실생활 또한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것에 맞게 창조하고 발전시

69) Ibid., pp. 93-94.

70) 「김일성저작선집 4」, p. 152. 그러나 조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서 민족음악에서 과거의 것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모든 민요를 그대로 부르는 것이 민족문화의 계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방면에서 우리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율, 새로운 율동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줄 알아야 합니다.” Ibid., p. 154.

71) 윤수동, “주체적음악예술발전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 「조선예술」 (1987. 4), p. 52.

키자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음악은 구체적으로 다음 네가지 방침에 따라 창작된다 하겠다. 첫째, 민족음악을 위주로 하면서 양악도 동시에 발전 시킨다. 둘째,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현대적 미감에 맞는 선율을 창조한다. 셋째, 기악보다는 노래를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노래 창작에서는 곡조보다 가사를 중시한다 등이다.⁷²⁾ 이러한 방침에 의해 창작된 곡들은 소조활동을 통해 대중화를 이루게 된다. 창작상 음악의 대중화는 철저한 주체적인 문예방침의 구현을 뜻한다.

북한의 노래(가요)는 대략 6가지로 분류된다. 송가·노동가요·당정책가요·서정가요·민요·혁명가요 등이다. 이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송가이다. 송가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 칭송한 노래를 일컫는데, 그 대표작으로는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등이 있다. 송가의 노래선율은 장중하며 승엄하며 사색적인 것이 특징이다. 송가는 집체창작을 통하여 곡과 가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능력으로는 형상화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가 다음으로 당 정책가요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당 정책가요의 곡조는 송가와 비슷하며 비교적 느리고 장중한 분위기를 풍긴다. 「2백일 전투의 노래」, 「당의 품은

72) 한상우,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서울: 신원문화사, 1989), p. 45.

우리집」, 「우리는 천리마를 타고 달린다」 등이 대표작들이다. 혁명가요는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 부대원들이 해방전 빨치산투쟁을 하면서 작곡했다는 노래를 말한다. 혁명가요의 대표적 곡은 「조선의 별」로써 송가의 시원이라 불려진다. 서정가요의 서정은 우리식의 서정이 아니라 주로 김일성의 영도 밑에서 지상낙원을 이룩했다는 식의 향토애나 조국을 주제로 한 노래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가요는 목적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으며, 음악성보다는 가사전달에 치중하며, 비교적 단순한 리듬과 단조의 가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민족음악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국악기의 현대적 개량화이다. 즉, 주체사상에 따라 민족음악의 형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족음악 형식에 맞는 악기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즉, 양악의 기법을 민족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국악기 개량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약 150여점의 민족악기들이 개량되었으며, 옥류금과 같은 새로운 악기들이 창안되었다. 한편 악기개량의 기본원칙은 탁하고 어두운 소리를 피하고, 인민의 정서에 맞는 밝고, 맑고, 부드럽고, 고운 음색을 창조하려 하였다. 이러한 개량국악기의 장점은 서양악기와 배합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음역이 넓어져 표현이 풍부하며, 그러면서도 전통적 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⁷³⁾

73) 정병호 외, 「북한의 공연예술 II」(서울: 고려원, 1991), pp. 226-27.

한편 북한의 음악은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방창이나 절가에서 보여지듯이 독창적인 음악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기존의 음악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형식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북한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北韓音樂의 史的展開

북한의 음악사는 일반적으로 1983년 발간된 「조선전사」의 시대구분에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의 해인 1926년을 기점으로 하여 1926년에서 1945년 8월까지를 「항일무장투쟁 시기」, 1945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를 「평화적 민주건설 시기」,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를 「조국해방전쟁 시기」, 1953년 7월부터 1960년 말까지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 1960년대를 「천리마 시기」, 그리고 1970년대를 「문학예술의 대 전성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구분을 토대로 북한음악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음악사는 1926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이때는 물론 남북한의 구분이 없었지만 북한음악의 정통성의 뿌리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가 강조된다. 북한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투쟁 시절 「조선의 노래」, 「피바다가」 등을 직접 작곡했다고 하며,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교육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반일사상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남산의 푸른 소나무」

등을 작곡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항일혁명가요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김일성-김정일의 세습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북한에는 리면상, 김원균 등에 의해 소련풍의 사회주의 음악이 등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당시 북한 음악계는 월북한 김순남, 정종길, 안기옥 등이 「북조선음악가동맹」을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들은 김일성과 공산정권에 대한 찬양,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강조, 주민노역선동을 위한 노래를 주로 작곡하였다. 대표작으로는 김원균의 「애국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리면상의 「산업건국의 노래」, 그리고 김순남의 창작가극 「인민유격대」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의 음악조직을 살펴보면 해방 직후 조직되었던 「중앙교향악단」이 1947년 「국립교향악단」과 「국립합창단」으로 개편되었으며, 전문 음악교육기관인 「국민음악학교」가 1949년 설립되었다.

6·25전쟁기의 북한 음악의 특징은 전시가요 중심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1950년 12월에 “예술인들은 전쟁승리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교시를 발표하여 전시음악의 임무와 성격을 규정하였다.⁷⁴⁾ 이에 따라 1951년에는 「북조선음악가동맹」과 「남조선음악가동맹」이 「조선음악가동맹」(위원장 리면상)으로 통합되어 전쟁 중의 모든 음악활

74) 민경찬, “북한 음악의 실상,”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p. 427.

등을 주도하였다. 이 시기 창작음악은 인민군대와 인민의 투쟁성을 강조한 리면상의 「조국보위의 노래」, 김옥성의 「전호속의 나의 노래」, 「결전의 길로」 등 전시가요가 대표작이라 하겠으며, 송가 대신 충성심을 강조하는 행진곡이 창작음악을 주도하였다.

이른바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로 불리우는 50년대 중 후반은 전쟁승리를 자축하는 노래들과 전후복구 건설을 위한 주민노역선동 주제의 곡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이 무렵 음악예술에 주체를 세우자는 주장이 나와 음악이 김일성 위상화와 당의 선전선동무기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⁷⁵⁾ 대표적 남로당계열 월북 작곡가 김승남, 정종길, 이진우 등은 종파주의자로 몰려 숙청을 당한다.

1953년 9월 김일성은 「전국작가예술인 대회」를 소집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예총 산하 「조선음악가동맹」도 해체되고 새로이 「조선작곡가동맹」이 결성되었다. 이후 북한 음악은 「조선작곡가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민족적 음조와 형식을 강조하는 민족음악이 발전하게 된다. 주요 주제들과 대표곡들을 살펴보면, 당의 혁명전통을 강조한 「영광의 땅 보천보」, 「당의 기치에 따라」 등과,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한 「복구건설의 노래」, 교향시 「향토」, 그리고 천리마 시대를 노래한 「청산벌에 풍년이 왔

75) 한상우,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 op. cit., p. 202.

네], 「천리마행진곡」 등이 있다. 장르별로는 다시금 송가가 가요를 대표하게 되었으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민족합창이 새로이 등장하고 극음악으로 후일 혁명가극의 모체가 되는 「밀림아 이야기하라」 등이 창작되었다.

1960년대 전반기의 북한사회는 김일성이 1인 독재체제를 완성하여 본격적으로 우상화 작업에 들어가는 시기이다. 1964년 11월 김일성은 작가예술인들에게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라는 교시를 내려 당과 혁명에 복무할 수 있는 혁명전통교양을 심도록 할 것과 혁명적 대작을 창작할 것을 강조하였다.⁷⁶⁾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음악의 창작분야에서는 혁명전통을 강조하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혁명전통을 강조하는 노래는 대부분 영화에 삽입되어 나타나 영화의 노래가 가요의 한 분야로 새롭게 자리잡는다.

50년대 후반의 민족적 음악형식에 관한 문제제기는 이 시기에 와서 민족음악의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며, 판소리의 창법과 관련하여 복고주의에 대한 비판이 확립되어 탁성을 제거한 밝고 맑은 소리가 북한의 일률적 창법으로 자리잡아 현재에 이른다. 한편 1963년에는 150여점의 개량된 민족악기를 전시한 「민족악기전람회」가 개최되어 민족음악의 공고화에 이바지하였다.

1966년은 음악에서 혁명이 시작된 해이다. 즉, 1966년 10

76) Ibid., p. 210.

월 「조선노동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과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맞는 전면적인 혁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969년 5월에는 음악에도 주체를 철저히 세워 민족적 특징을 더욱 뚜렷이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⁷⁷⁾ 이에 따라 60년대 후반 북한음악도 유일사상체제 확립과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한 음악예술의 전면적 혁명화가 진행되었다. 즉, 북한음악이 김일성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혁명을 노래하거나 아니면 김일성의 위대함, 현명함 등을 찬양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이 시기 중요한 음악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민족음악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1969년에는 「평양가무단」이 「만수대예술단」으로 개편되어 김일성의 문예사상을 구현하는 임무를 띠었다. 가요의 이름들도 「혁명적 송가」, 「전투적 행진곡」, 「혁명적 서정가요」 등과 같이 구체적 이름으로 바뀌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송가로서 주체사상적 내용에서 김일성을 찬양하였다는 「김일성원수님은 우리의 최고 사령관」, 당 정책가요인 「10대정강의 노래」, 서정가요 「수령님이 계시어 행복합니다」, 「조국의 진달래」 등이 있다. 한편 극음악 분야에서는 일반가극과 민족가극으로 나뉘어졌던 가극이 「주체적인 가극」이라는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1970년

77) 「김일성저작선집 4」, p. 151.

대 등장할 혁명가극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1970년대는 주체사상이 절대화되면서 모든 문학예술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창작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시기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일이 1960년대 후반부터 당의 선전선동부에 근무하면서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문예정책을 장악한다는 점이다. 이 시기 북한음악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창작의 중심이 가요에서 혁명가극으로 이양되었으며, 음악무용이야기, 음악무용서사시극 등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였다는 것이다.⁷⁸⁾ 그러나 대부분의 창작품 주제들은 전 시기와 동일하였으며, 새로이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노래들이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김일성의 우상화가 극에 달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하겠다. 한편 1971년 「평양음악대학」은 「평양음악무용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김일성 우상화와 예술선동을 위한 예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 창작으로는 소위 5대 혁명가극을 비롯하여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서정가요 「수령님 우리리 영광드리네」 등이 있다.

(3) 北韓音樂의 最近傾向

1980년 이후 나온 북한의 음악관련 문헌들은 북한음악이 김정일의 지도와 보살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78) 1970년대 북한음악의 특징은 '피바다식 민족음악'으로 대표된다. '피바다식 민족음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개될 가극부분을 참조하 것.

있다. 이것은 현재의 북한음악의 주체가 김정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음악의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음악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며, 창작방법론에서도 「주체의 문예 이론」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한편 80년대 들어 민족음악론이 전면적으로 제기된다. 북한의 민족음악이란 앞서 지적한대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결합하여 근로인민대중의 현실을 반영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음악의 체계가 민족적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통음악과 만나게 되며, 아울러 사회주의적 내용이 그 전통음악을 어떻게 해석하여 의미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80년대 이전까지의 민족음악은 주로 서양음악을 사용하여 사회주의적 내용을 노래하는데 그쳤다. 즉, 「음」의 체계는 서양음악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80년대 제기된 민족음악은 민족 「음」 체계를 보다 전통적이며 현대화시킨 음악을 말한다.

이에 따라 리차윤과 윤수동은 민족음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당과 수령의 문예 방침에 따라 음악예술분야에서 주체를 바로세워야 하며, 이것이 민족음악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역사적 특수성이다. 즉, 한반도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전통적인 민족문화가 말살되어 민족음악이 현대적 생활감정에 맞지 않은 채 뒤졌으므로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조국 통일음악으로서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남한은 해방 후 서양

음악과 복고주의적 전통음악으로 민족음악이 질식하고 있음으로 남한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주적 사상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도 민족음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리차운과 윤수동은 민족음악의 발전방향, 민족음악의 교육, 과학적 연구사업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⁷⁹⁾

그러나 80년대의 민족음악이 양악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음악이 추구하는 것은 양악과 민족음악의 조화로운 발전이며, 다만 그것이 민족음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80년대 민족음악의 대표적 경향인 민요의 현대적 수용이 이루어진다. 민요는 그 음악적 양상에서 고유한 민족적 감정과 정서를 지니고 있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짧고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인민적이고 통속적인 요소를 갖춘 민요는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교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민요형식의 노래로는 「백두산의 만병초」, 「노래하세 대흥단」 등이 있으며 양악과 민족음악이 통일된 형태의 대표작으로는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바다의 노래」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창작민요들도 많이 제작되었다.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묘향산의 노래」, 「대동강 실버들」 등이 있다. 한편 김정일의 지도로 수령의 모습을 형상화한 송가 「행복의 노래」가 발표

79) 리차운·윤동수, “민족음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조선음악년감」(1986), pp. 206-211. 노동은·송방송, “북한 음악의 이해,” pp. 179-80에서 재인용.

되었으며, 기념비적 걸작이라고 일컫는 민족가극 「춘향전」이 평양예술단에 의해 창작 발표되었다.

1985년 9월에는 남북분단 이후 처음 남한과 북한의 예술단이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방문공연을 가졌다. 북한측은 남성 4중창, 민요 2중창, 여성 4중창, 장새납 독주, 가야금 독주, 그리고 무용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여기에서 특히 남한측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18줄로 개량된 가야금 독주였다. 한편 1990년 12월에는 서울에서 평양민족음악단의 「송년통일전통음악회」공연이 개최되었다. 이 공연에서 옥류금은 섬세하면서도 풍부한 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았으며, 젓대, 장새납 등 개량 민족악기들이 소개되었다.⁸⁰⁾ 특히 90년의 공연은 민요와 연주위주로 구성되어서 같은 뿌리의 달라진 소리, 변화된 개량악기의 모습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남한 국악계내에서도 북한의 국악기 개량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⁸¹⁾

한편 90년대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그 고수를 다짐하는 내용의 체제보위가요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들 체제보위가요는 곡조가 단조로우면서도 경쾌하고 가사의 내용이 복합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지키세」, 「우리는 하나의 생명」, 「신심높이 가리라」 등이 있으며, 4분의 4박자에 「빠르고 당당하게」 부르

80) 「한국일보」, 1990. 12. 12.

81) 「일간스포츠」, 1990. 12. 13.

도록 돼있다. 한편 90년대초 북한에서 유행한 트롯풍의 「휘파람」은 이러한 사상무장강화의 맥락에서 공개석상에서는 불리지 않게 되었다.⁸²⁾

나.北韓舞踊의 現況 및 主要 흐름

(1) 北韓舞踊의 概觀

북한에서는 무용을 “사람들의 룰동적인 움직임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사회현실과 사상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형태”라고 정의한다.⁸³⁾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용은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을 훌륭하게 현상하여야 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뚜렷한 목적성을 지닌다.⁸⁴⁾

김정일은 무용예술을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정서감정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창작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혁명적 무용예술 전통의 계승발전이다. 혁명적 무용이란 노동계급의 진정한 무용예술로서 노동계급의 사상 감정과 생활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무용을 뜻한다. 이러한 혁명적 무용의 전통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김일성이 가무 「단심줄」과 「13도자랑」을 창작함으로써 이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무용예술이 항일혁명무용의 전통을 고수하고

82) 「조선일보」, 1992. 8. 26.

83) 「문학예술사전」, p. 377.

84) 김정일, 「무용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6.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해야 주체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인민들의 생활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참다운 무용예술은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형상해야 한다. 그런데 종래의 무용 창작가들은 주로 인간육체의 아름다운 율동미와 무용수들의 율동적인 기교를 보여주는 무용에 치중하여 사상교양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치 못했다는 것이다. 무용을 생활적으로 엮어 나감으로써 사람들이 무용작품의 사상주제적 내용을 쉽게 그리고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민족적 형식을 살리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무용이 근로대중의 노동생활과 밀접히 결합되어 발생하고 발전하여 온 것으로 보고 어느 예술 형태보다도 민족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무용창작에서 민족적 특성을 살린다는 것은 무용형상 전반에서 짙은 민족적 정취가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무용창작에서 민족적 특성을 옹기 살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무엇보다도 민족 고유의 춤가락을 가지고 무용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용창작에서 민족적 특성을 옹기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민족음악과 민족의상, 소도구 등 무용형상에 쓰이는 여러가지 형상 수단들의 민족적 특성을 뚜렷이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무용소품을 기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용을 소품화한다는 것은 모든 무용 작품들을 다 하나의 전형적인 생

활 단면과 거기에서 드러나는 사상감정과 정서를 하나의 생동한 이야기에 담아 집중적으로 그려내는 작은 형식의 작품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용예술을 소품 위주로 발전시켜야 다양한 생활을 형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종류의 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한마디로 세계의 무용예술을 받아들여 “우리의 미감에 맞게 우리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회주의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해 반동적인 예술조류가 침습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 종류의 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은 미술의 종합예술적 성격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무용창작에서 그 기본 형상수단인 춤가락을 비롯한 무용언어의 형상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키면서, 거기에 반주음악, 방창 등 음악적 형상수단과 무대의상, 소도구, 무대장치 등 무대미술적인 형상수단들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무용의 종합적 성격을 옹기 살려나가는 것이 무용의 인식 교양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⁸⁵⁾

북한의 무용작품은 소재와 구성방식에 따라 현대무용·민속무용·전설무용·가무·음악무용서사시·음악무용조곡·가극무용 등으로 구분된다. 현대무용은 북한의 현대적 내용과 노동의 신성함 등을 반영하는 모든 무용작품을 포함하는데 주체적

85) Ibid., pp. 17-58.

이고 혁명적인 북한무용의 근간을 이룬다. 여기서 현대적 내용이란 수령영도의 현명함, 덕성 등과 함께 충직한 혁명투사들의 투쟁업적, 고결한 혁명정신, 인민들의 충성심 등을 말한다. 현대무용은 70년대까지는 혁명무용이라고 주로 불리웠다. 무용 「조국의 진달래」, 「눈이 내린다」, 「키춤」 등이 혁명적 내용을 반영한 대표적 현대무용이다. 무용 「사과풍년」, 「강선의 노을」 등은 인민들의 창조적 노동 생활을 반영한 현대무용들이다.

민속무용은 옛날부터 각 지방에 전해 내려오던 인민적인 무용을 발굴하여 만든 작품이다. 북한은 무용의 민족적 풍격의 지향을 위해 1970년대 말부터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에 힘을 쏟았다. 민속무용은 노동과 생활의 무용이므로 계급성과 인민성에는 부합하지만 봉건사회의 유물이라는 점에서 당성, 즉 주체사상을 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민속무용의 현재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 계승을 시도하고 있다. 민속무용에서 중요한 것은 춤 동작, 춤 가락이며, 민족적 체취를 살리기 위해 조선춤의 걸기법 활용도 강조되고 있다. 「쟁강춤」, 「달맞이」, 「칼춤」 등이 민속무용의 대표작이다.

전설무용은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형상화한 무용작품을 가리킨다. 「금강선녀」, 「면경대」 등이 대표작품이다. 가무는 출연하는 배우자신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 형식이다. 북한이 가무를 중시하는 근거는 춤과 노래를 동시에 하길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에 가무가 부합되기 때문

이다. 대표작으로 「강냉이농사 풍년들었네」 등이 있다. 음악 무용서사시는 음악의 강한 표현력과 풍부성, 무용의 시각적인 묘사성을 결합시켜 북한의 혁명전통과 해방 이후 북한이 걸어온 혁명의 노정을 연대기적 구성형식에 따라 형상화하는 집체적인 무대예술이다.⁸⁶⁾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사천만의 염원을 안고」, 「영광의 노래」 등이 있다.

북한이 자랑하는 4대 무용명작은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 그리고 「사과 풍년」이다. 이들 4대 무용명작에는 “인민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노동의 영예감 등 투쟁과 창조로 일관된 혁명적 생활이 드높은 열정 속에 아름답고 격조 높게 반영”되어 무용예술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것이다.⁸⁷⁾ 「눈이 내린다」는 혁명 승리를 위해 불사신 처럼 억세게 싸워 나가는 여투사의 숭고한 형상을 통해 항일혁명투쟁을 그리고 있으며, 「조국의 진달래」는 김일성의 혁명전사인 여대원들이 조국 땅을 밟는 감격을 묘사한 작품이며, 「키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호하는 마을 처녀들의 낙천적인 노동생활을 묘사한 작품이며, 「사과 풍년」은 풍년이 든 사과밭에서 사과를 따는 아가씨들의 약동적인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이다.

86) 김채현, “북한 무용의 개론적 이해,” 「북한의 예술」, op. cit., pp. 221-22.

87) 정병호 외, 「북한의 공연예술 II」, p. 86.

(2)北韓舞踊의 史的展開

북한의 무용은 해방 이후 서울에서 활동하다 월북한 최승희, 함기봉, 최가야 등에 의해 1946년 10월 「북조선무용가동맹」이 발족됨으로서 구축되었다. 북한무용의 초기 전개과정은 최승희의 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최승희는 1946년 김일성의 도움으로 「국립최승희무용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최승희무용연구소」는 북한무용의 본산지 구실을 하게 된다. 최승희는 월북 후 첫 작품으로 김일성에게 바친 헌무 「해방의 노래」를 공연하였으며, 이후 일제때부터 추어온 소위 신무용인 「아리랑」, 「초립동」 등을 공연하였다. 한편 최승희의 딸 안성희는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 국제무용콩쿨에 참가 우승하였으며, 최승희는 1951년 동 베를린에서 열린 제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무용극 「조선의 어머니」로 1등상을 수상하였다.

1950년대 최승희는 「춘향전」, 「검무」, 「승무」 등의 민속무용과 「해방된 고향」, 「봄의 노래」 등의 신무용을 발표하였고, 무용극 「반야월성곡」을 발표하기도 한다. 춤으로 미쳐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극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자 한 최승희의 무용극 구상은 7, 80년대의 북한예술전반의 집체작 경향을 앞서가는 것이라 하겠으며, 음악무용서사시, 음악무용조곡 등 종합공연형식의 효시라 할 수 있다.⁸⁸⁾ 최

88) 이상일, “북한 현대 무용에 관한 비판적 접근,”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0), p. 17.

승희의 무용극의 구상과 실천은 후일 김일성 유일사상을 주축으로 하는 혁명가극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된다.

1950년대 후반 최승희는 남편 안막의 숙청과 함께 공연작품에 대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최승희는 그의 작품에서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을 한번도 주제로 삼고 있지 않다는 비판 등과 함께 숙청된다. 실제 최승희의 무용극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았으며 당성, 인민성, 계급성 안에서 민족적인 예술형식의 탐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⁸⁹⁾ 최승희의 숙청으로 인하여 「최승희무용연구소」는 1958년 「국립무용연구소」로 개칭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주체의 무용예술」이 북한무용의 최우선적이자 유일무이한 목표로 떠오르게 된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확립과 김일성 우상화작업의 일환으로 항일무장혁명 시기에 창조된 혁명무용작품들을 계승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을 주제별로 분석하면 김일성의 영웅적 혁명활동을 강조한 작품,⁹⁰⁾ 유격대원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⁹¹⁾ 아동단원들의 생활을 반영한 춤,⁹²⁾ 집단 오락춤인 혁명적 군중무용⁹³⁾이 있다.

1970년대 말부터는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이 집중적으로

89) Ibid., p. 19.

90) 앞서 언급한 ‘단심줄’, ‘13도의 자랑’이 대표작이다.

91) ‘무장춤’, ‘유격대 기마병춤’, ‘붉은 수건춤’ 등이 있다.

92) ‘뿔터이다’, ‘우리는 아동단원’, ‘어린이곡’ 등이 대표작이다.

93) ‘충동원가’, ‘유격대 행진곡’ 등이 있다.

진행된다.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의 원칙으로는 첫째, 춤의 가락을 지나치게 현대화하여 현대 춤가락과 구분하기 어렵게 되는 현상을 경계하고, 둘째, 지방적 특색이 강하게 안겨오는 민속무용을 많이 창작해야 하며, 셋째,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적 요구에 맞게 민속무용을 발굴·창작해야 하며, 넷째, 도식적인 경향을 없애고 율동을 추상화하지 말아야 한다 등이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의 민속무용은 전통적인 원형을 그대로 발굴·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민속을 재창조한 민속적 색채를 지닌 현대적 창작무용이라 하겠다.⁹⁴⁾ 대표적인 민속무용으로는 「방울춤」, 「돈돌라리」, 「쟁강춤」 등이 있다.

1971년부터 창작되어온 북한의 혁명가극은 북한 공연예술의 집대성이라 하겠다. 이러한 혁명가극에 무용을 배합하여 공연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인공과 주체이념의 부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소위 가극무용이다. 가극무용의 특징을 들면, 첫째, 가극무용은 주인공의 세계를 부각한다. 가극에서의 무용은 주인공의 세계를 여러모로 훌륭하게 펼쳐보임으로써 다른 형상수단들이 미치지 못하는 주제의 해명에 더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극무용은 극에 복종되고 있다. 이는 극의 정황을 고려하여 무용을 생활적으로 맞물림으로써 극을 생동하고 박력있게 부각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가극무용은 예술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무용을 통해 높은 예술성을

94) 정병호 외, 「북한의 공연예술 II」, p. 73.

구현함으로써 가극의 예술적 품위를 높히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의 가극무용은 작품당 3-4차례 삽입되며 무용이 가극의 단순한 삽입물로 전락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무용고유의 춤가락으로 독자적인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 예를 들어 4대 무용의 하나인 「키춤」은 「피바다」의 3장 2경에 나오는 물방앗간 가무의 일부를 따로 떼어 군무로 만든 작품이다.⁹⁵⁾

1987년 북한은 새로운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을 완성하여 발표했다.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에서는 무용작품의 양상과 정서감정, 그리고 소도구의 이름이나 생활적인 동작 같은 것을 글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무용표기의 기호학적 발상인 무용표기법이 육체의 언어인 춤동작을 얼마만큼 정확히 표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北韓演劇·歌劇의 現況 및 主要 흐름

(1) 北韓演劇·歌劇의 概觀

북한의 연극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불리는데 혁명연극과 혁명가극이 그것이다. 혁명연극은 만주지방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조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연극으로 프롤레타리아 연극과 별개로 이해되어야 한다. 혁명연극의 특성은 사상적 무장을 공고히 하고 무대를 현실감 있게 꾸미

95) Ibid., pp. 77-79; 김채원, “북한 무용의 개론적 이해,” pp. 236-39.

며 연극에 음악적 요소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혁명연극을 위해서 희곡의 창작, 연기, 무대, 음악 등에 대한 새로운 가치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극이란 “가사와 음악적형상수단을 기본으로 하고 무용, 미술 등 여러가지 형상수단들을 통하여 인간생활을 반영하는 종합적무대예술의 한 형태”라고 정의 된다.⁹⁶⁾ 아울러 혁명가극이란 종래 가극의 낡은 형식을 없애고 내용과 형식을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개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⁹⁷⁾

북한의 연극과 가극은 표현수단이 되는 음악에 절가와 방창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절가란 “간결한 구조속에서 하나의 완결된 음악사상을 담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대사상으로부터 개별적인물들의 내면세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사상과 단순하거나 복잡한 생활내용을 완벽하게 담을수 있는 가장 세련된 음악형식”으로 “가사는 통일적인 주제에 복종되는 여러개의 절로 이루어지나 음악은 한개절에 해당하는 선률이 반복된다.”⁹⁸⁾ 무대 뒤에서 부르는 노래인 방창은 주인공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군중의 입장은 물론 관객의 입장까지도 자유자재로 대변하면서 주인공의 극적 체험과 심리세계를 밝히는 데 사용

96) 「문학예술사전」, p. 1.

97) Ibid., p. 2.

98) Ibid., p. 620.

한다.

북한에서는 보통 4-5막, 7-8장의 장막극이 비교적 많이 공연되며 보통 2시간 이상의 공연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평양연극단」 등 여러 연극단체가 있으며 각 도에도 연극단이 조직되어 있다. 북한은 군중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연극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등에 연극소조가 조직되어 있으며, 전문 연극인들이 파견되어 이들의 연극활동을 지도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축전이라는 아마추어 연극단의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⁹⁹⁾

(2) 北韓演劇·歌劇의 史的展開

북한은 1930년대 초 김일성이 항일혁명 전적지에서 직접 창작·공연하였다는 일련의 작품들을 북한 연극·가극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제하 카프 문화운동 역시 북한 연극사의 큰 뿌리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60년대 초까지 카프를 북한연극의 단초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주체사상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주창하는 가운데 카프의 전통은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북한은 카프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전통을 다시 인정하고 있다. 즉, 카프 작가들이 당의 지도를 받지 못하였지만 “작품에서 당대

99) 윤재근 외, 「북한의 문화정보 II」(서울: 고려원, 1991), pp. 107-108.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주장하였으며 무산계급의 선각자를 전형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적리상을 표현하였다”는 것이다.¹⁰⁰⁾ 따라서 여기서는 카프를 시작으로 북한 연극·가극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프는 1925년에 결성되어 1935년에 해산당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 문학단체인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 동맹」을 일컫는다. 1930년대 들어 카프가 조직한 「가두극장」, 「해주극장」, 「대중극장」 등은 프롤레타리아 연극의 기치를 앞세우고 연극운동을 대중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31년 여름 카프가 조직한 극단들은 그 활동 내용으로 인한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 해산되었으며 소속 작가, 연극인들은 대량 검거되었다. 카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동극단인 「소형극장」을 창단하여 대중 속을 파고 들었다. 이동식 「소형극장」의 작품유형은 혁명을 위해 모진 고통을 감수하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혁명 사상을 담고 있다. 「소형극장」은 이러한 작품들을 근로자 대중 속에서 기동성 있게 공연하여 선전 선동적인 효과를 크게 획득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¹⁰¹⁾ 소형극장의 주요 구성원은 송영, 김승일, 이상춘 등이다.

1932년 창단된 카프의 산하 극단인 「신건설」은 조선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에 있어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 신

100) 김정일, 「주체문학론」, op. cit., p. 78.

101) 이강렬, “북한의 연극(2),” 「북한의 예술」, p. 287.

건설은 연극 운동의 확대를 위해 지방 극단들과 연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연극인들에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예술이론을 가르쳤다. 한편 「신건설」은 공장과 학교의 연극부를 지도하여 노동자, 학생들 속으로 연극운동을 심화시켜 나갔다.¹⁰²⁾ 「신건설」의 주요 구성원은 송영, 신고송, 이상춘 등이었으며 이들은 기관지 「극장」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신건설」은 1934년 12월 일제의 탄압으로 200여명에 달하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체포되었으며 이듬해인 1935년 5월에는 카프가 해산되었다.

1930년을 전후하여 만주에서는 소위 「혁명연극」이 탄생된다. 혁명연극의 시초는 김일성이 1920년대 말 만주 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 사업의 일환으로 빨치산 투쟁과 함께 대중들에게 반일 혁명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연극을 창조, 공연하기 시작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탄생된 연극으로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만국회에서 피를 뿜다」, 「3인 1당」, 「13도 자랑」 등이 있는데 김일성에 의해 창작된 것이라고 주장된다. 이들 초기 항일혁명연극의 기념비적 작품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하의 심각한 사회제반 모순을 계급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중을 교양 시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1930년대 중반들어 조선인민혁명군과 일제와의 무장투쟁이 심화되자 연극활동은 전투적이며 기동성 있게 전개되었으

102) Ibid., pp. 287-89.

며, 다양한 관중들의 수준과 기호에 맞게 연극의 주제와 종류도 다양하게 개척되었다. 당시의 혁명연극들은 주로 집체작으로 창작되었으며 사상적 무기로서 항일유격대원들에 의해 상연되어졌다. 이 시기 혁명연극의 대표적 작품은 「혈해」(일명 피바다), 「성황당」, 「꽃파는 처녀」 등이다.

북한에 있어서 혁명연극이 갖는 연극사적인 의의는 첫째, 공산주의적 당성원칙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연극발전의 새 단계를 이룩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무장투쟁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찾았던 점과 무장하고 일제를 격멸하는 식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한 점이다. 셋째, 연극의 종류와 형식을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관객과 친밀감을 더하도록 노력했다는 점이다. 넷째, 혁명연극에서 보여지는 집체성의 구현은 사실주의 연극의 기본 특징인 무대 상상부를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어 공산주의적 창조원리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혁명연극은 희곡의 무대화에 따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요구와 연극 창조자들의 혁명적인 생활 체험에서 기초한 체험 예술의 세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이다.¹⁰³⁾ 따라서 혁명연극은 그 목적성이 뚜렷한 정치극이며 연극의 교양적, 선전 선동적 효과를 극대화한 공연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103) Ibid., pp. 291-92; 서연호·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 I」, pp. 158-63.

1945년 해방 직후 남한의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을 하던 작가, 연출가, 배우들의 대다수가 월북하여 북한 연극사의 주류를 형성한다. 해방후 북한연극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근간으로 항일혁명 주제와 현대적 주제를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공연함으로써 사상성을 강조하고 대중과의 연계 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당은 「예술공작단」을 설립하여 먼저 연극인들의 계급의식을 고취하였으며 극단 내부의 혁신을 통한 형식주의의 극복을 시도하였다. 「퇴성」, 「조선빨치산」, 「격양가」 등이 북한연극의 초기 대표작들이다.

한편 이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연극을 이용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11차 상무위원회(1948. 10)는 혁명성이 약한 연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가, 예술가들이 현실 속에 뿌리내려 노동계급의 전형을 창조할 것을 결정하였다. 즉, 연극에서 현대성과 인민성이 더한층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의 결정에 따라 연극인들이 노동현장에 들어가 노동자들의 사상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나 도덕적 제 특질까지도 파악하게 된다. 이 시기에 창조된 노동계급의 주제를 지닌 작품으로는 「자매」, 「불길」 등이 있으며, 「땅」, 「비룡리 농민들」 등은 농민문제를 다룬 작품들이다.

6·25 전쟁 시기의 연극은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인물을 그린 선전극이 주를 이룬다. 즉 “연극이 싸우는 우리 인민들의 수중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예리한 무기가 되게 하며

전체 인민을 최후의 승리에로 고무추동하기 위한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⁴⁾ 아울러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애국심을 반영할 것, 둘째, 인민 군대와 일반인의 영웅성을 반영할 것, 그리고 셋째, 적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시켜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강령적 교시에 의해 만들어진 이 시기의 대표적 연극으로는 「탄광사람들」, 「적들 속에서」, 「고지의 별」 등이 있다.

전후 북한의 연극은 복구건설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리는 고양극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연극의 내용은 대체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복구작업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각을 일깨워주는 것들이었다. 「췌멘트」, 「젊은세대」, 「무지개 비친 초원」 등이 대표작이다. 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연극인들에게 제기된 과제는 공산주의자와 천리마 기수의 전형을 창조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예술가들은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작품창작을 시도하였다. 혁명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는 「해바라기」, 「태양의 딸」 등이 있으며, 천리마 시대를 맞이한 인간들의 새로운 사상적 풍모를 그린 작품으로는 「붉은 선동원」이 있다. 「붉은 선동원」은 성격, 갈등, 구성 등 전반에 걸쳐 천리마 시대에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자라나는 천리마 기수들의 사상적 특질을 심오하게 일반화함으로써 북한연극의 발전에 새로운

104) 이강렬, “북한의 연극(2),” p. 300.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⁰⁵⁾ 한편 1960년대 중반부터 연극작품에서 작가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집체작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처럼 북한의 연극은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민교양사업의 매개체 역할로 점차 획일화되어 갔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립연극단」을 제외한 북한의 모든 극단들은 해체되었다. 기존 극단들이 폐쇄를 당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연극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즉 인민대중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없는 연극은 주체의 시대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체의 시대를 맞아 북한은 연극에 있어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주장한다. 이때부터 「국립연극단」은 혁명의 순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1930년대 김일성이 항일혁명전적지에서 창작 공연했다는 일련의 작품들을 재구성하여 공연하면서 새로운 연극형식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3) 「피바다」식 歌劇과 「성황당」식 演劇

혁명가극 「피바다」는 김일성이 항일혁명 시기에 창작하였다는 「혈해」를 1971년 김정일의 지도로 가극으로 옮긴 것으로서 모든 혁명가극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

105) 서호연·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 I」, p. 43.

라 북한의 혁명가극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혁명가극 「피바다」의 창조는 「피바다」식이라는 가극형식을 탄생시켰으며 「피바다」는 이후 모든 혁명가극의 표본이 되었다. 북한은 「피바다」가 창조된 이후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가 혁명가극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였고, 「꽃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그 전성기를 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피바다」식 가극이 연극에 대한 대중의 외면을 극복하고 김일성 우상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려한 무대장치와 많은 등장인물, 그리고 우매한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는 음악과 무용을 곁들여 시청각화한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¹⁰⁶⁾ 실제로 「피바다」식 가극은 종래의 사실주의나 혁명적 대작보다 연극으로서는 훨씬 후퇴한 인상을 준다. 다만 연극의 다양한 시각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피바다」식 가극을 창조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있다. 첫째, 가극의 내용을 혁명적인 것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가극의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가극의 형식을 시대의 요구와 일반대중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혁신하는 것이다. 형식을 내용의 발전에 따라 세우는 것은 예술작품의 사상과 예

106) 유민영, “북한 연극의 분석과 비판,” 「북한의 문화예술」(서울: 국토통일원, 1990), p. 573.

술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형식을 내용에 맞게 혁신해야만 내용이 감명깊게 표현되며, 그래야만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과 투쟁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혁명가극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피바다」식 가극 창조를 위한 또 하나의 원칙은 인민성, 민족적 특성, 통속성의 구현이다. 가극 창조에서 인민성, 민족적 특성, 통속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가극작품에 근로대중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를 일반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알기쉬운 통속적인 민족적 형식에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가극이 일반이 즐기는 대중의 예술이 될 수 있으며 일반대중에게 새로운 생활을 제시해 주는 교양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¹⁰⁷⁾

「피바다」식 가극의 독창적 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극의 모든 노래를 절가화하고 방창을 도입한다. 즉, 종래 가극의 좁고 도식적인 틀을 깨고 가극 형상화를 넓게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묘사를 위해서 절가와 방창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피바다」식 가극에서는 무용이 가극의 사상적 내용을 밝히는 중요한 형상수단의 하나로 사용된다. 셋째, 무대미술을 입체화함으로써 무대미술의 시·공간적 표현력을 확대한다. 넷째, 민족악기에 양악기를 배합한 주체관현악으로 가극의 형상성을 높인다 등이다.¹⁰⁸⁾

107)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pp. 436-45.

108) 서연호·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 I」, pp. 204-206.

소위 5대 혁명가극은 혁명가극 중에서도 가정 완성도가 높다는 5개의 작품을 일컫는다. 5대 혁명가극으로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를 꼽는다. 이 5대 혁명가극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그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제한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항일혁명운동과 김일성에 의한 해방과 같은 도식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이론인 갈등을 도입해서 모든 작품이 심각한 갈등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결같이 긍정적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물의 대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립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인물을 보다 선명히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 공연되고 있는 연극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황당」식 연극이다. 「성황당」식 연극은 종래 연극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일반인들의 사상과 감정에 맞는 현대적 미감을 가진 연극형식과 형상수단을 동원하여 다양한 종류와 양상의 연극작품들을 새롭게 창조했다고 평가되는 혁명 연극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성황당」이 공연되게 된 발단은 1972년 11월 김정일이 「국립연극단」을 방문하여 “연극분야에서는 연극의 형태상 특성을 살리면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감정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독창적인 연극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시한 데 있다.¹⁰⁹⁾ 그

109) 「조선예술」(1987. 2). 한국비평문학회, 「북한 가극·연극 40년」(서울: 신원문화사, 1990), p. 235에서 재인용.

이후 국립연극단은 5년여의 기간을 연구하여 새로운 연극 이론을 창출하는데 이것이 「성황당」식 연극이론이다.

「성황당」식 연극이론에 의하면, 연극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문학적 형상수단인 희곡을 목적에 맞게 창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희곡을 목적에 맞게 창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희곡의 내용이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로 일관해야 하며 인간의 자주성을 위해 투쟁하는 인간의 전형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감정에 맞는 새로운 연극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희곡의 내용이 대중에게 가장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와 자주적인 인간문제를 효과 있게 내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황당」식 연극의 희곡 창작은 종래의 도식적이며 실내극 형태의 극 형식과 극작술을 버리고 무대위의 극적 생활과 사건의 흐름이 관객에게 현실을 보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도록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성황당」식 연극에 맞게 희곡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대사를 잘 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극창작에서 대사를 구사하는 방법이 바로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과 형상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모든 대사를 명대사로 만들어야 한다. 명대사란 “심오한 생활적 내용이 알기 쉬운 언어적 표현형식을 통하여 간결하고 명백하게 표현된 대사”를 뜻한다.¹¹⁰⁾

110)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pp. 470-77.

「성황당」식 연극은 배우들의 연기를 다음과 같이 혁신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배우는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이에 의거해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분석하고 체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배우가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배우의 세계관에 의해 배우 연기의 질과 형상수준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배우들의 화술 기량을 높여 대사형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연극에서의 연기는 말이 주동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말을 자연스럽고 실감나게 하고, 아울러 말의 특징을 잘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살려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셋째, 「성황당」식 연극에 맞게 연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진실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연극에서 연기는 대사와 함께 연기의 기본 수단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대사와 함께 대사에 잘 어울리는 행동을 찾아내어 그것을 세련된 연기술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화하여야 작품의 사상 주제적 과제해명에 더 잘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¹⁾ 이와 함께 「성황당」식 연극은 입체성을 강조하는 무대미술과 정서적 색채를 돋구는 음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종래의 연극에서는 무대미술이 단순히 등장인물의 행동장소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음악은 형상 수단으로 거의 이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종래 연극의

111) Ibid., pp. 481-90.

제한성을 극복하고 입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대미술을 입체화하고 음악을 균형있게 배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관객들이 연극에서 오늘의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¹²⁾

소위 북한의 5대 혁명연극은 「성황당」을 비롯하여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경축대회」 등이다. 1978년 무대에 올려진 「성황당」은 종교와 미신에서 주민들을 해방시킨다는 일종의 계몽극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종교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한 채 극단적인 폐단만을 과대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축대회」는 1988년 김일성의 76회 생일에 맞춰 「국립연극단」에 의해 공연된 5대 혁명가극 중에서 가장 최근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을 고무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

1980년대의 북한의 공연예술은 그 내용에 있어서 김일성의 승배에 대한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무용서사시 「혁명의 노래」는 1982년 4월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해서 초연된 작품으로 약 5,000명의 예술가가 참여한다. 총 3장으로 구성된 「혁명의 노래」는 장별로 일제에 대한 항쟁, 미 제국주의 자들과의 항쟁, 그리고 오늘날 북한에서 누리는 행복을 주제

112) Ibid., pp. 491-93.

로 구성되는데 특히 마지막 주제를 강조한다. 한편 80년대 들어 북한은 혁명영화에 주력하여 연극에서는 이미 완성된 혁명가극들만 반복해서 상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조선중앙연감」에서 연극과 가극의 공연기사가 거의 자취를 감춘 반면 영화에 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늘어났음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北韓映畫의 現況 및 主要 흐름

가. 北韓映畫의 概觀

일찌기 레닌이 “모든 예술 가운데 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영화를 중시해 왔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에서 영화를 중시한 것은 영화가 “대중을 혁명화하는 중요한 사상적 무기”¹¹³⁾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영화를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무장하여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자주적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 계급혁명의 사상적 무기”¹¹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영화에 관한 정의는 김일성의 영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교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영화는 우리 당의 힘있는 직관적인 선전선동수단입니다. 영화는 여

113) 오프스니야코프,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원론」, 이승숙·진중권(역)(서울: 이론과 실천, 1990), p. 231.

114)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692.

러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줄수 있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오랜동안의 력사적 사실들과 사건들을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소설이나 신문보다 낮고 무대의 제한을 받는 연극보다도 우월합니다. 영화가 여러가지 예술형식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힘있는 교양수단이라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¹¹⁵⁾

김정일 역시 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영화만큼 영향력이 큰 예술은 없습니다. 영화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돌릴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며 기동적인 예술입니다. 영화는 생활을 생동한 화면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나 내용을 쉽게 리해할수 있습니다.¹¹⁶⁾

북한의 영화는 일반적으로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의 4가지 장르로 구분된다. 예술영화는 일반적으로 극영화를 지칭한다. 예술영화의 특징은 “...인간성격을 통해서 주제를 천명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을 직접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여 반영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¹⁷⁾ 이러한 북한의 예술영화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나 「2·8영화촬영소」에서 주로 제작되고 있는데 예술영화의 주제

115) 「김일성저작집 12」, p. 9.

116) 「김정일선집 1」, p. 123.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41에서 재인용.

117) 최척호, 「북한예술영화」(서울: 신원문화사, 1989), p. 37.

는 주로 김부자 이상화, 당에 대한 충성, 주민 노역동원, 대남대미 비방, 인민군의 용감성 찬양, 계급혁명 고취 등이다. 이상화를 다룬 예술영화로는 김일성의 일대기를 그린 다부작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이 유명하다. 아울러 계급혁명을 고취하는 「피바다」, 「꽃피는 처녀」, 「한자위단원의 운명」이 수작으로 꼽힌다. 「요람」, 「나의 행복」 등은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제고 영화의 대표적 작품이다. 한편 주민노역선동 주제의 작품으로는 「정방공」, 「로동가정」 등을 들 수 있다. 북한군의 용감성을 그린 영화로는 「월미도」,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 등이 대표작이다.

다큐멘타리를 지칭하는 기록영화는 크게 기록영화와 시보 영화로 나뉜다.¹¹⁸⁾ 기록영화는 현실에 실재하는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실성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하며, 이 사실성은 기록영화와 사실을 가공하여 반영하는 예술영화를 구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기록영화는 당의 역사를 수록·보관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그런데 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혁명활동의 역사들이 김일성 중심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록영화의 상당부분은 김일성의 투쟁, 혁명활동을 담은 것이다.¹¹⁹⁾ 대표적인 기록영화로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118) 시보영화는 우리의 뉴스 영화에 해당된다.

119) 김문환, “북한 영화의 특성과 그 실태,”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0), p. 377.

투쟁을 영상화한 「김일성원수 항일유격전적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 등이 있으며, 천리마 시대정신의 구현을 목적으로한 정론영화 「오늘의 조선」, 「천리마대고조기에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등이 있다.

북한의 과학영화는 각 산업분야별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각 분야의 선진적인 경험, 의학상식 등의 보급을 위해 제작된다. 과학영화는 일차적으로 근로자와 청소년학생들에게 기초과학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그들의 일반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을 제고시키고 해당시기의 기술발전에 필요한 선진 기술을 보급, 일반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영화는 말 그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화로서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구려시절 한 소년장수의 활약을 그린 만화영화 「소년장수」가 북한 어린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¹²⁰⁾

북한영화의 특징으로는 기술적인 면에서 리듬과 템포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대중을 보다 알기쉽게 설득, 교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측면과 함께 연출자들의 작가적 용기와 실험정신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연기상의 특징으로는 신파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최근 대사처리 등에서 신파조 표현이 생활언어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

120) 「동아일보」, 1992. 10. 11.

밖에 70년대 주체문예이론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전통음악에 서양음악을 도입한 효과음악의 사용이 눈에 두드러진다.

북한에서는 연간 150~200편의 영화가 제작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은 한해에 약 25편정도의 영화를 관람한다고 하는데 이는 통계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 편수이다.¹²¹⁾ 북한에서 영화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는 「평양 영화대학」이 있다.

나. 映畫藝術論

1973년 김정일은 「영화예술론」이라는 북한의 영화정책과 영화제작 체계를 총괄하는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쓰여진 「영화예술론」은 「생활과 문학», 「영화와 연출», 「성격과 배우», 「화면과 미술», 「예술과 창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영화예술론」의 생활과 문학편에서는 영화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김정일은 시나리오와 영화문학의 차이를 논한다. 즉, 영화문학이란 시나리오를 단순히 우리말로 고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와 영화문학은 엄연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시나리오를 그 이름이 붙여진 때부터 수십년의 역사가 경과하는 동안 질적인

121) 「서울신문」, 1990. 8. 20.

변화를 통해 상당한 문학성을 갖춘 수준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문학이란 시나리오의 발전을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인 것이다.

김정일은 영화문학에서 「종자를 제대로 틀어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종자는 물론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를 말한다. 종자를 틀어쥐는 작가가 다음에 할 일은 「전형성의 구축」이다. 그러데 전형성의 구축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하여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깊게 그려내는 것」이다. 영화문학에서 유의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갈등의 형상화와 전개방식이다. 갈등은 애매모호해서는 안되고 그 성격이 분명하되 결말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²⁾ 많은 북한영화들의 스토리 전개가 극히 도식적이고 신화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이러한 갈등의 처리방식과 연관이 있다. 「영화예술론」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영화와 연출」편이다. 김정일은 여기서 영화 연출가의 사명과 이른바 주체적 연출체계를 밝히고 있다. 그는 영화 연출가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 “연출가는 예술창조와 제작기획, 사상교양 일체를 장악하고 창조집단의 성원일체를 영화창작으로 지도해나가는 사령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²³⁾ 아울러 김정일은 주체적 연출체계를 “연출가가 창작집단의

122) 노재승, “북한 영화의 개관과 이해,” 「북한의 예술」, op. cit., pp. 386-87.

123) 백지한, 「북한 영화의 이해」(서울: 도서출판 친구, 1989), p. 48.

사령관이 되어 정치사업을 선행시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창작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식의 연출체계”라고 밝혀 주체사상에 기초한 영화 제작의 집체적 성격을 명백히 하고 있다.¹²⁴⁾ 1970년대 이후 제작된 북한의 영화들에 다부작(시리즈물)이 많은 것은 이러한 집체적 제작이론에서 초래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성격과 배우」편에서 김정일은 배우의 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김정일은 배우는 사생활에서까지 예술가이며 배우로서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배우에게는 창작의 시간과 무대의 시간이 따로 있어서는 안되며, 진실한 인간상의 형상화를 위해 배우는 우선적으로 사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¹²⁵⁾ 한편 김정일은 「영상과 촬영」편에서 “촬영에서는 생활을 움직임 속에서 보여주는 동시에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내야 하며 대상을 조형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또한 촬영은 모든것을 간명하고 알기 쉽게 나타내야 하며, 다양한 인간 생활을 인상깊고 재미나게 보여주어야 하며, 로동계급의 사상관점과 입장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열렬히 옹호하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인물과 생활을 그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⁶⁾ 김정일의 이와 같은 언급은 영화는 일종의 직관

124) Ibid., p. 50.

125) Ibid., pp. 110-12.

126) 노재승, “북한영화의 개관과 이해,” pp. 390-91.

예술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에게 호소력과 침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화면이 직설적이고 간명해야 하며, 재미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계급적 관점에서 피사체를 화면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¹²⁷⁾

다. 北韓映畵의 史的展開

북한의 영화사는 문학, 미술 등 여타 문예분야와 마찬가지로 대략 5단계로 구분된다. 제1기는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 전까지의 시기이고, 제2기는 전쟁기간이며, 제3기는 50년대 말까지의 전후시기, 제4기는 소위 천리마 시기인 60년대와 1973년 「영화예술론」 발행이전의 시기, 그리고 제5기는 「영화예술론」 이후의 시기를 말한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영화는 1946년 제작된 기록영화 「우리의 건설」이다. 「우리의 건설」은 그 해 평양의 「삼일운동 기념행사」와 「노동절 기념행사」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영화 기자재의 시설과 인적 자원은 극히 빈곤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하 국내의 영화활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양은 사실상 영화활동의 불모지에 다름없었다 하겠다. 1947년에는 「국립영화촬영소」가 건립되어 소련에서 기자재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기록영화 제작에 들어갔다.¹²⁸⁾ 따라서 이 시기에 제작된 영화의

127) Ibid., p. 391.

128) 최척호, 「북한예술 영화」, op. cit., p. 64.

제작 편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46년 기록영화 2편, 1947년 기록영화 1편, 1948년 기록영화 7편 등에 불과하다. 북한 예술영화의 최초의 작품인 「내고향」(김승구 작, 강홍식 연출)은 1949년에 제작되었다. 일제와 맞서 싸우는 혁명투사를 중심으로 해방전과 해방후의 시대상을 비교한 「내고향」은 사실상 북한영화의 효시라고 하겠다. 아울러 이 시기에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서 수입한 사실주의 영화를 주로 상영하였다.

6·25 전쟁기에 북한의 영화는 중군기록영화가 주류를 이룬다. 1951년 제작된 「정의의 전쟁」, 「세계에 고함」 등은 6·25 전쟁의 책임을 남한과 미국측에 전가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선전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된 기록물이다. 특히 「정의의 전쟁」은 1951년 제6차 「국제영화축전」에서 「기록영화상」을 수상하였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야 예술영화는 다시 제작활동에 들어갔다. 「소년 빨치산」, 「또다시 전선으로」, 「정찰병」 등이 대표작이다. 특히 「정찰병」은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 정찰병들이 적후에서 벌이는 정찰활동과 그들이 이룩한 공적들을 묘사한 작품으로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창조에 성공한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1955년 북한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립영화촬영소를 복구함과 동시에 이를 예술영화촬영소와 기록영화촬영소로 분리시켰으며, 기자재들도 현대적 수준으로 개선시키고, 작가, 배우, 촬영기사들을 양성하는 등 영화사업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1956년에는 영화문학창작사가 설립되었다. 이 시

기에 제작, 상영된 대표적 영화들은 노역선동을 주제로 한 예술영화 「신혼부부」, 「행복의 길」과 기록영화 「강철」, 「건설의 하루」 등이 있으며, 남한을 비방하는 영화로 예술영화 「빨치산 처녀」,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등이 있다. 1955년에 제작된 기록영화 「김일성원수 항일 유격전적지」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한 북한 최초의 역사문헌영화라 하겠다. 같은 해인 1955년에 제작된 「종자의 선택과 관리」는 북한 과학영화의 효시이다. 한편 1957년에는 최초의 아동영화인 「분단의 하루」가 제작되었다.

1960년대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미화를 통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영화와 이른바 천리마 시대에 걸맞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역선동 영화이다. 항일빨치산 활동을 주제로 한 영화로는 「미래를 사랑하라」, 「녀대원」, 「한지대장의 이야기」 등이 대표작이며, 노역선동 주제의 영화로는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방공」, 「그들은 이렇게 싸웠다」, 「붉은꽃」 등이 있다. 「정방공」은 해방 무렵부터 60년대 초반까지를 시대배경으로 옥림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일대기를 그린 것으로 당과 김일성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참된 삶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발현이라는 내용이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을 확립하게 되는데 영화분야에서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그가 의도하는 작품들을 충실히 영화화했다는 식으로 영화창작의 영광을 모두

김일성에게 돌리기 시작했다.¹²⁹⁾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북한의 영화들은 집체창작에 의한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 대표작으로는 백두산 창작단의 집체작인 「유격대 오형제」, 「한 자위단원의 운명」, 「강물은 흐른다」 등이 있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압박받고 천대받던 가난한 농촌 청년들이 일제의 강요와 기만에 의해 자위단에 끌려가 피눈물나는 체험을 통해 민족적,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유격대를 찾아 떠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각본은 김일성이 직접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를 계기로 이른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수행과 함께 김정일의 주도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김정일은 1973년 4월 북한 영화의 교과서격인 「영화예술론」을 발표하였다. 3대 혁명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작된 최초의 영화는 1973년 제작된 집체작 「처녀지배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75년 제작된 「산정의 수리개들」은 주체형 인간의 전형성을 제시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와 양심에 대해 밝힌 작품이다. 1972년에 제작된 불후의 명작 「꽃파는 처녀」는 항일 빨치산 투쟁을 주제로 한 혁명가극을 영화화한 이 시기의 대표작이다. 이외에 「열관리공」, 「로동가정」, 「영원한 전사」 등이 70년대 전반 북한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129) 노재승, “북한영화의 개관과 이해,” p. 362.

1970년대 후반은 김정일이 「영화예술론」을 통해 제시한 영화제작 방침이 구체화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이 시기부터 북한의 영화들은 집체작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이런 영화들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시기별로 묘사하거나 김일성 일가의 일제하에서의 투쟁을 그린 이른바 혁명전통물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류의 영화들은 대개가 다부작으로 제작되는 추세를 보였다.¹³⁰⁾ 이 시기에 제작된 대표적 영화로는 김일성일가의 혁명전통을 강조한 「누리에 붙는 불」과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혁명력사의 불멸의 업적을 영화화한 기념비적대작”¹³¹⁾인 다부작 「조선의 별」 등이 있으며, 「춘향전」,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이름없는 영웅들」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1980년대는 북한의 문화예술, 특히 영화가 김정일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 아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주장되는 시기이다. 영화분야에서 김정일의 주도적 역할은 김정일이 “지난 시기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만 무려 320여 차례나 실무지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2천 2백여 차례의 가르침을 주시었다”는 평양방송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다.¹³²⁾ 이 시기 영화의 주제는 전과 비슷하여, 수령의 혁명활동을 주제로한 작품, 조국해방전쟁 주제의 작품, 근로자의 전형을 그린 작품

130) Ibid., p. 366.

131) 「로동신문」, 1982. 4. 13.

132) 「평양방송」, 1987. 2. 6.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1980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조선의 별」시리즈가 1985년까지 총 9부가 완성되었으며, 「이름없는 영웅들」은 1981년까지 총 20부가 제작되었다. 이외의 대표작으로는 「월미도」, 「고결한 삶」, 「소금」, 「도라지 꽃」 등을 들 수 있다.

라. 北韓映畵의 最近傾向

1990년대 들어 북한 영화제작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영화의 반 이상을 차지했던 김일성·김정일부자 우상화물이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영화의 제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1990년 제작한 총 45편의 예술영화와 기록영화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김부자 우상화물이 12편으로 전체의 27 퍼센트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주민사상 교양물이 11편, 북한체제 찬양물이 8편, 노역 선동물이 9편 등이다.¹³³⁾ 이는 80년대 말부터 불어닥친 공산권 국가에서의 개혁바람에 대응하여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고, 과거 직접적인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물에 주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하여 김부자 우상선전을 간접적이고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부작 「민족과 운명」은 최덕신을 비롯한 월북자들의 인

133) 「한국일보」, 1991. 1. 1.

생유전을 통해 반미·반한 의식을 북돋우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대표적 작품이다. 1990년 10월 개최된 「뉴욕남북영화제」에 출품된 북한영화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소위 향토영화의 효시라고 하는 「도라지꽃」은 고향을 지키기위해 안락한 생활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향토애의 강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김일성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우회적 기법으로 조국애를 강조하는 작품으로는 「고향땅」, 「하얀꽃」, 「억센나무」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영화의 또 다른 변화는 코메디 영화가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금강산으로 가자」는 금강산을 배경으로 생활조건과 환경이 다른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켜 북한의 체제와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웃기는 작품이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는 가정문제를 놓고 에피소드별로 묶어나간 사회계몽성을 띤 코메디 시리즈물이다. 한편 과도한 제작비용을 감당치 못해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사라졌던 다부작 영화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이는 관객의 70 퍼센트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이 사상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혁명영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사상성을 살리면서 액션을 가미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붉은 단풍잎」, 「임진왜란」 등이 액션을 가미한 다부작 영화들이다. 한편 「내고향 처녀들」은 전투에서 눈을 잃은 군인과

한 처녀와의 사랑을 그린 애정물이다.¹³⁴⁾

선전선동을 주 목적으로 삼아온 북한영화의 장르가 90년대 들어 액션, 코메디, 애정영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장르의 영화든 그것이 사회통합의 강력한 수단이라는 기본 전제에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애정영화도 삼각관계 따위의 것들이 아니라 노동 속에서 맺어진 건전한 사랑을 다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영화는 북한사회의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흥미와 예술성을 점차 가미해나갈 것으로 보여 수년내에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5. 南北韓 言語異質化 現況 및 主要爭點

언어는 민족을 구분하는 기본 척도들 중의 하나이며 민족 특성을 보여주는 문화적 유산으로서 민족문화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인 언어는 사회구성원들과의 사고와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글은 15세기 중엽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래 갑오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口語로서의 우리말은 선조 대대로 이어져 온 역사적 유산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한민족의 어문법에 대한 체계적 작업은 1912년 일제하에 총독부가 작성한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에서부

134) 「세계일보」, 1992. 7. 29.

터 시작된다. 그러나 조선의 국어학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중심이 되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독자적으로 제정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 조선말의 문법체계가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남북한의 상이한 언어관, 언어정책, 언어생활로 말미암아 언어적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이질화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本節에서는 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을 먼저 살피고 현존하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가. 北韓의 言語觀과 言語政策

해방 초기 북한은 조선어문연구회(1948)가 학술용어사정위원회(1949)를 설립하여 唯物論的 「마르크스 언어학」¹³⁵⁾ 이론을 바탕으로 주시경선생의 전통적 언어학을 재구성하는 형태의 국어학 연구에 주력하였다. 1950년에 들어서 「스탈린 언어관」¹³⁶⁾을 수용함으로써 민족어를 향상 발전시키는 기반

135) 마르크스는 '언어'에 대해 "그 기원이 의식과 마찬가지로 오래이다. 언어는 곧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또 오직 그럼으로써 만이 나 자신을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의식이다. 그리고 의식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오직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려는 요구, 그러한 간절한 필요로부터서만이 발생한다." K. H. Marx, F.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1845~46. 「독일 이데오로기」, (역)(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23.

136) '스탈린 언어관'에 의하면, "언어는 소여의 사회 내부에서 이런 또는 저런 토대, 낡은 또는 새로운 토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사회의 역사 및 토대의 역사의 전 행정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언어정책은 “인민의 말과 글을 발전시키는 데 세계인민들의 언어 발전과 공통적인 방향”¹³⁷⁾을 고려하였다.

스탈린 언어관에 기초하여 북한은 언어를 사상교환과 사상교육의 주요 수단으로써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건설을 위한 주요한 무기로 여기면서 발전시켰다.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때의 언어 규범화 분야에서 이룩한 「혁명전통교양」과 「주체적 언어사상」¹³⁸⁾을 접목시켜 수령중심과 체제반영을 위주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면서 민족어 발전을 추진하였다. 이는 곧 “언어 생활에서 부르조아적 요소나 복고주의적 요소가 스며드는 것을 반대하고 투쟁해야 하며 노동자, 농민이 늘 쓰는 말에 토대하여 발전시

다. 그것은 어떤 한 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계급들에 의하여, 수백 세대의 노력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것은 어떤 한 계급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김민수, 「북한의 국어연구」(서울: 일조각, 1989), p. 106.

137) 김일성의 교시, 「문화어학습」 제2호(1968), pp. 1-7. 김일성의 교시에는 사회주의 승리 이후에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되는 날, 수백 개의 민족어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가장 풍부하고 유일한 지대어가 하나의 공통적인 국제어로 합류된다는 스탈린의 국제어 합류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하치근, 「남북한문법 비교 연구」(서울: 한국문화사, 1993), p. 25.

138) ‘주체적 언어 사상’이란 언어에 있어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살리자는 것으로 이것은 민족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대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척결하여 언어의 자주성을 살리며 나아가 인민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여 민족어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알맞게 발전시킴을 나가자는, 한마디로 민족어의 주체성을 올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서태길, “북한의 언어정책 고찰,” 「북한의 어학혁명」, 북한언어연구회(편)(서울: 백의, 1989), p. 22.

키며 혁명적으로 세련시켜야¹³⁹⁾ 된다는 것과 연결된다. 이렇게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모든 인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언어발전을 기도했는데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언어관¹⁴⁰⁾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언어도구관이다. 언어가 사회적 교섭을 위한 사고의 도구라는 관점이므로, 언어는 다만 전달의 매개라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로 근원에 있어서는 사고와 언어는 별개의 이원적(dualistic) 존재이어서, 부차적인 표현보다 사고가 먼저라고 보며, 둘째로 본질에 있어서는 실제로 나타난 표면적인 언어행용(performance)을 언어라고 본다.

둘째, 언어사상일체관이다. 언어도구관이 형식주의적임에 대하여 내용주의적인 일체관에서는 사고와 언어가 일원적(monistic)이어서, 언어가 의미를 낳는 동시에, 의미가 사고의 모습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로 사고와 언어와의 관계가 산 통일체이어서 언어는 기성의 성과가 아닌 하나의 활동이며, 둘째로 이런 점에서

139) 하치근, 「남북한문법 비교 연구」, p. 24.

140) 김민수, 「북한의 국어연구」, op. cit., pp. 98-99. 언어관에 대한 견해와 분석은 다음과 같다. 언어를 이성의 거울이라고 보는 것은 도구관의 견해이고, 언어를 이성의 기관이라고 보는 것은 일체관의 견해이며, 언어를 이성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성관의 견해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 개혁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대립된다. 도구관에서는 언어는 편의적인 도구이므로 사고의 표현에 맞게 인위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체관에서는 선천적인 능력이므로 인위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형성관에서는 창조적인 능력이므로 부단히 다듬어 가야 한다고 믿는다. 전수태, 「북한의 언어정책」(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2), pp. 29-30.

언어는 사고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본다. 이는 내면적인 인간의 언어능력(competence)을 본질적인 언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언어사상형성관이다. 위의 사고위주의 일체관에 대하여 언어위주의 형성관에서는 사고와 언어가 일원적이나, 사고가 언어에서 생겨난 것이어서 언어는 의지나 감정도 지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로 언어는 이성과 계몽의 모체이어서 언어는 지배되지 않는 이성의 근원인 일원이며, 둘째로 언어는 사고와 행동의 방법을 가르치는 산 민족정신이라고 본다. 이는 개개인을 형성하는 집단심의 창조력을 본질적인 언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어를 목적이나 수단으로 여기면서 민족어를 발전¹⁴¹⁾ 시켰는데, 사회주의권 언어관이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주체사상과 언어도구관, 언어사상일체관, 언어사상형성관, 그리고 과학의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 수반되는 무기로써 언어형태를 갖추고 민족어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우선적으로 북한은 1948년부터 한자폐지정책을 전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책배경은 해방 직후 김일성의 사상과 연관되는데, 이는 인민들 모두가 쉽게 글을 이해하고 언어의 기능을 사회적 기능과 연결해 과학·기술·경제·정치的发展을 꾀한다는 발상이었다. 한글전용정책의 당위성

141) 민족어 발전방향을 보면 교육과정에서 있어서도 학교에서 국어과목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는 등 성의를 가졌으며 이를 사회전반에 확산시켰는데 이는 사회주의건설에 있어 근로인민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언어의 보급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은 아래에 부가적으로 설명되어 진다.

조선말 발전에서 또 하나의 전진을 가져오게 한 일은 한자 사용의 폐지이다. 한자 사용은 조선인민의 언어생활을 오랫동안 짓눌러 온 요인의 하나였다. …글자 생활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언어 분야에서의 사대주의, 부르주아 요소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서 간절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인 언어 사상, 우리당의 모국어 교육 정책의 성과, 문맹퇴치 사업의 완성, 교육 분화의 균종화, 그리고 우수한 민족 글자의 존재 등은 우리의 한자 사용의 철폐의 철저성을 담보했으며, 그 성과적 단행을 보장하였다. 이리하여 1949년초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전반적인 글자 생활에서 한자를 쓰지 않게 되었다. 한자 사용의 폐지 - 이것은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과 혁명적 전개력의 위대한 열매이며 조선말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 놓은 또 하나의 크낙한 사변이었다.¹⁴²⁾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1960년대에 두차례 그리고 1970년에 김일성이 「한문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한자교육이 부활¹⁴³⁾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남한의 신문과 잡지를 읽

142)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민족어의 발전에 관한 김일성 동지의 사상」(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0)의 내용을 전수태, 「북한의 언어 정책」, pp. 171-72에서 인용

143) 그러나 북한에서 규범 문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언어 혁명’을 실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는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상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민족어 발전의 장애가 되는 한자·한문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언젠가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고영근(편), 「북한의 말과 글」(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218.

기 위해서라지만 실지적으로는 어휘력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언어의 창조성과 자주성에 기초한 「주체적 언어사상」에 근거를 둔 김일성 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1964년 1월 3일),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1966년 5월 14일)가 발표되고, 북한당국의 의욕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정책, 「말다듬기 운동」과 「언어정화작업」 그리고 그 보급운동을 주로한 「문화어 운동」을 국가주도로 전개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언어이론에 근거를 둔 언어정책을 추진하였다. 주로 이념부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하면서 낡은 언어나 과거에 사용하던 말들을 개조하거나 없애 버렸다.

표제어(올림말), 어휘적 특성, 뜻풀이, 용례 등에서도 변화를 추구했다. 이는 1981년에 발간된 「현대조선말사전」과 1992년의 「조선말대사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表-1 참조).

〈表-1〉 북한어에 있어서 표제어, 어휘적 특성, 뜻풀이, 용례

| | 현 대 조 선 말 사 전 | 조 선 말 대 사 전 |
|--------|---|--|
| 사전의 성격 | -영생불멸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적인 사전편찬원칙과 이론에 기초하여 편찬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주체의 언어이론에 기초하여 만들 |

| | 현 대 조 선 말 사 전 | 조 선 말 대 사 전 |
|------------------|---|--|
| | - 우리말 문화의 어휘를 기본으로 하여 과학적으로 규범적인 풀이를 함 | - 근로자들의 언어생활과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전 |
| 규모 | - 13만 어휘의 중사전 - 상·하권, 총 2,960쪽 (신국판) | - 33만 어휘의 대사전 - 1, 2권, 총 4,080쪽 (4×6배판) |
| 표제어(올림말) 선정기준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에 나오는 말마디들을 빠짐없이 올리기 위해 힘썼다. - 비록 고유어에 기원을 둔 단어라 하더라도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과 인연이 없게 되었거나 문화어에 대립되는 요소들을 올리지 않았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전적로작들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 동지의 고전적 문헌들에 나오는 사회정치 용어를 비롯한 작성 어휘 부류들 - ... 낯은 투의 한자말, 력사어, 고어, 방언 등을 널리 올리었다. |
| 어휘적특성의 표시 | - 학술용어 43개(경공업, 민속, 수의, 종교는 대사전에는 없음) | - 학술용어 46개(방직, 수리, 자동차, 전자, 체신, 화학공업, 약학은 사전에 없는 것이 추가됨) - 지난날에 쓰이던 한자말이나 한문투의 말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것을 일반언어생활에서 될수록 쓰지 말라는 뜻으로 부호 ⊗를 하여 그 특성을 밝혀 주었다. |

| | 현대조선말사전 | 조선말대사전 |
|------------|--|---|
| | | -사용확률에 따라 뜻풀이 끝에 ()안에다 빈도수를 표시 |
| 뜻풀이 원칙과 준칙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념이나 본질 또는 어휘적 뜻을 정식화하여 주신 올림말의 풀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모시고 그에 기초하여 뜻풀이 하였다. -올림말의 뜻과 개념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물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하고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에 철저히 서서 풀이를 주었다.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개념이나 본질 또는 어휘적 뜻을 정식화하여 주신 올림말의 풀이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명제를 정중히 모시고 그에 기초하여 뜻풀이 하였다. -모든 올림말의 뜻풀이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철저히 기초하여 주었다. |
| 용례 및 기타 특징 | -례구와 례문 등 제시. 그 일부 출처를 밝힘 | -례구, 례문을 되도록 많이 주고 가능한 출처도 모두 밝힘 -한자표시 -외래어 원어 표시 -소리의 높낮이와 길이 표시 |

류성민, 「북한종교연구 II」(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2), pp. 33-

특히 북한은 1964년 김일성의 주체적 언어사상을 관철하기 위해 일어의 잔재를 일소하고,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비규범적인 것으로 간주해 정화시키는 「어휘정리사업」¹⁴⁴⁾을 전개했다. 어휘정리는 외래어를 정리하고 쉽고 고운 말을 보급하는데 기여하면서 “민족의식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소한 언어적 요소도 샅샅이 찾아내어 완전히 없애 버림으로써 말을 민족적 자부심과 단결력을 높이는 힘있는 수단으로 가꾸려 하였다.”¹⁴⁵⁾ 어휘정리를 통해 북한은 사회·정치성이나 혁명적 요구에 맞게 어휘를 세련되고 풍부하게 하려 했다. 이는 아래의 사전에 잘 나타나고 있다.

「조선말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편), 1962.

「조선말사전」.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편찬실(편), 1963.

「조선말사전」.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소, 1964.

「현대조선말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68.

「조선문화어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3.

「현대조선말사전」.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1981.

144) 어휘정리에 대해 “조선어를 더 한층 발달시키며 인민들의 언어 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일 데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 1964. 1. 25)와 “조선어를 더욱 발달시키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일 데 대하여” (내각결정 제29호, 1964. 4. 21)를 통해 어휘정리와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145) 하치근, 「남북한문법 비교 연구」, op. cit., p. 29.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이 외 북한은 맞춤법, 문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등을 개정시키면서 민족어를 계승해 왔다. 이러한 동안 남북간 언어이질화가 진행되었는데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남북한의 공동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¹⁴⁶⁾

- 1) 무엇보다도 국토양단과 민족분렬의 35년 동안에 생기게 된 언어규범에서의 차이를 시급히 극복하고 통일적인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하루 빨리 진행하여야 한다.
- 2) 발음과 맞춤법, 띄어쓰기 등 규범의 통일과 개선문제를 해결하며 학술용어를 비롯한 용어의 통일, 민족어의 순결성과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휘정리와 말다듬기, 한자폐지문제를 풀며 통일적인 조선말사전의 편찬과 문법책의 편찬, 나아가서는 민족글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중대하고도 시급한 문제들을 다같이 연구하여야 한다.
- 3) 우리는 또한 조선말의 형성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유구한 역사를 주체성 있게 연구하여 체계화하며 백

146)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자,” 「문화어학습」 제2호(1981) 참조.

두산에서 한라산이 이르는 금수강산은 나라의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이 찾아다니며 우리말의 귀중한 방언자료와 고장이름(지명)을 전면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묻혀있는 민족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발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현실화된다면 한민족의 언어이질화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김일성의 언어관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다.

나. 南北韓 言語의 差異와 言語使用의 問題點

남북한은 해방후 상반된 정치이념과 사회체제 속에서도 언어의 이질화를 수반할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북한의 문화어운동이후 언어이질화가 진행되었고 지리적·사회적·정치적 단절과 함께 그 정도는 더욱 더 깊어졌다. 이 결과 남북한은 각각 나름대로 언어변화를 겪음으로 해서 언어이질화현상이 심각해 졌는데 이는 表-2에서 나타나는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表-2〉 남북 언어이질화 대표사례

| 북 한 | 남 한 | 북 한 | 남 한 |
|--------|------------|-----------|-------------|
| 가는 바람 | (미풍) | 미역발 | (미역양식장) |
| 가슴조임증 | (협심증) | 반일투쟁 | (항일투쟁) |
| 고지크체 | (고딕체) | 번호판(전화의) | (다이얼) |
| 관풍금 | (파이프오르간) | 벌차기 | (프리킥) |
| 기둥선수 | (스타플레이어) | 부풀음제 | (베이킹 파우더) |
| 나비헤엄 | (접영/버터플라이) | 불벼락을 들썩우며 | |
| 날래 | (빨리) | | (화염병을 터뜨리며) |
| 녀성고음 | (소프라노) | 사기판 | (타일) |
| 늪밭괘 | (알루미늄 도시락) | 살짜공 | (연타/배구) |
| 담배칸 | (흡연실) | 설기과자 | (카스테라) |
| 도는 네거리 | (로터리) | 양말바지 | (팬티스타킹) |
| 따라난병 | (합병증) | 잠약 | (수면제) |
| 물말 | (하마) | 췌기밥 | (주먹밥) |
| 물스키 | (수상 스키) | 포전정리 | (종지정리) |

자료: 「동아일보」, 1994. 10. 5

이 결과 일상생활 언어에 있어서 양자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할 지라도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언어의 사용을 서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며, 서로 다르게 발음하거나 글자가 다른 명사가 2천 4백여 개에 이른다. 또한 문법용어, 어휘, 맞춤법이 다르고 발음, 억양, 리듬의 음성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문법용어를 보면 북한은 「조선어문법」(1960),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 「조선문화어문법」(1979) 등의 편찬으로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나, 1976년판을 분석할 때 문법용어 308개 가운데 남북이 일치하는 것은 불과 42개에 이르기 때문에 문법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분야의 차이¹⁴⁷⁾는 특히 심하며 남북한간에 새로운 단어들 많이 만들어져 통일어문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은 국어순화운동의 결과 바꿈말을 제정하였고 북한은 어휘정리사업을 전개해 새로이 다듬은 말이 5만 단어에 이르렀다. 이 외 남에선 산업화·개방화와 함께 수많은 외래어가 유입되었고 북에선 어휘에 체제이념이 내포되어 의미가 왜곡되기도 하였다.

맞춤법에 있어서 남북한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분단 직후에도 사용하다가, 북한은 「조선어 철자법」(1948 & 1954), 「조선어철자법사전」(1956) 그리고 「조선말규범집」(1966 & 1988)을 공포해 쓰고 있으며, 남한은 1988년 1월 14일 새로운 「한글맞춤법」²⁸²⁾을 고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147) 남북한 어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수태·최호철, 「남북한 언어비교: 분단시대의 민족어 통일을 위하여」(서울: 녹진, 1989), pp. 282-89.

282) 남한의 맞춤법 개정과정을 보면,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 1937년 ‘한글맞춤법통일안 수정’ (일부 삭제 및 용어 변경), 1940년 ‘한글맞춤법통일안’ 원안 일부 개정, 1946년 ‘한글맞춤법통일안’ 다시 일부 개정, 1946년 9월 ‘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 확정, 1948년 ‘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 한글판 출판, 1958년 ‘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 용어수정판을 거쳐 1988년 1월 14일 ‘한글맞춤법’을 내놓았다.

를 보면 북한은 단어내부의 표기에 한정되나 남한의 경우 띄어쓰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남한이 형태주의의 발음 현실을 어느 정도 수용하나 북한에선 원칙적으로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시옷도 나타내지 않는 규범적 형태주의 표기를 지킨다.

띄어쓰기를 살펴보면, 북한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존적 요소는 모두 붙여 쓰기 때문에 단어들이 너무 붙여져 띄어 쓰는 방향으로 조절된 반면, 남한은 극히 일부에 한해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너무 띄어져 있어 붙이는 방향으로 조절하였다.

문장부호와 문장부호법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글을 쓸 때 가로쓰기 원칙을 하는 반면 남한에선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병행하고 있어 문장부호의 모양 역시 북한은 한가지로 남한은 두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한자사용, 사전사용, 컴퓨터사용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 우선 한자사용을 보면, 남한의 경우 「한글전용 5개년 계획」¹⁴⁹⁾(1970) 이후 한자교육을 부

149) 한글전용 촉진사항을 보면: 1) 70년 1월 1일부터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문서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도 한글을 전용하며, 국내에서 한자가 든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 2) 문교부 안에 한글전용 연구위원회를 두어 69년 전반기 내에 알기 쉬운 표기방법과 보급방법을 연구·발전시킬 것; 3) 한글 타자기 개발을 서두르고, 말단 기관까지 보급하여 쓰도록 할 것; 4) 언론 출판계의 한글전용을 적극 권장할 것; 5) 1948년에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70년 1월 1일부터 전용하게 하고, 그 단서는 뺀다; 6)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앨 것; 7) 고전의 한글번역을 서두를 것 등이다.

활¹⁵⁰⁾해 교육용 기초한자 1,781자를 가르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60년 중반 이후 한자교육을 부활해 중학교 1,500자, 기술학교 500자, 대학 1,000자, 모두 3,000자 정도를 학습용 한자로 가르치고 있으나 법조문, 공문서는 물론 교과서, 사전,¹⁵¹⁾ 신문, 잡지, 학술지 등 모든 출판물에 한글만 전용으로 사용해 학습효과가 거의 없어 주민이 이를 읽고 쓰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북한 사전의 자모배열이 서로 다른 것이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남북한은 조선시대 「訓蒙字會」에서 언급한 자모배열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즉 기본음 24자 다음에 16자의 「복합철자」를 가르치는 음성학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자음의 경우 남한사전에는 「ㄱ」 「ㄴ」 다음에 「ㄲ」 「ㄸ」이 오지만 북한사전에는 모두 맨뒤로 위치한다. 모음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남한의 경우 「ㅏ」 다음에 「ㅑ」가 위치하는데, 북한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의 기본음 다음에 「ㅐ, ㅒ, ㅓ, ㅕ」 등의 복모음은 뒤편으로 간다. 그리고

150) 남한은 해방후 조선어학회 주도로 한글전용을 전개하였으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후 1964년 9월 신학기부터 국민학교 600자, 중학교 400자, 그리고 고등학교 300자의 한자를 익히게 하였으나 한글전용 5개년 계획으로 한자교육이 중단되었다. 이 결과 문과를 제외한 고등학생들이 한자에 무지가 되자 2년 후 1972년 문교부 선정 '교육용 기초한자' 1781자를 시안으로 발표, 한자를 익히도록 하였다. 이는 북한의 상용한자 3,000자 보다 1,219자가 적은 것이다.

151) 1992년 발행한 「조선말대사전」에는 다른 외래어들과 함께 표제어에 한자도 병기하고 있는 것이 예외다.

둘째, 컴퓨터내에서 한글을 표현하는 코드방식의 차이이다. 남한은 완성형과 조합형 둘다 표준으로 하는 반면 북한은 완성형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컴퓨터 관련 기술적 용어들이 상당히 다르다. 이것은 또한 각각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남한의 경우 영어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한글로 통일된 번역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외양상 남북한의 자판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입력할 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문자통일을 통한 민족문화창출에 있어 어느 한쪽도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통일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이와 함께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는 남쪽의 표준어와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는 북쪽의 문화어¹⁵²⁾의 차이(表3 참조)가 존재하고, 어느 기준에 의해 사정하고 통일표준어를 정해야 하는가의 어려움도 있다.

152) 북쪽의 문화어는 엄밀히 말해 평양어라기 보다는 북한 전역에서 사용되는 방언을 많이 받아들인 잡탕말이다. 이는 “문화어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이 구현되어 이루어진 우리 민족어의 최고형태,” 「문화어학습」 제2호(1981); 최정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언어리론 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52와 「현대조선말사전」(1981), p. 1007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남성우·정재영, 「북한의 언어생활」(서울: 고려원, 1990), 제2장.

〈表-3〉 표준말과 문화어의 차이

| 표준말 | 문화어 | 표준말 | 문화어 |
|-------|-------|------|------|
| 산책길 | 유보도 | 레코드 | 소리판 |
| 채소 | 남새 | 대중가요 | 군중가요 |
| 화장실 | 위생실 | 투피스 | 동강옷 |
| 고기잡이 | 추어전 | 커튼 | 창문보 |
| 개고기 | 단고기 | 그룹 | 그루빠 |
| 아이스크림 | 얼음보숭이 | 소년단 | 빼오네르 |
| 도시락 | 곽밥 | 주제 | 썰마 |

이현복,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전망,” 『북한개론』, 최명(편)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488

6. 北韓의 言論現況 및 主要 흐름

언론은 항상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적합한 나름대로의 구조, 성격 및 기능을 지니며¹⁵³⁾ 대중이 속한 사회의 체제를 설명하고 정당화시키는 신념체계로서 정치이념을 반영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적 언론관에 따르면, 기능론적 측면에서 언론은 사회의 각 하위 체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배분함으로써 각각의 체계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사회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¹⁵⁴⁾ 즉 사회는 기능적으

153) Fred S. Siebert, Theodore Peterson, Wilbur Schramm,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pp. 1-2.

154)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서울: 나남, 1984), p. 193.

로 분화된 존재로서 그리고 그 구성원은 유기체적 존재로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때, 여기서 언론은 정보 제공기능(information), 사회결합기능(correlation), 사회유지 기능(continuity), 오락제공기능(entertainment), 사회동원기능(mobilization)¹⁵⁵⁾을 담당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북한의 언론은 사회주의 체제의 기능과 다른 사회구조적 작용에 연유되어 언론관과 언론의 역할·기능이 사회주의 언론관에 기초하면서 이념적으로 주체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근거 언론이 추구해야 될 세가지 기본원칙을 세워 놓고 있는데, 1) 김일성의 혁명사상·주체사상을, 2) 당중앙의 유일지도 원칙에 따라, 3) 종자(김일성주의, 주체사상, 당의 유일사상을 의미하는 사상적 알맹이)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원칙¹⁵⁶⁾에 따라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원칙은 김부자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당과 인민의 단결을 주입시키고 사회주의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전위대로 작용하려고 한다. 특히 세번째 사항이 주는 의미는 첫번째와 두번째의 실천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원칙」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이는

155) Denis McQuail,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1983), pp. 76-84.

156) 「출판보도활동에 대하여」(동경: 주체사상국제연구소, 1987), pp. 142-44;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 5-81.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방침을 구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항일유격대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문·방송 등의 언론매체에 선 김부자 및 당정책에서 지시된 사항들을 신속히 밀고 나가야 하는 「전격전의 방법」과 이를 실천하는데 있어 중도포기는 있어서는 안되고 이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섬멸전의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언론은 자유주의 언론과는 그 속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언론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언론통제를 확실히 하고 있다. 그렇다고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헌법 제4장 제53조를 보면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공민을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때 보장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언론은 「정치사회화의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수령이나 당이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선택된 내용을 보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방송의 오락성이나 보도의 속보성 그리고 보도매체로서의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당론·시사성·시효성·정론성 등의 원칙 하에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속성과 구조적인 측면은 과거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는 김일정보다는 김정일이 언론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에 있어 북한의 선전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김일성교시에 의해 김정일은 「신언론정책」¹⁵⁷⁾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의 실천사항으로 언론매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지루하고 딱딱했으나 최근엔 좀더 친숙하고 재미있는 오락성을 가미한 내용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외적인 차원에서선 국제화 진전과 탈냉전 시대에 돌입하면서 자체이념을 강조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지식인 문화인 그룹들을 최전방에 내보내면서 대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한편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사상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 위한 전술적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언론실태와 신언론정책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신문·출판·방송 등의 현황을 각각 파악하고자 한다.

가. 新 聞

북한의 신문은 「레닌관」¹⁵⁸⁾을 그대로 따르면서 김일성부자 우상화, 주체사상의 전파, 당노선과 정책을 해설 보도하는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이념도구」이다. 이는 북한의 신

157) '신언론정책'의 시작은 1993년 8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후 김정일 문화사업에 대한 교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158) '레닌관'에 의하면 신문은 "집단적 선전자이며 집단적 조직자"이며 "공산주의 사상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무기"이고 그 기능은 선전·선동·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학이론서의 하나인 「신문리론」에서도 잘 묘사되고 있다. 이 이론에 기초하여 신문내용은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선전-선동자로서의 기능」, 당과 근로대중과의 연계를 위한 「조직자로서의 기능」, 공산주의 사상교양과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문화 교양자적인 기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 근거해 뉴스와 논평이 선택되어 보도되는데 김부자의 교시내용과 그에 관한 기사가 주가 된다. 이러한 관념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제내의 살인, 강도, 공무원의 비리 등 사건·사고에 관한 기사는 보도하지 않고¹⁵⁹⁾ 주민을 조직하고 교육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북한신문의 기능은 혁명을 위한 인민사고통합을 위해 당국이 정한 일련의 공통된 가치를 규정하여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선전매체에 불과하다.

신문체계는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피라밋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로동신문을 쟁점으로 해서 도당신문과 그 외의 신문에 기준하고 있다. 신문보도내용은 철저히 당중앙위 선전선동부 신문과와 정무원출판총국 신문과의 행정적인 감시와 감독하에 제작 발간되고 있다. 대대적인 보도내용은

159) 남한이 사회의 범죄·비리·부조리 등을 파헤쳐 보도함으로써 비판적인 기능을 하는 반면 북한의 언론매체는 긍정적 모범적 감동적 기사를 통해 인민을 교화하고 계몽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긍정적 모범은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되며 부정을 극복하기 위한 명백한 방도를 가르쳐 줌으로써 근로자들은 부정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된다”고 한다(1960년 노동당 제4차대회 중앙위원회에서의 발언).

(1) 공산주의 이념형성 및 공고화, (2)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고양, (3)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정신의 고양, (4) 반미 적대감정의 양양, (5) 김일성부자의 세습체제 지지 및 찬양¹⁶⁰⁾이 주류를 이룬다.

중앙지로는(괄호안은 발간기관),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민주조선」(정무원), 「보위」(사회안전부), 「조선인민국신문」(인민무력부) 등이 있고, 영자지로는 토요일에 발행되는 주간지 「The Pyongyang Times」(평양 타임스) 1개지가 있다. 격일간지로 「로동자신문」(직업동맹), 「수산신문」(수산위원회), 「농업근로자」(농업 근로자 동맹) 등 9개가 있다. 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이 발행하던 중앙지인 「로동청년」¹⁶¹⁾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당정책 노선을 전하고 공산주의 교양역할을 수행했으나 1992년말경 신언론정책과 함께 용지난과 인쇄시설의 낙후로 폐간되었다.

북한신문을 대표하는 「로동신문」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고 체제유지의 기반인데 1945년 대중을 조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창간된 「正路」의 후신으로 하루 6면씩 주 7회 제작되며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나뉘어 휴일 없이 조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제호 옆에는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160) 「서울신문」, 1990. 4. 5.

161) 「로동신문」이 지도체제와 남북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반면 「로동청년」은 특히 사회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출판사정과 신언론정책으로 「평양신문」과 함께 폐간되었다.

는 문구가 자리잡고 있다.

이 신문의 주요 임무와 기능은 1)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 선전, 2) 당의 활동과 목표달성에 대중을 조직, 선동·선전하며, 3) 김일성 1인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김일성 우상화선전, 4) 각급 당 단체와 당원들의 사업지침 적시 하달¹⁶²⁾ 등이다.

구성내용을 지면별로 살펴보면 1면엔 김일성부자의 연설·어록·교시·담화 등의 기사와 동정기사로, 2면은 공산주의 교양과 당의 선전, 외국으로부터 김부자에게 보내진 전문내용 그리고 독자투고 축전 등 여러 가지가, 3면은 각 지방의 산업소식과 경제기사를 주로 취급하면서 생산활동을 장려하는 기사가, 4면은 국내외 소식을 구분 없이 섞어 보도하고 있는데 외국대표단의 방북동향 및 각종 행사기사를, 5면은 통일관련 문제를 취급하면서 남조선관련 기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보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나머지 6면은 4면과 비슷하다.

이러한 보도편성은 김일성사후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는 부분에 있어 김정일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이를 분석하면 김정일에 대한 기사가 일면으로 크게 보도되고 있고 김일성에 대한 기사는 2, 3면에 밀려 기재되고 대남 비방강도는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내용면에 있어서 로동신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속보성과 진실성이 부재하며 전체적으로 사회면과 광고란이 없으면서 사건사고, 범죄·비행, 생활정보, 스포츠기사 등의 기사가 일체

162) 「서울신문」, 1992. 11. 2.

실리지 않는다. 보도부분에 있어선 김일성·김정일에 관한 기사를 주로 실는 1, 2면의 경우 가장 비중있게 다루며, 5면의 경우 대부분의 남한기사의 언론매체를 밝혀 주는 것이 남한신문의 경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남한 내의 반정부시위와 노동파업 등에 관한 소식은 빠뜨리지 않고 실린다. 또다른 특징은 대중성을 위해 독자의 편지와 노동자, 농민, 통신원 제도를 활용¹⁶³⁾하고 있다.

보도내용에 있어 로동신문 사설은 북한이 중요시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를 분석하면 국내정치 24.1%, 국제관계 19.3%, 사회 11.1%, 문화 4.2%¹⁶⁴⁾순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분야를 전기간을 통해 많이 다루면서 10년단위로 중점분야를 달리하는데 1950년대는 사회·문화부분, 1960년대는 국제관계부분, 1970년대에는 경제부분, 그리고 1980년대는 국내정치를 다룬 사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후계승계를 위해 1970년대부터 로동신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는데 이는 表-4에서 나타나듯이 「후계자 암시기」(74년~81년), 「후계자부각기」(82년~86년), 「지도

163) 전수대, 「북한의 언어정책」(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2), p. 204.

164) 1952년 1월 16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총 5천9백89편의 로동신문사설 가운데 2천4백30편(40.6%)을 정리 분석한 이은죽 교수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은죽,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서울: 서울대학교, 1990), pp. 141-52. 이러한 분석의 추세는 조형준, “북한언론에 관한 연구--노동신문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2)와 이상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언론--북한언론의 본질과 비판」(서울: 범우사, 1979) 참조.

자부각기」(87년~93년)의 3단계를 거쳐 나누어진다. 초기 1 단계에선 김정일에 관한 독자적인 기사는 실지 않고 김일성과 관련된 기사에서 김정일을 「당중앙」, 「영광스러운 당중앙」, 「당중앙의 향도」 등의 표현으로 부각시켜 보도화하였다. 2단계에 접어들어서 로동신문은 「영광스러운 당중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지도자동지」란 표현을 자주 사용했으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비서인 김정일동지」란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후계자로 부각시켰다. 3단계에 접어들어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로 보도하면서 김정일을 지도자로 확고화하는데 주력하였다.

〈表-4〉 로동신문의 김정일·김일성기사 비중변화

| 시기 | 기사 연도 | 김정일 단독 (A) | 김정일 김일성 공동등장 | | 김일성 단독 (B) | A/B |
|---------|---------|------------------|-----------------|-----------|------------------|------|
| | | | 김정일 비중 | 김일성 비중 | | |
| 후계자 암시기 | 74년-81년 | 0 | 0 | 32 | 108 | |
| 후계자 부각기 | 82년-86년 | 11 | 19 | 30 | 33 | 0.33 |
| 지도자 부각기 | 87년-90년 | 37 | 28 | 16 | 32 | 1.15 |
| | 91년 | 11 | 9 | 3 | 6 | 1.83 |
| | 92년 | 23 | 4 | 1 | 2 | 11.5 |
| | 93년 | 28 | 2 | 7 | 5 | 5.6 |
| | 소계 | 99 | 43 | 27 | 45 | 2.2 |
| 총 계 | | 110 | 62 | 89 | 186 | |

김정용, “김정일의 이미지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동아일보」, 7. 17에서 재인용.

「민주조선」은 주 6회(월요일은 미발간) 4면으로 발행(화·금요일은 6면)으로 비록 로동신문에 비해 그 권위는 떨어지지만 다른 신문보다는 앞장선다. 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정무원을 대변하고 있는 기관지로 정부의 법령과 결정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많이 전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김부자체제의 강화를 위해 선전에 비중을 두면서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실리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입법기구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각도에서 발행하는 지방지로는(괄호 안은 발간 당위원회), 「남포신문」(남포시 당위원회), 「개성신보」(개성시 당위원회), 「평북일보」(평북도 당위원회), 「평남일보」(평남도 당위원회), 「함북일보」(함북도 당위원회), 「함남일보」(함남도 당위원회), 「황북일보」(황북도 당위원회), 「황남일보」(황남도 당위원회), 「강원일보」(강원도 당위원회), 「자강신문」(자강시 당위원회), 「량강일보」(량강도 당위원회)등 12개지가 있는데 4~5만부 정도가 발간된다. 이러한 신문들은 로동신문에서 나온 보도들을 대원칙에 입각해 자기 나름대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방지 발간에도 일련의 변화가 있었는데, 중앙지인 「로동신문」, 「민주조선」, 「로동청년」과 함께 북한의 4대

165) '평양신문'은 북한 전역에 배포되었는데 이 역시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 선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이 신문은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서

일간지 중의 하나였던 지방지「평양신문」¹⁶⁵⁾ (평양시 당위원회 발간)은 「로동청년」 폐간과 같은 이유로 사라졌다.

일간지외에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교통신문」, 「건설신문」, 「통일신문」, 「교원신문」, 「조선인민군신문」 등 20여개의 전문지가 있으며 공장기업소에서 「공장신문」과 각대학에서 발행되는 「대학신문」 등 하급신문이 있다.

상기에서 언급된 북한신문의 쓰기와 구성형태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면 한글전용으로 가로쓰기를 채택하고 있다. 본문활자는 명조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활자가 남한신문에 비해 작아 뾰뚱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김부자의 이름과 교시내용은 크고 진한 고딕체를 사용하면서 차별화하고 있고 항상 「께서」, 「하시였다」 등의 존칭어를 간다 붙인다. 구성은 기사가치가 높은 것은 상단에, 그 다음의 가치는 그 밑에, 그리고 더 낮은 가치의 내용은 중간 하단으로 배열한다. 편집기법의 주 특징은 제목에 동사를 많이 사용하며 컷을 일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길고 설명적이다. 약어나 축어 그리고 신조어, 외래어, 한자어 등의 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고 시각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사진이나 삽화는 대체로 전체 지면의 12% 정도이나, 때로는 관련기사 없이 사진만 게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¹⁶⁶⁾

볼 수 없는 만화·상품광고·연재소설·일기예보 등이 실려 있고 TV·라디오 프로그램도 유일하게 안내하면서 편집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가독성이 높았다. 또한 이 신문은 '로동신문'이 서기연호와 양력날짜만을 알리는데 비해 그 밑에 음력날짜를 더 적어 표기하였다.

166) 박정규, “북한 언론매체의 역사,” 「언론학원론」, 한국언론학회(편)(서울: 범우사, 1994), p. 215.

신문의 판매부수와 판매형태를 살펴보면, 로동신문 50만~80여만부¹⁶⁷⁾와 민주조선 10만부를 제외하고는 4~5만부 정도가 발행되고 있는데 우편배달에 의해 전달된다. 당·정간부들에게는 月 1원 50전(한국돈으로 5백10원 정도)에 직접 배달되지만 개인 신문구독은 거의 없어 家家戶戶 배달되지 않는다.¹⁶⁸⁾ 따라서 주민들은 학교·협동조합·직장 등에 배치된 신문을 통해 또는 직장·마을 단위로 조직된 「독보회」¹⁶⁹⁾를 통해 신문을 볼 수 있다.

나. 出 版

북한의 출판물은 「사상적 무기」와 「혁명적 출판물」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출판 지침지인 「편성리론과 실천」의 서론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출판이란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사회·문화건설을 실천하기 위해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 수 있다”¹⁷⁰⁾고 한 김일성교시에서도 잘 나

167) 발행 부수가 한때 1백50만 부에 달했고 평균 1백여만 정도였으나, 최근 종이부족과 인쇄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발행 부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168) 신문가판대가 평양및 주요 관광지의 역과 호텔에 비치되어 1부당 10전에 팔고 있는데 주로 외국인 여행자가 사보고 있다.

169) 독보회는 필요할 때 주민사상교양을 한다.

170) 「서울신문」, 1990. 10. 29에서 인용

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주입시키면서 당원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김부자 찬양과 당정책을 인민들에게 교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치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당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출판은 있을 수 없고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인쇄·출판 등 역시 있을 수 없다.

북한의 출판담당부서는 형식상 정무원 직속인 출판총국이나 실제로는 노동당중앙위 선전선동부 출판지도국이 맡고 있어 발행되는 출판물이 「기관잡지」라는 특성을 지닌다. 출판사는 50여개 정도로 모두 관영출판사이며 자유경쟁의 원칙하에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목적에 의해 설립되면서 기능과 계층별로 철저히 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모든 간행물이 등록번호와 검열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발행부수 또한 엄격하게 통제된다. 간행물 유형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출판사에서 여러 종류의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잡지 등을 발간하지만, 내용상 同종류의 잡지를 발행하지 않으며 시사성과 오락성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잡지와는 달리 성격 및 구조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

출판물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조선로동당출판사는 「로작」과 사상·혁명 등의 정치서적, 금성청년출판사는 사상·혁명, 사회과학원출판사·중앙과학기술통보사·공업출판사는 과학기술, 문예출판사는 문예작품, 교육도서는 김일성종합출판사가 관련도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가 좋아하는 만화는

금성청년출판사, 조선미술출판사, 예술교육출판사 등에서 제작된다. 계층별로는 사로청출판사·근로자사·조선인출판사·여성출판사·외국문종합출판사 등이 있으며 이들 출판사 밑에 여러 개의 부속출판사가 따로 있다. 특히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출판업무 외에 북한출판사업을 총지휘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김부자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단행본의 경우 발행량이 정치(36%), 문학예술(34%), 과학기술(6%), 사회(6%), 역사(4%) 순이다.¹⁷¹⁾ 정기간행물의 경우 일간이 29개, 격일간 2개, 주당 2회가 9개, 주간 2개, 반월간 2개, 월간 22개, 격월간 3개, 계간 1개 등 모두 122개¹⁷²⁾에 이르며, 대남 선전용 70여종과 단행본 200여종, 대외 선전용 1백여 종이 있다. 이들은 일반사회학, 문학예술, 자연과학, 대외선전 분야별로 나누어진다.

일반사회학 부문의 간행물로 여러 종류가 있다. 이는 대부분 월간이나 발행기관과 발행사가 다른 것이 타부문잡지와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다. 이는 아래의 表-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71) 「일간스포츠」, 1990. 8. 17; 「스포츠서울」, 1990. 9. 10.

172) 윤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I」(서울: 고려원, 1991), p. 92.

〈表-5〉

일반사회학부문 잡지

| 잡 지 명 | 간 행 | 발 행 기 관 | 발 행 사 |
|--------|-----|----------|----------|
| 로동자 | 월간 | 직총중앙위원회 | 직맹출판사 |
| 천리마 | " | | 군중문화출판사 |
| 삼천리 | " | | " |
| 대중문화 | " | 정무원문화예술부 | " |
| 조선녀성 | " | 녀맹중앙위원회 | 조선녀성사 |
| 청년생활 | " | 사로청중앙위원회 | 로동청년출판사 |
| 소년단 | " | " | " |
| 새세대 | " | " | " |
| 남조선문제 | " | 남조선문제연구소 | 로동출판사 |
| 국제생활 | 반월간 | | 국제생활사 |
| 조선우표 | 격월간 | 정무원체신부 | 체신출판사 |
| 조선(화보) | 월간 | | 조선화보사 |
| 인민교육 | " | 정무원교육위원회 | 교원신문사 |
| 고등교육 | " | " | " |
| 력사과학 | 격월간 | 사회과학원 | 사회과학원출판사 |
| 조선어학 | " | " | " |
| 경제연구 | 분기간 | " | " |

자료: 윤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I」(서울: 고려원, 1991), pp. 93-94.

주요잡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로동자」는 공장사업소의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당이 제시하는

과제의 전달과 그 실천과 완수를 위해 배포된다.

「천리마」는 북한이 유일한 대중종합교양잡지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양이나 일반상식보다는 통일문제나 체제 찬양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지난 1959년초 「천리마운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이의 임무는 (1) 당의 노선과 정책, 특히 수시로 제기되는 시책을 선전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들을 고무할 것, (2) 인민들이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노력 혁신을 일으키도록 추동할 것¹⁷³⁾ 등이다.

「국제생활」은 군당 지도원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국제정세를 알리려 발간되는 정치교양지인데 미국과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

「남조선문제」는 남한사회의 정치·군사·사회·문화·경제분야에 걸쳐 논문과 해설형식으로 구성되어 남조선 혁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단」은 중학생·고교생이상을, 「새세대」는 고교생이상을, 「청년생활」은 청년을, 「인민교육」은 각급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선여성」은 여맹초급단체간부들과 여맹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로동당의 노선·정책 선전, 여성 직장진출을 추동, 노동과 군사훈련 참가 등을 유도하고 있다.

173) 「매일경제신문」, 1992. 10. 3.

주목할 사항은 1946년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창간되어 근로자사에서 30만부 정도를 발행하였던 「근로자」가 폐간된 것인데 폐간이유가 불확실하다. 이 잡지는 당정책 홍보와 집행을 위한 논설이 주로 게재되었고 이외 김부자의 저술문헌도 소개되었다. 특히 (1) 당 간부를 대상으로 수시로 제기되는 로동당의 시책과 그 관철을 위한 방도를 제시, (2) 당의 노선과 정책을 꾸준히 선전, (3) 김일성유일사상 계획 확립에 기여¹⁷⁴⁾하면서 주어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이와 함께 당원들의 정치이론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학예술 부문의 출판은 대부분 문학예술총동맹의 직속기관인 문예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국내외 문학, 음악·미술·영화등 문화예술 관련 단행본, 해외작품 번역, 고전 등을 펴내고 있다. 문예출판사의 간행물을 정리하면 작가동맹 중앙위원회가 발행기관으로 월간인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등이 있다.

이중 「조선문학」은 북한의 대표적 월간 문학잡지이며 북한 당국이 작가들에게 당의 문예정책을 선전하게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혁명전통물 30%, 전쟁물 30%, 조국통일물 30%, 그리고 사회주의건설물 10%¹⁷⁵⁾로 구성되어 있고, 소설·단편

174) 「세계일보」, 1992. 10. 7; 「서울신문」, 1992. 10. 20.

175) 유재천, 「북한 언론의 실상」(서울: 민족통일협의회, 1992), p. 163.

소설 7~10편, 서사시·서정시 40여편 평론과 기타 4~5편¹⁷⁶⁾ 정도가 실린다. 1981년 말부터는 김정일의 국제적 지위와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를 위한 찬양시를 매호 3~4편씩 수록하고 있다.

「청년문학」은 기성작가와 신인작가의 단편소설·시·희곡·평론 등이 실리는데 신인문학도 등용의 기회를 주고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고 있다. 또한 「아동문학」은 아동작가들의 글을 싣고 있다.

월간으로 문예출판사에서 발행되면서 발행기관이 다른 문예잡지로는 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조선미술」, 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조선음악」, 무용가연극인동맹위원회의 「조선예술」, 영화인동맹 중앙위원회의 「조선영화」 등이 있다. 그리고 간행시기가 계간이고 同발행사이나 발행기관이 작가동맹중앙위원회인 「시문학」과 「극문학」이 있다.

「조선영화」는 영화인동맹 기관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 임무는 김일성부자 충성심 고양과 영화인들의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잡지는 영화잡지라는 특성 때문에 비교적 많은 사진과 함께 「우수영화」의 시나리오와 새영화 소개 그리고 영화 일반상식 등이 고정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최근 영화작품이 김부자찬양, 체제보위, 노역선동 일색으로 인해 소재와 주제가 한정되어 시나리오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176) 「경향신문」, 1992. 11. 2.

있는데, 그 이유를 「사상성의 결여」로 진단하고 「사상적 알맹이인 종자작업의 명백성을 확실히 할 것」¹⁷⁷⁾을 촉구했다.

「조선음악」은 로동당의 예술관련시책을 전달하고 있는데 새로 발표된 가요의 악보나 각종 음악평론 및 음악계 동정 등이 실린다.

자연과학분야의 발행기관은 모두 과학원이며 월간으로 간행된다. 이중 과학원출판사는 「과학원통보」와 「력사과학」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에서 출판되는 것은 「수학과 물리」, 「분석화학」, 「생물학」, 「지질과 지리」, 「전기」, 「금속」 등이 있으며, 공업출판사의 「건축과 건설」, 의학출판사의 「조선의학」 등이 있다.

대외선전부문에 있어서는 8종류의 정기간행물이 8개 국어로 발간되는데 모두 월간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외선전 수단으로 출판되고 있는데 모두 노동당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다. 그중 발행기관이 조선화보사이고 외국문출판사가 발행사인 「조선」, 「오늘의 조선」, 「새조선」 등이 있고 同발행사이나 조선무역위원회가 발행기관인 「조선무역」이 있다. 그리고 발행기관이 체신성이고 체신출판사가 발행하는 「조선직맹」, 「조선여성」, 「조선청년학생」 등이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선언론정책으로 로동신문부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일부 주요 신문과 일부 잡지가 폐간되고 있다.

177) 「문화일보」, 1994. 7. 15.

더불어 「체육」, 「자연보호」, 격월간으로 영자로 발간되던 「Korea Trade Union」, 「Woman of Korea」 등도 폐간되었다.

반면 그동안 관광안내잡지 역할을 한 「금수강산」이 한글판에서 영문판으로 제작되고, 기존의 「과학세계」보다 한 차원 높은 「과학원 통보」가 순수 학술적인 과학적 업적과 이론적 접근을 모색하면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한영판으로 발행되고 있다. 그리고 교양잡지 격인 「음악세계」가 한글로 발간되고, 「조선의 요리」가 새로이 창간되었는데 기존의 교양적 내용과 준 오락적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경제난, 종이부족, 대외적인 정보차단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문제는 새로운 잡지가 창간되고 있고 지금까지 별로 교화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부문에 있어 새로운 제목과 내용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신언론정책은 새로운 홍보매체를 발전시키려는 의미와 함께 선전선동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배려라 판단된다.¹⁷⁸⁾

이들 간행물에 속담과 격언이 유달리 많이 등장¹⁷⁹⁾하는데

178) “시대적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며, 편집의 정책적 수준을 더욱 높이고, 누구나 다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도록 신문을 특색있게 만들라” (「세계일보」, 1994. 2. 23)고 김정일이 노동신문사 간부들에게 말한 대목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179) 「국민일보」, 1992. 1. 7. 보다 광범위한 설명은 남성우·정재영, 「북한의 언어생활」(서울: 고려원, 1990), 제6장.

1) 김일성-김정일체제 및 영도력 선전, 2) 주민노역 찬양, 3) 북한식 사회주의 우월성 주입, 4) 반한 반미선전 등에 관한 것이 1백여 개에 달할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내부 사정과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반한·반미에 관련된 내용은 줄어들고 있다.

김일성저작의 경우 단일문건이 정치, 경제, 통일, 외교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를 비롯한 당문헌들은 1,300여 종에 2억 5,670여만 부를 출판¹⁸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가장 많이 발간된 책은 「로작」이며 38권까지 발간되었으며 매년 35만 부 이상씩 발간되고 있는 주체사상의 총서인 「김일성 저작집」, 그리고 7권으로 되어 있는 「김일성 선집」이 있다. 이를 시기별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⁸¹⁾

- 「김일성선집」제1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54), 1-4권 134편
- 「김일성선집」제2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64), 1-6권 124편
- 「김일성저작선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87), 1-9권 202편
- 「김일성저작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92), 1-38권 1,228편

180) 김용학, 「로동신문」, 1990. 10. 23.

181) 김병로, 「김일성저작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7).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찬양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이미 1백만부 이상이 발간되었다. 특히 주체 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와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것은 혁명승리의 기본담보」,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소개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전기」,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 등은 혁명전통교양을 위한 지침서로써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전적 료작인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는 “3대혁명의 역사적필연성과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당성,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성과 그리고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¹⁸²⁾를 명시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일성저작 다음으로 김정일명의로 된 저작물이 약 4백편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제목이 밝혀진 문헌은 2백30여편, 전문이 밝혀진 것은 170여편 정도이다. 김정일저작은 「김정일선집」외는 김일성의 「저작선집」이나 「저작집」과 같은 전집류의 형태로 발전하지는 않았는데, 170여편의 문건 중 전집류 문헌에 수록된 것은 다음과 같다.¹⁸³⁾

182) 「로동신문」, 1990. 3. 3.

183) 김병로, 「김정일저작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김정일선집」 제 1, 2권(75편)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1권-5권(103편, 제4권
은 미입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16편)

또한 주체사상을 계승하고 강화하기 위해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의 문헌은 해설선전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주목할 만하다.

김정일의 개별문건은 「조선중앙년감」, 「근로자」, 단행본 소책자에 주로 수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 김정일이 직접 저작한 저작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대부분 확인된 저작의 상당 부분이 김정일의 말이나 연설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그 중 「조선중앙년감」과 「로동신문」에 수록되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은 총 30여편으로 전체 저작의 10%미만이고 그 나머지는 과거의 작품을 소급해서 출판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⁴⁾

김병로박사에 의해 정리된 김정일저작의 전체적인 내용구성은 사회·문화 분야가 전체의 55%, 정치 26%, 경제 14%, 군사 3%, 통일 1%이며, 전반적으로 당조직과 유일사상체계 및 문예 분야의 문헌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⁸⁵⁾

184) Ibid., p. 24.

185) Ibid., 제3장.

여기서 김정일의 외교·통일관련 문헌이 제일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관한 독립적인 문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대신 1984년 두 권으로 출판된 「김정일 지도자」는 김정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1974년 이후 권력이양 과정에서 김일성이 대외·대남 업무를 그리고 김정일은 대남 업무만을 관장하는 역할분담으로 기인된다.

김정일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열정은 대단해 이 분야에 대한 저작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사회주의 문예이론에 관한 저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 「주체의 문학예술에 관하여」(1-5권)라는 단행본을 비롯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 「무용예술론」(1990. 11. 30), 「미술론」(1991. 10. 16), 「음악예술론」(1991. 7. 17), 「건축예술론」(1991. 10. 23), 「주체문학론」(1992. 1. 20) 등을 출판¹⁸⁶⁾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최근 김정일 우상화작업을 위해 시·소설·노래·방문기들을 편집한 작품집과 단행본 70여 종 약 3백만 부가 출간되었는데 주로 문예출판사와 금성청년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

외국문출판사는 김일성·김정일 저작선집과 노동당과 정부의 각종 문헌 등을 외국어로 번역 출간하고 있는데 해외의 무명작가나 친북인물들을 동원해 김부자우상작품을 창작, 출

186) Ibid., p. 35.

판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10년동안 400여 종의 문헌을 외국어로 번역·출판하여 보급하였다.¹⁸⁷⁾ 그리고 1990년에는 김정일 후계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출판물내용 변화를 모색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91년에 발간된 「조선로동당력사」이다. 이의 전신은 1979년 발간된 「조선로동당략사」인데 이를 개정하여 새 제목으로 재 발간한 것이다. 과거의 내용이 김일성위주였던 것을 신판에는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 부문을 제외하고는 김정일을 치하하는 내용으로 일색 되어 권력이양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상기의 출판물들은 마지막으로 평양종합인쇄공장, 교육도서인쇄공장, 사회과학원인쇄공장, 사회안전부인쇄공장 등 10군데¹⁸⁸⁾에서 인쇄가 된다. 그중 동독의 기술 및 설비원조로 만들어진 평양종합인쇄공장은 인쇄물의 80%를 맡고 있으며, 기타 인쇄공장에서 나머지 출판물들을 인쇄하고 있다. 인쇄시설은 상당히 낙후된 상태이고 인쇄기술은 남한의 1960년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출판사업의 경쟁이 없어 도서의 부피는 얇고 갱지를 사용해 지질은 조잡하다. 그러나 대외용이나 특수인쇄물들은 일본 조총련 산하의 시설들을 이용해 지질의 수준이 국내지보다 우수하다.

187) 「로동신문」, 1993. 2. 13.

188) 「세계일보」, 1991. 11. 6; 「민주일보」, 1990. 11. 1.

다. 通 信

사회주의 국가는 보통 하나의 통신사를 가지며, 북한에도 역시 「조선중앙통신사」가 유일한 통신사이다. 이는 정무원 직속기관이며 노동당과 정무원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기관이다. 외국의 통신사와 협정에 의해 알제리 북경 아바나 자카르타 등에 파견한 특파원을 통해 외신을 받으면서 국외 정보를 독점¹⁸⁹⁾ 하고 있고, 타언론에 허용되지 않는 영역까지 취재를 할 수 있어 국내외 정보와 뉴스를 통괄하고 있다. 또한 소련의 타스·적색타스, 新華社의 참고소식, 외국의 통신·방송·신문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가지고 「참고통신」을 만들어 당간부들에게 배포하며, 대내외선전을 위해 「조선중앙년감」 외 일간으로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로·불·서문통신」 등을 발행하면서 정보전달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조선중앙통신사는 나라의 창구역할을 하면서 출판보도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구나 중앙통신사는 정치·군사·외교·행정·경제·남한소식 등을 중앙과 지방의 신문사와 방송국들에게 전달하면서 당·정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를 구체

189) 서방 통신기관과의 교류는 거의 미비한 상태이다. 주로 프랑스의 '아바스통신사'와 '로이타통신사'가 준 상주하면서 취재했으나 김일성 사망 직후 대외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단 축출돼 취재가 불가능했다. 대신 미국 'CNN방송'의 취재가 허용되어 그 당시 북한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보도하였다.

적으로 살펴보면, 대내적으로는 김일성이 제시한 혁명노선과 그 실현을 위해 당의 정책과 시책을 인민대중에게 신속 정확히 침투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식민지 예속화정책, 남조선 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 폭로·분쇄 및 북조선에 대한 비방증상과 허위선전의 반박규탄, 북조선 인민이 진행하는 건국 위업과 그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제적 지지성원 유도와 국제정세 자료들을 신문사·방송국에 제공하여 인민의 국제정치 정세이해를 돕는 것¹⁹⁰⁾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라. 放 送

북한의 방송은 「국가방송」으로써 마르크스-레닌의 언론관을 전형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써 「일정한 선전목적을 실현하는 보도선전」 및 「사상문화교양수단」과 「문화예술 선전수단」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방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상문화교양자적역할”¹⁹¹⁾을 하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선전기구로써, 대중을 교양하기 위한 선전수단으로써, 그리고 김부자우상화와 유일체제를 강화시키는 수단과 함께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러

190) 유재천, 「북한 언론의 실상」, op. cit., p. 64.

191) 「백과전서」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p. 77.

한 주민교화사업의 핵심무기는 인쇄매체보다는 전파매체가 앞서고 있는데 이는 하부적 실천적 도구에 있어 전파매체가 앞서기 때문이다.

방송 역시 언론에서 추구해야 될 세가지 기본적 원칙들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는 첫째, 주체사상을 방송에서 구현해야 하며, 둘째, 방송담당자들이 당에 의거하여 모든 활동을 해 나가야 하며, 셋째,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제작시 김일성주의를 표방하는 좋은 내용을 골라 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단기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속도전과 사상전의 방침을 구현해야 하는데, 그 구현은 항일유격대식 방법과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가능하다.¹⁹²⁾

이러한 원칙과 함께 방송내용이 「우리식」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¹⁹³⁾

- 1) 김일성부자의 위대성 선전으로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방침, 영도의 현명성, 공산주의 덕성을 선전해야 한다.
- 2)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로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에 당과 인민이 하나로 단결되어 의지하는 모습을 선전해야 한다.

192) 안춘옥, “북한의 TV프로그램 편성전략” (한국방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4. 5. 14), pp. 116-17.

193)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 op. cit., pp. 118-45.

- 3)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으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모든 인민들은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선전해야 한다.
- 4)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 세계의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된 내용의 선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의 조직·편제는 정무원에 속해 있으면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지시·통제와 최종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 노동당중앙위원회가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운영체제를 보면 대내 방송은 당선전선동부, 대남·대외 방송은 당대남사업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여기서 결정된 정책과 내용은 정치국 → 비서국 → 선전선동부 → 방송통신선전선동기구 등을 거쳐 중앙방송위로 하달된다.¹⁹⁴⁾ 이러한 이원적 방송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방송을 당이나 어느 조직의 기관방송으로 두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체제 속에 지역체계는 「조선중앙방송위--각시도방송위--군읍방송위--유선방송중계소」¹⁹⁵⁾로 구조화되어 있으면서 대남

194) 「동아일보」, 1989. 1. 24. 방송은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명목상 최고 기구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검열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방송내용 일체를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 방송국이 방송하는 모든 것은 동 위원회의 검열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방송국이란 동 위원회가 검열한 내용을 단지 기술적으로 전파에 실어 보내고 있을 뿐이다. 강현두, “언론과 예술,” 「북한개론」, 최명(편)(서울: 을유문화사, 1989), p. 453.

195) 「중앙일보」, 1989. 6. 26.

대외(국제) 방송위원회로 세분되어 있다.

북한의 라디오방송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에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2개국어 있고, 특수국으로 분류되는 「구국의 소리방송」, 「평양 FM방송」 등 2개국어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내용 라디오방송으로 중파 3채널, 단파 4채널로 하루 22시간 방송된다. 「로동신문」을 비롯해 중앙신문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내용은 주로 뉴스(21%), 교양(50%)¹⁹⁶⁾이 대부분인데 해설 및 논설, 연예, 스포츠 보도를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 시간이 있다. 뉴스보도는 「김일성과 당의 외교적 활동이나 공동성명, 편지, 메시지」, 「산업 부문 뉴스」, 「국제소식」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당위 및 사회주의 세력의 국제적 연대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해설 및 논설은 「주체 사상 및 당 정책의 해설」, 「통일 정책의 해설」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¹⁹⁷⁾ 이 외에 신문의 사설, 평론, 논설 등을 방송한다.

「평양방송」은 대남 대외용 방송으로 하루 23시간 30분 방송된다. 방송편성 내용을 보면 뉴스 52.6%, 논설 13.2%, 교양 10.5% 순으로 되어 있고 재일동포 시간으로 5.2%를 할애하고 있다.¹⁹⁸⁾ 전반적으로 뉴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방

196) 「중앙일보」, 1990. 9. 18.

197) 강현두, “언론과 예술,” op. cit., pp. 455-56. 특기할 것은 김일성의 교시나 담화 내용을 담은 ‘로작’ 방송을 중앙방송은 10.5%를, 평양방송은 6.6%를 차지하고 있다.

198) 「조선일보」, 1990. 6. 12.

송내용은 하루 총 방송시간의 70%(15시간 이상)¹⁹⁹⁾을 대남모락선전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 방송은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방송대학」과 「김일성방송통신대학」 강좌를 내보내면서 「국제방송」을 전하고 있는데, 주로 재일동포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동남아,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전세계에 韓·日·中·英·佛·러시아어·서반아어·아랍어, 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해 방송하고 있다.

대남 흑색선전 방송용으로써 「구국의 소리방송」이 있는데 이는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중파 1, 단파 2개로 하루 3회 평균 13시간 방송한다. 그동안 남한의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대변방송이라고 줄곧 주장해 온 해외방송용 「민민戰방송」²⁰⁰⁾이 「구국의 소리방송」의 한 지부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한국어, 영어, 일어,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사용해 대남 비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북·월북자들을 이용 서울 표준어로 방송을 하고 있다.

1991년에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는 「평양 FM방송」은 90%가 음악을 그리고 나머지 10%는 문예물을 방송한다. 방송시간을 보면 저녁 9시부터 이튿날 새벽5시까지이며 휴일에는

199) 강현두·김우룡(편), 「한국방송론」(서울: 나남, 1990), p. 569.

200) '민민전방송'은 '구국의 소리방송'과 함께 1970년 3월 '통혁당목소리 방송'으로 시작되어 1985년 8월에 지금의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다.

24시간 방송한다. 방송편성을 보면 혁명가곡이 3시간 40분으로 45.8%, 서양 고전음악이 3시간 20분으로 41.7%, 방송극이 1시간으로 12.5%²⁰¹⁾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까지 가청권을 포함하고 있어 남측의 청소년을 겨냥해 남한사회의 비리와 부조리 등을 풍자하는 방송을 보내고 있다.²⁰²⁾ 이와 함께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을 찬양하고 남한과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연속극도 방송한다.²⁰³⁾

지방에는 「해주방송」, 「사리원방송」, 「개성방송」, 「원산방송」, 「강계방송」, 「혜산방송」, 「남포방송」, 「신의주방송」, 「함흥방송」, 「청진방송」, 「평성방송」 등 11개국이 있다. 대부분의 중앙방송은 보도논평이 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는데, 지방방송은 중앙방송을 중계하면서 10~15분짜리 자체 제작프로그램을 하루에 3회 정도 방송하기도 한다.

그외 10개의 유선방송국, 2백개의 군·구지역방송국과 4천 3백여개의 방송실이 있다.²⁰⁴⁾ 집단청취를 통해 선전·선동·정

201) 「경향신문」, 1992. 5. 11.

202) ‘평양 FM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대남 선전용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강현두·이창현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대남 선전을 위한 노골적인 선전방송은 찾을 수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북한의 3대혁명과업 중 문화혁명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결론 지우고 있다. 강현두·이창현, “평양 FM방송의 프로그램분석연구”(한국방송학회 봄철세미나 발표논문, 1990).

203) 김우룡, “남북 방송 교류의 방안 모색,” 「한국 방송 정책론」, 한국방송학회(편)(서울: 나남, 1993), p. 653.

204) 「한국일보」, 1993. 6. 14; 「조선일보」, 1990, 6. 12.

보전달·주민교육 등의 효과극대화를 위해 제3의 방송으로 불리우는 「유선방송」²⁰⁵⁾은 지역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를 통해 송신된다.

라디오 보급현황을 보면 보유대수가 375만 대로 추정된다. 시중가격이 1백20원~1백80원선으로 근로자 한달 평균월급이 80원에서 120원 임을 감안할 때 이는 그들 평균임금의 2배가량되어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설령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반도체」(트랜지스터)의 개인소유는 불가하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북한 당국은 「우리식 백화점」과 「외화상점」 등을 개방하여 돈이 있으면 전기접속식 라디오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주로 달러로만 라디오 구입이 가능하므로 일반주민이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정간부들, 외국을 입출입하는 사람, 해외 친지들로부터 송금 받는 사람, 화교들이 구입할 수 있다. 여기서 구입한 라디오 역시 처음부터 채널이 납땜으로 고정돼 있어 남한 방송 및 외국방송을 들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귀순자에 의하면 과거 일부 고위층, 비행기 조종사, 선원들로 제한되었던 남한방송의 청취가 일반주민들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²⁰⁶⁾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어 들어오는 반도체라디오의 급증으로 인한 것인데 라디오다이얼에 납땜이 없어 자유롭게 외부방송을 청취

205) 특히 농어촌지역에 유선방송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

206) KBS 사회교육방송국이 귀순자 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994. 5).

할 수 있어 특히 외부정세를 알고자 하는 북한청소년들이 이러한 라디오를 가지려 한다. 점검이 있을 경우 주민들은 다시 낚땀을 하는 수법으로 감쪽같이 당국의 눈을 속이면서 외부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주민의 남한귀순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1993년 북한을 탈출한 여만철씨 일가의 경우를 비롯해 최근 귀순한 북한주민들 대부분이 남한방송을 청취한 것이 귀순을 촉진케 했다고 한다. 러시아 북한별목공의 경우 김일성의 「선물라디오」인 일제 소니 라디오를 7명당 1명꼴로 갖고 있으며 강제송환 위험을 무릅쓰고 휴식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을 이용, KBS 국제방송국의 우리말 방송을 수시로 듣고²⁰⁷⁾ 있어 최근 별목공들의 귀순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TV방송은 특히 문화성·예술성·사상성을 확실히 견지하고 있는데 타언론매체가 그렇듯이 오락성보다는 주민을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는 예술선전수단으로써, 정치이데올로기의 선전·선동 수단으로써, 그리고 강력한 사회주의 건설실현에 봉사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백과전서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우리 나라 텔레비존방송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나라 텔레비존방송들은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위력한 사상교육 수단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과학 기술 문화 수준을 높여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207) 「세계일보」, 1994. 5. 22; 「동아일보」, 1994. 5. 7.

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 텔레비존방송은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류포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돈을 벌기 위한 영리수단으로 되고있다.²⁰⁸⁾

TV방송국현황을 보면 「조선중앙TV」, 「만수대TV」, 「개성TV」 등 3개국에 있으며 「대내용」, 「대외용」, 「대남용」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는 모두 컬러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TV」는 남한보다 6년이 앞선 1974년부터 컬러로 송출되고 있다.

현재 북한을 대표하고 있는 TV는 1969년에 개국한 「조선중앙TV」(평양TV라고도 함)인데 이는 25kW의 송신출력으로 14개소에 설치된 송신소를 통해 북한전역에 방송²⁰⁹⁾된다. 방송시간은 오후 3시이후²¹⁰⁾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9시이후부터 정오까지 방송한다. 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계몽·선전 영화가 35.6%로 가장 많고 스포츠 21%, 단막극(드라마) 13%, 보도 10%, 음악 9%²¹¹⁾순이다. 전반적으로 당 정책선전과 혁명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주민생활상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1983년 12월에 개국한 「만수대TV」는 평양주민과 외국인

208) 「백과전서」(1984), p. 354.

209) 「세계일보」, 1993. 3. 17.

210) 안춘옥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1992. 10. 12~17),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시 6분, 토요일은 3시 13분, 일요일은 3시 9분에 방송이 시작되는 등 시간이 조금씩 유동적인 면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211) 「경향신문」, 1994. 7. 18. 보충적으로 「중앙일보」, 1991. 1. 9; 「국민일보」, 1991. 12. 24 참조.

들을 대상으로 토·일요일 오후 7시 5분부터 9시 30분까지 (일요일은 상오 10시 5분부터 오후 1시까지 방송)한다. 문예성 프로그램이 많은데 주로 예술프로와 외국영화(동구 전쟁 영화, 소련·중국영화 등)를 방송한다. 이중 외국영화는 북한 주민이 가장 즐기는 방송이다. 최근에 들어선 그날의 방송물을 그 다음날 다시 방송하고 있다. 중복적 내용이 하루에도 몇 차례 방송되는 경우는 있으나 드라마를 중복적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추세 역시 경제난으로 기인된다고 여겨진다.

「중앙TV」와 「만수대TV」 모두 「모범소개 영화」가 많다. 하루에 2~3차례씩 10~15분 정도 방송하는데 생산현장에서 모범일꾼들의 활약상을 영화화한 것이다. 두방송 모두 뉴스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앙TV는 국제뉴스를 할당하지 않고 있으나 만수대TV에서는 13분 정도 언급하고 있다. 반면 만수대TV는 남한과 전세계의 사회주의 혁명을 언급하지 않는다.

1971년 개국한 「개성TV」는 유일한 지방방송으로써 1991년 10월부터 컬러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같은 NTSC 송출방식을 채택하면서 월요일을 제외한 날 -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 방송을 보내고 있다. 방송은 대남비방선전이 많고 김일성부자와 사회주의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대체로 북한TV의 편성내용은 보도, 단막극, 영화, 스포츠, 사상교육, 소년단소식, 논평, 음악, 당정책 및 해설, 일기예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성은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 김일성부자 위대성 선전(중앙TV 28.5%, 만수대TV 34.5%),²¹²⁾ 사회주의 우월성, 당정책홍보, 대남·대미비난에 편중되고 있다.

TV방송에 있어 일련의 변화는 단편형식의 드라마가 최근 연속극 형식으로 선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주로 노동의욕을 고취하는 「愛國主義고양물」²¹³⁾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코미디형식도 선을 보이면서 방송내용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이를 위해 「TV소설」, 「가정요리」와 남한의 전국노래자랑 프로와 같은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경연대회」를 방송하고 있다. 1988년 이후부터는 「보천보경음악단」이 만수대TV와 중앙TV에서 하루에 한차례 이상 20~30분 정도 경음악을 연주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놀랄만한 사항은 「토펙과 제리」라는 미국 만화영화를 만수대TV에서 방송한 것이다. 이영화는 가장 부르조아적 내용이며 弱肉強食의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를 방송했다는 것은 정말 의아스럽다.

TV수상기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1백50만~2백만 대로 보급률이 30%²¹⁴⁾ 수준으로 추산된다. 컬러TV 수상기 가격은

212) 안춘옥이 1992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북한방송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TV프로그램 편성전략,” p. 116.

213) 마쓰기 지로, “북한 TV 사정,” 「코리아평론」(1988. 7).

214) 「한국일보」, 1993. 6. 14.

14인치 기준으로 700원 그리고 흑백TV는 300원 정도인데 이는 근로자 월급의 7배와 3배에 해당하는지라 당·정간부급 외 일반주민들의 구입은 엄두를 못 낸다. TV 구입실태를 보면 김일성생일을 축하하는 명절에 전국에서 선발된 모범노동자들에게 구입권한이 배정되는데 이 또한 대금을 내지 못하면 구입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로 TV보급이 상당히 낮아 주민들은 대부분 10~15가구 단위의 인민반 반장집에 설치한 TV를 시청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인민의 잦은 동원으로 파생되는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TV수상기 생산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TV를 생산하는 대동강 TV수상기공장, 평양TV공장, 남포통신기계공장, 안주통신기계공장, 단천영예군인공장²¹⁵⁾의 가동률이 극히 저조해 계획하고 있는 TV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7. 北韓의 宗教現況 및 主要 흐름

종교²¹⁶⁾를 하나의 문화유형으로 그리고 종교를 매개로 나타

215) 「서울신문」, 1989. 12. 3. 컬러TV는 소련이나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생산하나 생산대수가 극도로 한정되어 있고 흑백TV 생산 역시 많지 않다.

216)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종교는 “하나의 절대 신념 체계이며 종합적 절대 가치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상이나, 예술, 문화, 가치관, 그리고 지상 권력도 그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 신념의 체계 안에서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윤이홍, 「종교가 북한사회에 끼치는 영향」(서울: 통일원조사연구실, 1990), p. 9.

나는 삶의 양식을 하나의 문화표현으로 간주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종교사상이 지니는 긍정적, 부정적 또는 발전적, 보수적 유형에 따라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형태가 정립되어 왔으며, 종교사상의 전개에 따라 한국의 문화표현이 양상을 달리해 왔다.”²¹⁷⁾ 불교와 유교는 신념체계의 가치관과 도덕관을 심어주면서 국민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고 군주 역시 통치이념으로써 이러한 철학과 교리를 국가운영에 잘 활용하였다. 이외 신분을 따지지 않았던 천도교, 원불교 등이 민족종교집단을 형성하였으며 기복신앙과 주술종교 역시 한국사회에 자리잡고 있었다. 조선 후기 격동의 시기에 서양문화의 수용과 함께 천주교·기독교가 한국사회에 등장해 종교전선에 혼란을 야기했지만 근대화 운동에 앞장서고 국민의 도덕과 가치관 그리고 윤리관에 변화를 주면서 거대한 종교집단을 형성하였다. 기독교와 천주교를 제외하고는 타종교들이 서로 다른 신념체계와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 배타성을 지닌 채 오늘날까지 공생의 형태를 띄면서 종교문화를 자아내고 있다.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말미암아 한반도 분단이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 남북한 종교인들 간의 접촉이나 공동 보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남한종교는 서양종교와 전통종교가

217) 원불교학교재연구회(편), 「종교와 원불교」(원광대학교, 1994), p. 130.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의미 있게 발전한 반면 북한 종교는 정치적 선전도구 또는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종교적 의미를 상실하였다. 물론 남한에도 정치적 상황변동이 종교지형을 변화시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종교본질이 소멸되면서 종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때껏 외형적 종교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종교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체제종교를 이해해야 한다. 이에 근거 이節에서는 북한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유교 그리고 기타 종교에 관한 현황과 주요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天主教

천주교는 한국의 유교문화가 가치규범으로써 사회통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봉건적 체제유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무렵부터 사회사조에 영향을 주고 변동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등장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미신타파운동, 계급타파운동, 국문전용운동, 서양문화도입운동 등을 일으키면서 한국의 근대화 운동에 앞장섰다.²¹⁸⁾ 이는 선교사들의 순교정신과 정신적 지주역할 그리고 자발적 신앙공동체의 형성의 결과로서 성취된 것이지만 천주교의 수난은 전래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꾸준히 자생력을 키워, 해방

218) 유홍열, 「한국사회사상사논고」(서울: 일조각, 1982), pp. 311-12.

전에는 190,000여명의 신도가 있을 정도였다. 북한의 경우 8개 교구중 3개의 교구와 50,000여 명의 신도, 신학교, 수도원, 병원 등이 있어 사회 각 분야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²¹⁹⁾ 신도수에 있어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시켰으나 개신교에 비해 숫자는 미비하였다.

해방 직후 북한 천주교의 주요 특징은 “혁명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진보적 분파가 거의 부재하고, 최소한 교권 주변에서조차 친일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²²⁰⁾ 이는 일제하에서 정교분리로 인해 총체적으로 친일화되었고 1920년대 중반 이후 민족주의적 분파가 완전히 숙청된 결과였다. 이로 인해 「내부로부터 진보적인 분파의 출현 → 이들에 의한 제국주의적·봉건적 요소의 청산」이란 방식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교회 전체가 혁명의 대상으로 위치지워질 가능성이 높았다.²²¹⁾ 이에 따라 천주교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던 사제와 수도자들은 투옥되거나 총살당하는 등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기독교도연맹이나 불교도연맹과 같은 어용조직을 천주교내에 형성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의 결렬이 명확히 되는 시점에 일본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었던 미국 메리놀회 선교사

219) 유홍열, 「한국 천주교회사」(서울: 가톨릭 출판사, 1962). p. 103.

220)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해방후 북한교회사」, 김홍수(편) (서울: 다산글방, 1992), p. 164.

221) Ibid.

들이 재 입국하여 미군정과 남한 교회와 서울 메리놀회 선교사들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북한 공산정권을 극도로 자극하였고, 북한 천주교 세력도 종전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꿔 적극적 반공 태세를 갖추자 공산정권과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들은 조선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요 신자들에게도 “무신론자에게 일시적 또는 외면적으로라도 협력하는 것은 가톨릭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요, 신앙을 배반하는 것”²²²⁾이라면서 가입을 금지시켰다.

북한인민당국과 천주교 세력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1948년 원산 德元수도원의 인사들을 탈세와 「반국가음모사건」²²³⁾으로 체포하기 시작하였고, 평양교구 성직자와 수도자 전원을 간첩활동으로 체포하였다. 이러한 탄압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계속되어 성직자들이 없어지거나 월남해 교세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특히 전쟁을 전후해 외국인 선교사들이 악질반동 종교인으로 취급당해 희생²²⁴⁾되었다.

그 이후 천주교는 북한에서 모습을 감추었지만 국제협력단계에 있어 국제천주교단체와의 연계와 친선 관계를 도모하기

222) Ibid., p. 166.

223) 德元수도원내에서 반소·반공전단과 폭약과 무기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인사들을 체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빌미 삼아 북한은 40년간 지탱해 온 수도원을 원산농업대학으로 탈바꿈하였다.

224) 유흥열, 「한국 천주교회사」, op. cit., p. 1018에 의하면 한국인 52명, 미국인 4명, 불란서인 15명, 독일인 66명, 오스트리아인 1명, 벨기에인 5명, 네덜란드인 6명, 호주인 1명 등 모두 150여명이 학살되거나 옥사하였다.

위해 1988년 6월 30일 「조선천주교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조직목적²²⁵⁾이 타종교 단체에 비해 정치적 색채가 적지만, 천주교인의 자유와 권리,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면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이상적인 취지 아래 현재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국제협력단계의 한 과정으로써 1988년 10월에는 동평양 장충동에 평양장충성당을 세웠다. 1989년 말 현재 평양에 약 2~3백명의 신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800명에서 1,200명 정도의 천주교인이 남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300여 명 정도만이 조선천주교인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현재 개성, 남포, 원산 세곳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지회는 파악되지 않은 천주교인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조선천주교인협의회 중앙위원회」가 「천주교를 알자」와 「신앙생활의 걸음」 등의 교리서 2종을 발간했는데 내용이 남한천주교리의 기본틀을 별다른 수정 없

225) 조선천주교인협회의 조직목적은 북한을 공식 방문한 캐나다교회협의회 대표 켈러그 신부에 의해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1) 천주교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준다. (2) 애국적 사상으로 천주교인들을 교육시킨다. (3) 천주교인들이 전국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한다. (4) 국가의 번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함께 일한다. 고태우, 「북한의 종교」(서울: 통일연수원, 1991), p. 74. 또한 “교회의 발전과 권익 옹호, 교인 호상간의 연계와 단합을 도모하며 사랑과 화해, 평화를 위한 복음정신에 기초하여 각국의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도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들의 요구를 반영” (「평양방송」, 1988. 7. 2)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받아들이고 있고 성가와 기도문도 최근 남한의 것을 거의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는 성당은 있으나 아직 신부와 수녀가 없어 미사를 신도 대표 2명이 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와선 노년 층이 주가 되던 신자들이 젊은 층과 중년 층으로 점차 교체되고 있는데 특히 40~50대 1~2명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신자들은 주어진 임무를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종교적 의미로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 당국이 천주교를 여전히 종교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타종교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나. 基督教

기독교는 천주교보다 훨씬 뒤인 1860년대에 선교사가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비롯 의료활동, 교육활동, 자선활동을 하면서 한민족에게 기독교를 전래하였다. 儒·佛·善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뒤따랐지만, 천주교가 치른 수난을 고려할 때 큰 고난 없이 이 땅에 토착할 수 있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한 이래 이남보다 이북에서 널리 기반을 구축하였다.²²⁶⁾ 주된 이유는 이남에선 유교정신과 함께

226) 해방 당시 기독교와 천도교가 이북 지역에,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가 이남 지역에 강세를 보였다.

신분계급이 명확하고 보수적·봉건적인데 반해 이북에선 신분구별이 거의 없고 주민들의 성향이 진보적·개화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현황을 살펴보면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는 그 어떤 지역보다 기독교의 활동이 왕성하였다.²²⁷⁾

한일합방후 선교사들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한민족의 민족정신이 고취되자 일제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1912년 기독교인이 일본 관헌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소위 「105인 사건」을 구실 삼아 기독교인 105명을 투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그들의 치외법권을 이용해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해 주었으며, 한국 기독교인들 역시 「삼일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반일 투쟁에 나섰다. 이에 대응하고자 일본은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을 구실 삼아 외국 선교사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1938년 일본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2,000여명의 신도들이 체포되거나 투옥되었고 주기철, 최봉석, 최향림 목사등 50여명이 순교²²⁸⁾하였다. 이러한

227) 1938년 당시 60만 명을 넘는 기독교인 중 약 75%가 북서 지방의 신도인 것을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Vol. II, 1935-1959*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1964), pp. 209-210 참조.

228) 김양선,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서울: 장로회 종교 교육부, 1956), p. 43.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집요하게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은 수많은 교회를 통폐합시키고 예배시간의 제한, 신사참배, 강제근로동원 등으로 기독교의 활동을 방해했으며 심지어 조선교단이란 어용단체를 조직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파들을 강제로 편입시켰다.

해방 전까지 평양은 한국기독교의 중심지였으며 이 지역의 교회는 항일독립운동의 활동지로써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공산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였으며 교회재건운동과 각 교파들의 자체 조직재건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러한 재건운동은 자치회와 건국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기독교사회민주당과 기독교자유당 결성을 통해 정치에 관련하게 되었다.

그 당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는 기독교 사회주의나 민족사회주의에 가까워 공산주의 노선만을 추구하는 김일성노선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김일성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을 공산정권에 방해되는 인물로 여겨 기독교탄압을 가하게 되었다. 진보적·개화적 성향의 이북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박해에 항의하는 강력한 저항을 했으나,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공산화는 어렵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은 더욱 더 강도 높은 탄압을 가해 기독교세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 결과 이북 기독교인들의 남하(주로 1945년부터 1953년

사이)가 시작되었다. 북에 끝까지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으나 그 수는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전쟁이 발생한 이후부터 당국은 회당을 강제적으로 폐쇄하고 기독교 집회를 금지시키는 등 양성적인 탄압정책을 가해 기독교세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공산화 이전의 활발했던 기독교 세력에 비추어 보아, 또한 이전의 기독교신주의 세대가 아직 생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지하로 들어가고 말았지만 기독교는 아직도 북한의 사회과정의 소외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을 것”²²⁹⁾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분단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이러한 지하교인도 기독교의 맥을 이어가지 못해 결국 기독교는 북한에서 소멸된 종교로 볼 수 있다.

북한 기독교단체의 현황을 알기 위해선, 1946년 11월 28일에 창립된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²³⁰⁾의 활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1960년대까지 상부 조직만 있는 단체로서 남한에서 발생한 정치적·사회적 사건에 대해 성명서 정도만

229) 이문용, “북한의 도덕과 종교,” 「북한문화론」(서울: 북한연구소, 1978), p. 518.

230) 참여인사들을 보면 중앙위원회 강양욱, 김치근 외 14명 그리고 상임위원회 강양욱 박상순 외 5명으로 구성되었다.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의 강령은: 1) 기독교의 박애적 원칙에 기초하여 인민의 애국열을 환기하며 조선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건국 사업에 일치 협력할 것; 2) 민주조선 건국에 해독인 죄악과 항쟁하고 도의(道義) 건설을 위하여 분투할 것; 3)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력할 것; 4) 기독교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 등이다. 이는 「중앙년감 1949」, pp. 90-92와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를 참조.

널 정도로 활약이 미비하였으나, 7.4공동성명을 계기로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외교 채널을 연결하고, 해외교포 및 종교인을 포섭할 목적으로 1974년 8월 「조선 기독교도 연맹」²³¹⁾이라는 명칭으로 재 발족하였다. 그 뒤 1980년대에 들어서 조직을 새로이 재 정비해 종교단체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기독교단체들과 유대를 맺기 위해 1974년 WCC에 가입 신청을 했으나 북한내 기독교현실을 인식한 WCC가 이를 거절하자 공산권 국가들이 주축이 된 「기독교평화협의회」(CPC)에 가입하였다. 종교활동 대신 남한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기독교평화회의」(1974. 11)와 「기독교평화회의」(1976. 11)에 참가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선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자간의 대화」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1981년, 1982년, 1984년 세차례에 걸쳐 중국과 소련의 교회를 방문하였고, 1985년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CPC총회에 그리

231) 연맹의 조직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2) 사회단체나 정당들과 친교를 맺는다; (3)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참여한다; (4) 조국 통일을 위해 일한다; (5)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전세계의 모든 개인 및 조직과의 접촉을 가진다; (6) 가정교회를 위해 지도자를 양성한다. 현재 중앙위우천회와 10개 특별시와도 및 50개 시·군에 지방위원회가 있다고 하나 지방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6,000여명 정도의 신도가 연맹에 가입했다고 한다. 김석주, “교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 「북한교회목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까?», 고기준 외(서울: 형성사, 1990), pp. 16-17.

고 1986년과 1988년엔 글리온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외 기독교 행사에 열의를 보였다. 이러한 활동은 “전세계의 모든 개인 및 조직과의 접촉을 가진다”²³²⁾는 연맹의 조직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길 수 있다.

대내적으로도 변화를 모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同연맹은 남한의 공동번역성서와 찬송가를 북한의 언어와 맞춤법에 따라 발간하여 사용하고 있다.²³³⁾ 그리고 1988년 11월 평양 만경대 구역 봉수대에 봉수교회와 1989년엔 칠골리에 칠곡교회를 건립하였고 500여개의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에선 목사 20~30여명²³⁴⁾이 1만명내외(연맹 가입교인 6,000명)²³⁵⁾의 신자와 함께 예배를 본다. 이들 신도의 90%는 여자신자이며 초교파로 교회가 운영되기는 하지만 장로교가 80%, 감리교가 17%, 성결교가 2%, 그리고 기타 교파가 1% 정도²³⁶⁾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2) 이는 캐나다교회협의회 대표들이 북한교회를 공식방문후 보고된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조직목적 가운데 다섯 번째 항목인데, 나머지 항목은: 1)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2) 사회단체나 정당들과의 친교를 맺는다; 3)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참여한다; 4) 조국통일을 위해 일한다; 5) (본문내용); 6) 가정교회를 위해 지도자를 양성한다 등이다. Ibid.

233) 1983년 신약성경 1만 부와 가사만 적은 찬송가 1만부, 1984년 구약성경 1만부, 1990년 신·구약 합본을 1만 부와 401곡의 찬송이 담긴 찬송가 1만 부를 발간하여 사용하고 있다.

234) 한국전쟁 전에 안수 받은 목사 10여명과 조선기독교도연맹에 부설된 평양신학원에서 배출된 12명의 목사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신학원은 72년부터 운영되었으며 3년 과정이다.

235) 신자수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길은 없다.

236) 윤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I」(서울: 고려원, 1991), p. 224.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태이나 조선기독교도연맹은 여전히 통일전선 구축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행사를 공식적으로 주도하면서 기독교의 맥을 잇고 있고 대외적 기독교 행사에도 참여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 것을 고려할 때 종교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다. 佛 教

북한에서 불교는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되기보다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정권은 불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 이유는 불교가 봉건시대의 산물으로써 낡은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불교는 현실을 도피하여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계급투쟁을 죄악으로 간주하는 반동적 관념론적 사상”²³⁷⁾이며 혁명투쟁에 장애물로 결론지우고 있다. 이는 정치사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불교는 사람들에게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압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대신에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운명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설교한다. 또한 불교는 봉건시기에 침습하여 봉건지배계급의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면서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237) 과학원력사 연구소(편), 「조선통사(상)」(학우서방, 1963), p. 135.

해독을 끼쳤다. 불교가 북조선에서는 이미 없어졌으나 남조선에서는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데 해독적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운명론을 강조함으로써 민중을 독재자가 수탈하도록 하는데 협조하여 기생하였다.²³⁸⁾

하지만 불교가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중요시하는 점에서는 주체사상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부정하지만 주체사상은 종교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불교가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개인과 전체의 「一卽多 多卽一」의 사상과 일맥한다고 보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주체사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불교를 삶의 진리와 반동적 관념론적 사상으로 간주하면서도 한민족이 북방불교를 수용했던 전례로 남쪽에 비해 상당량의 국보급 및 보물급에 해당되는 불교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들을 관광적 기능과 역사유적지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38)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304.

〈表-6〉 북한의 사찰실태²³⁹⁾

| 사찰명 | 위 치 | 현 실 태 |
|-----|--------------|---|
| 귀진사 | 황해북도 서흥군 송월리 | ○극락전, 주악루, 칠성각, 심검당 현존 ○법화경등 판목 2,000여매 묘향산 박물관으로 이전 |
| 심원사 | 황해북도 연탄군 연탄읍 | ○보광전, 청풍루, 향로각 현존 |
| 강서사 | 황해남도 배천군 강호리 | ○대웅전, 7층석탑, 5층석탑 현존 |
| 자혜사 | 황해남도 신천군 서원리 | ○1961년 복원 |
| 월정사 | 황해남도 안악군 월정리 | ○극락전, 만세루, 명부전, 수월당 현존 |
| 법흥사 | 평안남도 평원군 신성리 | ○극락전 왕사전, 장경각 현존 ○8만대장경, 목각경판 700여개가 묘향산 박물관으로 이전 |
| 금광사 | 평안북도 의주군 금광리 | ○대웅전, 백화전, 청운당 등 현존 |
| 서운사 |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읍 | ○대웅전, 청운당 현존 |
| 수충사 |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 ○대웅전, 충의문, 수충사비 현존 ○서산대사와 제자들 초상 현존 |
| 심원사 | 평안북도 박천군 상양리 | ○보광전, 전동루, 향로각 현존 |
| 천주사 |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읍 | ○보광전, 천주루 현존 |
| 양화사 | 평안북도 태천군 상단리 | ○대웅전, 명부전, 봉축전, 심검당, 봉향각 등 현존 |
| 명적사 | 강원도 원산시 영삼리 | ○대웅전, 심검당 현존 |

자료: 고태우, 「북한의 종교 정책」(서울: 민족문화사, 1989), p. 182

239) 북한의 사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정태혁·신법타, 「북한의 절과 불교」(서울: 민족사, 1990), 제1부 참조.

우선적으로 사찰현황을 살펴보면, 61개의 사찰²⁴⁰⁾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 일부 주요사찰에 대해서는 表-6에서 설명되어 진다. 대표적인 사찰로는 평양 시내에 위치한 용화사, 금강산의 정양사, 신계사, 표훈사, 개성의 계곡사, 관음사, 구월산의 성불사, 묘향산의 보현사, 안변의 석왕사, 평양의 법운암, 평성의 안국사, 황주의 심원사와 평양의 정릉사 등이 있다.²⁴¹⁾ 이중 석왕사, 심원사, 6·25 때 불타 복구된 성불사와 보현사, 그리고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는 박천의 숙원사 등은 한국의 국보급에 해당되며 불교의 31본산 중 하나였던 평양의 영명사 역시 절터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중 정릉사 성불사 보현사 심원사 용화사 등은 필수 관광코스이다.

특히 평양시 동명왕릉터에 자리잡고 있었던 정릉사는 북한 最古의 사찰로 김일성대학 고고학 연구팀에 의해 발굴작업되었는데 그 당시 1천5백년전의 우물과 각종 철제·토제·목제·석제품 등 유물 1천1백여점이 발굴되었으며 1993년 5월중순에 복원되었다.²⁴²⁾ 이는 고구려 시대 건축기술의 정수를 보여

240) 16세기초 북한 지방에는 모두 561개(강원도 59개, 황해도 210개, 평안도 208개, 함경도 74개)의 대소 사찰들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1939년 12월경 불교의 교세는 강원도에 86개, 황해도에 124개, 평안도에 87개(평안남도 46개, 평안북도 41개), 강원도 86개, 함경도에 106개(함경남도 82개, 함경북도 24개) 등 총 403개로 줄어들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조사, 한국불교연구원, 「북한의 사찰」(서울: 일지사, 1987), p. 120.

241) 윤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I」, op. cit., p. 226. 이탤릭체는 저자의 삽입문.

242) 「동아일보」, 1993. 9. 10.

주는 건축물로 한국 건축사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으며 일본의 건축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현사는 우리나라의 5대 사찰 가운데 하나로 팔만대장경을 비롯하여 불탑 및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유명한 사찰로 1980년대부터 국내외에 공개되어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졌으나 보현사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아예 「역사박물관」으로 그 이름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변경은 불교 문화유산들이 종교유산이 아니라 인민들의 예술적 재능과 건축미술이 어울려 이룩된 「역사유적」,²⁴³⁾ 「문화재」(또는 「문화유적지」)로 존재하면서 관광적인 기능과 역사유적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존재하는 사찰들은 「문화휴식처」, 「소년단의 야영지」, 「학습장」으로 보존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 나머지는 공동사업을 위한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찰에는 승려 1~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해방 전후에 이미 승려인 사람들이다. 40대 승려들이 있기는 한데 이들은 승려양성기관인 「불학원」에서 3년간 교육되면서 승려로 양성된다. 이들은 특별 행사(4월 8일 부처님 오신날, 2월 15일 열반회, 12월 8일 성도회) 때 대대적인 행사를 벌리기도 하고, 포교·설법과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그들의 전체활동이라 볼 수 있다.

243) 한국은 국보·보물등으로 나누어 유형문화재의 중요성 및 가치를 분류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건조물·역사기념물·사적 등을 뭉뚱그려 '역사유적'이란 말을 흔히 사용한다. 「서울신문」, 1989. 1. 22.

승려들은 대부분 결혼한 대처승이다. 의식이나 의복을 보면 일제시대에 잔존해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모두가 머리를 기르고 있고 사찰에서도 속복(양복)을 입고 그 위에 붉은 가사를 두르고 있으며 구두를 신고 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실지 포교나 설법보다는 사찰관리와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라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을 불교인으로 볼 수 없다.

북한의 불교는 공산화되기 이전에도 기독교와는 달리 강력하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했고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1946년 「토지개혁 법령」에 의해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찰들의 재산이 압수²⁴⁴⁾ 당하면서 교세는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승려들이 사찰을 떠나기 시작했다.²⁴⁵⁾ 한국전쟁 이전까지 승려들의 신앙생활은 이력저력 행해졌으나 전쟁이 발발되자 그들은 군에 참여해야 했고 사찰이 은신처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탄압이 뒤따랐다. 그 이후 승려들의 신앙 활동은 거의 중단되었고 불공을 위해 산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 노동자로 전락하여 생계를 이

244) 토지개혁은 승려조직의 특성상 불교계에 큰 일격을 가했다.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했던 대사찰들이 받는 타격은 특히 심했다. 예를 들어 석왕사의 경우 4천여 정보의 토지를 모두 몰수당했다.

245) 2백명이 넘는 승려가 있었던 석왕사는 승려가 3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1백명 이상의 승려가 거주했던 보현사, 건봉사, 유점사, 귀주사 등도 승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홍사성, “북한불교의 재인식,” 「민족불교」(1989), p. 254에 상세히 기술.

어 나갔다. 이렇게 되자 결국 승려 없는 절만 남게 되고 신도들의 발길은 끊어져 황폐화되었고, 소수의 독실한 신자에 의해 불교가 호응되었을 뿐 일상 주민의 생활에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여 불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불교를 정책적으로 적절히 이용했는데 이는 불교단체의 활동을 통해 행해 졌었다.

북한은 「북조선 불교 총연맹」이 1945년 12월 26일 발족²⁴⁶⁾되었는데, 이 외 「북조선 불교연합회」와 「북조선 불교도총연맹」(1945. 11. 26), 「조선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1947. 5. 13), 「북조선 불교 종무원」(창립일자 미상) 등이 발족되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창립시부터 정치성과 함께 조국연합기구 성격을 지닌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의 일원으로 남측에 대해 선동적인 성명을 채택하는 등 대남 선동에 앞장섰으나 적극적인 활동은 없었다. 이러한 활동마저도 1971년경에 중단되어 불교단체의 활동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1972년에 들어서 자취를 감추었던 「조선불교도연맹

246) 연맹원수 375,438명으로 발족하였으며 이때 참가인은 김세울, 유빈암 등 16명이었다.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p. 122. 연맹의 강령을 살펴보면(「중앙년감 1949」, p. 92): 1) 전 조선불교의 통일단결과 신앙자유의 확보를 기함; 2) 교단자체의 혁신을 단행하며 대중을 교화하여 조선의 완전 자주독립을 촉진함; 3) 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국내 제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와 보조를 같이하여 세계민주주의 이념의 관리를 기함; 4) 불타정신을 선양하며, 사회사업 문화사업의 향상 발전을 기함; 5) 불교도에서 노동정신을 앙양시켜 국가산업 경제부흥 발전사업을 협조함으로써 되어 있다.

중앙위원회」가 「조선불교도연맹」²⁴⁷⁾으로 정식으로 재 발족되어 전국을 총괄하면서 불교종파나 종단이 없는 불교계를 관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불교의례·관행·교리를 부분적으로 따르면서 대부분의 불교집회를 열고 있으나 북측의 통일전략을 주입시키는 강론을 거듭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이 연맹은 대외활동에 나섰다. 주로 남한을 포함한 해외의 불교단체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정치선전을 비롯해 대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통일선전에 나서면서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1988년 이후 북한종교계의 주요 움직임과 관심은 기독교나 천주교보다 불교에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에 산재해 있는 사찰들이 문화재로써 존재하고, 둘째, 불교정신과 불교문화가 타종교에 비해 뿌리가 깊고, 셋째, 타종교에 비해 종교적 활동을 감시하기가 수월하고, 넷째, 호국불교정신이 체제유지에 한편으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정일의 민족문화유산 보전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사회과학원 산하 「민족 고전연구소」에서 고려조의 팔만대장경 국역사업을 7년간에 걸쳐 완수하여 원본과 그 해제본 25권을 보현사에 보관하고 있다. 1~7권까지는 「세상사람들을 모두 구제하여 부처로 되게

247) 창립 당시 인원수는 37만 5천4백38명이었고 현재 연맹원 수는 약 1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다는 교리를 설교한 대승경에 대하여», 8~10권에는 「보살의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규제하고 설교한 대승론에 대하여 수록했다», 11~18권까지는 「소승불교」를, 19~24권에서는 불교의 역사와 불교관계자료들을, 마지막 25권에는 「보유-보충-보유-체계의 불교관계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 이상의 차원에서 불교와 불교인을 재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전통문화유산을 재 해석²⁴⁸⁾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라. 天道教

해방 당시 천도교인은 280만 정도였는데 이중 약 70% 정도인 169만여 명이 북한에 있으면서 가장 큰 종교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세를 공산정권이 쉽게 다룰 수 없었고,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천도교에 널리 퍼져 있어 이를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산정권 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박해를 가하였다.

남북간의 분열과 날로 더해 가는 공산당의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 천도교인들은 1948년 3월 1일을 기해서 「남북통일을 위한 천도교인 3·1재현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중무원과 청우당 위원장인 김달현의 반대로 전국 규모로 확산되지 못한 채 많은 천도교인들이 체포되거나 처형 당하였다. 또한

248) 법성, “북한의 종교,” 「북한의 사회」, 강정구(편)(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302.

「영우회사건」, 「김일성 추대 반대 연판장 사건」 등의 반공 투쟁으로 수많은 천도교인들이 학살되었다. 그 결과 천도교인 78만 정도가 월남하였고 북한에 남아 있는 자 가운데 개종한 자도 있어 천도교인의 수는 현저히 격감하였다. 이 결과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천도교사상은 종교적 차원에서 명분을 잃기 시작했으며 오로지 종교·정치적 작동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에는 김달현이 중심이 되어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²⁴⁹⁾이 1946년 2월 8일에 창당되었다. 이는 공산당원이 일제때부터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전개되었던 천도교 청우당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전쟁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으나 1974년에 「조선천도

249) 그 당시 천도교 청우당에는 중앙위원에 김달현, 김정주, 박윤길 외 46명, 상무위원에 김달현 외 13명, 정치위원에 김달현 외 6명이 관련되어 있었다.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p. 124 참조. 청우당 강령으로서는 1) 민족자주의 이상적 민주국가의 건설; 2) 사인여천의 정신에 맞는 윤리 수립; 3) 회귀일체의 실행을 이념을 기초로한 경제제도의 실현 등이 있다. 그리고 정책으로서는 1) 쏘련 및 제 민주주의국가와의 적극 친선을 도모함; 2) 반일 반제국적 신민주주의 제 정당과 우호 협조하며 민족통일 전선을 기함; 3) 인내천의 신문화로써 민족원기의 진작과 신생활의 창조를 기함; 4) 노동자 농민 어민 소시민 근로지식층의 생활향상을 기함; 5) 중요산업의 국가경영과 토지의 국유화를 기함; 6) 인민교육의 일체는 국가부담으로 하며 사회교육의 철저화를 기함; 7) 인격향상과 기술 중점의 교육제도 실시를 기함; 8) 20세이상 남녀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함; 9) 광공업 수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농업의 과학화 증농화를 기함; 10) 실업방지, 보건, 위생, 교양, 문화등 고도사회정책 실시를 기함; 11) 언론, 집회, 신앙, 결사, 출판의 자유를 기함; 12)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평등을 기함 등이다. 「조선중앙년감 1949」, p. 90.

교회 중앙지도위원회」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두 천도교단체는 조직상으로는 이원화되었으나 실지 단일화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1989년 5월 「조선종교인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대남 정치 선전에도 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회는 김일성부자 우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김정일마저 「한울님」으로 여기면서 그가 「운명의 구세주」 또는 김일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神格化하고 있다. 이는 최덕신의 「만고의 위인 김정일」이란 유고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강산에 현세의 한울님이신 김일성 주석님과 함께 김정일 비서를 또 한분의 한울님, 걸출한 영도자로 모시어 개벽천지가 이루어졌으니 제일강산이라는 전민중적 공감대의 형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천도교에서 일컫는 한울님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채 언급되고 있다.

마. 儒 教

유교에 대한 북한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매도하고 있다. 그들은 유교를 “왕권을 신성화하고 신분제도를 합리화하며 계급적 압박의 정당화, 천명에 대한 순종, 지배계급과의 타협 등을 설교”²⁵⁰⁾하는 「봉건적 사회정

250)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573.

치사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유교의 목적을 “봉건사회에서의 통치자와 피통치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양반 귀족과 평민간의 적대적 관계를 가리우기 위한 것이며 근로인민들을 봉건제도의 노예로 영원히 엮어매 놓으려는 악랄한 책동”²⁵¹⁾으로 보면서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반동적인 사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유교는 하늘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와 조상숭배 등 비과학성을 띄고 있으면서 관념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유교를 종교라기 보다는 철학적 사회정치적 사상²⁵²⁾으로 취급하면서 봉건유교사상과 봉건유교도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봉건유교도덕」에 있어서는 기초적 규범을 「인」, 「의」, 「예」, 「지」로 그리고 3강 5륜 교의를 내세워 봉건착취제도와 봉건적 사회관계를 합리화하고 있는데 忠孝사상에 대해서도 봉건질서를 위한 사상적 수단으로 여겨 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는 表-7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국가가부장」적 의미는 봉건시대의 군주론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

251) Ibid.

252) 유교는 원래 “경전은 성리학에서도 上宰(天) 太極등의 궁극존재(神)에 대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영생주의 기복주의를 갖고 있지 않고 내세관과 인격신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종교성이 부인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장태교수는 실지로 “유교사상의 핵심인 祭禮등이 天과 조상의 신을 하나의 근원속에 통일시켜 신앙화한 종교적 성격이 강할 만큼 ‘종교로서 유교의 사상체계’는 명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 1994. 7. 24.

〈表-7〉 봉건유교도덕에 관한 내용

| 구 분 | | 내 용 설 명 | 평 가 |
|------------|----|--|--|
| 기초적 규 범 | 인 | 봉건적 등급질서에 맞게 사람을 차별하여 사랑하는 것 | 인민대중 속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행동절차와 행동격식이고 도덕적봉건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의 식과 봉건도덕관념을 주입하기 위한 것 |
| | 의 | 봉건제도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 | |
| | 예 | 봉건제도와 질서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행동절차와 행동격식 | |
| | 지 | 선천적으로 타고 났다는 도덕적 인식능력 | |
| 기 본 내 용 | 삼강 |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지매와 복종의 관계 | 중앙집권적 봉건제도, 봉건적 가족제도를 비롯한 봉건제도와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 | 오륜 | 사랑: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의 맹목적인 '효성' 의리: 봉건국왕에 대한 신하들과 백성들의 절대적인 '충성' 차별: 남편에 대한 아내의 무조건적 '순종' 질서: 형에 대한 동생 또는 어른에 대한 어린이의 '복종' 신의: 봉건지배계급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의' | |

류성민, 「북한종교연구 I」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2), p. 43

요약하면 북한은 유교가 봉건지배계급의 사상적 지배도구로 이용되면서 인민대중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주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반동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 민족문화발전애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주체이념은 강한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사상적 근본은 유교적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와 자식간의 혈연적 관계를 국가차원으로 확대시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는 부모의 역할과 인민에 대한 자상함을 지닌 신과 같은 이가 바로 「아버지」라 불리어지는 김일성이며 이를 바로 김정일이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일은 아직 아버지라 호칭되고 있지는 않지만 1년 전부터 가끔 아버지라 호칭되면서 이미지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즉 유교적 차원에서 볼 때 김부자는 종교의 존재를 부인하는 차원에서 초자연적인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있으면서 인자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교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 충효관을 「국가 가부장제」에 교묘하게 적용시켜 「유기체적 가족국가관」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즉 인민대중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으로 표현된 효도의 연장으로 통합된 하나의 새로운 유교사회, 즉 가족국가에로의 전환”²⁵³⁾

253) 이문웅,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동 -사회조직 및 신앙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과 한국문화 - 인류학적 접근」, 한상복(편)(서울: 심설당, 1982), p. 218.

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향교실태를 살펴보면 분단 직전에는 개성의 成均館과 전국 1백29개소에 鄉校²⁵⁴⁾가 있었으나 현재 그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개성의 성균관은 대대적인 보수가 있었으나 그 외 향교는 거의 방치되어 폐허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바. 其他 宗教

북한에선 상기 종교의 「사전」과 「대사전」에서 「회교」, 「유태교」, 「신도교」 등의 종교를 분류해 설명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평가는 전혀 없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원시종교에 대해선 미신으로 분류해 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表-8에서 정리되어진다.

〈表-8〉 원시종교에 대한 설명

| | 조선 말 대사전 | 현대 조선 말사전 |
|------|--|--------------------------------------|
| 자연숭배 | 일정한 자연물이나 자연력 같은 것을 신비한 것으로 여기고 신처럼 믿는 것 | 일정한 자연물이나 자연력 같은 것을 신비한 것으로 여기고 믿는 것 |
| 조상숭배 | ①조상을 숭배하는 것 ②종교미신적 관념에서, 죽은 조상의 령혼을 숭배하는 것. 또는 그런 풍습이나 신앙 | 죽은 조상의 령혼을 숭배하는 것. 또는 그런 풍습이나 신앙 |

254) 「조선일보」, 1992. 6. 15.

| | 조선말대사전 | 현대조선말사전 |
|------|--|--|
| 토테미즘 | 사람들이 일정한 동식물이나 자연현상을 자기들의 조상이나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보호하고 숭배하는 원시종교의 한 형태 | 원시적인 종족이나 씨족들이 일정한 어떤 동식물이나 자연현상을 자기들의 조상이나 수호자로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 |
| 애니미즘 | 객관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표상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사물현상을 혼이나 귀신이 지배한다고 본 고대원시인들의 신앙 | 객관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표상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사물현상을 혼이나 귀신이 지배한다고 믿고 있던 고대 원시인들의 신앙. 우리나라에서 고대 건국설화들은 이러한 애니미즘에 의해 생겼다. |
| 샤머니즘 | 령혼을 숭배하는 일종의 원시종교, 무당들이 빌던 미신도 이에 속한다. 샤머니즘이란 말은 동부 씨비리종족의 하나인 어웬크 족(일명 통그수족)의 말인 '샤만' (무당)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 령혼을 숭배하는 일종의 원시종교, 세계의 넓은 지역에 퍼져있다. 무당들이 믿던 미신도 이에 속한다. |
| 물신숭배 | 개별적인 물건이나 대상에 신비스러운 초자연적 힘을 부여하며 그것을 우상화하는 미신적 행위 | 어떤 물건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신처럼 떠 받드는 것 |

자료: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자연세계에서 과학적 지식이 미비했던 원시인들이 자연현상이나 자연물, 동식물로부터 초자연적 힘이 있다고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신봉하게 된 결과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거나 믿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할 경우 비를 바라는 기우제를 암암리에 지내는 것을 보면 북한에도 아직까지 원시신앙의 뿌리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신행위 역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미신을 “전날에,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그것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²⁵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주민들이 부적을 소지하거나 쌀 등 생필품을 주고 관상, 손금, 점 등을 보는 것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²⁵⁶⁾

255)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219.

256) 최근 평양을 방문한 방북자들의 목적에 의하면 점괘를 보는 것은 청소년층에까지 확산되어 부적, 점치기 외에 주패(트럼프)를 통한 신수메기로 운수, 질병발생여부, 진학문제를 결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 1991. 7. 11.

IV. 南北韓 文化交流의 現況 및 問題點

1. 南北韓 文藝交流의 現況 및 問題點

가. 南北韓 文藝交流의 展開

남북한 문화교류의 시발점은 1985년 5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광복 40주년을 맞는 그해 8월 15일을 기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남한측 제의)과 예술공연단(북한측 제의)의 교환방문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접촉에 합의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적십자사는 모두 네 차례의 비공식접촉과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거쳐, 1985년 8월 22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제3차 실무대표접촉에서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그리고 기타 인원 51명으로 구성된 총 151명의 방문단 규모와 1985년 9월 20일에서 23일까지의 방문시기에 대한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이러한 남북한 적십자사의 합의에 따라 제1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어 1985년 9월 21과 22일 양일간 서울과 평양에서 민족전통가무를 중심으로 한 예술단 공연이 이루어졌다.

제1차 교환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남북적십자회담의 남한측 수석대표인 이영덕은 1985년 12월에 개최된 제10차 본회담에서 이듬해 구정을 즈음하여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을 교환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이종률은 팀 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1986년 2월로 예정된 제11차 본회담의 연기를 남한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은 자동적으로 연기되었다.¹⁾

북한측은 1989년 5월에 가서야 제2차 방문단 교환문제 협의관련 실무대표접촉을 제의하여 그해 9월 27일 제1차 실무대표접촉이 이루어졌다. 이후 양측은 총 7차에 걸친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방문단의 규모, 공연내용 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공연내용물에서 혁명가극물의 배제를 주장하는 남한측과 이를 주장하는 북한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국 방문단의 교환문제는 다음해로 연기되었다. 1990년에 들어서도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공연을 둘러싼 남북한 양측의 대립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제2차 방문단 교환은 무산되었다.²⁾

남한은 1990년 2월 통일민속 잔치인 정월 대보름 답교놀이

- 1) 1986~1988년 동안 대한적십자사는 수차례 걸쳐 북한측에 본회담 개최를 촉구하였으나 번번히 북한측에 의해 거절당하였다.
- 2) 남한측은 혁명가극이 정치성 배제라는 적십자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예술단의 교환취지와 남북관계 개선측면에서 문제시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북한측은 '꽃파는 처녀'가 민족적인것, 건전한 것,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는 것이라는 공연내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작품이며 남한측의 북한실상 공개 및 민족 대교류 정신에도 부합됨을 계속 주장하였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북회담사무국, 「적십자회담 수첩」(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4), pp. 113-27 참조.

를 개최하면서 문화부와 통일원 공동으로 「남북문화교류의 5대원칙」을 발표하였다. 「남북문화교류의 5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분단 이전의 우리민족 전통문화를 우선 교류한다. 2) 승부 및 경쟁적 분야는 배제한다. 3)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하는 표현방식은 지양한다. 4) 쉽고 작은일에서부터 시작한다. 5)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등이다. 이와 함께 남한측은 1990년 8월에는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통일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남북한 교류 문제를 조정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91년 12월 개최된 남북한의 총리회담인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제6차 고위급회담(1992. 2)에서 이를 발효시켰다.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합의서」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원칙을 담고 있다. 제17조는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는 민족 구성원들의 왕래·접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21조는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는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과 대외공동진출 원칙을 담고 있다.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한 양측은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여 1992년 9월 17일에는 4장 20조 50항으로 구성된 「교류·협력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부속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북한은 그들이 자신감이 있는 예술작품과 문화유물의 교환전시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또한 예술 및 체육분야의 교류·협력에도 비교적 호응을 해왔다. 그러나 종교인, 언론인들의 교류에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었다.³⁾

한편 199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그해 광복절을 기해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을 실시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8차에 걸친 실무접촉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은 결국 결렬되었다. 결렬의 주요인은 북한측이 제시한 3가지의 전제조건에 있었다. 북한측은 첫째, 방문단 교환에 앞서 이인모의 송환을 먼저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남북한 상호핵사찰 실시를 남북합의서 이행과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포커스 랜즈 군사훈련이 남북

3) 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9-14조, 1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남북회담사무국, 「사회문화공동위 수첩」(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4), pp. 23-45 참조.

사이의 화해와 완화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반평화적·반대화적 행위임을 들어 중지를 요구하였다.

정부차원의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 민간부분에서의 남북한 문예교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1990년 10월에는 평양에서 윤이상이 주관하는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개최되어 남한 대표로 황병기 등 17인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한편 황병기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는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에 북한측의 참가를 요청하여 같은해 12월에는 북한의 평양민족음악단이 서울에서 공연하였다. 1990년대 남북한 문화교류는 제3국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교류현황은 表-9과 같다.

〈表-9〉 1990년대 제3국 개최 남북한 주요 문예교류 현황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뉴욕남부 영화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1990. 10. 10-14 ○장소: 뉴욕 ○참가: 남측 31명, 북측 8명 ○내용: 남북한 영화 각 7편 시사회 개최 | 미국지역에서 개최된 영화인 공동행사 |
| 환동해 국제예술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1991. 5. 2-5 ○장소: 쓰루가 ○참가: 남측 52명, 북측 60명 ○내용: 중앙국립관현악단과 평양음악무용단의 합동공연 | 일본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남북예술인 공동행사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남북코리아 서화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1991. 5. 27-29 ○장소: 북경 ○참가: 남측 28명, 북측 10명 ○내용: 남한작품 49점, 북한작품 27점 합동전시 | 중국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남북예술인 공동행사 |
| '91 남북 통일전통 미용풍속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1991. 8. 17-18 ○장소: 사할린 ○참가: 남측 120명, 북측 80명 ○내용: 농악·진도북춤 등 전통 예술 합동공연 | 소련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남북예술인 공동행사 |
| '92 통일 예술축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1992. 8. 16 ○장소: 사할린 ○참가: 남측 78명, 북측 42명 ○내용: 남한의 대중가요와 북한의 전통예술 합동공연 | '91남북통일 전통미용풍속제에 이어 개최된 행사로 사할린 교민 위문행사 |
| 코리아 통일미술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1993. 10. 12-23 ○장소: 동경·오사카 ○참가: 남·북·해외교포 미술가 30명씩 ○내용: 민예총, 북한 및 조총련 작품 공동전시회 (남한 37점, 북한 30점, 조총련 34점 등 총 101점 출품) - 제 1차 미술전 (10. 12-17, 동경 센트럴 미술관) - 제 2차 미술전 (10. 18-23, 오사카) | 남북미술가들의 첫 만남으로 동 미술전의 정례적 개최에 잠정합의 하는 등 남북미술교류의 계기를 마련 |

자료: 남북회담사무국, 「적십자회담 수첩」, op. cit.

나. 南北韓 文藝交流에 대한 評價

그동안 진행되어온 남북한 문예교류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검토하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진행될 남북한 문예교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남북한 문예교류의 본격적인 시발점이었던 1985년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시 남한측의 평양 공연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조선예술」, 「조선문학」 등 북한의 주요 문예잡지를 통한 북한의 남한 예술단 공연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부정적이었다. 북한은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 첫째, 「북소리」, 「태평성대」 등 남한 측의 전통무용이나 음악공연물들이 대부분 1) 복고주의적이라는 점, 2) 궁중에서 공연되었던 작품이라는 점, 3) 불교나 굿 등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4) 미풍양속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⁴⁾ 즉, 남한 공연단이 비교적 순수한 입장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그들의 보존정도와 열의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구성한 전통음악과 무용공연물들이 북한측에게 복고주의라는 빌미를 주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측은 「2000년대를 향하여」, 「겨레의 갈망」 등 현대무용에 대해서 미국식이며 퇴폐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

4) 문화발전연구소,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서울: 문화발전연구소, 1993. 9), p. 69.

다. 북한은 「2000년대를 향하여」를 “벌거벗은 여자들이 나와 미국식 음악에 맞추어 엉덩이를 휘둘러대는 추태”로 단정하고 비난하였다.⁵⁾ 이 역시 남한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이려 했던 남한측의 의도는 북한측에게 미국식 예술문화의 본보기로 간주되었다 하겠다.

한편 1985년 당시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에 대한 남한의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공연물들이 전반적으로 획일화되고 통제화되었다는 것이다.⁶⁾ 즉, 북한의 공연물 대부분이 예술성을 결여하고 있는 반면 대중성과 정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문학예술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남한의 시각에서 북한의 공연물을 분석하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둘째, 남한측은 북한의 민속음악과 무용 공연물들에서 전통성의 상실내지는 변질이 두드러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무용의 경우 춤사위에 소련 민속춤의 요소와 인도춤의 손동작이 가미되어 우리의 전통민속무용이 “국적불명의 춤”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⁷⁾ 아울러 남한측은 18줄로 개량된 북한의 가야금을 예로들면서 북한 민속악기에 있어서의 전통의 변질 문제를 전반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북한예술의 전

5) 「조선예술」(1985. 11), p. 25.

6) 「조선일보」, 1985. 9. 2.

7) Ibid.

통성 변질에 관한 언급은 1990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취재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즉, 북한에는 전통음악이 대중성을 상실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아악 등 궁중음악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한편 북한은 1990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90송년 통일전통음악회」 공연 성과에 대한 「로동신문」의 기사를 통해 북한예술의 민족전통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다. 즉, 북한에서 개량한 민족악기들은 훌륭하고 민족의 전통을 살린 것들이며, 북한 음악가들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음악을 옹기 바짝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민족전통음악이 상실되었다고 한 남한 당국의 선전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등이다.⁹⁾ 이러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자신들 스스로 민족적이고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북한문화예술을 남한측이 변질운운하자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 무렵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영화제」에서 남한영화의 지나친 성애장면에 대한 북한 영화인들의 신랄한 비난이 있었다.¹

0)

그러나 같은 해 12월에 서울에서 열린 「'90송년 통일전통

8) 「경향신문」, 1990. 10. 25.

9) 「로동신문」, 1990. 12. 11-13. 문화발전연구소,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p. 76에서 재인용.

10) 염무웅, “남북 문화교류정책의 이념과 전망,”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p. 172.

음악회」를 참관한 대부분의 남한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악기 개량사업을 전통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옥류금은 남한 국악계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¹¹⁾ 이는 1985년 당시 예술단 상호교환 공연시 남한 국악계가 북한의 개량 가야금을 놓고 변질운운하던 때와 비교하면 무척 달라진 시각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북한은 상대측 문화예술의 전통성과 작품의 완성도를 논함에 있어서 아직도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다. 南北韓 文藝交流의 問題點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더불어 실시된 예술단의 공연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한간의 문예교류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해왔으며, 그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되어 왔다. 통일원 자료에 의하면, 1989년 이후 1994년 9월까지의 문예분야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은 총 172건이었으며, 이중 18건만이 성사되었다. 즉, 남북한 문예교류의 성사율은 신청건수의 약 10 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이러한 문예분야의 대북접촉은 최근들어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남북한 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하였던 1991년에는 총 66건의 대북접촉신청에 44건이 승인되어 8건이 성사된 반면,

11) 「일간 스포츠」, 1990. 12. 13; 「중앙일보」, 1990. 12. 20.

1992년에는 39건 신청에 2건만이 성사되었으며, 1993년에도 19건 신청에 2건만이 이루어졌다. 한편 1994년 12월 2일 현재까지 1994년에 실시된 남북한 문예교류는 지난 4월 「코리아 통일미술전 및 예술축전」 개최 협의를 위한 북경 실무회동과 9월 중국 연길시에서 개최된 「뉴코리아나 국제사진전」 등 2건에 불과하다.¹²⁾

이렇게 최근 3년간 남북한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거의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문예교류가 체제경쟁이나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최근의 남북한 문예교류의 침체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1994. 7. 8)과 무관하지 않다. 즉,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남북한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으며,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한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어려울 것임을 거듭 언급한 바 있다.¹³⁾ 한편 민예총이 북한의 문예총

12) 금년들어 12월3일 현재까지 문예분야 대북접촉은 총 18건이 신청되어 본문에서 언급한 2건만이 성사되었다. 18건의 신청요청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음악이 8건, 영화 3건, 무용 2건, 문학·미술·사진이 각 1건, 기타 2건 등으로 음악분야의 교류신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월 26일~30일간 중국 연길시에서 개최되었던 「뉴코리아나 국제사진전」에서는 남북한 각 85점, 중국 46점 등 총 216점의 풍경사진이 전시되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관계자 5명과 조선사진가협회 관계자 3명이 참석하여 남북한 사진작가간 첫 접촉이 이루어졌다.

13) 「한국일보」, 1993. 10. 10; 「동아일보」, 1993. 10. 26.

과 공동으로 금년 8월에 일본의 도쿄를 비롯한 5개 도시에서 열기로 합의한 「코리아 통일미술전 및 예술축전」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북한측의 연기결정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아울러 민예총이 북한 문예총과 함께 작년 일본개최에 이어 금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제2회 「코리아 통일미술전」 역시 같은 사정으로 무산되었다.¹⁴⁾

1990년의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과 1992년의 노부모 고향방문단 교환의 실패과정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방문단교환의 실패는 남북한 협의과정에서 정치적 선전효과를 지닌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의 공연을 놓고 상호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며, 노부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의 실패도 역시 정치적인 문제인 북한측의 이인모의 소환과 포커스랜즈 군사훈련의 중지요구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였다.

둘째, 남북한간의 문화교류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체제 유지와 긴장완화의 수단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함께 이루어진 예술단 교환의 성사는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이유로 남한의 5공화국 정부의 정통성을 계속 부정해오던 북한당국이 5공화국 정부가 지속적인 안정을 이루자 5공화국을 공식적인 남북한 대화의 상대로 인

14) 박인배 민예총 사무차장, 개인면담, 1994. 10. 20.

정하고 예술단의 교환을 통해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남한정부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재개는 체제유지와 정통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하겠다.

1990년대 초반 남북한 문화교류가 비교적 활성화 되었던 것은 그 무렵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즉, 1989년의 독일통일, 1990년의 소련연방의 해체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체제존립의 위기에 몰린 북한이 서울 올림픽, 북방외교 등으로 긴장과 갈등상태를 지속하여 오던 당시 남북한 관계를 문화교류 등을 통해 개선을 시도하였으며, 아울러 북한은 이러한 남북한 긴장완화 국면을 이용해 체제내부의 결속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었다. 이는 불과 몇 달전 「꽃파는 처녀」 공연문제를 구실삼아 제2차 이산가족 및 예술단 교환방문의 파기를 선언하였던 북한이 「범민족 통일 음악회」(1990. 10)에 남한 공연단을 선뜻 초청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며, 이후 두달 뒤인 그해 1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에도 그들이 요구한 전제조건들이 관철되지 않았음에도 참가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¹⁵⁾

셋째, 대부분의 남북한 문화교류가 장기적 안목을 결여한 채, 일단 접촉하고 보자는 이른바 한건주의 식으로 진행되었

15) '90송년 통일전통음악회와 관련하여 처음에 북한측은 구속된 애국인사들을 석방할 경우에만 서울에 갈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전과는 달리 남한측의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에도 예정대로 참가하였다. 남북회담사무국, 「사회문화공동위 수첩」, op. cit., p. 198.

다. 특히 제3국에서 이루어진 민간주도의 남북한 문예교류의 대부분이 교류협력을 위한 성실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어렵게 성사된 교류가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¹⁶⁾ 더우기 주최 단체들 간에 공명심, 경쟁의식 등까지 작용하여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남북한 문예교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예교류 전반에 있어서 상대적 독자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즉,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남북한 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류에 임하는 북한측의 성실성이 일차적으로 요구되지만, 남한측이 개방적이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¹⁷⁾ 예를 들어 제2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북한의 혁명가극을 비롯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짙은 공연물들의 공연에 대해서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한정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제까지 대부분의 남북한 문화교류의 경우 북한측의 전제조건이 많았던 까닭에 그 조건의 수락여부가 교류진행의

16) 이상일, “민족문화예술의 근원과 원형에서의 접근,” 『북한문화연구』제1집 (1990), p. 194.

17)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op. cit., p. 97.

관건이 되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 문화교류 성사여부의 주도권을 북한측이 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남한측에서 북한이 교류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제안하여 북한을 교류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연계하는 정책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둘째, 남북한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차원의 교류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차원의 교류는 남북한의 현 체제 자체가 좀더 비군사화, 탈정치화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은 지난 10년간의 교류현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문화교류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북한측에게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교류거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어렵게 성사된 각종 문화교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실한 프로그램의 작성, 장기적 교류계획 수립, 정책적 뒷받침 등이 중요하다. 지속성을 가지고 교류를 제도화시킬 때만이 교류 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뢰가 구축되면 정치적 상황 등 외적요인에 의해 교류가 중단되는 상황에도 보다 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3년 10월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에서 개최된 「코리아통일미술전」 행사는 금년 10월 서울에서 제2

차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만약에 2차 통일미술전이 개최되었다더라면 그것은 남북한간의 정례적인 미술교류전으로 발전되어 제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겠다.¹⁸⁾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예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985년 교환방문시 북한측이 남한측 공연을 관람하고 북고주의 또는 봉건잔재라고 혹평한 것은 사회주의적 미학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공연물의 선택이 북한의 문예이론과 미학적 관점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남한의 관점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문예이론과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예교류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차원의 교류에 대한 방향제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남북한 문예교류는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교류는 형식적 또는 단편적인 교류로 진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간교류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교류항목별 시기·순서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의 남북한 문예교류는 정치

18) 박인배, 개인면담, 1994. 10. 20.

적 상황에 종속되어 상대적인 독자성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류가 치밀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져 단지 일회성 만남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문예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 동질성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교류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다면, 또한 교류를 점차 제도화 시켜나간다면 문예교류·협력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2. 南北韓 言語交流의 現況 및 問題點

언어의 동질성 회복은 이질화된 기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의 경우 언어의 이질화 골이 깊은만큼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학, 예술, 종교, 언론 등의 분야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유연성과 포용성 있는 문화를 가진 편이 그렇지 못한 편을 흡수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언어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언어의 이질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간 언어교류가 꾸준히 동반되어야 한다. 언어교류가 뜻하는 것은 이질화된 언어 부분을 동질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節에서는 먼저 그동안의 언어이질화 극복을 위한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남북

한의 언어이질화 현황을 고려하면서 언어교류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자 한다.

가. 言語異質化 克服을 위한 展開過程

남북한은 언어이질화 극복을 위한 첫단계로써 코펜하겐(1991. 5. 27~31)에서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단일화」를 위한 회의를 가져 일부 합의에 도달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최로 파리에서 열린 회의(1992. 6. 16, 17)에서 북측의 자음안과 남측의 모음안을 수용하는 단일안에 합의하는 역사적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국제교류학회 주최로 북경에서 열린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세미나」(1993. 8. 28~31)에서 남측 10명과 북측 7명이 모여 통일에 대비한 남북언어와 철학분야의 학술토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남북문화현실에 대해 「이질화」가 아닌 「격차」로 보아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가졌다. 이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민족문제연구회」가 등장했으며 향후 교류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 이어서 중국 연변에서 개최된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¹⁹⁾(1994. 8. 5~9)에서 한글을 컴퓨터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

19) 남측에선 국어정보화회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음성학자 22명이 참가하여 14편 그리고 북측에선 조선과학기술통연맹 중앙위원회 소속 학자 26명이 1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외 연변 및 해외동포학자 30여명이 16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을 논의하였다.

특히 김일성사후 불안정한 북한 내부 사정으로 「남북동반대회」와 「경제전문가회의」가 북한측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는데, 염려했던 컴퓨터처리 학술대회가 무사히 진행된 것을 보면 향후 일정에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추측도 할 수 있다.

나. 言語交流의 問題點

민족어에 있어 문제는 언어전반, 즉, 문법, 어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억양이나 리듬에 걸친 이질화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언어학자들이 어떠한 정치적 상황변동에 상관없이 자주 모여 이질화된 부분을 찾아 일치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고영근(서울대), 심병호교수(북한, 사회과학원 국어사정위원회 서기장)는 남북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고영근은 남북한간 언어와 문자 사이에는 아직까지 이질적 측면보다 동질적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심병호는 「우리의 어휘 정리사업과 거기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라는 논문을 통해 남한의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우리말 큰사전」과 북한의 「조선어 사전」의 1차 부분을 한정해서 상호 비교한 결과 930여개 (55%)가 거의 같고, 540여개 (45%)는 서로 바꾸거나 다듬은 언어인데 이중에서도 대략 30%정도는 언어상의 차이는 양측 협의하에 조

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²⁰⁾ 두교수 모두 이질화된 단어·어휘·맞춤법·문법체계·띄어쓰기·문장부호법 등의 일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면 언어이질화를 극복하는 것이 시간을 요구할 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성취시키기 위해 언어발전과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은 언어 전반에 대한 정리 및 통제와 언어 정책의 강화목적과 효과적인 언어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어문연구회」(1947), 「학술용어사정위원회」(1947), 「과학원 어문학연구소」(1962), 「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1964), 「국어사정위원회」(1966) 등 강력한 어문연구기관과 정책수행기관을 설립하여 문법, 방언, 국문학 등을 연구하였다. 반면 남한엔 「국어연구원」²¹⁾의 이렇다 할 연구기관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강력한 언어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언어동질성을 창출하는 데 있어 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에 말려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강력한 언어정책과 남북언어교류를 위해선 남한 내 상호경쟁의 원칙하에 국어연구원에 필적할 만한 어문연구기관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수행기관이 필요하다.

20) 심병호, “우리의 어휘 정리사업과 거기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발표된 것을 박상천·김경용·류보선,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9)에서 p. 13에서 인용.

21) 1984년에 문교부산하에 ‘국어연구소’가 설치되었고 이것이 1990년에 ‘국어연구원’으로 격상되어 언어정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언어교류에 있어 학자들의 비발견적인 태도이다. 그동안의 민간교류전례를 보면 북한의 경우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하여 논의자체를 정치적 사안과 연관시켜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언어학술대회는 정치인들이 참석치 않아 그 어느 모임보다 정치적 개입요소가 없었고 북한의 태도가 진지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석인들 역시 언어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로 구성되어 언어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주제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문제해결에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남측의 태도다. 이번 학술대회에 읍저버 자격으로 참가한 도쿄 외국어대학 오오에 다카오 교수에 의하면, 남한 참석자들의 태도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공격적이었다는 것이다.

실지로 분단 후 50년 동안 서로의 언어교류없이 이질화되기 시작한 한글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고 언어동질화를 이룩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 이것은 정책적 합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언어의 이질화는 더욱 더 깊어지고 언어사용에 있어 외국어보다 남북한의 공통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간 언어동질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언어형태를 말살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언어학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노력은 정치적

상황변동에 종속됨이 없이 지속적이어야 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호인내와 양보, 합리적인 타협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南北韓 言論交流의 現況 및 問題點

「자유주의 언론」을 지향하는 남한과 「사회주의 언론」을 고수하는 북한과의 언론교류는 특히 어렵다. 문학 예술 언어 종교부분에 있어서의 상호교류와 협력은 조율과 통제가 가능하고 파급과 효과면에 있어서도 장시간을 요구한다. 하지만 언론교류는 바로 북한의 체제붕괴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節에서는 그동안 전개된 언론교류 실태를 알아보고 부수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南北韓 言論交流의 提議와 實踐

분단 후 북한은 1957년 제2차 전국기자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남측에 「언론인 교류」를 제의했으며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모두 9차례 관련 제의를 했다. 주요 제의를 보면, 1960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에서 최용건의 보고를 통해 양측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출판기관을 창립하고 각 분야에 걸친 문제들을 보도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61년 1월에 개최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 성명과 「조국평화통일결성대회」의 성명을 통해 언론인 교류를 구체적으로 제의하였다. 그 이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대남 호소문 형식이나 담화문에서 이를 재차 주장하였다. 한편 1963년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대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제의들은 선전적 차원에서 남한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나 교류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1970년대로 접어들어 「7.4공동성명」이 전개되고 「남북적십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서 제의했던 형태로 언론교류를 처음으로 제의했고, 이후 두번 더 제의를 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남북한간의 언론교류 사업은 남북연방제 실시후」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공식적으로 언론교류를 거부하였다. 언론교류가 힘들다고 판단한 남한정부는 교류에 앞서 상호실천 사항으로 “남북한간에 현재 행해지고 있는 대남, 대북방송을 지양”할 것을 제의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없었다.

이후 양측은 언론교류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1982년에 당시 손재식 통일원장관이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의 한 실천방안으로 「서울-평양간 도로개통, 이산가족의 우편교류 및 상봉실현, 그리고 다른 제의들과 함께 방송교류에 대한 제의」를 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

1980년대 말에 들어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동유럽 국가들의 몰락을 가져왔고, 특히 동서독의 통일과 연결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전파매체의 역할이 컸다. 이를 인식한 남한은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교류를 제의했다. 민정당 당직자회의에서도 이를 당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의했고 1989년에는 「상호 TV방송의 시청허용과 언론상호 공개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공보처 장관 이름으로 이를 재차 제의했다. 특히 1988년 「7.7선언」과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확대」(9. 3)로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일부 출판간행물, 영상자료를 일반에게 보여주고, TV에서도 김일성부자 사진이 보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0년 8월 9일 KBS 서기원 사장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정하철 위원장을 초청하기로 하고 KBS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의 협정체결을 제의²²⁾했다. 이에 따라 KBS는 북한측에 이산가족 방송과 자연생태계 탐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제언하였다. 이어 同年 9월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통일축구대회」와 1991년 5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 남북단일팀 평가전」을 계기로 경기가 생중계되고, 남북한의 기자가 상대지역에서 취재가 이루어져 언론교류에 실가담만한 희망을 주었고 남북고위급회담 관련기사가 보도되자 기대된 희망이 한층 더

22) 박종수, “남북 방송교류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정책론」, 한국방송학회(편)(서울: 나남, 1993), p. 622.

부풀어졌었다.

결국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방송(TV·라디오)의 교류 및 협력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교류가 제도적으로 공식화되는 순간에 이르렀었다. 하지만 이것은 비공식적 협력차원으로 진전되었으며, 그 형태는 KBS와 MBC가 「프로그램 공동제작」, 「기타 방송관련 자료의 개방」, 「방송인력의 공동연수」 등 초창기에 불가능한 방송협력사업을 북한에 제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전개되지 않았지만 남한의 방송 프로그램 상당수를 북한이 받아들이는 조그만 전진이 있었다. MBC는 1992년 말에 「여명의 눈동자」 38회분을 포함한 교류가능한 프로그램 목록집을, 그리고 KBS는 대외비로 자료목록을 준비해 제시했는데 이를 북한은 선별작업을 하였고 그 중 상당 프로그램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남한의 방송물 상당수가 김정일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보처는 몇 가지 주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의태자의 일대기」를 북한에서 촬영하는 것을 협조해 달라고 했고, KBS는 「두만강 지역의 경제특구」, 「고구려 발해지역의 유적탐사」, 「고구려벽화」를 위한 현지취재와, 「몽고말이 어떻게 국내에 수송되어 전달되는가」 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현지에서 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협력유형을 MBC도 지지했다. 또한 북한과의 방송교류 및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KBS는 「남북방송협력국」을 그리고 MBC는 「남북협력담당」을 신설해 만

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와 함께 MBC는 1993년 금강산 취재를 목적으로 북한측에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 들여 금강산 국제그룹이 초청장을 보내 왔다. 이는 북한으로부터 경협의 초청장을 받은 첫 경우가 된다.

상기 제의들은 성격적인 면에서 비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어 진행이 가능한 사항들이었다. 하지만 SBS가 백두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고 그의 깃발을 휘날릴 것이라는 제안²³⁾은 북측이 즉각 반대표명을 했다. 이는 정치적 요소가 포함됨과 동시에 북한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방송협력사업의 시작은 출판교류로 이어졌다. 1992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남한의 여강출판사와 북한의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대표들이 만나 북한 「이조실록」 국역본의 출판권 계약을 맺음으로써 남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출판물이 발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94년 1월 25일 여강출판사와 민족고전연구소의 저작권 계약 대리인이 「팔만대장경해제」의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그마한 성과에 이어 문화체육부는 1993년 12월 31일자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전면 개정해 1994년부터 북한출판물이라도 비정치적 비이념적 간행물 등의 수입시판을 허용하였고, 국내출판물 중

23) 박종수(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사업부 제5차 Workshop, 1994. 10. 11).

비사상적·비이념적 출판물의 대북반출²⁴⁾을 가능하게 하였다.

직접교역에 의한 반입절차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남북간 직접 계약에 의해 제3국 경유를 포함한 직접 반출입을 문체부의 협의를 거쳐 통일원의 승인하에 가능하게 했으며 일반 시판을 허용하였다. 이 경우 북한의 출판물 대외창구인 조선출판물 수출입상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간접교역은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3국을 통한 북한간행물의 반입을 안기부와 통일원의 의견을 조회하고 문체부의 승인하에 가능하게 했다. 이 경우 일반시판은 불가하고 특수자료취급기관 162개에 한해 배포하게 하였다. 반출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통일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직까지 남북한 출판인의 직접교류는 없고 출판물의 수입 및 출판권 계약 등을 위해 통신교류나 제3국에서의 접촉은 가끔 이루어졌었다. 남한의 북한출판물(表-10) 수입은 주로 일본의 「구월서방」(동경), 「조총련지부사무소」(지방), 홍콩의 「동도서공사」, 「Apollo Book Store」, 미국의 「고려무역상사」(L.A.)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제3국을 경유한 간접교역에 의존하여 남한에 유입되었다.

24) 대북 반출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등록된 무역업자에 의해 자유로이 추진될 수 있다.

〈表-10〉 북한출판물 수입현황('90-'93)

(금액: \$)

| 분 야 별 | | '90 | '91 | '92 | '93 |
|---------|-----|--------|--------|--------|--------|
| 총 류 | 종 수 | 177 | 33 | 58 | 39 |
| | 부 수 | 53,403 | 56,729 | 59,124 | 54,285 |
| | 금 액 | 71,165 | 75,171 | 71,381 | 73,745 |
| 철 학 | 종 수 | 114 | 85 | 53 | 3 |
| | 부 수 | 220 | 580 | 141 | 143 |
| | 금 액 | 1,843 | 2,811 | 922 | 569 |
| 종 교 | 종 수 | - | - | - | - |
| | 부 수 | - | - | - | - |
| | 금 액 | - | - | - | - |
| 사 회 과 학 | 종 수 | 525 | 246 | 978 | 442 |
| | 부 수 | 3,231 | 2,372 | 2,211 | 2,955 |
| | 금 액 | 19,463 | 28,615 | 13,856 | 3,063 |
| 순 수 과 학 | 종 수 | 21 | 22 | 61 | 14 |
| | 부 수 | 426 | 341 | 276 | 333 |
| | 금 액 | 2,437 | 1,695 | 1,256 | 1,342 |
| 기 술 과 학 | 종 수 | 42 | 136 | 211 | 48 |
| | 부 수 | 1,032 | 1,298 | 1,142 | 1,408 |
| | 금 액 | 3,756 | 6,104 | 5,009 | 6,309 |
| 예 술 | 종 수 | 22 | 51 | 69 | 74 |
| | 부 수 | 635 | 787 | 519 | 898 |
| | 금 액 | 2,726 | 4,125 | 2,696 | 4,806 |
| 어 학 | 종 수 | 17 | 23 | 28 | 16 |
| | 부 수 | 185 | 289 | 136 | 246 |
| | 금 액 | 711 | 1,315 | 522 | 1,128 |

| 분 야 별 | | '90 | '91 | '92 | '93 |
|-------|-----|---------|---------|---------|---------|
| 문 학 | 종 수 | 735 | 364 | 715 | 403 |
| | 부 수 | 1,489 | 1,587 | 2,003 | 1,952 |
| | 금 액 | 8,423 | 7,749 | 9,916 | 9,493 |
| 역 사 | 종 수 | 63 | 79 | 104 | 68 |
| | 부 수 | 246 | 397 | 2,573 | 1,941 |
| | 금 액 | 3,838 | 4,764 | 57,617 | 52,851 |
| 계 | 종 수 | 1,716 | 1,039 | 2,277 | 1,107 |
| | 부 수 | 60,867 | 64,380 | 68,125 | 64,161 |
| | 금 액 | 114,362 | 132,349 | 163,175 | 183,306 |

자료: 문화체육부, 「출판정책자료집 1993」(서울: 문화체육부, 1994), pp. 166-67

나. 南北韓 言論交流의 問題點

무엇보다 남북간의 언론관이 다른 것이 큰 문제다. 남한은 자유주의 언론의 원칙 아래 정치·정보·사회·경제·문화·교양·오락·체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내용을 시사성·공정성·오락성·상업성·신속성의 속성과 함께 보도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언론관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이념적 내용을 포함하면서 김부자 우상화와 당·정의 지시를 하달하는 전위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론 정론성과 시사성·시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보도의 원칙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사실상 정치사회화의 도구에 불과하다.

남북은 이념대립의 실질적 표징인 체제우월의 대결을 지속

하면서 「零和게임」(zero-sum 게임)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비판적 언론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언론정책²⁵⁾으로 인해 남북 모두는 상대를 인식하지 않은 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서로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쌍방에게 해를 주면서 소모적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추진하기 위해 그의 위대성과 남조선 혁명수행을 위한 보도와 대남비방강도는 언론의 주요 역할과 기능으로 작용한다. 또한 북한은 대외선전활동과 대남전략차원에서 대남비방이 담긴 신문 및 간행물 등을 해외로 보내고 있으며 효과의 극대화와 신속성을 위해 해외 방송매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남측은 과거 정치체제의 취약성으로 언론의 기능이 권위주의체제를 강화하는데 집중되었고 군사정권시대에는 정권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언론통제와 함께 반공사상을 주입²⁶⁾시켰다. 신문의 경우 여전히 체제우위적 관점에서 북한을 보도하면서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을 향한 언론의 성향은 「평화공존 지향적」이기보다는 「대립갈등 지향적」²⁷⁾이며 이러한 것은 상호 언론교류에 부정적

25) 언론정책은 “그사회에서 언론이 바라는 목적을 향해 진행하도록 합법적 지도과정”을 의미한다. Don R. Leduc, *Transforming Principles into Policy*, J. O. C., Vol. 31, no. 2(Spring 1980), pp. 197-98. 남북한 언론정책의 공통된 특징은 이념대립의 실질적 표징인 체제우월의 대결을 지속하면서 내적으로는 정권강화를 위해 언론통제를 가한 것이었다.

26) 언론보도에 반공이데올로기를 포함하나 이념투쟁을 전면에 등장시키지는 않았다.

27) 박종수, “남북 방송교류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고찰,” p. 626.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론교류가 정치적 상황변동에 영향을 받는 종속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은 선언적 의미이며 핵문제로 야기된 남북간 갈등은 매스컴이 협력차원이 아닌 지극히 자극적 비방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언론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상대비방이 계속될 경우 언론교류협력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언론이 자기를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선봉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남북당국의 입장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는 북한의 경우 수직적이며 남한은 수평적인데, 이러한 선상에서 언론교류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반동선전죄 아니면 이적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의 법으로는 사실상 언론교류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주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북한의 불리한 정치·경제적 여건이 남북언론교류를 허용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 평양의 표면적 반대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썩은 문화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언론인 교류문제는 민족구성원 전체가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언론교류로 인한 남한사회현실이 북한주민에 전달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며 이의 실현은 바로 체제붕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상기의 문제점들은 주로 남북의 상이한 언론관과 언론정책 그리고 정치·경제적 상황에 연관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과는 별도로 기술적인 문제점도 뒤따르고 있다. 이는 주로 방송부분에 해당된다.

먼저 TV방송교류에 있어 전파를 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북한은 기관방송인 「조선중앙TV」와 「만수대TV」는 유럽식이며 독일의 텔레폰켄사가 개발한 PAL방식(주사선 625)이어서 남한에서는 시청이 어렵다. 반면 남한TV와 북한의 「개성TV」는 미국식 NTSC방식(주사선 525)을 사용하고 있어 방송교류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남한에서 북한TV를 시청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수신하는 기술적인 경로로는 (1) 마이크로웨이브와 광섬유를 이용한 연결, (2) 직접 위성방송(DBS), (3) 케이블TV의 링크시스템, (4) TV방식전환장치(TV Standard Converter)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번째 방법은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마이크로웨이브전송시설이 설비되어 있어 이를 이용 평양 → 판문점 → 서울을 이어 전파송신이 가능하다. 두번째 방법은 북한TV 전파를 DBS를 향해 쏘으면 남한이 이를 수신 북한방송을 방송할 수 있다. 세번째는 케이블TV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 상대방의 TV를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verter를 이용해 NTSC와 PAL으로 상호전환등을 통해 프로그램 교환 등을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차원에서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방법의 경우 북한TV 전용 채널이 따로 있어야 하며 인공위성을 통한 경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된다. 네번째의 경우, 남한 내는 각 방송사와 한국통신은 상이한 방송방식을 변조할 수 있는 Converter가 있어 북한TV를 시청할 경우 기술적 어려움은 없으나 구입비용이 비싸지고 곳곳에 송신소를 세워야 하는데 남측은 평지가 그리고 북측엔 고산지대가 대부분이라 송신소 설립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방송수신이 완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만 기술적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수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교류에 있어 남북한 당국의 상대방 언론에 대한 개방의지 결여가 문제가 된다. 북한의 경우는 체제유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남한의 언론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나, 반면 남한은 북한 언론부분에 있어 일부를 개방²⁸⁾한다고 천명했다. 이것은 상호개방이 아니라 일방의 개방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미비하다. 이를 살펴보면 일부 북한출판물을 특정기관과 문고를 통해 볼 수 있으나 공개범위에 있어 제한적이다. 방송²⁹⁾에 있어서는 KBS 1TV의 「남북의 창」, MBC TV의 「통일전망대」, EBS의 「통일의 길」 등을

28) 개방이란 엄격히 말해 전파매체와 인쇄매체에 있어 일반시민에 완전 공개를 의미한다.

29) 정부는 1990년대 초반 북한전파를 개방했다고 선언했다.

1주일에 한번씩 방송³⁰⁾하고 있지만 방송내용이 단조롭고 딱딱하며 생활문화를 전혀 보여주지 않아 문화동질성 창출 차원에서 파급효과는 거의 없다.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남한이 언론교류 협력부분에 준비가 된 반면 북한은 도저히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언론교류보다는 언론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정치·사회·문화적 사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즉 기능주의의 논리처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필요하며 서로의 현실이 노출되는 부분은 초창기에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4. 南北韓 宗教交流의 現況 및 問題點

고착화된 분단은 남북한간 종교문화의 맥을 사실상 단절시켜 버렸고, 종교의 영향이 미치는 도덕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민족성향을 달리하게 되었다. 종교문화의 이질성은 결국 주

30) 편집과정을 보면 안기부가 방송을 녹화를 해서 홀수일은 MBC에 짝수일은 KBS에 주고 있는데 이 역시 100% 녹화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기부가 일차 편집과정을 거쳐 한정된 내용만을 임의로 전달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KBS와 MBC가 그나마 정리하여 편집하고 있다. 이는 방송매체를 이용 혁명사상과 사회주의 우월성을 고취시키면서 대남비방을 일삼는 내용을 남한주민들에 그대로 전달할 수 없는 시각으로 비롯되는데 이것이 바로 방송개방에 있어서 한계이며 문제이다.

민들의 내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종교인의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간의 종교교류란 그 자체가 자유와 평등을 갈구하며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현재 남한의 종교인구는 전 인구의 77%³¹⁾나 되는데 구체적인 교리는 각각 다르지만 각 종교는 신앙원리에 근거하고 있고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운동과는 달리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여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각 종교계는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평화와 조국이 갈망하는 민족통일을 위해 남북간 종교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교류는 경쟁지향적 성과위주가 지양되어야 하고 민족동질성 창출 차원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유념해 이節에선 그동안 진행된 남북한 종교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아 본다.

가. 南北韓 宗教交流·協力の 展開課程

(1) 天主教

한국가톨릭교회는 1982년 12월에 2년후 있을 천주교 전개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한선교위원회」를 만들어 평양교구 등 북한 가톨릭교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

31) 경제기획원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참고로 한 문공부 집계(1990년).

다. 이는 1980년대 초부터 관심을 표명한 「분단상황하의 교회」의 접근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첫단계로써 남한 천주교는 1983년 9월이후 바티칸 라인을 통해 평양에 추기경 방북 가능성을 타진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으나 국내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어 1984년 교황의 한국방문은 북한에 대한 관심과 남북 천주교교류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는데, 이에 힘입어 남한 천주교구는 12월 북한선교위원회를 주교회 직속기구로 두어 북한당국과 접촉을 담당하게 하였다.

남한천주교의 노력과 바티칸의 협력으로 고종욱(고 마태오) 신부는 1984년 3월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때 북한의 천주교실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가 있었다. 북한당국이 천주교 신부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고 신부를 통해 남한 천주교와의 접촉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³²⁾ 1985년 3월엔 한국가톨릭교회 주교의 평양방문에 앞서 남북이 5개항의 합의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남한측의 사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同年 9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상호방문」의 일원으로 참가한 지학순 주교의 방북은 오히려 역효과를 창출해 남북 천주교간의 불신이 싹트기 시

32) 변진홍, 「남북한 종교 교류의 전개과정 - 각 종단의 교류 현황을 중심으로」(서울: 빅 벨, 1994), p. 418.

작했다.

이후 한국가톨릭교회는 북한당국과의 접촉을 꾸준히 시도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바티칸의 협조를 얻어 북한당국 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했었다. 당시 바티칸교황청은 CCFD (Commite Catholique contre et pour le Developpement)를 통해 북한당국에 약 50만불에 해당하는 원조³³⁾를 제공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고, 북한은 당시 남한 천주교와의 접촉에 제 동을 걸었지만 1986년 말에서 1987년 초에 바티칸교황청에 관계정상화를 희망하면서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펼쳤기 때문 에 바티칸은 남북천주교 대화를 연결시키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북한은 1987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세계 비동맹국 가 외상회의에 바티칸 대표단이 읍저버로 참석하기를 희망하 자, 교황청은 한국인 신부의 동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고 북한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장익, 정의철신부의 북한방문 (1988. 10. 30-11. 4)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장 충성당에서 북한 천주교인 60여 명과 함께 10월 30일 저녁미 사와 11월 1일 아침미사를 봉헌하고 성적 등을 기증했으며

33) Ibid., p. 420, 註 22. 바티칸의 대북 원조는 서독교회의 동독교회 지원과 비슷한 맥락이다. 서독교회는 1986년부터 1988년 동안 4천6백60만 마르 크, 한화로 1백67억원을 동독교회로 송금하였다. 자선사업을 통하여 거둬진 이 기부금은 성당과 성당 설비들의 건립과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독교인들은 공산체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동독교인들 에게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유대를 표시하였다. 「동아일보」, 1989. 10. 7.

북한 천주교신자 5명³⁴⁾을 면담하기도 했다. 바티칸교황청은 북한의 이러한 유화적 태도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학생 2명을 로마 우르바노 신학교 입학을 승낙하였고, 방북신부와 면담한 신자들을 바티칸 부활대축일미사에 참석토록 초청해 그중 2명이 바티칸에서 교황을 알현할 수 있었다. 북한은 천주교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로마신학교에 1명의 학생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그가 천주교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주재 외교관의 일원으로 파견된 것이 밝혀지자 1년여 만에 송환되었고 그 이후 사제 양성을 위해 바티칸에 유학한 경우는 없었다.

한국가톨릭교회의 대북선교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었는데 1987년 전체 주교단의 이름으로 평양에 교회를 건립하고 신부를 파견하겠다는 제의를 평양에 했고 북한당국은 협의를 위해 김수환 추기경을 북한으로 초청했으나 그 당시 남북관계에 따른 여론의 부정적 의도를 감지한 남한정부가 주교급의 방북을 원해 추기경의 방북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우회적인 방안의 하나로 1989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박창득, 남해근, 조영희 신부가 미주 가톨릭신자 9명과 함께 방북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방

34) 장익신부가 이때 평양에서 처음 만난 천주교인들은 김승렬(야고보, 약 60세), 마등용(바오르, 약 63세), 윤봉순(모세, 약 60세), 박덕수(마르코, 약 60세), 홍도숙(데레사, 약 55세) 등 5명으로 이 가운데 박 마르코와 홍 데레사는 부부이다. 변진홍, 「남북한 종교 교류의 전개과정」, p. 420, 註 23.

북 신부들은 장충성당에서 미주신자와 북한 천주교인 100여 명과 함께 아침미사를 집전하였다. 그러나 同年 6월 제4차 「세계성체대회」에 북한 천주교인을 참석토록 한 남한교회의 노력은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은 세계성체대회를 전후로 일련의 변화를 보였는데 「조선천주교협회」의 결성도 이에 해당된다. 이는 남한을 포함한 해외 천주교인들과의 접촉필요성으로 기인된 만큼 1989년 6월 2일 「조선종교인협회」의 일원으로 「조선천주교인협회」는 남북종교인회담을, 그리고 1990년 8월 10일과 13일에는 남한의 정의구현사제단의 방북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였다. 또한 1991년 제4차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ACRP)(네팔 카투만두, 10. 27-11.2)에 참석하여 남북천주교인들의 교류에 관해 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익환 목사와 문규현 신부의 방북은 그동안 진전된 남북천주교 교류·협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은 이들의 석방없이는 한국교회와의 대화창구를 닫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1989년 8월에 예정된 남한교회 공식대표단의 방북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한에도 이어졌는데 同年 9월 서울 세계성체대회 기간 중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방북하여 남북 공동미사를 별도로 치르겠다고 통일원에 방북 신청을 했으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방북 신청 목적은 순수한 종교 활동이라고 하지만 정의구현사제단이 천주교 전체를 대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하

기 어렵다”³⁵⁾고 박힘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이어 1991년 3월 두봉 주교의 방북 시도와 동년 9월과 1992년 5월경 흥동근 목사를 통한 추기경 방북초청 역시 좌절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주교회는 1991년 9월 29일 「평화통일기원미사」에서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북제의 5개항³⁶⁾ - 1) 남북한 신자 공동참회예절 봉헌; 2) 북한교회를 위한 북한신학생 양성 요청시 적극 지원; 3) 예수성탄, 예수부활, 성모승천대축일등 3대 대축일 및 평화통일기원미사 합동봉헌; 4) 60세 이상 고령신자 이산가족 고향방문 우선 실현; 5) 남북한 신자 합동성지순례 실시 - 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핵문제가 돌출되자 남북 천주교간 접촉은 중단되었다. 대신 북한 천주교는 일본 천주교와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도모했는데, 이를 보면 1992년 9월경 일본 소마 주교가 JNCC대표단의 옵저버 자격으로 방북하여 장충성당을 방문해 견진성사를 집전하였고, 1993년 4월 19일에는 조선천주교인협의 대표단의 방일이 이루어져 동경한인교회 이기헌 신부를 통해 추기경에 대한 방북 초청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동안의 남북 천주교접촉은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단계를 막 넘어섰는데 이런 성과는 상당히 미비하다. 성과

35) 「동아일보」, 1989. 9. 30.

36)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화해와 나눔」 제43호(1992), pp. 4-15.

는 별도로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 천주교의 실체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다.

(2) 基督教

남한의 대북 선교단체들은 1960년대부터 방송을 통해 대북선교를 시도했으며, 「7·4공동성명」을 계기로 「조선기독교도 연맹」과 우회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선 선교사를 북한에 파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중국과 소련에서 조선족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 이산가족 위주로 해외동포들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의 방북은 타종교인에 비해 두드러졌다. 대부분 개인방문에 준하나 그들은 북한교회의 실상을 파악하고 남북한 교회가 교류·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미국한인교회연합회의 고문이며 조국통일축진회의 회장인 김성락 목사의 방북(1981. 6)은 대북선교의 길과 대화의 장을 열어 놓았다. 그들은 방북후 해외거주 기독교들과 북한의 기독교들이 분단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제1차 모임(오스트리아 비엔나, 1981), 제2차 모임(핀란드 헬싱키, 1982), 제3차 모임(오스트리아 비엔나, 1984)을 주선하였으며, 1982년 재방북시 성경 200권과 찬송가 100권을 조선기독교도연맹에 기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에 「통일문

제연구원 운영위원회」가 구성(1982. 9)되었다. KNCC 제34회 총회(1985. 2)에선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화되었다. 해외 기독교자들도 이를 지지했는데 1) 한반도에 다시 骨肉相爭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2) 우리 민족의 분열과 조국의 분단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3)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불행한 일이며, 이 불행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대화³⁷⁾ 뿐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KNCC 계통 교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통일의 과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비정부차원의 통일운동과 참여를 중요시하면서 이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평화와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남한 기독교계 역시 고마태오 신부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 선교에 더욱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북한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모색하였다. 세계교회도 남북간 기독교 교류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첫단계로 1984년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CCIA/WCC)는 일본도잔소(10. 29-11. 2)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란 주제하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란 선언서를 채택하면서 차후 해외교회들이 방북 및 접촉을 모색하되 남한교회와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회의에 북한

37) 김석주, “교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 「북한교회목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까?」, 고기준 외(서울: 형성사, 1990), p. 12.

이 불참함으로써 남북기독교인들간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기점으로 남북기독교 접촉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기독교인들은 WCC의 도움과 주선에 힘입어 스위스 글리온 제1차 회의(1986. 9. 2-5)에서 KNCC 대표단 5명과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 5명이 역사적·공식적 최초 상봉을 하게 되었다. 이어 제2차 회의(1988. 11. 24-25)엔 남측 11명, 북측 7명이 만나게 되었다. 여기서 남북한은 1995년을 「통일 회년의 해」로 선포하고 「남북한 개신교 지도자 협의회 선언문」 및 「통일공동기도문」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제3차 글리온회의(1990. 12. 1-4)와 1991년 2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WCC 7차 총회에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 4명이 옵저버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간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평화·정의·통일의 사명을 내걸고 나선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마침내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오는 한민족의 고통과 갈등을 세계교회가 인식해 동참의 길을 걸었다. 세계교회협의회(1985. 11. 11-19; 1987. 11. 9-16; 1988. 7. 1-15), 미국교회협의회(1986. 4. 18-5. 3), 일본기독교협의회(1987. 5. 6-13), 캐나다교회협의회(1988. 11. 4-12) 등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기독교의 실상을 살피고 선교의 기반을 구축하려 하였다. 그리고 WCC는 6차 총회 폐막일인 1989년

7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성명을, 동년 8월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22차 총회에선 「한반도의 통일과 화해」라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한민족의 애절한 소망을 염원했다.

이외 WCC 미국 일본 독일 회원교회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학자, 기독교인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해 남북기독교인들은 제3국에서 만날 수가 있었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남한교회의 노력은 계속되었는데 1988년 2월 29일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하고, 일본 도쿄에서 남북기독교인들이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제1차 회의(1990. 7. 10-13), 「민족선교학회」 주선으로 제2차 회의(1991. 7. 9-12), 제3차 회의(1992. 10. 20-22)를 가지면서 남북 기독교교류와 협력을 재 결의하였다. 이러한 만남은 美 로스 앤젤레스(1991. 3. 14-19)에서 「한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전망」이란 주제로 「남북교회학자 심포지엄」³⁸⁾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희년 5개년 공동사업 실무 협의회」³⁹⁾에서 성사되면서 남북간 대화의 고리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남북기독교인들의 만남은 7·4공동성명에서 나타난 자주, 평화,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의 3대정신

38) 남측에선 이영희, 박형규, 정현백이 그리고 북측에선 박영수 조평통대변인이 참석하였다.

39) 남측에선 권호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 8명이 그리고 북측에선 장영섭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하였다.

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KNCC는 남북한당국에 5가지 사항⁴⁰⁾을 건의하고 있다.

- 1)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이산가족의 상호 상호 자유스러운 방문 과거 전력으로 인한 사회적 부당한 차별 철폐가 시행되어야 한다.
- 2)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수립의 자유로운 참여 보장 그리고 통일문제의 연구 및 논의를 위한 민간기구활동의 제도적 보장 체제나 이념에 대한 양심과 신앙에 따른 자유로운 비판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공격성 성향, 배타주의를 제지, 상호 건설적 비판

40) 김영한,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서울: 풍만, 1990), p. 128-29. 그리고 KNCC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교회는 해방 50년 제인 1995년을 회년, 즉 해방의 해로 선포한다.
- 2) 교회갱신운동(개교회주의, 교권주의 극복, 교회일치를 위한 선교적 협력 강화, 평신도 운동 촉진, 경제적,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예언자적 역할 중대)을 전개한다.
- 3) 평화와 화해의 신앙공동체로서 평화교육, 통일교육 및 이데올로기 교육을 촉진시킨다.
- 4) 회년축제와 예전을 통하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참다운 화해와 일치를 실현한다.
- 5)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운동을 개 교회차원, 교단적인 차원, 에큐메니칼 운동의 차원, 타종교와의 대화 속에서 포괄적으로 전개한다.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교류, 방문, 통신의 개방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의 언어, 역사, 지리, 생물, 자연 자원 등의 학술분야와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분야의 상호교류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개방이 시행되어야 한다.

- 4)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하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불가침조약 체결, 주한미군 철수, 주한 유엔군 사령부 해체, 군사력 감축, 군비축소, 평화산업으로 전환 핵무기 철폐가 시행되어야 한다.
- 5) 민족자주성의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협상이나 회담, 국제협약에 있어서 외세간섭 배제,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 유지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조약체결에 있어서 민족의 삶과 이익 우선 및 남북 상호간의 합의와 공동이익 우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보적 통일론은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이후 홍동근 목사는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김일성대학에서 기독교학을 강의하게 되었다. 또한 북조선기독교도연맹 고기준 서기장의 초청에 의해 소망교회 객선회 목사(1991. 9. 24~10. 1)가 북한을 방문해 봉수교회 설교 및 선교활동을 하였고, KNCC 총무인 권호경씨(1992. 1. 7~1. 13)가 김일성을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남한기독교는 교단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선교 대책을 나름대로 세우면서 「하나의 교회」와 「한민족복음화」를 향해 선교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를 보면 북한선교전담부서를 갖추고 있는 교단이 있고, 단순히 북한종교에 관한 자료를 정리 북한에 대한 선교에 대비하는 교단도 있다.

한편 1990년 여름엔 기독교단체들이 연합하여 홍콩을 거쳐 북한에 쌀을 보냈는데 이는 선교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동포애의 전달이었다. 그리고 1993년 8월 15일 남북나눔의 운동본부에서 추진한 「인간띠잇기대회」가 행해졌는데 독립문에서 임진각까지 6만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총회연합회 남북교회협력위원회는 1993년 9월 9일 「북한교회재건설천강령」을 채택하여 효과적인 대북선교, 기독교교류, 북한교회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1994년 한국 5개 교단중 장로교와 협의회, 북한, 재일 기독교 총회가 동경⁴¹⁾ (5월 말부터 6월 초)에서 만나 앞으로 기독교선교를 위해 동경의 서울·평양에서 만나자는 결의를 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수년 동안 수천명의 해외거주 교포들이 방북해 이산가족을 재회하고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북한기독교의 문을 두드렸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의 남북기독교인들간 접촉은 상당히 부진했지만 이를 통해 북한기독교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

41) 동경모임에서 남한은 50~60명, 북한은 5~6명, 그리고 재일기독교총회에선 20~30명이 참석했다.

었다.

(3) 佛 教

북한불교계는 해외 불교학자와 공산권불교단체 그리고 언론인들을 북한에 초청하는 등 일련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조선불교도연맹」 역시 과거와는 달리 불교적 색채를 어느 정도 보이면서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아시아 불교문화권 국가들과의 접근을 비롯 남한불교계와 조심스런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대외적 활동을 살펴보면, 1981년 인도 태국 버마 등 동남아불교국가에 불교대표단을 파견했고, 1982년에는 몽고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 불교도평화회의(A.B.P.C)에 참가했다. 1986년 12월에는 네팔에서 열린 제15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했으며 그 당시 참가한 남측 불교인들과 자연스럽게 첫대면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열린 기타 불교총회엔 북한이 불참하여 남북불교인들간 만남의 맥을 잇지 못했다.

한편 남한불교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불교인과 접촉을 희망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절하였다. 한 예를 들어 재야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1988년 5월엔 「민족화합 공동올림픽 추진 불교본부」를 결성해 조선불교도연맹에 「남북 불자 공동기원법회」를 제안하고자 했으나 통일원에 의해 거부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전불교도의 이름으로 남북불교 교류협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했

었다.

우선적으로 불교계는 하와이 대원스님의 방북⁴²⁾(1988. 7)을 계기로 남북간 불교교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놓았다. 이어 11월에는 「남북 불교도 교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남북한 불교교류를 위해 본격적 활동에 임할 것을 표명하였다. 대승불교승가회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대승보살의 결의」라는 성명을 통해 “남북한 불교 전통 사찰 순례 방문과 불교학술문화교류를 제의”⁴³⁾하였다.

이에 북한은 1989년 6월에 방북한 법타스님을 통해 “남한의 불교행사에 초청하면 언제라도 가겠다”⁴⁴⁾는 의사를 전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同年 10월 14일 개최될 「한강연등대법회」에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을 초청하였고 평양은 참가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 행사를 위한 판문점 실무 접촉에 북한이 불참함으로써 남북불교인의 서울상봉은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불교계는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 이 결과 한민족 불교교류추진미주불교협의회가 주선한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⁴⁵⁾(LA 관음사, 1991. 11)에 남북한 불교인들이 함께 초청되

42) 대원스님의 방북시 교감이 이루어진 북한 불교대표의 제16차 WFB 대회 참석 가능성은 실현되지 못했다.

43) 「불교신문」, 1988. 8. 17.

44) 「불교신문」, 1989. 10. 18.

45) 북한불교인이 참석함으로써 그 명칭도 「남북불교대표자회의」로 바뀌었다.

어 마침내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법회에서 어떤 합의서나 공동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남북불교계가 분단후 처음으로 공식적 만남을 이루었다.

이러한 시작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 남북불교인 만남의 지속성을 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동북아시아 평화회의」에 북한의 불교관련인사들을 초청⁴⁶⁾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남북불교인의 대화는 더이상 없었다.

그동안의 과정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최근 제3국에서 열린 불교행사에서 남북불교인이 만났고 남한 및 해외거주 스님이 방북하여 북한의 불교실정을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일보전진한 것이다.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 큰 수확이다.

(4) 天道教

남한의 천도교는 남북관계는 천운이며 분단, 붕괴, 통일 또한 천운이라고 믿고 東學思想을 계승한 민족종교인 천도교가 남북통일의 매개적 역할⁴⁷⁾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46) 이흥파 사무총장은 조선불교도 중앙위원회 박태오 위원장, 홍봉수 도문, 심상련 서기장, 이동철 평양시 불교회장을 초청했다.

47) 천도교의 입장에서 볼때 “物論과 觀念論의 대립, 理論과 實踐의 균열, 마음과 몸의 갈등등 산적한 인류의 평화와 복지의 문제앞에 더이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 노태구, “東學(思想)의 평화관” (평화문제연구소 Workshop 발표논문, 1993. 11. 11), p. 2.

과의 천도교 교류를 적극 추진⁴⁸⁾하였다.

우선적으로 남측은 1988년 천도교 서적을 비롯한 경전을 이북에 보냈고, 북경을 통한 대북접촉을 시도하였다. 이어 1989년 4월 5일에는 포덕 130전을 기념하는 천일기념식에서 오익제 교령이 남북천도교인의 교류와 상호방문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밝히고,⁴⁹⁾ 이것을 위해 同年 7월 3일 「천도교 남북교류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위원회는 북한지역의 실상 파악, 남북 천도교인 교류 협력 추진과 통일을 위한 주도적 역할, 남북 천도교인 합동 성지 순례, 천도교 경전 및 교서의 교환 추진⁵⁰⁾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후 천도교는 재미교포 전용선과 박이정의 방북을 통해 오익제교령의 초청을 전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교령을 포함한 33명의 천도교 증진교역자들은 방문단을 구성해 평양교당에서 북한천도교인들과 천일기념식을 가질 것을

48) 천도교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가 세계를 東과 西로 양분하였으며 남북한의 분단과 갈등 역시 이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천도교를 민족분단 극복으로 내세우고 있다. “人是天이니 事人如天”하라는 人乃天의 정신이 제시하고 있는 교리의 내용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중시 여기는 민주주의와 평등에 근거를 둔 공산주의의 다른 정치이념을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화공존의 이념으로써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이념으로써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남한 천도교는 민족종교를 음성적으로라도 도와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산가족 결함을 위해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위해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한다.

49) 「천도교월보」, 1989. 5. 15.

50) 변진홍, 「남북한 종교 교류의 전개과정」, op. cit., pp. 426-27.

공식 제의⁵¹⁾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북한은 국제종교단체 회의에 참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1991년 제4차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에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남북 천도교 대표들이 분단 후 처음으로 회동하게 되었다. 이 때 남측 대표단은 북한천도교인들이 천일기념식에 참석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남한 천도교 교역자들의 방북을 재차 제안하였다.

북핵문제로 남북간 관계가 악화된 상황하에서, 오교령과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류미영 위원장이 중국북경(1993. 10. 19-20)에서 만나 동학혁명 100주년이 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남북 천도교 교류와 협력을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 1994년 류위원장은 오교령에게 동학혁명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사안에 대해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하였으나 핵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남한정부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류위원장은 남북 천도교 단체들이 “갑오농민전쟁 100돌을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한 접촉을 가지는 것은 자주적 민간대화의 일환으로써 당국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또 개입해서 안될 일”⁵²⁾이며 남한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동안 남북 천도교인의 대화가 대표인사급 차원에서만 이

51) 「천도교신문」, 1990. 11. 25.

52) 북한 류미영 위원장의 담화내용(1994. 2. 3).

루어지고 있는 것은 남북 모두가 종교적 차원에서 보다는 정치적 요소가 많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만남에 있어서 순수 종교행사, 교류·협력 외 남한천도교가 남북정상회담을 성취시키기 위한 중재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천도교와 접촉을 모색했고, 평양은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냉각된 정치적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종교행사를 제안하는 등 편법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은 가져올 수 없었다. 또한 천도교 교류와 행사를 위한 실무접촉 대상자에 있어서도 남측이 종교인사를 보내려는 반면 북측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속한 인사를 채택함으로써 마찰을 야기하였다.

(5) 其他宗教

그동안 남북종교인의 만남은 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외 민족종교⁵³⁾인 원불교, 대종교 등이 대북접촉을 모색하였다.

일차적으로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는 1989년 6월 2일 「한국종교인협의회」에 “나라의 통일은 전민족적인 위업인 것만큼 당국자나 그 어떤 특정인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종교인들도 이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남 종교인교류를 제의했으며, 1990년 7

53) 이외 남한에는 기타종교로 ‘도교’, ‘증산교’, ‘국제도덕협회’, ‘대순진리회’, ‘천리교’, ‘태극도’, ‘천존회’ 등이 있다.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전래되어 오는 巫教(Shamanism)가 있다.

월에는 후자가 전자에 남북종교인회의를 제안⁵⁴⁾한 바 있다. 상호간의 노력은 무산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전자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당국의 지시에 따르는 반면 후자는 일부 종교교단으로 구성되어 범 종교단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족종단」은 1990년 개천절을 남북통일 원점으로 삼고 백두산 정상에서 남북공동 천제봉행 계획 등을 추진하였다.⁵⁵⁾

원불교 역시 대북접촉과 중국을 포함한 공산국가권의 교화를 목적으로 1989년 3월 「북방교화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첫 번째 시도는 미국 서부교구 L.A.교당 박성기 교무를 평양에 보내어 포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북한교우들의 소식을 확인토록 하였다. 이어 1990년 8월 제3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에 김영두 교무가 북한 주체사상연구소장인 박승덕 박사에게 「원불교교전」을 전달함과 함께 북한에 원불교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켰다.

1993년에는 북한이 단군릉을 발굴하였다고 선전하면서 대종교에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1994년 3월 12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친 접촉이 성사되었다. 이때 대종교의

54) 한편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1989년 11월에 '화합과 참여의 시대'를 열고 평화통일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남북종교교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55) 이 계획에는 대종교(총신교 권태훈), 한얼교(법통 신정일), 단군교(대표 김해경), 환종교(대표 이선동) 등이 참여하였다. 「종교신문」, 1990. 9. 19.

안호상 총전교와 류미영 천도교 위원장은 상호교류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효하였는데, 이는 1) 민족 대단결과 조국 통일을 위한 공동 노력, 2) 양측의 상호방문 및 개천절을 비롯한 전례 행사의 공동진행, 3) 남북한의 단군 성지(5곳) 복구 및 단군 관계 학술 토론회 개최, 4) 북한에 대중교 북부 도 분사 설치 검토⁵⁶⁾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족종교 중 일부 종단이 대북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외 기타 민족종교들의 대북접촉은 없는 실정이고 관심 또한 없다. 하지만 남북한에 유교문화가 뿌리 깊이 내려오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이 유교 자체를 종교로 보지 않는다 하여 남한 유교가 전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차후 종교문화를 창출하는데 있어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나. 南北韓 宗教交流·協力에 있어서의 問題點

종교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남북 종교교류와 협력은 분단의 구조적 장애요소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교류의 범위와 협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남북 종교교류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하

56) 변진홍, 「남북한 종교 교류의 전개 과정」, op., cit, p. 431에서 인용.

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정치적 개입과 간섭은 크나 큰 장애요 소로 등장하고 있고 남한내 각종 교계는 대북접촉에 있어 종단과 종파간의 대립, 비체계적이고 비생산적인 계획과 추진, 그리고 정부시책에 정면 충돌하면서 종교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남북 종교교류에 역효과를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종교관과 종교정책을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바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남한 종교계가 대북 진출에 있어 노출되는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기독교와 천주교의 대북 접촉은 타 종교에 비해 활발하나 그 접근법에 있어 부분적으로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기독교는 보수교회와 진보교회간의 불일치, 그리고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의 독단적인 접근 등은 일관성과 단합성을 요구하는 종교교류에 있어 분명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의 경우를 보면 KNCC가 한국기독교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만 KNCC에 속하지 않은 보수주의 교단협의회 등의 정면적 반발은 남북 기독교 교류에 있어 심각한 불일치와 갈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는 다음에 열거되는 진보측의 대북접근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⁵⁷⁾

1) 진보적 운동권 성직자들의 비종교적 목적의 대북활동.

57) 조동진, “통일운동 50년사와 민족교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기독교학문연구회(편)(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pp. 57-58.

- 2) 보수적 교회 지도자들의 자기 과시적 복음화대회 개최 등 행사 중심의 대북활동.
- 3)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협의회의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 접촉형태의 대북활동.
- 4) 국제 교파별 북한선교위원회 조직 및 대외성명 등을 통한 간접적 대북활동.
- 5) 각종 북한선교단체들의 중국 또는 러시아 선교조직을 통한 간접 대북활동.
- 6) 미국, 유럽 등 공산권 선교기관의 냉전시대 선교방법인 성경 밀반입 등 비합법적 대북활동.
- 7) 제3국에서의 학술회의 개최등 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접촉을 통한 학술교류적 대북활동.
- 8) 북한의 대남조직과 통일과 관련한 조직과의 접촉과 대화를 통한 대북활동.
- 9) 사랑의 쌀보내기와 남북나눔운동 등 경제적 접촉을 통한 대북활동.
- 10) 해외교포들의 고향 방문단 등을 통한 대북활동.

이러한 유형의 대북접근은 얼마만큼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문제점 역시 뒤따른다. 특히 대남활동조직과의 대화 등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상당한 혼선을 줄 것이고 실질적으로 순수 종교차원의 교류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보수교단(또는 복음주의계통)은 상기의 진보적 접근을 공박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위의 선언이 평화통일 책임문제가

마치 남한교회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남북한 이데올로기를 동질로 다루고 있으며, 북한 죄악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남한정부의 반공 이데올로기 정책에 대해 질타하고, 한반도 평화유지 및 안보장치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김일성 집단의 위장평화공세에 역이용 당할 소지가 많으며, 민중신학적 논리에 입각⁵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남북한간 냉전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계의 견해는 진보교회의 접근을 어느 정도 제지하고 있다.

또한 KNCC 계통에서 주체사상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하는 기독교와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받들면서 주체사상을 전개하는 것과 충돌되고 있다. 이는 실지 연계될 수 없는 논리이다. 그리고 진보계의 광선희 목사는 북한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도움이 김일성 하사품으로 전달되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책없는 도움」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문제가 될 것이다.

직면하고 있는 또다른 문제점은 교단 대표자들이 자기 교파세력의 확충을 위해 대북 접촉을 선전하거나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기독교는 여러 대북 접촉기구를 통해 대북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책의 일치성이 없어 큰 혼란을 주고

58) 김영한,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 op. cit., p. 11.

있다. 더구나 통일교의 대북접촉, 즉 돈으로 모든 것을 매수해 놓고 김일성을 만나고 교류를 터놓은 것은 기독교 선교에 지장을 주고 있다.

천주교는 기독교와는 달리 북한선교위원회가 대북접촉을 이끌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두고 있으나, 정의구현사제단의 독자적 행동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남북 종교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독교의 경우도 해당되는데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은 북한종교의 위상을 한층 높여 준 반면 남한의 종교정책과 통일정책에 혼선을 줌으로써 일관된 정책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남북한 불교교류가 어려운 주 이유⁵⁹⁾는 남한이 종교적 차원에서 교류를 원하는 반면 북한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데서 비롯된다. 이는 남북 불교인의 최초의 공식만남인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의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남측 단장은 불교를 통한 민족 문화의 교류와 상호 신뢰의 회복, 민족동질성의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불교 교리와 사상을 이에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 데 비하여 북측 단장은 통일을 역설하면서 남한의 핵무기 철수, 보안법과 반공법 철폐, 방북인사

59) 하지만 남측 불교인은 북한의 불교와의 교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주된 이유로는 1) 1600년의 오랜 불교사상이 민족의 정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면서 북한주민의 정서 부분에 잠재되어 있고, 2) 부분적이거나 관광지역으로써 사찰 등이 존속하고 있고, 3) 직업승려가 있다는 것, 4) 일부사찰의 복구나 보수 등은 불교를 전면 부정하지 않는 정책적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는 우선적으로 북한불교를 정확히 인식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석방 등 정치적 선결 조건을 내세운 불교교류를 제시⁶⁰⁾함으로써 견해차이를 노출킨 것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남북 천도교교류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첫째,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천도교는 특히 정당화되어 있어 교류와 협력은 정치성을 떨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첫째, 현재 북한의 「천도교청우당」(우당이라 불리움)은 종교적 단체의 성격을 띄면서 정당으로 지금껏 존재하면서 대남 선전에 나서고 있다. 연관적으로 둘째, 우당은 종교활동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이를 통해 북한체제에 접근하면서 여러 종교단체들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남측의 대북 추진단체가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이원화되어 있다. 넷째, 여전히 북한의 천도교인의 신자수나 교당이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북 종교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남북정부 모두가 종교계의 대북·대남 접근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관장하는데서 비롯된다. 북한당국이 각종교단의 움직임을 완전 지휘·감독하는 반면 남한의 종교계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접근을 모색했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확실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대북 추진종단과 정부가 마찰을 수반할 수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表-11에 보듯이 「화해와 협력의 단계」 → 「남북연합단계」 → 「단일국가형성 단계」별 추진계획과

60) 변진홍, 「남북한 종교 교류의 전개과정」, op. cit., p. 416.

대책을 세우면서 남북종교교류에 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종교계의 대북 접촉에 대해 구체적 사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정부는 대북 종교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는 되는 일과 안되는 일」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表-11〉 통일전후의 예상되는 종교갈등과 대책

| | 북한 | 우리종교계 | 정부 대책 |
|----------------|---|---|--|
| 1단계 화해와 협력의 단계 | 종교교류목표가 대남통일전선일환으로 교류에 소극적 | 교류제의 및 접촉시도 상호경쟁적으로 무절제하게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계의 통일논의 개발정립 • 인도적 제정, 물자 지원 •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예배소 설치 • 북한종교 실태조사 연구 • 통일기금적립 |
| 2단계 남북연합단계 | 이념 공백으로 심리적 갈등 및 방황이 뒤따라 종교역할이 긍정적으로 작용 | 교세확장 및 과시차원의 상호경쟁적인 포·선교가 예상되며, 북한의 해방이 전 각 종교재산에 대한 기득권 다툼예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종교학자 교류 및 공동조사 연구 • 종교인 상호방문 교류 • 북한종교시설 복구를 위한 기금적립 |
| 3단계 단일국가형성단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종교시설 복구 |

자료: 1994년 국회국정감사자료

남북 종교교류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종교적 차원에서 상대가 누구냐에 있다. 남한의 종단은 순수 종교를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남한 천주교는 조선천주교연합회를 합법적 기구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등도 순수 종교단체가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 세워진 사회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남북 종교교류에 있어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문제해결에 돌파구를 찾는 계기를 창출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남한의 종교단체들과 교류를 가질 때 북한은 필요에 따라 협회와 교회·성당·교당이라는 이중적 대화창구를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협회결성 이전보다 남북 종교교류가 갖는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 종교단체들은 남한내 반정부적 종교단체를 대화상대자로 선호할 때 남북 종교교류 자체가 정치적 수단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러한 구도가 구체화된다면 남북 종교교류에 있어 남북 정부의 정치적 개입은 피할 수가 없다.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이질화된 남북 종교문화를 재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상호존중의 바탕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이 북한을 무시할 때 후자 역시 전자의 접근을 기피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종교교류의 출발선상이나 최종목적에 있어 순수 종교적인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되지만, 북한의 종교현실을 살펴볼 때 신

양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북한 종교계가 사회에서 갖는 위상이 넓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V. 結 論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을 자랑하는 한반도에서 분단 이후 전개되어 온 극심한 정치적, 군사적 갈등과 문화적 이질화는 한민족의 참혹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비극을 조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종식시키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사명이다. 냉전시기 동안 민족적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결과는 매우 미미했다. 즉 한반도 내외의 정세변화에 따라 남북한 관계에도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그 변화는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1990년을 전후한 탈냉전적 국제질서의 태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도 대화와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다. 그러나 핵문제와 김일성 사상은 그러한 해빙 분위기를 다시금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거사를 되돌아볼 때, 문화교류를 비롯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도 궁극적으로 정치적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전면에 부각된다.

그렇지만 남북한 문화교류의 한계를 단지 정치적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분단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성실하게 접근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정치적 관계의 개선이 암담한 가운데 비정치적 분야, 특히 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 가능성조차 정치적 차원에서만 찾고자 한다면 남북한간의 접근을 통한 통일 가능성은 너무나 요원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정치적 환경의 제약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문화적 차원 자체에서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또는 저해하는 요인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장차 문화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까지 모색해 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기간 동안 남북한은 문화예술교류의 필요성을 각각 제기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근본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분석, 정리한 남북한의 문화정책(第Ⅱ章), 북한문화의 실상(第Ⅲ章), 그리고 남북한 문화교류 현황(第Ⅳ章)을 통하여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남북한 교류를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점들은 비교적 자명하게 드러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들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이질화의 심화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상이한 체제를 확립하면서 남북한은 정치·사회문화

뿐만 아니라 언어, 언론, 문학, 예술, 종교 등의 광범한 문화 영역에서 이질화가 확대, 심화되고 있다.

둘째, 문화에 대한 엄격한 통제정책을 가진 북한정권의 문제이다. 북한의 문화는 전 분야에 걸쳐 당·정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적 순수성과 독자성을 찾기 힘들다. 실제로 당·정의 노선과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북한의 문화예술단체들과 소속 작가, 예술인, 언론인, 종교인들은 당의 전위대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남북한 문화예술교류의 효율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북한문화의 도구화 현실이다. 북한의 공식적 문화론과 문화정책은 김일성부자 우상화와 체제강화, 당·정의 선전 선동, 사회주의 혁명건설, 대남 선전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문화의 도구화는 언론에 의해 선도되고 있으며, 문학예술의 경우에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종자론, 주체문예이론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구화된 북한의 문화가 다양성을 강조하는 남한 문화예술과 조화를 찾기란 매우 힘들다.

넷째, 비타협적인 북한의 문예사상과 문예조류의 문제이다.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에 근거하여 있어 사회주의적인 내용과 민족적인 형식을 벗어난 어떠한 문예작품도 창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문예관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국의 문예가 북

한에 공식적으로 수용될 여지는 없다.

다섯째,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태도이다. 특히 북한의 언론매체에는 상호존중은 커녕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대남 비방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남한의 대북 보도에서도 적대적 인식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호비방중지를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한에서는 상호존중의 입장을 가능한 한 수용할 의지를 보인데 반해서 북한은 이를 묵살함으로써 합의 사항은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상대적 관계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보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한의 상호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문제점들의 상당 부분은 북한정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남한 측이 상호타협이나 교류협력을 조속히 실현시키려 노력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목표로 남한의 진보적 학자와 민간단체들이 주장하는 바 - 즉 문화교류의 탈 정치화, 탈 이념화, 탈 군사화, 정부의 불개입, 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조항의 삭제, 그리고 언론취재 과정에서 통일원장관의 사전 승인과 문화예술의 교류와 자유적 접촉을 제약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철폐 등 - 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 남한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주의적인 태도는 북한의 문화정책적 변화를 무작정 기대하거나 또는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더딜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씩이나마 상황변화를 일궈나가는 것이다. 독일사례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¹⁾ 역사 및 환경 등의 차이로 독일과 한반도를 비교하는 데는 적실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사례는 적어도 남북한 문화교류의 방향과 원칙을 모색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독일사례의 시사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반도의 경우는 독일과 달리 질적, 양적으로 상호대화 및 교류협력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남북한 간에 어떠한 타협점을 찾기란 더욱 힘들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문화적 교류협력에서 선결해야 할

1) 문화교류분야에서 독일사례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화협정체결 전 민간교류를 정부가 적극 지원했다. ② 상대측 체제의 약점으로 부각되거나 명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의 교류는 뒤로 미루고 쌍방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상대측이 호응함으로써 이들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교류했다. ③ 서독정부는 선전효과가 아닌 장기계획 아래 대 동독 제안이나 교류원칙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가용 통로를 소리없이 지속적으로 가동하였다. ④ 일종의 데이터뱅크식 교류협력 종합프로그램을 정부가 면밀하게 작성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고 추진 전략 면에서 실효를 거두었다. ⑤ 장기적 안목으로 청소년교류에 주력했다. ⑥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여 통일과정과 통일기간에 나타난 의외성의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했다. ⑦ 통일후 동독인들이 자유민주시민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했다. 김문환, “통일한국의 정신문화”(제5회 도산사상세미나 발표논문, 1993. 11. 6), p. 15.

일은 남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상대문화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 2) 문화적 이질화를 강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태도와 이질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본격적 연구와 해결책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분단 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통문화야말로 남북한 사회를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문화의 재발견 및 교류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체제경쟁과 상호마찰을 수반하거나 경제적 격차를 노정시킬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문화교류를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5) 내용면에 있어서는 교감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정례화가 가능한 문화교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6)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문화교류행사가 한반도에서 개최되기가 어렵다면, 제 3국, 특히 해외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부터 점차 교류협력을 위한 실천분야를 확대,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점과제들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 즉 문화교류에 의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북한정권의 입장을 고려하는 접근이 요청된다. 체제유지에 급급한 북한정권이 포용성 내지 흡수력 측면에서 보다 큰 역량을 가진 남한의 문화에 북한사회를 그대로 노출시킬 의도는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문화예술 교류 - 주로 선동 및 선전의 차원에서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 를 제외하고 있는 한 교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허용할 수 있는 부분과 당장 허용하지 않을 부분에 대한 분류와 이를 바탕으로 장차 교류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제유지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정권이 거부하는 형태의 문화교류는 일반적 문화계 종사자들의 직접적 상호방문을 동반하는 교류,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한 방송, 언론 및 종교 차원의 교류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선동, 선전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 예컨대 예술작품 및 문화유물의 교환전시, 국제무대에서의 문화적 공동진출 등에는 비교적 너그럽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문화교류현황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교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양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간의 역사유물 공동발굴, 문화유물 및 예술작품의 교환전시 등에 역점을 두며, 문화계 인사들의 직접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우선 제 3국을 무대로 교류의 폭을 넓힘으로써 상호간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상호적응의 호기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학 및 방송교류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문학과 방송은 내용상 체제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북한정권이 이 부분의 교류에 응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남한정부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을 통해 민족구성원들이 서로 상대방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북 제안은 상호이해를 통하여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발상이지만, 이는 북한의 언론관과 언론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험을 접한 북한정권이 동독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만을 마련할 위험성이 있다.

만약 남북한간에 문화적 상호이해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면 사실을 남한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선 남한 내에서부터라도 북한의 문화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문화예술작품이나 방송에 대한 개방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1988년 이후 북한의 비정치적 비이념적 내용을 지닌 출판물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은 특수인과 특수기관에만 유포되어 있을 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다. 또한 북한방송도 부분적으로 편집되어 방영되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보다 반공교육적 차원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남한사회가 북한정권의 선동, 선전전략에 희생될 여지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이질화로 인하여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문화예술작품과 방송의 개방을 통하여 북한의 생활문화를 제대로 아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앞으로 한반도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남북한 문화교류협력 정책의 방향은 포괄적이고 가능한 모든 경우를 대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현재 남한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북한과의 상호관계라는 차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한다. 남한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정책적 일관성이 없다면 무엇보다 북한정권을 혼란스럽게 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 초기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교류협력정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남북한 간에 문화협정의 체결에 힘쓰고,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문화분야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아울러 정책적 테두리 내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문화접촉을 적극 후원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상호관계라는 차원에서는 북한의 비타협성을 염두에 두고 대북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가지고 문화적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때 예측하기 힘든 상황변수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단계적인 교류확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문화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 단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만이 중·장기적으로 대화 및 접촉을 통한 문화적 이질화의 극복은 가능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강현두·김우룡(편). 「한국방송론」. 서울: 나남, 1990.
- 고영근(편).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고태우. 「북한의 종교」. 서울: 통일연수원, 1991.
- _____. 「북한의 종교 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9.
- 과학원력사 연구소(편). 「조선통사(상)」. 평양: 학우서방, 1963.
- 국토통일원. 「북한의 문화예술」. 서울: 국토통일원, 1981.
- 김민수. 「북한의 국어연구」. 서울: 일조각, 1989.
- 김병로. 「김일성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7.
- _____. 「김정일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 김양선.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 서울: 장로회 종교 교육부, 1956.
- 김영한.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풍만, 1990.
- 김정일. 「무용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 남북회담사무국. 「적십자회담 수첩」. 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4.
- 남성우·정재영. 「북한의 언어생활」. 서울: 고려원, 1990.
- 류성민. 「북한종교연구 I」.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2.
- _____. 「북한종교연구 II」.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2.
-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창달 5개년계획연구」. 서울: 문화발전연구소, 1993.
- _____.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서울: 문화발전연구소, 1993. 9.
- 문화부. 「문화발전 10개년계획」. 서울: 문화부, 1990.
- 문화체육부. 「신 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 서울: 문화체육부, 1993.
- _____. 「출판정책자료집 1993」. 서울: 문화체육부, 1994.
- 박상천·김경웅·류보선.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 9.
-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8.
- 백지한. 「북한 영화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친구, 1989.
- 변진홍. 「남북한 종교 교류의 전개과정 -- 각 종단의 교류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빅 벨, 1994.
- 서연호·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 I」. 서울: 고려원, 1989.
- 안계춘. 「북한 사회의 이질화 실태조사 분석」. 서울: 국토통일원, 1980.
- 오프스니아코프.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원론」. 이승숙·진중권(역). 서울: 이론과 실천, 1990.
- 원불교학교재연구회(편). 「종교와 원불교」. 원광대학교, 1994.
- 유재천. 「북한 언론의 실상」. 서울: 민족통일협의회, 1992.
- 유홍열. 「한국사회사상사논고」. 서울: 일조각, 1982.
- _____. 「한국 천주교회사」.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62.
- 윤이흠. 「종교가 북한사회에 끼치는 영향」. 서울: 통일원조사연구실, 1990.
-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II」. 서울: 고려원, 1989.
- 윤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I」. 서울: 고려원, 1991.
- 윤재근 외. 「북한의 문화정보 II」. 서울: 고려원, 1991.

- 이병룡. 「통일문화 지향과 문화예술」. 서울: 국토통일원, 1985. 11.
- 이상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언론 -- 북한언론의 본질과 비판」. 서울: 범우사, 1979.
-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 사회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 1990.
-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이일·서성록. 「북한의 미술」. 서울: 고려원, 1989.
- 전수태. 「북한의 언어정책」.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2.
- 전수태·최호철. 「남북한 언어비교: 분단시대의 민족어 통일을 위하여」. 서울: 녹진, 1989.
- 정병호 외. 「북한의 공연예술 II」. 서울: 고려원, 1991.
- 정대혁·신법타. 「북한의 절과 불교」. 서울: 민족사, 1990.
-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최정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언어이론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최척호. 「북한예술영화」. 서울: 신원문화사, 1989.
-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출판보도활동에 대하여」. 동경: 주체사상국제연구소, 1987.

- 하치근. 「남북한문법 비교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3.
- 한상우.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 서울: 신원문화사, 1989.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 15년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서울: 문화발전연구소, 1992.
- 한국불교연구원. 「북한의 사찰」. 서울: 일지사, 1987.
- 한국비평문학회. 「북한 가극 연극 40년」. 서울: 신원문화사,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6.
- _____ . 「통일이념 정립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6.
-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_____ .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 I」. 평양: 문예출판사, 1992.
- 홍기삼. 「북한의 문예이론」. 서울: 평민사, 1981.
-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 1984.
- 홍의정. 「주체미술의 대전성기」. 평양: 조선미술출판사, 1987.
-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민족어의 발전에 관한 김일성 동

- 지의 사상」. 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0.
- Marx, K. H., F.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1845~46.
- McQuail, Denis.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1983.
- Rhodes, Harry A., Archibal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Vol. II, 1935-1959*.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1964.
- Siebert, Fred S., Theodore Peterson and Wilbur Schramm.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2. 論 文

-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해방후 북한교회사」. 김홍수(편). 서울: 다산글방, 1992.
- 강현두. “언론과 예술.” 「북한개론」. 최명(편).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강현두·이창현. “평양 FM방송의 프로그램분석연구.” 한국방송학회 봄철세미나 발표논문, 1990.
- 권영민. “북한 문화의 현황과 그 특성.”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서울: 한국문예진흥원, 1990.
- 김문환. “북한 영화의 특성과 그 실태.”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0.

_____. “통일한국의 정신문화.” 제5회 도산사상세미나 발표
논문, 1993. 11. 6.

김석주. “교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 「북한교회목사들은 무엇
을 어떻게 설교할까?」. 고기준 외. 서울: 형성사, 1990.

김우룡. “남북 방송 교류의 방안 모색.” 「한국 방송 정책론」.
한국방송학회(편). 서울: 나남, 1993.

김여수.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예술논총」 제1집
(1988).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친애하
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김창순. “통일문화의 창조운동을 논한다.” 「북한」(1984. 3).

노동은·송방송. “북한 음악의 이해.” 「북한의 예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노재승. “북한 영화의 개관과 이해.” 「북한의 예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노태구. “東學(思想)의 평화관.” 평화문제연구소 Workshop
발표논문, 1993. 11. 11.

리차윤·윤동수. “민족음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
의 일관한 방침.” 「조선음악년감」(1986).

마쓰기 지로. “북한 TV 사정.” 「코리아평론」(1988. 7).

“문화어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되어 이루어진 우리
민족어의 최고형태.” 「문화어학습」 제2호(1981).

- 민경찬. “북한 음악의 실상.”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 예술진흥원, 1990.
- 박정규. “북한 언론매체의 역사.” 「언론학원론」. 한국언론학
회(편). 서울: 범우사, 1994.
- 박종국. “문화정책의 기초와 과제.” 「문화예술논총」 제1집
(1988).
- 박종수. “남북 방송교류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고찰.” 「한국
방송정책론」. 한국방송학회(편). 서울: 나남, 1993.
- 박현채. “80년대의 민족사적 의의.” 「실천문학」(1987).
- 법성. “북한의 종교.” 「북한의 사회」. 강정구(편). 서울: 을
유문화사, 1990.
- 서태길. “북한의 언어정책 고찰.” 「북한의 어학혁명」. 북한언
어연구회(편). 서울: 백의, 1989.
- 송기중. “통일한국의 언어정책.”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심광현. “90년대 문화정책 비판.” 민예총 주최 심포지움 발
표논문, 1993. 11.
- 안춘옥. “북한의 TV프로그램 편성전략.” 한국방송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4. 5. 14.
- 양홍모. “통일문화 형성론 서설.” 「통일논총」 제5권 제1호.
- 염무웅. “남북 문화교류정책의 이념과 전망.” 「북한문화연
구」 제1집(1993).
- 유민영. “북한 연극의 분석과 비판.” 「북한의 문화예술」. 서

- 을: 국토통일원, 1990.
- 유홍준. “북한 미술의 사적전개와 그 이해.” 「북한의 예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제13회 민족통
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발표논
문, 1994. 11. 29.
- 윤수동. “주체적음악예술발전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 「조
선예술」(1987. 4).
- 이문웅. “북한의 도덕과 종교.” 「북한문화론」. 서울: 북한연
구소, 1978).
- _____.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동 — 사회조직 및 신앙체계
를 중심으로.” 「한국인과 한국문화 — 인류학적 접근」. 한
상복(편). 서울: 심설당, 1982.
- 이상일. “민족문화예술의 근원과 원형에서의 접근.” 「북한문
화연구」 제1집(1993).
- _____. “북한 현대 무용에 관한 비판적 접근.” 「북한 문화예
술 연구의 방향」.
- 이영옥·최석태. “주체 미술의 개념과 실제.” 「북한의 예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이춘길.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북한
문화연구」 제1집(1993).
- 원동석. “남북예술교류와 민예총의 입장.” 「민족예술」(1989.
3).

- _____. “코리아통일미술전에서 본 남북미술의 성향.” 「민족예술」(1994).
-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논총」 제5집(1993).
- 정세현. “통일문화 창조의 전망.” 한국공연예술평론가협회 주최 통일문화 심포지움 「통일문화 지향과 오늘의 공연예술」 발표논문, 1985. 2.
-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제5집(1993).
- 조동진. “통일운동 50년사와 민족교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기독교학문연구회(편).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 조 민.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통일연구논총」 제2권 제2호.
- 조형준. “북한언론에 관한 연구 -- 노동신문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2.
- 홍사성. “북한불교의 재인식.” 「민족불교」(1989).
- 홍종선. “어문분야의 남북 동질화.” 「북한문화연구」 제1집(1993).
- 황성모. “민족회합과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접근.” 국토통일원 주최 「통일문제학술회의: 민족회합 민주통일방안 발표 2주년 기념」 발표논문, 1984. 1.
- Leduc, Don R. “Transforming Principles into Policy.” J.

O. C., Vol 31, no 2(Spring 1980).

3. 其 他

「김일성저작선집 2, 4」.

「김일성저작집 7, 12, 25, 35」.

「김정일선집 1」.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백과전서」.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1984.

「조선중앙년감 1949」.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조선문화어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3.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현대조선말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68 & 1981.

「국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로동신문」.

「매일경제신문」.

「문화일보」.

「민주일보」.

- 「불교신문」.
- 「서울신문」.
- 「세계일보」.
- 「스포츠서울」.
- 「스포츠조선」.
- 「일간스포츠」.
- 「조선일보」.
- 「종교신문」.
- 「중앙일보」.
- 「천도교신문」.
- 「천도교월보」.
- 「평양방송」.
- 「한국일보」.
- 「화해와 나눔」.
- 「1994년 국회국정감사자료」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和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
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資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統一文化研究(上)

統一文化시리즈 94-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